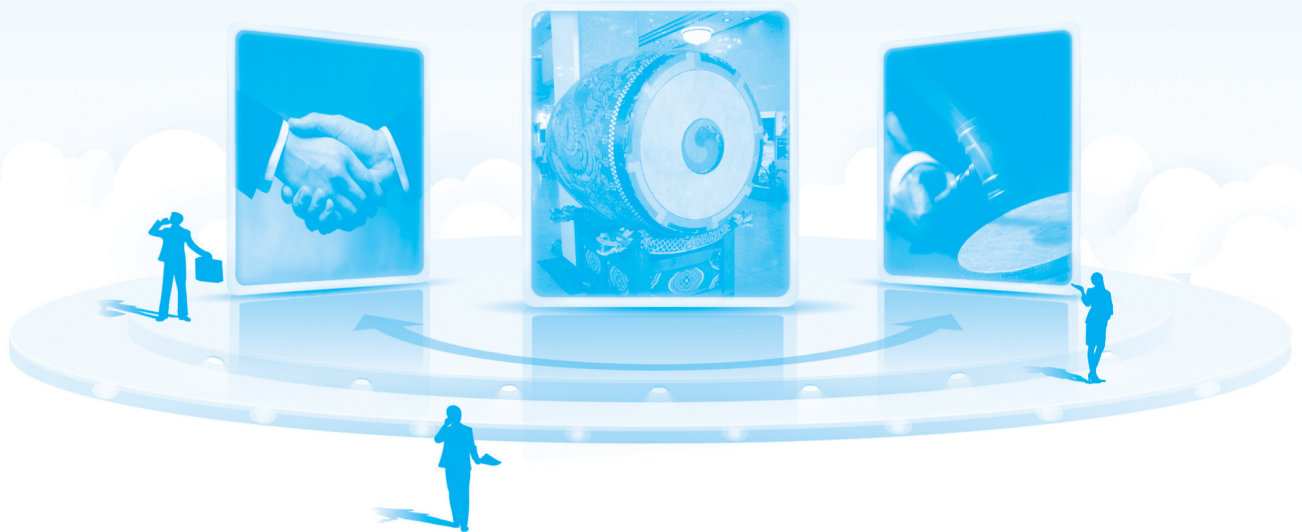


발 간 등 록 번 호

11-1140100-000066-10

2011 고충민원 조정사례집



국민권익위원회
고충처리·부패방지·행정심판

C · O · N · T · E · N · T · S

제1장 국방 · 보훈민원

- ◆ 강원 고성군 대대리 포사격장 40년만에 이전 합의 / 7
- ◆ 강릉시 사천해변 40년 군 경계용 철책 철거,
해수욕장 개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전망 / 23
- ◆ 원주시 군부대 신축 반대 집단민원, 군사보호구역 확장 않고
주민 체육시설 건립 합의 / 37
- ◆ 가평군 예비 헬기작전지시 폐쇄로 주민 58년 숙원해결 / 49
- ◆ 강원 고성군 청간해변 41년 군(軍) 경계용 철책 경관형 울타리로
교체 / 64

제2장 경찰민원

- ◆ 서울 동대문구 ○○아파트 앞길 교차로 설치로 주민 교통 불편
해소 / 77

제3장 산업 · 농림 · 환경민원

- ◆ 천안시 ○○아파트 교통소음, 방음벽 설치로 해소 / 85
- ◆ 서울 송파구 ○○아파트 교통소음, 1년 6개월만에 해결 / 93
- ◆ 통영시 장사도 해상공원 뱃길 열려 / 103

제4장 도시 · 수자원민원

- ◆ 광양시 명당지구 산업단지 준공지연 해결로,
지역경제 활성화 / 115
- ◆ 고령군 ○○ 아파트 부설주차장 추가 설치로 주차난 해결 / 134

- ◆ 경기 안성시 공장증설 요구 민원, 하천구역 정비를 통해
해결 / 147
- ◆ 안동 축산농가 구제역 피해 36농가 축산보상 / 157
- ◆ 임실 섬진강댐 재개발사업지구 거주민 이주대책 마련 / 167
- ◆ 전남 강진만 어업피해 원인 조사 합의 / 183
- ◆ 인천 환경가교 철거로 인한 교통정체 해소 / 200
- ◆ 경기 양주시 회천택지개발지구 잔여지 보상, 13년만에 해결
/ 215

제5장 교통 · 도로민원

- ◆ 청원군 내수면 묵방리 등 12개 마을 교통불편 해결 / 227
- ◆ 충남 아산시 8개 마을 주민 교통불편, 27년만에 해결 / 237
- ◆ 남원 88고속도로 확장공사로 인한 환경피해 해결 / 255
- ◆ 전남 화순군 대리지구 교차로 개선공사로 주민불편 해결
/ 268
- ◆ 충북 옥천군 이백삼거리 고속도로 통로박스(굴다리)
확장 합의 / 279

제6장 행정 · 문화 · 교육민원

- ◆ 진천선수촌 진입로 높이 낮춰, 주민 교통 안전대책 마련
/ 297
- ◆ 산업단지 조성으로, 교육환경 열악해진 홍명고등학교 이전
/ 309

제 | 장

국방보훈민원

조정사례



- ☐ 강원 고성군 대대리 포사격장 40년만에 이전 합의
- ☐ 강릉시 사천해변 40년 군 경계용 철책 철거, 해수욕장 개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전망
- ☐ 원주시 군부대 신축 반대 집단민원, 군사보호 구역 확장 않고 주민 체육시설 건립 합의
- ☐ 가평군 예비 헬기작전지시 폐쇄로 주민 58년 숙원해결
- ☐ 강원 고성군 청간해변 41년 군 경계용 철책 경관형 울타리로 교체

강원 고성군 대대리 포사격장 40년만에 이전 합의

민원번호 : 2AA-0811-028799, 2BA-1110-017700(국방보훈민원과, 김문영 조사관)

(‘11. 11. 29.)

민원개요

강원 고성군 간성을 대대리 일원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고성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인근 포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등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으니 포사격장의 폐쇄 또는 이전을 요구하는 민원에 대해 대대리포사격장을 대체지로 이전하여 평시 군사훈련 여건을 보장하고, 지역 주민들의 생활여건과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학습여건 보장하도록 조정 중재하여 40여년 만에 주민 숙원 해결

1 당사자

- 신청인 : 강원 고성군 간성읍 주민 ○○○ 및 학생 등 1,320명
- 피신청인 : 육군 제○○보병사단장(피신청인1), 제○○군단장(피신청인2), 제○○야전군사령관(피신청인3), 강원도 고성군수(피신청인4)
- 관계기관 : 강원도지사

2 민원내용

- 포 사격 소음·진동으로 주민 생활 불편 및 학생 학습권을 침해하고 있는 대대리포사격장의 폐쇄 또는 이전 요구

3 피신청인 등 의견

가. 육군 제○○보병사단장, 육군 제○○군단장.

- 대대리포사격장의 이전 대체지가 확보되어야 이전이 가능

나. 육군 제○○야전군 사령관

- 대대리포사격장 이전부지가 검토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반영은 어렵다.

다. 고성군수

- 포 사격장 이전 대체지와 비용을 부담할 수 없음. 그러나 군(軍) 부대가 ‘대대리포사격장을 이전하겠다.’고 결정하면, 포 사격장 이전관련 사업에 적극 협조하고 지원

4 주요 쟁점사항

- 대대리포사격장 이전 대체지 확보
- 포 사격장 이전 비용 부담

5 갈등 분석

가. 민원발생배경 및 주요사실관계

- 포 사격 소음·진동으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생활이 불편하고, 중·고등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있는 대대리포사격장의 폐쇄 또는 이전을 요구하는 집단 고충민원 제기
 - * 2011. 8. 25. 지역주민 및 학생 1,319명 대대리포사격장의 폐쇄 또는 이전 요구
 - * 2011. 10. 5. 고성고등학교 학생회장 대대리포사격장의 이전 요구(2BA-1110-017700)
- 이에 대해 군(軍) 부대는 ‘대체지가 제공될 경우, 포 사격장의 이전은 가능하지만, 포 사격장의 폐쇄는 불가하다.’고,
- 관련 지자체는 ‘포 사격장의 이전 대체지와 비용을 부담할 수 없다.’고 답변
- 대대리포사격장의 이전을 위한 대체지와 예산 확보 가능여부 대두
- 집단민원의 합리적 조정해결 필요
 - 위원회에서는 신청인, 피신청인 및 관계기관의 의견 등을 조율하여 민원 해결방안을 모색

나. 해결 목표

- 관계기관 역할분담(조정)을 통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 대대리포사격장을 대체지로 이전하여 평시 군사훈련 여건을 보장하고,
 - 지역 주민들의 생활여건과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학습여건 보장으로 집단민원 해소

6 갈등해결과정

- '11. 8. 8. : '11년 9월 이동신문고 현안사항 해결요청 (고성군)
- '11. 8. 23.~24. : 실지조사(1차) 및 주민 의견수렴
- '11. 8. 25. : 집단고충민원 제기 (지역주민 및 학생 1,319명)
- '11. 8. 30. : 관계기관 자료 및 의견 제출요구(육군 제00보병사단, 강원도 고성군 등)
- '11. 9. 6.~7. : 실지조사(2차) 및 000mm 포 사격 소음측정
- '11. 10. 5. : 고성 중·고등학교 학생회장 고충민원 제기
- '11. 10. 18. : 관계기관 방문 지원협조(강원도)
- '11. 10. 27. : 협의사항 완성을 위해 조정회의 개최 합의
- '11. 11. 2.~3. : 관계기관 합동 현장 확인(3차) 및 협의
- '11. 11. 21. : 대대리포사격장 이전 소요예산 국방중장기계획 반영 가능통보
- '11. 11. 21. : 조정서(안) 최종합의 (피신청인, 관계기관)

7 조정 (합의) 결과

가. 조정 · 합의 최종결과

- 130mm 포는 이달 말부터 사격을 중단하고, 155mm 포는 연간 총 6회로 제한, 105mm 포는 가능한 다른 지역에서 사격하고, 군(軍)은 내년 6월까지 105mm 사격장 이전지를 선정, 사격장 이전 사업을 '14~'18년 국방중장기계획에 반영 토록 하는 합의

나. 위원회 조정 · 합의문

- 피신청인1, 2는 대대리포사격장의 이전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조치한다.
 - 1) 130mm 포는 2011. 11. 30.부터 대대리포사격장에서 사격하지 않는다.
 - 2) 155mm 포는 '13년~'17년 또는 '14년~'18년 국방중기계획에 따라 대체지(충용사격장 일원)가 완공될 때까지, 대대리포사격장에서 해상사격 등 연간 총 6일만 사격한다.
 - 3) 105mm 포 대대리포사격장 사격 일수는 2012. 2. 최초 주민설명회에서 신청인 대표 등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4) 피신청인1 주관 하에 피신청인4와 함께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이전까지 105mm 포 사격장 이전 대체지를 선정하고, 사격장 이전 사업을 '13년~'17년 또는 '14년~'18년 국방중기계획에 편성하는 등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이전사업이 추진되도록 조치한다.
 - 5) 고성 중·고등학교 시험 기간 중에는 대대리포사격장에서 포 사격을 하지 않는다.
 - 6) 각 포 사격장 대체지 조성 완료 후에는 대대리포사격장에서 일체 포 사격을 하지 않는다.
 - 7) 피신청인1은 피신청인2에게 대대리포사격장 이전 사업이 '13년~'17년 또는 '14년~'18년 국방중기계획에 편성될 수 있도록 건의/조치하고, 피신청인2는 피신청인1의 건의 사항을 피신청인3에게 건의하여 대대리포사격장 이전 사업이 가능한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국방중기계획에 편성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 8) 반기 1회 대대리포사격장 이전 추진상황을 지역주민대표에게 설명하고, 필요한 사항을 조치한다.
- 피신청인3은 대대리포사격장의 이전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조치한다.
 - 1) 피신청인2의 건의사항인 대대리포사격장 이전사업이 '13년~'17년 또는 '14년~'18년 국방중기계획에 편성될 수 있도록 육군본부에 건의하여 반드시 편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한다.
 - 2) 군사령부 차원에서 대대리포사격장 이전사업과 관련된 각종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고 조치한다.
 - 피신청인4는 대대리포사격장의 이전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조치한다.
 - 1) 피신청인1, 2가 대대리포사격장 이전 대체지를 원만하게 선정할 수 있게 최대한 협조하고, 선정된 대체지 주변 주민들을 설득하는 등 이전사업에 적극 관여하여 지원하고 조치한다.
 - 2) 피신청인1, 2가 반기 1회 주관하는 대대리포사격장 이전 추진상황 설명회에 함께 참여하고, 필요한 사항을 적극 조치한다.
 - 3) 기타 대대리포사격장 이전사업과 관련하여 피신청인1, 2의 각종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 지원하고 조치한다.
 - 기타 대대리포사격장의 사용 및 이전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신청인 대표, 피신청인1, 2, 3, 4가 상호 협의하여 조치하고, 국민권익위원회는 포 사격장 이전 사업이 완료될 때 까지 참여·관리한다.

8 수용-이행 여부 및 시사점

가. 신청인-피신청인 수용 및 이행여부

- '11. 11. 30. : 130mm포 사격금지
- '11. 12. : 사격장 이전 사업비 '13~17 또는 '14~18 국방중기예산 육군본부 반영건의
- '12. 1. : 포 사격장 이전 주민 설명회(반기 1회) 및 대체지 선정
- '18. 12. : 포 사격장 이전 완료 추진

나. 시사점

- 4개월 동안 여러 차례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함께 노력한 결과, 군(軍) 부대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한 덕분에 40년 이상 지속되어온 주민과 학생들의 불편이 해소되는 계기 마련
- 대대리포사격장을 대체지로 이전하여 평시 군사훈련 여건을 보장하고, 지역 주민들의 생활여건과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학습여건 보장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대안을 끌어냄으로써 이해당사자 모두 win-win 하는 결과 도출

고성 포사격장 40년 민원..권익위 중재 해결

기사입력 2011-11-29 18:04

【고성=연합뉴스】 이종건 기자 = 40년 이상 끌어온 강원도 고성군 '대대리 포사격장 소음' 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해결되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오후 고성군청 회의실에서 김영란 위원장 주재로 현장 민원 조정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현지 주민 대표를 비롯해 군부대 지휘관과 참모, 황종국 고성군수를 비롯한 고성군청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130mm 포는 이달 말부터 사격을 중단하고 155mm 포는 연간 6일로 사격훈련을 제한하기로 했다.

105mm 포의 경우 가능한 다른 지역에서 사격하고 가능한 이른 시일 내에 부지를 선정해 이전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고성중·고교 시험기간에는 사격훈련이 일절 금지된다.

군(軍)은 장기적으로 사격장 전체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사업을 2014~2018년 국방 중장기 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포 사격으로 인한 소음에 시달려 왔던 고성군 간성읍 등 주변 지역 주민들은 불편한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특히 사격장으로부터 불과 450여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학업에 큰 지장을 받았던 고성중·고교 재학생 580여명은 이번 결정으로 면학 분위기 조성에 큰 도움을 받게 됐다.

대대리 포 사격장은 애초 1972년 항공작전용으로 군(軍)에 의해 간성읍 북천에 설치된 비행장이었다. 이후 작전환경이 바뀌면서 비행장 사용이 줄어들자 관할 군부대는 1980년부터 지금까지 연평군 약 60일간 포 사격을 해왔다.

이 때문에 주변에서는 소음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급기야 지난 8월 주민과 학생 등 1천320명은 국민권익위의 이동신 문고가 고성지역을 방문했을 때 사격장 폐쇄 또는 이전을 바라는 집단 민원서를 제출했다.

조정회의를 주재한 김영란 위원장은 "지난 8월부터 4개월 동안 여러 차례 현장 조사와 관계 기관 협의를 통해 함께 노력한 결과 이번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며 "군부대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한 덕분에 40년 이상 지속돼 온 고질적인 민원이 해결돼 주민과 학생 불편이 해소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조정회의 참석에 앞서 현지 군부대를 방문, 장병들을 격려하고 위문금을 전달했으며 포사격장 현지를 둘러봤다.



권익위, 강원도 고성 포사격장 40년만에 이전 합의

기사입력 2011-11-29 15:00

【서울=뉴시스】 장진복 기자 = 1980년부터 포 사격장으로 사용돼 온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대대리 포사격장(3만1944㎡)이 이전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현장조정 결과 강원도 고성군 대대리 포사격장에 대한 대체지를 내년 6월 까지 선정토록 중재했다고 29일 밝혔다.

당초 군(軍)은 1972년 항공작전을 위해 해당 지역에 비행장을 설치했으나 이후 작전환경이 바뀌면서 비행장 사용이 줄었다. 이에 관할 군부대는 해당부지를 1980년부터 지금까지 사격장으로 사용하면서 연평균 약 60일간 포를 사격해왔다.

이에 인근 주민들은 40여년간 소음에 시달려 왔고 사격장에서 불과 450m 떨어진 고성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경우 학습권 침해를 받아왔다.

간성읍 지역 주민들 및 고성 중·고교 학생 1320명은 지난 8월 권익위의 '이동신문고'가 고성에서 열렸을 때 포사격장 이전을 요청하는 집단 민원서를 접수했다.

김영란 권익위원장도 고성군청에서 지역주민 및 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이달 말부터 130㎜포 사격중단 ▲155㎜포 연간 6회 사격제한 ▲내년 6월까지 105

김 위원장은 "지난 8월부터 여러차례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군 부대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한 덕분에 40년 이상 지속돼 온 주민과 학생들의 불편이 해소되는 계기가 마련됐다"라고 밝혔다.

2011년 11월 30일 (수)
16A면 충청/강원

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15.5.8.8 cm

경향신문

2011년 11월 30일 (수)
20A면 지역

고성 대대리 포사격장 40년 만에 이전 합의

시가지 인근에 위치해 소음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강원 고성군 간성을 대대리의 포사격장이 40년 만에 이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고성군청에서 김영란 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 회의를 열어 대대리 포사격장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합의안을 이끌어냈다. 이날 현장조정으로 130mm 포의 경우 이달 말부터 사격이 중단되고, 155mm 포의 사격훈련은 연간 6회로 제한된다. 또 사격장 이전은 오는 2014~2018년 국방중장기계획에 반영해 추진하고, 이전 전에도 고성중·고교 시험 기간에는 포 사격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군당국은 1972년 항공작전을 위해 고성군 간성을 대대리 시가지가 장자리에 비행장을 설치했다. 하지만 작전환경이 바뀌면서 관할 군부

대가 1980년부터 해당부지(3만1944㎡)를 사격장으로 사용하면서 연평균 약 60일간 포 사격훈련을 해왔다.

이로 인해 인근 주민들은 수십년간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포 소음에 시달려 왔다.

특히 사격장에서 불과 450m 떨어진 고성중·고교 학생들은 포사격 시 수업에 집중하기 어려워 학습권 침해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간성을 주민들과 고성중·고교 학생 등 1300여명은 지난 8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집단 민원을 제기했다.

김영란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4개월 동안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친 끝에 군부대의 협조를 이끌어냈다”며 “40여년 지속되어온 주민과 학생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최승현 기자 cshdmz@kyunghyang.com
10.3 X 11.6 cm

한국일보

2011년 11월 30일 (수)
13B면 지역고성 대대리 포 사격장
2018년까지 이전

국민권익위원회와 강원 고성군, 제1야전군 사령부 등은 고성군 간성을 대대리에 위치한 포 사격장(3만1,944㎡) 이전을 골자로 한 조정안에 23일 합의했다. 이에 따라 군 당국은 내년 상반기까지 105mm 포 사격장의 대체부지를 선정하고, 이달 말부터 130mm 포 사격을 중단할 계획이다. 155mm 포 사격은 연간 6회로 제한하기로 했다.

특히 군은 2014년부터 시행하는 국방중장기계획에 이번 조정안을 반영해 늦어도 2018년까지 대대리 포 사격장을 완전 이전할 방침이다.

군이 1972년 항공작전을 위한 비행장으로 조성한 해당부지는 1980년부터 최근까지 육군 모 부대가 포 사격장으로 사용했다. 때문에 주민들은 소음 피해와 함께 지역발전도 가로막고 있다며 대책을 호소했다. 간성을 주민과 고성중·고교생 등 모두 1,320명은 지난 8월 이런 내용이 담긴 집단민원을 국민권익위에 접수했다.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은 “군 부대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해 준 덕분에 40년 이상 지속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았다”고 말했다.

박은성기자
4.9 X 14.9 cm



권익위, 강원도 고성 포사격장 40년 만에 이전 합의

2011.11.29 (15:55) 김철우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1980년부터 포 사격장으로 사용돼 온 강원도 고성군 대대리 포 사격장이 이전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가 군과 주민 등을 상대로 현장 조정해 강원도 고성군 대대리 포 사격장에 대한 대체지를 내년 6월까지 선정하도록 중재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군은 1972년 해당 지역에 비행장을 설치했으나 작전환경이 바뀌면서 비행장 사용이 줄었고 1980년부터 사격장으로 사용하면서 한해 평균 60일 동안 포를 사격해왔습니다.

이에 인근 주민들은 40년 넘게 소음에 시달려 왔고 사격장에서 불과 450m 떨어진 고성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경우 학습권을 침해받아왔습니다.



고성군 대대리 포사격장 40년 만에 이전

20111129 14:10 / 배선영 기자

강원도 고성군 대대리에 위치한 포사격장이 주민들의 민원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40년 만에 이전할 전망이다.

권익위원회는 지난 8월 지역주민으로부터 민원을 접수한 뒤 여러 차례 군 당국을 만나 협의한 끝에 내년까지 사격장 이전지역을 선정하고 국방중장기 계획에도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성군 대대리 주민들은 지난 40년간 포사격 연습의 소음에 시달려왔으며 주변 학교의 수업에도 큰 차질을 빚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성,포사격장 40년만에 중지한다

20111130 / 이장춘 기자

40년 이상 끌어온 고성군 ‘대대리 포사격장 소음’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해결되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오후 고성군청 회의실에서 김영란 위원장 주재로 현장민원 조정회의를 갖고 포사격으로 인한 소음과 불편한 주민생활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130mm 포는 이달말부터 사격을 중단하고 155mm 포는 연간 6회로 사격훈련을 제한하기로 하는 한편, 105mm 포의 경우 가능한 다른 지역에서 사격하고 내년 6월까지 부지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인근의 고성중·고교 시험기간에는 사격훈련이 일절 금지하기로 했으며 군부대는 장기적으로 사격장 전체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사업을 2천14~2천18년 국방중장기 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

아주경제
한·중·영·일 4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메디컬투데이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건강신문

고성 포사격장 소음 민원, 40년만에 해결

기사입력 2011-11-29 15:52 | 기사수정 2011-11-29 18:24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40년 이상 지속된 강원도 고성군 ‘대대리 포사격장 소음’ 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해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고성군청 회의실에서 김영란 위원장 주재로 현장 민원 조정회의를 열고 130mm 포는 이달 말부터 사격을 중단하고 155mm 포는 연간 6회로 사격훈련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또 105mm 포는 가능한 다른 지역에서 사격하고 가능한 빨리 부지를 선정해 이전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고성중·고교 시험기간에는 사격훈련이 일절 금지된다.

군(軍)은 장기적으로 2014~2018년 국방 중장기 계획에 사격장 전체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사업을 반영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포 사격으로 인한 소음에 40년간 고통을 겪어 왔던 고성군 간성읍 등 주변 지역 주민들은 불편한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특히 사격장으로부터 불과 450여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학업에 큰 지장을 받았던 고성중·고교 재학생 580여명은 이번 결정으로 면학 분위기 조성에 큰 도움을 받게 됐다.

대대리 포 사격장은 1972년 항공작전용으로 군에 의해 간성읍 북천에 설치된 비행장이었으나 이후 작전환경이 바뀌면서 비행장 사용이 줄어들자 관할 군부대는 1980년부터 지금까지 연평균 약 60일간 포 사격을 해왔고 지역주민들은 소음 민원을 제기해 왔다.

급기야 지난 8월 주민과 학생 등 1320명은 국민권익위의 이동신 문고가 고성지역을 방문했을 때 사격장 폐쇄 또는 이전을 바라는 집단 민원서를 제출했다.

조정회의를 주재한 김영란 위원장은 “지난 8월부터 4개월 동안 여러 차례 현장 조사와 관계 기관 협의를 통해 함께 노력한 결과 이번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며 “군부대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한 덕분에 40년 이상 지속돼 온 고질적인 민원이 해결돼 주민과 학생 불편이 해소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회의에는 현지 주민 대표와 조성직 육군 제22보병사단장, 정진국 육군 제8군단 참모장, 나영기 육군 제1야전군사령부 교육훈련과장, 황종국 고성군수를 비롯한 고성군청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강원도민일보

2011년 11월 30일 (수)
07면 지역

“대대리 포사격장 문제 해결 적극 참여”

인터뷰 고성 방문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

“대대리 포사격장 이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국민권익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관리해나갔습니다.”

고성군 대대리 포사격장 이전을 위한 현장조정회의 참석을 위해 29일 고성군을 방문한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은 “고성 주민들은 그동안 최전방에 위치한 지리적 문제로 인해 많은 고통을 받아 왔다”며 “이번 합의조정으로 40년 이상 지속돼 온 주민과 학생들의 불편이 해소되는 계기가 마련돼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21면

또 “오늘의 합의는 지난 8월부터 4개월

동안 여러 차례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함께 노력한 결과로, 주민들과 군(軍) 부대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한 덕분에 이뤄지게 됐다”며 “이제 물꼬를 튼 만큼 앞으로 조금씩 진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군부대 측은 앞으로 105mm 포사격장 이전 대체지 선정을 이르면 시일내에 추진, 주민들과 신뢰를 쌓아야 한다”며 “고성군도 이전 대체지가 선정되면 최대한 협조하고 이전 사업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오늘 조정·합의 내용은 민법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앞으로 실현해나가는 일만이 남았다”며 “국민권익위원회는 조사·조정·합의가 완료될 때까지 참여하고 관리해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고성/남진현 jcnam@kado.net
18.1 X 9.3 cm

고성 대대리 포사격장 40년 만에 이전

【고성】고성군 간성읍 대대리 군부대 포사격장이 외곽으로 이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29일 고성군청 회의실에서 김영란 위원장과 황종국 군수, 조성직 육군 제22보병사단장, 정진국 육군 제8군단 참모장, 나영기 육군 제1야전군 사령부 교육훈련과장,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갖고 대대리 포사격장 이전을 합의했다.

이에 따라 1972년 간성을 대대리 3만1,944㎡ 규모로 조성된 대대리 포사격장은 40년 만에 다른 지역으

권익위 현장조정회의서 외곽 이전 전격 합의

2014~2018 중장기계획 반영 주민숙원 해결

로 이전하게 됐다. 그동안 대대리 포사격장은 1972년 항공작전을 위해 비행장을 설치했다 작전환경이 바뀌면서 1980년부터 포사격장으로 전환돼 연평균 60일간 사격으로 고성지역 주민과 인근 고성중·고등학교가 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등 집단 민원이 잇따랐다.

이날 현장조정회의에서는 △130mm 포는 이달 말부터 사격중단 △155mm 포는 연간 총 6회 △각 포사격장 대체지 조성완료후 대대리 포사격장에서 사격중지 △고성 중·고교 시험 기간에는 포사격 중지 △사격장 이전 사업의 2014~2018년 국방중장기계획 반영 등을 합의했다.

현장조정회의를 주재한 김영란 위원장은 “지난 8월부터 4개월 동안 수차례에 걸쳐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포사격장 이전을 결정했다”며 “40년 이상 지속된 고성지역 주민과 학생들의 불편이 해소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고성지역 주민과 고성중·고 학생 1,320명은 지난 8월 고성군에서 열린 권익위 ‘이동신문고’에 포사격 피해를 호소하며 사격장을 폐쇄하거나이전해 달라는 집단 민원서를 냈다.

정래석기자 redfox9458@knews.co.kr
20.7 X 9.0 cm

강원도민일보

2011년 11월 30일 (수)
21면 지역

대대리 사격장 이전... 40년 숙원 해결

130mm 사격 중단·105mm 타 지역 이전 합의... 주민 소음 피해 해소

국민권익위 현장조정회의

고성지역 주민들의 숙원인 대대리 포사격장이 40년만에 이전,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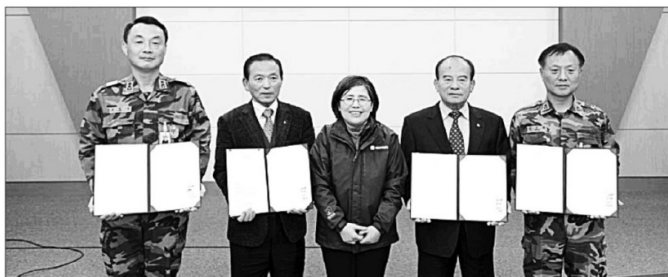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29일 오후 고성군청에서 황종국 고성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주민대표, 육군 제1군사령부, 8군단, 22사단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지난 8월 ‘이동신문고’ 운영 당시 주민들이 건의했던 대대리 포사격장 이전 문제에 대해 합의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130mm포는 이달 말부터 사격을 중단하고, 155mm포는 대체지인 충용사격장이 완공될 때까지 연간 총 6일로 제한해 사격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105mm포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전 대체지를 선정하고, 사격장 이전사업을 2013~2017년 또는 2014~2018년 국방중장기계획에 편성토록 했다.

이와 함께 이전 전까지 105mm 포사격 일수는 내년 2월 최초 주민설명회에서 협의해 결정키로 했다.

특히 포 사격장 이전 전이라도 고성 중·고교 시험 기간에는 포 사격



고성군 대대리 포사격장 이전을 위한 현장조정회의가 29일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고성군청에서 열린 사격장 이전에 대해 합의했다.

을 하지 않는데도 합의했다.

대대리 포사격장은 지난 1972년 고성군 간성읍과 거진읍 대대리 사이에 위치한 군용비행장과 복천 둔치 3만1944㎡에 설치된 이후 1980년부터 포 사격장으로 사용돼 왔다.

당초 군(軍)은 1972년 항공작전을 위해 이 지역에 비행장을 설치했으나 이후 작전환경이 바뀌면서 비행장 사용이 줄었고, 이후 관할 군부대는 해당부지를 1980년부터 지금까지 사격장으로 사용하며 연평균

약 60일간 포 사격을 실시해왔다.

이로 인해 인근 주민들은 40여년간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포 소음에 시달려 왔으며, 사격장에서 불과 500여m 떨어진 고성 중·고등학교 학생들도 학업에 집중하기 어려울 정도로 학습권 침해를 받아 왔다.

이에 따라 지역 주민들과 학생 등 1300여명은 지난 8월 국민권익위원회가 놓여온 지역을 직접 찾아가서 민원을 상담하고 해결하는 ‘이동신문고’를 고성에서 운영할 당시 그들

안의 피해를 호소하며 사격장을 폐쇄하거나 이전에 달라는 집단 민원서를 접수시켰다.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은 “포사격장 이전 합의는 지난 8월부터 4개월 동안 여러 차례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함께 노력한 결과로, 군(軍) 부대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한 덕분에 이뤄지게 됐다”며 “40년 이상 지속돼 온 주민과 학생들의 불편이 해소되는 계기가 마련돼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고성/남진현 jcnam@kado.net
20.7 X 18.0 cm

중부매일

강원도 대대리 포사격장, 40년만에 이전 합의

권익위 중재, "130mm포 이달 말 중지...대체지 내년 6월 선정"

20111130 / 이슬기 기자

1972년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대대리 시가지 가장자리에 설치된 이후 1980년부터 포 사격장으로 사용돼오던 대대리 포사격장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의 현장조정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것으로 보인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번 포사격장의 이전은 약 40년만에 합의된 것이며 대체지는 내년 6월 선정된다는 것이다.

앞서 당초 군은 1972년 항공작전을 위해 이곳에 비행장을 설치했으나 이후 작전환경이 바뀌면서 비행장 사용이 줄었고 이에 관할 군부대는 해당부지를 1980년부터 지금까지 사격장으로 사용하면서 연평균 약 60일간 포를 사격해왔다.

이로 인해 인근 주민들은 40여 년간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포 소음에 시달려 왔고 사격장에서 불과 450m 떨어진 고성 중·고등학교 학생들도 학업에 집중하기 어려울 정도로 학습권 침해를 받아왔다.

이에 간성읍 지역 주민들과 고성 중·고교 학생 총 1,320명은 지난 8월 권익위가 놓여준 지역을 직접 찾아가서 민원을 상담하고 해결하는 '이동신문고'가 고성에서 열렸을 때 그간의 피해를 호소하면서 사격장을 폐쇄하거나 이전해 달라는 집단 민원서를 국민권익위에 접수시킨 바 있다.

이후 권익위 김영란 위원장은 여러 차례 군과 협의 끝에 29일 고성군청에서 지역민들과 조성직 육군 제22보병사단장, 정진국 육군 제8군단 참모장, 나영기 육군 제10야전군사령부 교육훈련과장, 황종국 고성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관련 합의를 성사시켰다.

이번 합의안에는 ▲ 130mm 포, 이달 말부터 사격 중단 ▲155mm 포, 연간 총 6회 제한 ▲105mm 포, 가능한 다른 지역서 사격 ▲군, 내년 6월까지 105mm 사격장 이전지 선정 ▲사격장 이전 사업 '14~'18년 국방중장기계획에 반영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이전 전이라도 고성 중·고교 시험 기간에는 포 사격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돼있다.

한편 조정회의를 주재한 김 위원장은 "지난 8월부터 4개월 동안 여러 차례 현장조사와 관계

기관 협의를 통해 함께 노력한 결과로 군 부대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한 덕분에 40년 이상 지속돼온 주민과 학생들의 불편이 해소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강원도 고성군 대대리 포사격장 40년만에 이전

기사입력 2011-11-29 17:32



【고성=뉴스시스】 강진형 기자 = 김영란(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오후 강원도 고성군청에서 열린 ‘고성군 대대리 포사격장 이전 현장조정회의’에서 포사격장을 40년만에 이전하기로 합의한 뒤 민원인 및 관계기관 대표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제공)

강릉시 사천해변 40년 군 경계용 철책 철거, 해수욕장 개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전망

민원번호 : 2BA-1009-010289(국방보훈민원과, 오형조 조사관)

(‘11. 3. 17.)

민원개요

강원 강릉시 사천해변은 아름다운 백사장과 100년 이상 된 송림으로 이름난 강릉의 대표관광지이지만, 군(軍) 경계용 철책이 설치되어 있어 평소 인근주민들도 해변 출입이 자유롭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해수욕장 이용 관광객 감소로 관광손실도 상당해 군(軍) 경계용 철책을 현대화 장비로 감시기능을 강화하면서도 해수욕장 관광객을 끌어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주민 40년 숙원 해결

1 당사자

- 신 청 인 : 강원 강원 강릉시 사천면 방동리 ○○○외 2,249명
- 피신청인 : 육군 제○○보병사단장(피신청인 1), 강릉시장(피신청인 2)
- 관계기관 : 강원도지사

2 민원내용

- 강릉 사천해변은 깨끗한 백사장과 송림이 우거져 관광명소로 손색이 없으나, 해수욕장 등 해변에 무단으로 설치된 군(軍) 경계용 철책 때문에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장애가 되고 있으니,
 - 관광객 편의와 지역발전을 위해 개활지와 해수욕장 해변 590m의 군(軍) 경계용 철책을 철거 요구

3 피신청인 등 의견

가. 육군 ○○보병사단장

- 사천해변은 과거 적 침투지역으로 철책 철거 시 해안경계 작전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나, 강릉시장이 사천해변 개발계획을 구체화하고 경계력 보강을 위한 감시장비 설치와 경관형 고가초소 신축 등 군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작

전성을 검토하여 합동참모본부 승인 후 철거가 가능하다.

나. 강릉시장

- 해수욕장 구간(220m)에 대한 사천해변 군 경계용 철책 철거가 가능할 경우 철책철거 공사 시행 및 경계력 보강을 위해 육군 ○○보병사단장이 요구하는 대체시설 및 감시장비를 설치하겠다.

다. 강원도지사

- 육군 ○○보병사단장이 사천해변 철책을 철거하기로 하는 경우 육군 ○○보병사단장의 대체시설 및 감시장비 제공에 필요한 예산지원과 사천해변 개발계획 수립에 적극 협조하겠다.

4 주요 쟁점사항

- 사천해변 군(軍) 경계용 철책 철거 시 작전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대체 가능여부
- 철책 철거 범위 및 대체 감시시설 설치비용 분담

5 갈등 분석

가. 민원발생배경 및 주요사실관계

- 강릉 사천해변은 해수욕장으로 좋은 자연조건을 갖추고 있으나, 1970년대부터 해변 백사장에 경계용 철책을 설치하여 활용에 제약
 - ※ 사천해변은 1982. 4. 10. 국민관광휴양지로 지정되어 매년 약 1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나 철책으로 인한 해변출입 제한, 관광 기반투자 부재로 관광객 감소 추세
- 주민들은 2008년부터 관광객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철책을 철거해 달라는 민원을 군부대에 지속적으로 제기하였으나,
 - 관할 군부대는 군사 작전상 철거가 곤란하다는 입장을 견지
- '10. 9. 3. 사천해변 변영희장, 강릉시 재향군인회장, 지역주민 등 2,250명이 위원회에 군 철책 철거를 요구하는 고충민원을 제기

나. 해결 목표

- 주민들의 숙원사항을 해소하면서 군 작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주민과 군 모두가 윈-윈하는 해결방안을 마련
 - 군 경계용 철책을 철거하되, 현대화 감시장비를 도입하는 방안 등
 - ※ 조정 성립 시 관광수입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예상

6 갈등해결과정

가. 진행과정 개요

- '10. 9. 15. : 제1차 현장조사 및 관계기관 협의
 - 주민대표, 육군 ○○보병사단, 강릉시 관계자들과 사천해변을 실사하고 해결방안 논의
 - ※ (육군 ○○보병사단) 사천해변은 과거 적 침투지역으로 군 작전상 철책 전부(1.2km)를 철거하는 것은 불가하나 민가 형성 지역 등 일부 지역은 검토 가능
- (강릉시) 군 작전성 검토 결과에 따라서 군 철책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공사 및 대체시설 제공 가능
- '10. 9. 15. ~ '11. 3. 2. : 추가 현장조사(3회) 및 관계기관 협의(7회)를 거쳐 위원회 조정안 제시
- '11. 3. 2. : 신청인, 피신청인 및 관계기관 위원회 조정안 수용

7 조정 (합의) 결과

가. 조정 · 합의 최종결과

- 군부대는 사천해변에 설치된 군 경계용 철책 1,200m 중 해수욕장 운용구간을 포함해 590m를 철거하고, 대신 강릉시는 경계용 철책 철거지역에 경관형 고가 초소와 광학 감시장비 등을 설치해주며, 강원도는 대체 감시장비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합의안을 마련

나. 위원회 조정 · 합의문

- 육군 제○○사단장은 2011. 6. 30.까지 사천해변 군 철책 총 1,200m 중 사천

천부터 사천해수욕장 운영구간까지의 총 590m 해안철책 철거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합동참모본부의 철책철거 승인을 받아 피신청인 2가 철책철거 공사를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 강릉시장은 합동참모본부의 사천해변 철책철거 승인 후 기존 진지를 환경조화형 진지로 리모델링하고, 경관형 고가초소 및 적외선 기능 광학 감시장비 등 육군 제○○사단장이 요구하는 대체시설 및 감시장비를 설치하여 피신청인 1에게 소유권을 이전한다.
- 강원도지사는 관광객 유치와 지역발전 등 지역주민의 권익증진을 위해 사천해변 경계력 보강을 위한 대체 감시장비 설치비용 중 강릉시장이 건의하는 비용의 지급일과 지급액을 상호 협의하여 지원한다.
- 신청인은 향후 사천해변 군 철책 추가 철거 등 새로운 요구를 하지 않는다.

8 수용-이행 여부 및 시사점

가. 신청인-피신청인 수용 및 이행여부

- '11. 6. 28. : 완료철책철거 합참 승인
- '11. 7. 4. : 사천해변 철책철거 공사 완료(대체 감시 장비 설치 완료)
- '11. 7. 11. : 사천해변 군 경계용 철책 철거 및 해수욕장 개장

나. 시사점

- 이번 조정은 단순히 군 경계용 철책 일부를 철거하는 것을 넘어,
- 노후된 철책 대신 현대화된 과학화 감시장비 도입을 통해 군 작전수행에 도움을 주면서도 지역주민의 숙원을 해결한데에 있음.

울창한 송림.깨끗한 백사장..40년 軍철책 건힌다

기사입력 2011-03-17 14:52 | 최종수정 2011-03-17 14:55



국민권익위, 강릉 사천 해변 철책 해수욕장 개장전 철거 조정

【강릉=연합뉴스】 유형재 기자 = 울창한 송림과 깨끗한 백사장을 자랑하는 강원 강릉시 사천 해변에 1971년부터 설치된 군(軍) 경계용 철책이 해변(해수욕장) 개장 전에 철거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17일 현장조정을 통해 깨끗한 백사장과 100년 이상 된 송림으로 이름난 강릉의 대표관광지이면서도 철책이 설치돼 주민 및 관광객들의 해변 출입이 자유롭지 못했던 사천해변의 철책을 철거하는 조정을 이끌어 냈다.



국민권익위는 이날 강릉시 사천면사무소에서 김영란 위원장 주재로 지역주민들과 이인태 육군 제23보병사단장, 최명희 강릉시장, 김홍주 강원도 환동해출장소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에 합의했다.

이 자리에서 군부대는 사천해변에 설치된 군 경계용 철책 1천200m 중 해변 운용구간이 포함된 철책 590m 철거에 적극 협력키로 했으며, 강릉시는 철거지역에 경관형 고가 초소와 광학 감시장비 등을 설치하기로 했다.

강원도도 대체 감시장비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데 합의했다.

사천해변은 1982년 국민관광휴양지로 지정돼 매년 약 10만명의 관광객이 찾고 있지만, 철책이 설치돼 해변 출입의 제한, 관광 기반투자 부재 등으로 관광객이 감소하자 지역주민 2천 250여명이 지난해 9월 국민권익위에 이를 철거해 달라는 집단민원을 냈다.



김영란 위원장은 "이번 조정은 권익위가 주민과 관련기관들과 함께 지난해 9월부터 6개월 동안 4회의 현장조사와 8차례의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함께 노력하고 협력한 결과로 장기간 지속되어온 주민불편이 해소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최명희 강릉시장은 "해변 개장 전까지 철책이 철거돼 피서객과 관광객들이 울창한 송림과 깨끗한 백사장에서 맘껏 강릉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yoo21@yna.co.kr

김영란 위원장, 민원 현장조정

기사입력 2011-03-17 15:31



【서울=연합뉴스】 김영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17일 오후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사무소에서 사천해수욕장 군용 철책 철거 요구 민원에 대해 현지주민, 군부대, 강릉시 관계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상반기 내 군용 철책을 철거기로 합의한 후 기념 촬영 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원도 환동해출장소장 김홍주, 강릉시장 최명희, 육군제23사단장 이인태, 김영란 위원장, 지역 주민. 2011.3.17 << 국민권익위원회 >>

김영란 위원장, 사천해수욕장 주민과 인사

기사입력 2011-03-17 15:32



【서울=뉴시스】 박세연 기자 = 친서민 현장 행정에 나선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17일 오후 강릉시 사천면 해수욕장 인근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뒤 주민들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제공)



권익위원장 '軍 철책 철거' 현장 논의 김영란(가운데) 권익위원장이 17일 강원 강릉시 사천해변에서 군부대 및 강릉시 관계자들과 해변에 설치된 군 철책 철거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1971년부터 설치돼 있던 군 경계용 철책 590m는 올해 해수욕장 개장 전에 철거된다.

강릉 연합뉴스
14.6 X 10.1 cm

40년 묵은 사천해변 철조망 철거

국민권익위 현장 조정회의 열어 합의... 경제 활성화·군 경계기능 강화 기대

40년간 지역발전을 가로막았던 강원 강릉시 사천해변의 해안 철책이 철거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7일 강원 사천면사무소를 방문해 김영란 위원장 주재로 강릉시와 육군 23사단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사천해변에 설치된 철책 590m를 상반기 중으로 철거기로 합의했다.

강원도와 강릉시는 해당 지역에 들어설 경관조소와 광학 감시장비를 육

군 철책부대(23사단)에 지원기로 약속했다. 사천해변은 백사장과 100년 이상된 송림으로 이름난 관광명소이지만, 1971년 설치된 군 경계용 철책으로 인해 출입이 자유롭지 못했다.

특히 200m에 이르는 해수욕장 구간에도 철책이 들어서 사천면 주민 2,250여명은 지난해 9월 국민권익위에 민원 조정 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6개월간 4차례의 현장조사와 8차례에 이르는 국방

부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번 합의로 강릉시와 주민들은 40년 묵은 장기민원을 해결했고, 육군은 노후한 관측설비에 대신 첨단관측장비를 지원받아 경계기능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김영란 국민권익 위원장은 "장기간 지속되어 온 주민불편이 해소되고 관광객 유치가 활발해져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은성기자
15.2 X 8.5 cm

江原日報

2011년 03월 18일 (금)
15면 인물

“해변 철책 철거로 시민 위한 경제적 효과 기대”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 강릉 방문

강릉시 사천면 해변의 군 철책 철거와 관련한 현장조정회의를 위해 17일 강릉을 찾은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사진)은 “해변의 철책 철거로 이번 여름에 주민들이 경제적 효과를 얻고 시민들과 외지 관광객들의 해변 이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22면

김 위원장은 “관광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지역주민들의 숙원이 이뤄지고 군부대는 최첨단 장비를 강원도와 강릉시로부터 지원받는 효과를 거두게 돼 서로 윈윈하는 의미가 있다”고 이번 조정회의 결과를 평가했다. 그는 또 “서로 원하는 지역과



범위가 다르고 비용문제도 있어 군부대, 강릉시, 주민들의 양보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합의가) 어려웠을 것이다”며 “(당사자끼리) 직접 합의가 어려운 것을 위원회가 국가 입장에서 역할을 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동해안 전체의 해변 철책 철거를 조정할 용의는 없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민원이 들어와야 가능하다”고 답변, 추후 예상되는 민원 제기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강릉=정익기기자

8.9 X 10.5 cm

江原日報

2011년 03월 18일 (금)
22면 지역

사천면 주민 40년 숙원 軍 철책 없앤다

사천해변 군 경계용 철책 590m 국민권익위원회 현장조정으로 올 상반기 내 철거 합의

개발 제한 등 관광손실 이유로 지난해 집단 민원 제출

시 경관형 고가초소·감시장비 설치·도 비용 일부 지원

【강릉】강릉시 사천면 주민의 40년 숙원이던 사천해변의 군 경계용 철책 590m가 국민권익위원회의 현장조정으로 올 상반기 내에 철거되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7일 강릉시 사천면사무소에서 김영란 위원장 주재로 지역주민들과 이인태 육군 제23사단장, 최명희 강릉시장, 김홍주 도 환경해충장소장 등이 참여한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군 경계용 철책을 철거하는 합의안에 서명했다.

사천해변은 깨끗한 백사장과 100년 이상 된 송림으로 이름난 관광지

이지만 1971년 군 경계용 철책이 설치되면서 인근 주민들의 해변 출입이 자유롭지 못했다.

특히 220m에 이르는 해수욕장 구간마저 철책이 설치되면서 개발 제한, 관광객 감소 등 지역 관광손실도 상당해 지난해 9월 사천면 주민 2,250여명이 국민권익위에 철책 철거를 요구하는 집단 민원을 제출했다.

이날 조정회의에서는 군부대는 사천해변의 군 경계용 철책 1,200m 중 해수욕장 구간 등 590m를 철거하고 강릉시는 경관형 고가초소와 광학 감시장비 등을 설치하며 강원도는 장비



◇강릉시 사천해변 군(軍) 경계용 철책 590m가 국민권익위원회의 현장 조정으로 여름해변 개장 전에 철거된다. 17일 김영란 위원장(가운데)이 현장 방문, 군부대와 강릉시 관계자들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강릉=최유진기자

시설 설치비용 일부를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주민들은 “깨끗한 백사장과 송림이 우거져 관광명소로 손색이 없는데도 해변에 설치된 철책 때문에 관광

객 유치에 안 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애를 먹었다”며 “철책 철거를 계기로 관광 활성화와 지역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익기기자 igjung@kmnews.co.kr

20.8 X 12.4 cm

〈KBS 뉴스9〉 사천 해변 철책 철거된다

2011. 3. 17.(목)

〈앵커멘트〉

아름다운 강릉 사천해변을 가로막고 있던 철책이 철거됩니다.

주민들은 관광객이 늘게 생겼다며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엄기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푸른 해송밭과 어울린 새하얀 백사장과 항구. 하지만 바다를 가로막는 철책이 아름다운 경관을 해칩니다.

주민들의 오랜 걱정거리였던 사천해변의 철책이 사라집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군 당국, 강릉시, 주민 등은 오늘 현장조정회의를 갖고 이런 내용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해수욕장 구간의 철책 590미터를 없애는 대신, 강릉시가 강원도의 지원아래 군에 고가초소와 적외선 감시장비 등을 설치해 주기로 한 겁니다.

〈인터뷰〉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

"비용문제가 있어서 군부대와 강릉시, 주민들의 양보가 없었으면 이뤄지기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주민들은 오랜 소원을 풀게됐다며 기뻐합니다.

당장, 올 여름 철책이 없어져 관광객이 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조규백 주민대표

"당초 300m 철거하기로 시하고 얘기가 됐는데, 600미터 가까이 철거가 되니 더 바랄게 없지요"

하지만 동해안 전체의 경관변화는 아직 거북이 걸음입니다.

강원도가 지난 2007년부터 철거해온 동해안 철책은 36킬로미터 가량. 전체 철책의 17%에 그칩니다. 하지만 철거사업은 지난해로 모두 끝나, 당장 올해부터 철거 사업계획은 물론 예산조차 세워져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게다가 남북관계가 계속 얼어붙으면서 군이 철책 철거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앞으로 추가적인 철책 철거가 쉽지 않을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NEWS 엄기숙 입니다.

2011-03-17 (21:00)

〈강릉 MBC〉 사천 철책 철거 합의

2011. 3. 17.(목)

◀ANC▶ 수 년째 민원이 제기된 강릉 사천해변의 군 경계 철책 철거 문제가 해결책을 찾게 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군과 행정기관, 주민들간에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이르면 올 여름 해변 개장 전까지 철거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인성 기잡니다.

◀VCR▶ 강릉시 사천면 사천해변.

백사장에는 지난 1971년 설치된 낡은 군 경계용 철책이 길게 이어져 있습니다.

지난해, 사천면 주민 2,200여명은 송림과 해변을 가로막고, 미관을 해치는 철책을 철거해달라는 민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냈습니다. 이후 국민권익위원회는 4차례의 현장 조사와 8차례의 사천 협의를 통해 조정안을 냈습니다. 강릉시와 강원도가 군 경계시설을 보강하는 대신 군당국이 철책 590m를 철거한다는 겁니다. 이를 23사단과 강릉시, 강원도, 주민들이 모두 받아들여 마침내 40년 묵은 철책이 철거되게 됐습니다.

◀INT▶김영란 위원장/국민권익위원회 : "어려웠던 조정 이끌어내 기뻐"

오랜 숙원이 해결되는 것에 주민들은 기쁨을 감추지 못합니다.

◀INT▶조규백 주민 대표 : "너무너무 기쁘다."

지금까진 이 작은 출입구로만 백사장을 드나들 수 있었지만 앞으로 철책이 철거되면 관광객들은 사천해변을 이용하기 편해질 걸로 기대됩니다. 또, 울창한 송림과 시원한 바다 경관을 함께 갖추게 돼 여름 피서철 사천지역 경기 전망도 밝게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릉MBC 보도부 김인성 기자

친서민 행정위해 강원도 찾은 김영란 위원장

기사입력 2011-03-17 15:33



【서울=뉴스시스】 박세연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 김영란 위원장(중앙)이 17일 오후 사천해수욕장 군용 철책 철거 현장조정회의를 마친 뒤, 관계관, 주민들과 함께 기념 촬영 하고 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원주시 군부대 신축 반대 집단민원, 군사보호구역 확장 않고 주민 체육시설 건립 합의

민원번호 : 2BA-1009-010289(국방보훈민원과, 서상원 조사관)

(‘11. 1. 27.)

민원개요

강원 원주시 소초면 장양리에 신축중인 육군 포병부대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부대 신축으로 인해 지가하락 등의 피해를 받고 있으니,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및 이 건 민원 마을의 발전 방안 마련 요구에 대해, 부대 경계선을 기존 경계선 밖으로 보호구역을 추가로 설정하지 아니하고 마을 발전을 위해 마을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하는 조정을 통해 군부대 신축과 마을 발전을 동시 만족하는 대안 마련

1 당사자

- 신 청 인 : 강원 원주시 소초면 장양리 주민 53가구(이장 ○○○)
- 피신청인 : 육군참모총장
- 관계기관 : 원주시장

2 민원내용

- 육군 포병부대를 마을에 인접하여 신축하고 있어 건축허가 제한 등 재산권 피해 우려되어 재산권보호 대책 마련 요구

3 피신청인 등 의견

가. 육군참모총장

-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책을 마련할 수는 있으나, 군 부대인 피신청인의 특성상 마을 발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

나. 원주시장

- 마을 발전을 위해 일정 부지를 매입해 마을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피신청인의 지원이 필요함

4 주요 쟁점사항

- 군부대 신축으로 건축물 높이 제한 등 주민 재산권 침해
- 마을 발전 방안 마련

5 갈등 분석

가. 민원발생배경 및 주요사실관계

- 군 부대 신축으로 인해 지가하락 등의 피해를 받고 있다며, 피해 최소화 및 마을 발전 방안 마련 요구 고충민원 제기
 - ※ 2010. 9. 강원 원주시 소초면 장양리 거주 53가구(대표: 이장 ○○○)
- 이에 대해 군 부대에서는 ‘피해 최소화 방안은 논의가 가능하나, 마을 발전 방안은 군 본연의 임무상 불가능하다’고 답변
- 마을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해 원주시 역할 대두
- 집단민원의 합리적 조정해결 필요
 - 위원회에서는 신청인, 피신청인 및 관계기관의 의견 등을 조율하여 민원 해결방안을 모색

나. 해결 목표

- 포병부대 신축을 둘러싼 집단민원에 대해 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국책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최적의 해법 마련
 - 모두가 win-win 할 수 있는 갈등 해결 방안 창출

6 갈등해결과정

가. 진행과정 개요

- 2010. 9. 1. : 고충민원 접수
- 2010. 9. 13. : 실지방문조사(1차)
 - 장소 : 마을회관, 공사 현장 사무소
 - 참석 : 신청인(대표자 포함 주민 5명), 육군본부(무기정책과)
 - 신청인 요구 사항 정리 및 피신청인 입장 확인

- 신 청 인 : 피해 최소화 및 마을 발전 방안(체육시설 건립) 마련 요구
- 피신청인 : 피해 최소화 방안만 논의 가능
- 2010. 10. 7. 피신청인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답변자료 접수
 - 피신청인 : 피해 최소화 방안으로 군사시설 보호구역 미설정 제안
 - 관계기관 : 마을 발전 방안으로 제안된 체육시설 건립 소요 비용 제출
- 2010. 11. 3. : 실지방문조사(2차)
 - 장소 : 마을회관, 공사 현장 사무소, 원주시청
 - 참석 : 신청인(대표자 포함 주민 3명), 육군본부(무기정책과), 원주시(건강체육과), 위원회(국방보훈민원과)
 - 마을 체육시설 건립시 소요 비용 분담 방법 및 분담액 조율
- 2010. 11. ~ 2010. 12. : 기관 협의
 - 육군본부와 원주시간 비용 분담 방법 및 분담액 조율을 위해 우리 위원회 주관으로 수십 회 전화를 이용한 협의
- 2010. 12. 22. : 실지방문조사(3차)
 - 장소 : 마을회관
 - 참석 : 신청인(대표자 포함 주민 7명), 육군본부, 원주시(건강체육과), 위원회
 - 1차 조정안 도출, 1월 초까지 세부사항 추가 논의
- 2011. 1. 14. : 실지방문조사(4차)
 - 장소 : 마을회관, 공사 현장 사무소, 원주시청
 - 참석 : 신청인(대표자 포함 주민 6명), 육군본부, 원주시(건강체육과), 위원회
 - 최종 조정안 도출, 주민대상 설명, 조정 회의 장소 확인

7 조정 (합의) 결과

가. 조정 · 합의 최종결과

- 주민 재산권 피해 최소화
 - 부대 최외곽경계선 밖으로 보호구역 ※ 미설정
 -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상 최대 1킬로미터 범위 이내 설정 가능
- 마을 발전 방안
 - 마을 체육시설(게이트볼장, 테니스장) 건립
 - 원 주 시 : 체육시설 부지(990㎡) 매입, 체육시설 설치(총 6억원 예상)
 - 육군본부 : 체육시설 부지 성토(5t트럭 350대)
 - 배수시설, 구조물(석축) 설치, 평탄작업(총 1,700만원 예상)

- 부대 신축 반대 현수막 제거 등 농성 해제
 - 강원 원주시 소초면 곳곳에 설치한 ‘부대 신축 반대’ 현수막 및 집단 행동을 위해 공사 현장 입구에 설치한 농성 천막 자진 철거

나. 위원회 조정·합의문

- 강원 소초면 장양리 ○○-○번지 외 1필지(990㎡)(이하 ‘사업 대상 토지’라 한다)에 대해 향후 관계기관에서 실시하여 나오는 감정평가금액에 토지를 매각할 것과, 관계기관이 사업 대상 토지를 매수하기 전이라도 이를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며, 2011. 1. 31.까지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소유자의 ‘토지 매각 동의서’와 ‘토지 사용 승낙서’를 관계기관에게 제출한다.
- 본 조정서에 서명한 7일 이내에 ‘부대 신축 반대’와 관련된 현수막, 천막 등을 철거하고, 이후 이와 관련한 민원을 제기하지 아니한다.
- 피신청인은 아래와 같은 사항을 이행한다.
 - 관계기관으로부터 신청인의 ‘토지 매각 동의서’ 및 ‘토지 사용 승낙서’ 접수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사업 대상 토지에 체육시설 부지조성을 위한 토사골재지원 및 평탄작업을 실시한다.
 - 부대 경계선을 기존 경계선 밖으로 확대하지 아니하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 보호구역을 추가로 설정하지 아니한다.
- 관계기관은 신청인의 ‘토지 매각 동의서’ 및 ‘토지 사용 승낙서’를 접수한 즉시 피신청인에게 통지하고, 2012. 6. 말까지 생활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공사에 착공한다.

수용-이행 여부 및 시사점

가. 신청인-피신청인 수용 및 이행여부

- '11. 6. 30. : 체육시설 부지 매입
- '12. 6. 30. : 체육시설 착공

나. 시사점

- win-win 해결의 모범 제시
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국책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대안을 끌어냄으로써 이해당사자 모두 win-win 하는 결과 도출한 사례로, 군부대 신축 민원 해결의 한 모델로 제시될 수 있다 하겠음.

원주시 소초면 포병부대 신축 집단민원.. '원-원'

권익위 중재로.. 신축하되 군사보호구역 확장 않기로

【원주=연합뉴스】 김영인 기자 = 강원 원주시 소초면 장양리 일대의 포병부대 신축을 반대하는 지역주민의 집단 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해결됐다.

국민권익위는 27일 원주시청에서 시와 주민 대표, 군부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장양리 주민 52가구가 제기한 포병부대 신축 반대 집단민원에 대해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주민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국민권익위의 중재로 포병부대를 신축하더라도 부대 외곽 경계선 밖으로 군사보호구역을 확장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또 원주시는 마을주민들을 위해 990㎡ 규모의 체육시설 부지를 확보해 테니스장과 게이트볼장을 설치하고 주민들은 '부대 신축 반대' 현수막과 농성 천막을 철거하기로 했다.

회의를 주재한 국민권익위 김홍갑 상임위원은 "이번 조정으로 주민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국책사업도 추진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해법이 마련됐으며 특히 체육시설을 설치기로 한 시의 노력에 감사한다"라고 말했다.

이 일대 주민들은 포병부대 신축으로 지가하락 등의 재산권 피해가 우려된다며 지난해 9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집단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kimyi@yna.co.kr

YBN영서방송

신축 포병부대, 주민갈등 봉합

신강현 기자 ksshin@ybn.co.kr 2011-01-27 | Hit:11 |

[앵커]

국방부가 원주시 소초면 장양리에서 포병부대 조성 공사를 추진하면서 주민과 갈등을 빚어왔는데요.

결국 국민권익위원회가 중재에 나서면서 갈등이 일단락됐습니다.

부대 측이 주민 요구를 수용키로 하면서 주민들도 천막농성을 풀었습니다.

보도에 신강현 기자입니다.

[기자]

원주시 소초면 장양리에 있는 포병부대 신축으로 지역주민과 군부대간 갈등이 수개월동안 지속됐습니다.

주민들은 멀리 떨어져 추진하기로 해놓고 마을에서 불과 50여 미터 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공사를 하고 있다며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또 부대 신축으로 인해 지가하락 등의 피해를 받고 있으니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중재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27일 원주시청에서 장양리 주민 52가구가 제기한 집단민원에 대해 현장조정회의가 개최됐습니다.

현장조정회의 결과 군은 포병부대를 신축하더라도 부대 외곽 경계선 밖으로 군사호보구역을 확장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sync- 이민영 / 육군본부] --- “저희들은 앞으로 사전에 주민들과 대화할 수 있는 채널을 열어 놓고 이행하기로 약속한 사항 책임지고 이행..”

또 마을주민들은 필요한 토지를 매각하고 ‘부대신축반대’와 관련한 현수막과 천막을 철거하고 이와 관련한 민원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int- 박인순 / 마을주민] --- “조정결과 만족합니다, 그동안 협의를 위해 애써준 분들에게 감사..”

원주시는 마을 발전을 위해 부지를 매입하고 생활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공사에 착공하기로 했습니다.

[sync- 박용훈 / 원주시부시장] --- “원주시가 해야할 것들은 원칙적으로 진행..진행과정에

서 이의가 있으면 언제든지 대화..”

이번 중재로 군부대신축 민원발생해결의 한 모델이 제시됐습니다.ybn뉴스 신강현(영상 - 홍 승택)입니다.

신강현 기자 ksshin@ybn.co.kr

GTB 강원민방

집단민원 상생 합의 (R)

2011-01-27 오후 8:20:00

[앵커]

원주 포병부대 신축을 반대하는 주민 집단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해결됐습니다.
주민과 군부대가 상생하는 합의도출로, 다른 군부대 관련 민원 해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종우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터]

주민반발에 부딪혀 난항을 겪던 포병부대 신축 문제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3년만에 해법을 찾았습니다.
군은 당초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 포병부대를 신축하더라도 부대외곽 경계선 밖으로 군사보호 구역을 확장하지 않기로 주민과 합의했습니다.
주민들은 반대 현수막과 천막 농성을 중단하고 부대신축에 이의를 달지 않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박인순 이장/원주 장양리)

"인터뷰"

원주시는 마을에 테니스장과 게이트볼장 등 체육시설을 건립하기로 하면서 합의 도출에 일조했습니다.

[인터뷰]

(김홍갑 /국민권익위 상임위원)

"인터뷰"

국민권익위는 이번 중재가 주민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국방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상생 모델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주 혁신도시 군 훈련장 이전 등 군부대 시설관련 민원해결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GTB뉴스 이종웁니다.

이종우 jongdal@igtb.co.kr



원주시 소초면 포병부대 신축을 둘러싼 주민들과 군당국간의 오랜 갈등이 국민권익위원회 중재로 해결됐습니다.

국민권익위는 "군당국은 포병부대를 신축하더라도 부대 외곽 경계선 밖으로 군사보호구역을 확장하지 않기로 했으며, 이에따라 주민들은 농성을 풀기로 전격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시아경제

권익위, 원주시 포병부대 신축 집단민원 해결 군사보호구역 확장 않고 체육시설 건립에 합의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장양리 일대에 포병부대 신축으로 인해 발생한 지역주민과 군부대간 갈등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해결됐다.

27일 권익위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강원 원주시청에서 장양리 주민 52가구가 제기한 집단민원에 대해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해 ▲군은 포병부대를 신축하더라도 부대 외곽 경계선 밖으로 군사보호구역을 확장하지 않고 ▲원주시는 마을 주민들을 위한 체육시설을 건립하며 ▲마

을 주민들은 '부대 신축 반대' 현수막과 농성천막을 철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합의안을 성사시켰다.

원주시 소초면 장양리 거주 주민들은 마을 인근에 군이 포병부대를 신축하기로 하면서 지가 하락 등의 재산권 피해를 받게 됐다며 지난해 9월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권익위는 수차례의 현장조사와 실무조정협의를 통해 민원을 조정했으며 부대 내 핵심시설들이 부대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점을 고려해 군사보호구역을 경계선 밖으로 설정하지 않기로 하는 조정안을 만들어내면서 이번 민원을 해결하게 됐다.

합의안에 세부 실행내용으로 원주시는 체육시설 부지를 매입해 게이트볼장 등을 설치하기로 했고 육군본부는 이를 도와 체육시설 부지에 대한 성토 및 평탄작업을 하기로 했다. 현장조정회의를 주재한 김홍갑 권익위 상임위원은 "권익위의 이번 조정으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국책사업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해법이 마련됐으며 특히 예산을 들여 체육시설을 설치하기로 한 원주시의 노력에 깊이 감사한다"고 전했다.



국민권익위 원주시 포병부대 신축 집단민원 해결

기사입력 2011-01-27 15:01



【원주=연합뉴스】 김영인 기자 = 강원 원주시 소초면 장양리 일대의 포병부대 신축을 반대하는 지역주민의 집단 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해결됐다. 국민권익위는 27일 원주시청에서 시와 주민 대표, 군부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장양리 주민 52가구가 제기한 민원에 대해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주민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 하기로 합의했다. 사진은 관계자들이 합의를 펼쳐 보이고 있다. kimyi@yna.co.kr



포병부대 신축 현장 둘러보는 김홍갑 상임위원

기사입력 2011-01-27 22:02



【원주=뉴스시스】 박동욱 인턴기자 = 27일 오후 강원 원주시 소초면 일대 포병부대 신축 현장을 찾은 국민권익위원회 김홍갑 상임위원(왼쪽 두번째)이 관계기관 대표들과 함께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제공) photo@newsis.com

포병부대 신축 인근 지역 갈등 현장조정회의

관 : 국민권익위원회, 및 장소 : 2월 1. 27(목) 원주시청



'포병부대 신축' 민원 타결

◇원주시 소초면 장양리 포병부대 신축과 관련된 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타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원주시청 7층 투자상담실에서 주민과 국방보훈 민원과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민원조정회 나서 국방부는 군사보호지역 확대 중지 및 주민들을 위한 체육시설 건립을 하기 위해 하는 한편 주민들은 포병부대 신축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했다.

원주/ 안종률기자 <yahn@jeonmae.co.kr>

15.6 X 9.7 cm



◇원주시 소초면 장양리 일대 포병부대 신축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현장조정회의가 27일 시청에서 열렸다.

소초면 포병부대 주민 민원 해결

국민권익위 현장조정회의서 군사보호구역 추가 없기로

【원주】원주시 소초면 장양리 일대 신축 중인 포병부대와 관련한 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 현장조정으로 해결됐다.

주민 민원에 대해 권익위가 나서 합의 조정을 이끌어 낸 것은 원주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권익위는 27일 시청에서 지역 주민들과 원주시, 육군본부 등 이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권익위는 육군본부측이 포병부대를 신축하더라도 부대 경계선을 기존 경계선 밖으로 확대하지 않고 군사보호구역을 추가로 설정하지 않는 조정안을 만들어 합의를 이끌어냈다. 또 원주시와 육군본부는 시가 토지를 매입하고 군측이 평탄작업을

실시하는 등 주민들을 위한 체육시설을 건립하기로 했으며 주민들은 '부대 신축 반대' 현수막 및 농성천막을 철거하기로 했다.

그동안 소초면 장양리 주민들은 육군본부가 마을 인근에 포병부대를 창설키로 하고 지난해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자 지가 하락 등의 재산권 피해를 호소하며 반발을 계속해왔지만 해결이 되지 않아 지난해 9월 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제기했다.

김홍갑 권익위 상임위원은 "제3의 조정기관인 권익위를 통해 주민들은 군측에 편하게 의견을 전달할 수 있었고 군측도 양보안을 수용했다"며 "주민과 군, 원주시가 잘 협의해 조정안대로 잘 이행해달라"고 말했다.

김설영기자 snoo06@komevs.co.kr

10.3 X 16.4 cm

가평군 예비 헬기작전지시 폐쇄로 주민 58년 숙원해결

민원번호 : 2CA-1009-031892(국방보훈민원과, 김문영 조사관)

(‘11. 7. 22.)

민원개요

경기 가평군 가평읍 읍내리 소재 가평헬기예비작전지시는 비행장 기능이 상실되어 군(軍) 차량운전 연습장으로 사용되고 있는바, 가평헬기예비작전지시를 폐쇄하고 운전 연습장을 대체지로 이전하여 가평시가지가 개발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민원에 대해, 기능이 상실된 헬기예비작전지시를 폐쇄하고, 군(軍) 차량운전연습장을 대체지로 이전하여 군사훈련여건을 보장하면서 가평시가지의 발전여건 마련 장기간 지속되어온 주민불편이 58년 만에 해소

1 당사자

- 신청인 : 경기 가평군 가평읍 주민 대표 ○○○외 438명
- 피신청인 : 육군 제○○야전군사령관(피신청인1), 육군 제○○야전수송교육단장(피신청인2), 가평군수(피신청인3)
- 관계기관 : 경기도지사

2 민원내용

- 비행장 기능이 상실되어 군(軍) 차량운전 연습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가평헬기예비작전지지의 폐쇄 및 군(軍) 차량운전 연습장(이하 '운전 연습장'이라 한다) 이전 요구

3 피신청인 등 의견

가. 육군 제○○야전군사령관, 육군 ○○야전군수송교육단장

- 가평헬기예비작전지지의 폐쇄는 군사작전상 받아들이기 곤란하며, 가평헬기예비작전지지의 이전 대체지에 운전 연습장 부지와 각종 운전연습 시설이 설치·지원되지 아니할 경우, 운전 연습장의 이전은 곤란하다

나. 가평군수

- 육군 ○○야전군사령관이 가평헬기예비작전기지를 폐쇄하고, 운전 연습장의 이전에 동의할 경우, 운전 연습장 이전 대체부지와 비용을 부담하겠다

4 주요 쟁점사항

- 헬기예비작전기지의 폐쇄 및 군(軍) 차량운전 연습장 이전 가능 여부
- 차량운전 연습장 대체 부지 확보 및 비용 부담

5 갈등 분석

가. 민원발생배경 및 주요사실관계

- 가평시가지의 발전을 위해 비행장 기능이 상실되어 군(軍) 차량운전 연습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가평헬기예비작전기지 폐쇄 및 군(軍) 차량운전 연습장의 이전을 요구하는 고충민원 제기, 이에 대해
 - * 2010. 9. 9. 지역주민 438명 가평헬기예비작전 폐쇄 등 요구(2CA-1009-031892)
 - 군(軍) 부대는 ‘대체지가 제공될 경우, 군(軍) 차량운전연습장의 이전은 가능하지만, 가평헬기예비작전기지의 폐쇄는 불가하다’는 입장이고,
 - 관련 지자체는 ‘헬기예비작전기지 및 운전 연습장 대체지 제공이 가능하다’고 답변
- 이에 따라 가평헬기예비작전기지의 폐쇄 및 운전 연습장의 이전을 위한 대체지 확보 가능성이 대두되어 집단민원의 합리적 조정해결 필요
 - 위원회에서는 신청인, 피신청인 및 관계기관의 의견 등을 조율하여 민원 해결방안을 모색

나. 해결 목표

- 관계기관 역할분담(조정)을 통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 기능이 상실된 헬기예비작전기지를 폐쇄하고, 군(軍) 차량운전연습장을 대체지로 이전하여 군사훈련여건을 보장하면서 가평시가지의 발전여건 마련

6 갈등해결과정

가. 진행과정 개요

- '10. 9. 9. : 집단고충민원 제기 (지역주민 438명)
- '10. 9. 9.~'11. 5. 31. : 현장 실지조사(10회) 및 관계기관방문(12회)
- '11. 1. 24. : 가평헬기예비작전기지 폐쇄 건의 (육군 제○○야전군사령부)
- '11. 1. 27. : 군(軍) 차량 운전연습장 이전가능 의견제시 (육군본부)
- '11. 2. 18. : 가평헬기예비작전기지 폐쇄 결정 (합동참모본부)
- '11. 3. 11. : 군(軍) 차량운전연습장 이전 대체지 결정 (육군 제○○야전수송교 육단)
- '11. 4. 26. : 군(軍) 차량 운전연습장 이전관련 현장 합동실무회의
- '11. 4. 8. : 군(軍) 차량 운전연습장 이전관련 당사자간 협의 완료
- '11. 5. 26. : 군(軍) 차량 운전연습장 환매권 관련 법률검토
- '11. 5. 31. : 협의사항 완성을 위해 조정회의 개최 합의
- '11. 7. 7.~12. : 조정서(안) 최종합의 (○○군사령부, ○○야수단, 경기도, 가 평군)

* 4회에 걸친 현장방문과 30여 차례 협의를 통해 합의안 마련

7 조정 (합의) 결과

가. 조정 · 합의 최종결과

- 군(軍) 부대는 가평헬기예비작전기지를 폐쇄하고 운전연습장의 이전에 동의하 며, 이에 적극 협력하며, 가평군은 운전연습장 이전에 따른 각종 토지와 시설 등을 지원하고, 경기도는 이전사업을 적극 지원하기로 합의

나. 위원회 조정 · 합의문

- 피신청인1은 가평헬기예비작전기지의 폐쇄 및 운전 연습장의 이전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조치한다.
 - 1) 가평헬기예비작전기지를 빠른 시일 안에 폐쇄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 2) 피신청인2, 3 및 관계기관이 효과적인 군 임무수행과 가평군의 발전을 위하 여 운전 연습장을 이전하는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 3) 운전 연습장의 이전 시기와 방법, 절차, 예산 및 기반시설 설치 등 부대 사업 등은 피신청인 2, 3 및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 피신청인2는 가평읍내 운전 연습장의 이전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조치한다.
 - 1) 운전 연습장의 이전은 육군 제○○야전수송교육단 일원으로 이전한다.
 - 2) 운전 연습장의 이전 시기와 방법, 절차, 예산 및 기반시설 설치 등 부대 사업 등은 피신청인1, 3,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추진한다.
 - 3) 공익사업 변환 조치가 필요한 경우, 원 소유자의 동의와 환매권과 관련한 사항은 피신청인3과 상호 협의하여 조치한다.
 - 피신청인3은 육군 제○○야전수송교육단 일원으로 운전 연습장의 이전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조치한다.
 - 1) 운전 연습장의 이전 시기와 방법, 절차, 예산 및 기반시설 설치 등 부대 사업 등은 피신청인1, 2 및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후, 운전 연습장의 이전 대체부지 및 시설(육군 제○○야전수송교육단 일원)에 대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와 운전연습장 부지(가평군 가평읍 읍내리 ○○○번지 일원)에 대하여 '감정평가' 한다.
 - 2) 피신청인1, 2, 관계기관과 체결한 양해각서(MOU)에 따라, 운전 연습장의 이전 대체부지 및 시설(육군 제○○야전수송교육단 일원)에 대하여 국방부 승인을 받은 후, 그 승인된 사업 추진절차에 따라 세부사업을 추진한다.
 - 3) 공익사업 변환 조치가 필요한 경우, 원 소유자의 동의와 환매권과 관련한 사항은 피신청인2와 상호 협의하여 조치한다.
 - 4) 기타 운전 연습장 이전사업과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행정적 지원을 한다.
 - 관계기관은 육군 제○○야전수송교육단 일원으로 운전 연습장의 이전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조치한다.
 - 1) 운전 연습장을 육군 제○○야전수송교육단 일원으로 이전할 때, 피신청인3의 경기 가평군 가평읍 읍내리 ○○ 일원 가평 군관리계획(지구단위구역, 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의 변경결정 신청 등 사업추진과정에서 필요한 행정절차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 2) 운전 연습장의 이전 시기와 방법, 절차, 예산 및 기반시설 설치 등 부대사업 등은 피신청인1, 2, 3과 협의하여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추진한다.
 - 3) 기타 운전 연습장 이전사업과 관련하여 피신청인3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마. 기타 운전 연습장의 이전과 관련하여 '이전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감정평가' 등 필요한 세부내용은 피신청인1, 2, 3, 관계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조치한다.

수용-이행 여부 및 시사점

가. 신청인-피신청인 수용 및 이행여부

- '11. 7. 31. : 헬기예비작전기지지 폐쇄
- '12. 6. : 군(軍)차량 운전연습장의 이전 시기, 방법, 절차, 예산 관련 양해각서 체결 추진 중

나. 시사점

- win-win 해결의 모범 제시
기능이 상실된 헬기예비작전기지를 폐쇄하고, 군(軍) 차량운전연습장을 대체지로 이전하여 군사훈련여건을 보장하면서
- 가평시가지의 발전여건 마련으로 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대안을 끌어냄으로써 이해당사자 모두 win-win 하는 결과 도출

가평읍내 軍운전교육장 부대로 이전..郡·軍 합의

기사입력 2011-07-22 17:41

【가평=연합뉴스】 임병식 기자 = 경기도 가평군의 도심에 위치한 군(軍) 운전교육장이 옮겨진다.

가평군과 제3야전수송교육단은 이날 오후 가평군청에서 조정회의를 열고 가평읍에 위치한 운전교육장(5만4천409㎡)을 제3야전수송교육단으로 이전한다는 데 합의했다.

가평군과 군부대는 8월에 구체적인 세부 사항을 논의하고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이날 조정회의는 국민권익위원회 중재로 이뤄졌다.

가평군은 부대 안에 새로운 교육장을 지어 옮기고 이전이 완료되면 국방부 소유인 기존 교육장을 양도받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가평군의 한 관계자는 "이번 합의로 교통체증이 줄고 이전하는 교육장 부지를 활용하면 지역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가평읍 중심지에 있는 이 운전교육장은 1953년 '가평 헬기예비작전기지'로 건설됐으나 활용 빈도가 낮게 되자 1975년부터 군 차량 운전교육장으로 바뀌어 하루 군용차량 100여대가 운전 연습을 했다.

가평읍 지역 주민 438명은 지난해 9월 "군 운전교육장으로 인해 가평읍 시가지가 발전되지 않고 있다."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교육장 이전을 요구하는 집단 민원을 낸 바 있다.

andphotodo@yna.co.kr

국민권익위원회, 가평읍내 군 비행장 폐쇄 이전 합의

기사입력 2011-07-22 17:05



【가평=뉴스시스】 22일 오후 경기도 가평군청 회의실에서 가평헬기장 폐쇄 및 차량연습장 이전 요구 집단민원을 제기한 100여명의 지역민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해 헬기장을 폐쇄하고 운전연습장을 이전하는 합의안을 성사시키고 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제공)



가평군 도심에 위치한 군비행장이 38년만에 폐쇄, 이전지로 해 지역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가평군 주민 58년 숙원 풀었다

읍내 軍 비행장 폐쇄 · 운전연습장 이전 합의

지난 1953년 가평군 가평읍 시가지 가장자리에 설치된 군 비행장이 1975년부터 군 차량 운전연습장으로 사용돼 오다가 **국민권익위원회**의 현장조정으로 비행장이 폐쇄되고 운전연습장이 이전할 것으로 보인다.

가평비행장은 1953년 군사작전을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나, 작전환경 등의 변화로 1975년부터 지금까

지 비행장이 아닌 군 차량 운전연습장으로 사용되어 왔다. 이에 가평읍 지역 주민 438명은 '비행장 및 운전연습장으로 인해 가평읍 시가지가 발전되지 않고 있다'며 지난해 9월 **국민권익위**에 비행장 폐쇄와 운전연습장을 이전해 달라는 집단 민원을 낸 바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22일 오후 3

시 가평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지역 주민들과 육군 제30전군사령부 정주교 공병부장, 민광철 육군 제30전수송교육단장, 이진용 가평군수, 방기성 경기도 행정 제2부지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 김대식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군부대는 가평비행장을 폐쇄하고 운전연습장의 이전에 동의하며 ▲가평군은 운전연습장 이전에 따른 각종 토지와 시설 등을 지원하고 ▲경기도는 이전사업을 적극 지원하는 합의안을 마련해 중재에 성공했다.

이번 조정회의를 주재한 김대식 부위원장은 "이번 조정은 권익위가 관계기관 및 주민들과 함께 지난해 9월부터 10개월 동안 10회의 현장조사와 12차례의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함께 노력했고, 군 부대 측에서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문제 해결을 위해 고민한 결과로서, 장기간 지속되어온 주민불편이 58년 만에 해소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가평전종민 기자 jjm@hyundaiilbo.com

15.6 X 25.7 cm

경기신문

2011년 07월 25일 (월)
21면 경기

가평읍 軍 비행장 폐쇄 이전 합의

권익위, 주민 58년 숙원 현장조정 해결

체결시 경제 활성화 가시적 경제효과 기대

〈속보〉지난 1953년 가평군 가평읍 시가지 가장자리에 설치돼 그동안 군(軍) 차량운전연습장으로 비행장의 이전과 관련(본보 7월 22일 보도),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김영란)의 현장조정으로 비행장이 폐쇄되고 이전하게 됐다.

24일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국민권익위**는 지난 22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지역주민들과 육군제3야전군사령부 정주교 공병부장, 민광철 육

군제3야전수송교육단장, 이진용 군수, 방기성 경기도행정제2부지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 김대식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가 개최됐다.

이 현장조정회의에서 군 부대는 가평비행장을 폐쇄하고 운전연습장의 이전 동의했으며 가평군은 운전연습장 이전에 따른 각종 토지와 시설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조정회의를 주재한 김대식 부위원장은 “이번 조정은 권익위가

관계기관 및 주민들과 함께 지난해 9월부터 10개월동안 10회의 현장조사와 12차례의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함께 노력했고 군 부대 측에서 적극적으로 동참해 문제해결을 위해 고민한 결과로서 장기간 지속돼온 주민불편이 58년만에 해소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합의안에 따라 운전연습장 이전관련 세부 이행합의서(MOU)가 체결되면 이전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이전이 완료된 후, 기존 부지는 도로와 주거지역, 공원 등으로 개발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인한 가시적 경제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평=김영복기자 kyb@
15.2 X 10.1 cm

京仁每日

2011년 07월 25일 (월)
06면 지역

가평주민 58년 숙원 ‘해결’

국민권익위, 가평읍내 軍 비행장 폐쇄·이전 합의

1953년 가평군 가평읍 시가지 가장자리에 설치된 군(軍) 비행장이 1975년부터 군(軍) 차량 운전연습장으로 사용되어 오다가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김영란)의 현장조정으로 비행장이 폐쇄되고 운전연습장이 이전할 것으로 보인다.

가평비행장은 1953년 군사작전을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나, 작전환경 등의 변화로 1975년부터 지금까지 비행장이 아닌 군(軍) 차량 운전연습장으로 사용되어 왔다.

이에 가평읍 지역 주민 438명은 ‘비행장 및 운전연습장으로 인해 가평읍 시가지가 발전되지 않고 있다’며 지난해 9월 **국민권익위**에 비행장 폐쇄와 운전연습장을 이전해 달라는 집단 민원을

낸 바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지난 22일 오후 3시 가평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지역주민들과 육군 제3야전군사령부 정주교 공병부장, 민광철 육군 제3야전수송교육단장, 이진용 가평군 군수, 방기성 경기도 행정 제2부지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 김대식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에서 ▲군(軍) 부대는 가평비행장을 폐쇄하고 운전연습장의 이전에 동의하며 ▲가평군은 운전연습장 이전에 따른 각종 토지와 시설 등을 지원하고 ▲경기도는 이전사업을 적극 지원하는 합의안을 마련해 중재에 성공했다.

이번 조정회의를 주재한 김대

식 부위원장은 “이번 조정은 권익위가 관계기관 및 주민들과 함께 지난해 9월부터 10개월 동안 10회의 현장조사와 12차례의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함께 노력하였고, 군(軍) 부대 측에서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문제 해결을 위해 고민한 결과로서, 장기간 지속되어온 주민불편이 58년 만에 해소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안에 따라 운전연습장 이전 관련 세부 이행합의서(MOU)가 체결되면 이전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이전이 완료되면 기존 부지는 도로와 주거지역, 공원 등으로 개발해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인한 가시적인 경제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평 권길행기자
14.6 X 12.9 cm



권익위 '가평 헬기작전기지 폐쇄' 현장회의

국민권익위는 지난 22일 가평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지역주민들과 육군 제3야전군사령부 정주교 공병부장, 민광철 육군 제3야전수송교육단장, 이진용 가평군수, 방기성 경기도 행정 제2부지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 김대식 부위원장 주재로 '가평헬기예비작전기지의 폐쇄 및 군 차량 운전연습장 이전' 현장조정회의를 열었다. 이날 조정회의에서 ▲군(軍) 부대는 가평비행장을 폐쇄하고 운전연습장의 이전에 동의하며 ▲가평군은 운전연습장 이전에 따른 각종 토지와 시설 등을 지원하고 ▲경기도는 이전사업을 적극 지원하는 등의 합의안이 마련됐다.

가평/김민수기자 kim2988@kyeongin.com

8.7 X 11.6 cm

말많던 가평 '軍운전교육장 이전' 확정

郡 조정회의, 교통체증 해소·지역발전 기대

가평군의 도심에 위치한 군(軍) 운전교육장이 이전한다.

가평군과 제3야전수송교육단은 지난 22일 오후 가평군청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중재로 조정회의를 열고 가평읍에 위치한 운전교육장(5만4천409㎡)을 제3야전수송교육단으로 이전하기로 합의했다.

가평군과 군부대는 8월에 구체적인 세부 사항을 논의하고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가평군은 제3야전수송교육단 내에 새로운 교육장을 건립해 이전이 완료되면, 국방부 소유인 기존 운전교육장을 양도받기로 했다.

가평군의 한 관계자는 "이번 합의로 교통체증이 줄고 이전하는 교육장 부지를 활용하면 지역 발전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가평읍 중심지에 있는 운전교육장은 1953년 '가평 헬기예비작

전기지'로 건설됐으나 활용 빈도가 낮게 되자 1975년부터 군 차량 운전교육장으로 바뀌어 하루 군용차량 100여대가 운전연습을 했다.

가평읍 지역 주민 438명은 지난해 9월 "군 운전교육장이 가평읍 시가지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통체증도 유발하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교육장 이전을 요구하는 집단 민원을 낸 바 있다.

가평=고창수기자 chkho@ekgib.com

15.2 X 7.8 cm



가평군, 軍 차량운전 연습장 이전 본격화

기사입력 2011-07-21 14:03

【가평=뉴스시스】 이병훈 기자 = 경기 가평군은 제3야전수송교육단에서 사용하는 군(軍)차량 운전교육장 이전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21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비행장 기능이 상실돼 군 차량운전 연습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가평읍 읍내리 723-6번지 일원 5만4409㎡의 군 시설부지 이전을 위해 22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가평헬기에 비작전기지의 폐쇄 및 군 차량 운전연습장 이전 조정회의를 갖는다.

국민권익위원회 김대식 부위원장 주재로 열리는 조정회의에는 경기도 방기성 행정2부지사, 이진용 군수, 관할부대인 육군 제3야전군사령부 공병부장 정주교 준장, 육군 제3야전수송교육단장 민광철 대령, 민원인 대표 서흥원 가평읍 주민자치위원장, 지역주민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특히 이날 회의는 그동안 군부대 및 관련기관에서 조정협의 및 법적검토한 안에 대한 조정안에 서명함으로써 구체적인 군부대 이전에 대한 계획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군은 2010년 9월 가평 헬기에비작전기지 폐쇄 등의 요구를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하고, 국민권익위원회와 제3야전군사령부, 제3야전수송교육단에 20여 차례 협의 의견 수렴 등을 진행해 왔다.

그 결과 지난 2월 합동참모본부로부터 가평 헬기에비작전기지 폐지를 득했고, 현재까지 가장 큰 문제로 대두돼 오던 신규 부대이전부지에 대해서는 4월 관련부대로부터 제3야전수송교육단 내 부지를 활용하는 절충협의안을 마련하는 성과를 이끌어 냈다.

군 관계자는 "운전교육장 부지는 2020 가평군 기본계획상 시가화예정용지로 돼 있으나 제3야전수송교육단에서 군(軍)차량 운전교육장으로 사용하고 있어 군 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하지 못해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면서 "도심지역에 운전차량들의 시가지통과 및 교육장 진·출입시 교통사고, 교통정체 등 수십 년간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해 왔다"고 말했다.

가평군 군헬기 예비비행장 이전 본격화

기사입력 2011-07-21 19:13 | 기사수정 2011-07-21 19:13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의 군헬기 예비비행장 이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21일 가평군에 따르면 오는 22일 군청에서 가평읍 군헬기 예비비행장 폐쇄 및 군 차량 운전 연습장 이전 조정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김대식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해 방기성 경기도 행정2부지사, 이진용 군수, 정주교 육군 제3군사령부 공병부장, 서흥원 가평읍 주민자치위원장 등 민·관·군 대표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그동안 논의됐던 군헬기 예비비행장 이전을 위한 조정안에 서명, 구체적인 이전 계획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예비비행장은 비행장 기능을 상실하면서 군부대 차량 운전연습장으로만 사용, 교육장을 이용하려는 차량이 시가지를 통과함에 따라 교통사고와 교통정체 등으로 주민들의 불편을 겪어왔다.

특히 예비비행장 부지는 2020 가평군 기본계획상 시가화예정용지로 지정돼 있으나, 운전연습장으로 사용돼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못하는 등 지역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가평군은 예비비행장 이전을 위해 국민권익위와 3군사령부, 관할 부대 등과 20차례에 걸친 줄다리기 협상을 통해 지난 2월 합동참모본부로부터 예비비행장 폐지안을 이끌어냈다.

또 가평군은 예비비행장 이전 부지에 대해 관할 부대와 협의를 펼쳐, 부대 내 부지를 활용하는 절충안도 이끌어냈다.

군은 앞으로 3군사령부와 업무협약(MOU) 체결과 운전연습장 이전 기본 실시설계 등을 추진, 예비비행장 이전을 조속히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전국도민일보

2011년 07월 22일 (금)
01면 종합

軍 차량 운전연습장 이전계획 본격화

가평헬기장 예비작전기지 폐쇄

경기 가평군 가평읍 내 비행장 기능이 상실되어 군(軍) 차량 운전 연습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군 시설 이전계획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군은 비행장 기능이 상실되어 군 차량 운전연습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가평읍 읍내리 723-6번지 일원 5만4409㎡의 군 시설부지 이전을 위해 관할부대 협의와 지역주민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요구한 민원 해소를 위해 22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가평헬기장 예비작전기지의 폐쇄 및 군 차량 운전연습장 이전 조정회의를 갖는다.

국민권익위원회 김대식 부위원장 주재로 열리는 조정회의에는 경기도 방기성 행정2부지사, 이진용 가평군수, 관할부대인 육군 제3야전군사령부 공병부장 정주교 준장, 육군 제3야전수송교육단장 민광철 대령, 민원인 대표 서흥원 가평읍 주민자치위원장, 지역주민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특히 이날 회의는 그동안 군부대 및 관련 기관에서 조정협의 및 법적검토한 안에 대한 조정안에 서명함으로써 구체적인 군부대 이전

에 대한 계획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지역은 2020가평군 기본계획상 시가화예정용지인 제3야전수송교육단에서 군 차량 운전교육장으로 사용하고 있어 군 관리계획(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하지 못함에 따라 지역 발전을 위해 교육장 이용 군 운전차량들의 시가지 통과 및 교육장 진출입시 교통사고, 교통정체 등 수십 년간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해 왔다.

이에 군은 지난해 9월 가평 헬기장 예비작전기지 폐쇄 등의 요구를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하여 부대이전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와 제3야전군사령부, 제3야전수송교육단과 20차례 이상 협의,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고 있다.

그 결과 금년 2월 합동참모본부로부터 가평 헬기장 예비작전기지 폐지를 득하였으며 현재까지 가장 큰 문제로 대두돼 오던 신규 부대 이전부지에 대해서는 4월 관련 부대로부터 제3야전수송교육단 내 부지를 활용하는 절충협의안을 마련하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가평=박용준기자

10.2 X 16.2 cm

일간경기

2011년 07월 22일 (금)
06면 지역

軍 부대 이전 구체적 계획 마련

가평군 군차량 운전연습장 부지 도시계획시설로 편입절차 본격화

군 “주민숙원 해결 에코피아 가평발전 앞당길 것”

가평군은 군 차량운전 연습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가평읍 일원의 부지를 도시계획시설로의 편입 절차가 본격화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헬기장 기능이 지난 1989년 9월 상실됐지만 군 차량운전 연습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가평읍 723-6번지 일원 5만1400㎡의 군 시설 부지 이전을 통해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22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가평헬기예비작전기지의 폐쇄와 군 차량 운전연습장 이전 요구에 따른 조정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는 국민권익위 주재로 방기성 경기도 행정2부지사, 이진용

가평군수, 국민권익위원회 김대식 부위원장 등을 비롯, 육군 제3야전군사령관 업무수행자 군수참모처장 정주교 준장, 육군 제3야전수송교육단장 민광철 대령, 가평군 반대추진위원회 서흥원 대표 및 회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특히 그동안 군부대와 관련기관에서 조정협의(안) 등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법적 검토를 마치고 조정회의를 가짐으로써 군부대 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될 전망이다.

지난 1989년 9월 헬기장 철수 후 현재 제3야전수송교육단에서 운전교

육장 실습코스로 사용 중인 교육장이 가평읍 도심지역에 위치하여 운전교육차량 진입·출입 대기로 교통사고 등 수십 년간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해 왔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 2004년 8월 반대추진위원회를 결성하여 주민설명회와 가두행진을 갖는 등 2004년 10월 주민반대의견 국회청원 제출, 2009년 4월 국회국방위원장 방문 등 군 운전교육장 이전을 위한 노력을 했으나 2007년까지 대체부지 선정을 위해 군부대와 협의하던 중 대체부지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이에 군은 지난 2010년 9월 가평헬기예비작전기지 폐쇄 등의 요구를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신청을 제

기하여 부대이전계획 및 제3야전수송교육단 의견 수렴 등을 20여 차례 이상 진행해 왔다.

그 결과, 올 2월 가평비행장 해제를 득하였으며, 현재까지 가장 큰 문제로 대두돼오던 신규 부대이전부지에 대해서 올 4월 국민권익위, 육군본부, 관련부대로부터 제3야전수송교육단으로 활용하는 절충안을 협의하는 성과를 이끌어 냈다.

군 관계자는 “향후 육군 제3야전사령부와 MOU 체결 등 군 운전연습장 이전 기본 실시절차 추진을 통해 주민 숙원을 해결하고 에코피아 가평발전을 앞당겨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가평=송영호기자
hoho9024@iganigco.kr
20.8 X 13.1 cm

신아일보

2011년 07월 22일 (금)
06면 경기

군사 차량 운전연습장 이전 계획 본격화

가평·국민권익위, 오늘 군청서 조정회의 개최

경기도 가평군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가평읍내 군사차량 운전연습장(구 헬기장) 이전 계획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군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비행장 기능이 상실되어 군 차량 운전 연습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가평읍 읍내리 723-6번지 일원 54,409㎡의 군 시설부지 이전을 통해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자 22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가평헬기 예비 작전기지의 폐쇄 및 군 차량 운전연습장 이전 요구에

따른 조정회의를 갖는다고 21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주재로 열리는 이번 회의는 경기도 방기성 행정2부지사, 이진용 군수, 국민권익위원회 김대식 부위원장, 육군 제3야전군사령관 업무수행자 군수참모처장 정주교 준장, 육군 제3야전수송교육단장 민광철 대령, 가평군 반대추진위원회 서흥원 대표, 회원등이 참석한다.

특히 이날 회의는 그동안 군부대 및 관련기관에서 조정협의(안)

등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법적 검토를 마치고 조정회의를 가짐으로써 군부대 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군은 앞으로 육군 제3야전사령부와 MOU 체결 및 군 운전연습장 이전 기본 실시절차 추진 등을 통해 주민 숙원을 해결하고 에코피아 가평발전을 앞당겨 나갈 방침이다.

가평/정원영기자
wyjung@shinailbo.co.kr

15.0 X 9.4 cm

경기신문

2011년 07월 22일 (금)
21면 경기

가평 軍시설 이전계획 본격화

가평군 발전을 저해하고있는 제3야전수송교육단의 군(庫) 차량 운전 연습장을 사용되고있는 가평읍 읍내리 일원 5만4천409㎡의 군사시설부지 이전해 22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가평헬기예비작전기지의 폐쇄 및 군 차량 운전연습장 이전 조정회의를 갖는다.

21일 군에 따르면 군은 비행장으로 사용되던 기능이 상실돼 군 차량 운전 연습장으로 사용되고있는 가평읍 읍내리 일원 5만4천409㎡의 군사시설부지 이전해 22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가평헬기예비작전기지의 폐쇄 및 군 차량 운전연습장 이전 조정회의를 갖는다.

국민권익위원회 김대식 부위원장 주재로 열리는 조정회의는 경기도 방기성 행정2부지사, 이진용 군수, 관할부대인 육군제3야전군사령부

오늘 軍차량 운전연습장 이전 조정회의 부지 5만4천㎡ 계획적인 도시개발 추진

공병부장 전주교 준장, 육군제3야전수송교육단장 민광철 대령, 민원인 대표 서흥원 가평읍 주민자치위원장 지역주민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특히 이날 회의는 그동안 군부대 및 관련기관에서 조정협의 및 법적 검토한 안에 대해 조정안에 서명함으로써 구체적인 군부대 이전에 대한 계획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이 지역은 2020년 가평군 기본계획상 시가화에정용지로 돼 있

으며 가평읍 도심지역에 위치해 있어 군 운전차량들의 시가지 통과 및 교육장 진·출입시 교통사고, 교통정체 등이 수십년 간 발생해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군은 지난 2010년 9월 가평 헬기예비작전기지 폐쇄 등의 요구를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 부대이전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와 제3야전군사령부, 제3야전수송교육단에 20여차례 이상 협의 의견을 수렴

등을 진행해 왔다.

그 결과 지난 2월 합동참모본부로부터 가평헬기예비작전기지 폐지를 득했고 현재까지 가장 큰문제로 대두돼오던 신규 부대이전부지에 대해서는 4월 관련부대로부터 제3야전수송교육단내 부지를 활용하는 절충 협의안을 마련하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육군 제3야전사령부와 MOU체결 및 군 운전연습장 이전 기본시설설계 추진등을 통해 지역주민 숙원을 해결하고 예코피아-가평발전을 앞당겨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가평=김영복기자 kyb@
20.4 X 10.3 cm

경인일보

2011년 07월 22일 (금)
21면 지역

軍차량 운전연습장 이전추진

가평지역 비행장시설부지 사용... 지역발전 저해 등 민원제기

“도심지역 이용 군차량들로 주민 피해 수십년”

국민권익위주재 조정회의서 구체적계획 마련

가평지역내 소재한 군(庫) 차량 운전 연습장 시설에 대한 이전 추진이 본격화된다.

가평군은 22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비행장으로 사용되던 군(庫) 차량 운전 연습장 시설에 대한 군사시설이전 조정회의를 갖는다고 밝혔다.

21일 군에 따르면 가평읍 읍내리 723의6 일원 5만4천409㎡의 군사시설부지는 지난 1953년 비행장시설로 건설된 군 시설이었지만 비행장 기능이 상실돼 지난 1975년부터 군 차량 운전 연습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주민불편은 물론 지역발전을 저해한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와관련 군(庫)은 국민권

익위원회 김대식 부위원장 주재로 경기도 방기성 행정2부지사, 이진용 군수, 관할부대인 육군 제3야전군사령부 공병부장 전주교 준장, 육군 제3야전수송교육단장 민광철 대령, 민원인 대표 서흥원 가평읍 주민자치위원장, 지역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평헬기예비작전기지의 폐쇄 및 군 차량 운전연습장 이전' 조정회의를 갖기로 했다. 특히 이번 조정회의에는 그동안 군부대 및 관련기관에서 조정협의 및 법적 검토한 안에 대해 조정안에 서명함으로써 구체적인 군부대 이전에 대한 계획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가평군은 지난해 9월 가평 헬기예비작전기지 폐쇄 등의 요구를 국민

권익위원회에 제기해 부대 이전을 위해 국민권익위와 제3야전군사령부, 제3야전수송교육단과 20차례 이상 협의해 지난 2월 합동참모본부는 '가평 헬기예비작전기지 폐지' 결정을 내렸다. 신규 부대이전부지에 대해서는 지난 4월 관련부대로부터 제3야전수송교육단내 부지를 활용하는 절충 협의안이 도출됐다.

가평군 관계자는 “본 지역은 2020 가평군 기본계획상 시가화 예정용지로 돼 있으나 제3야전수송교육단에서 군 차량 운전교육장으로 사용하고 있어 군 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하지 못해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면서 “가평읍 도심지역에 위치한 본교육장을 이용하는 군 운전차량들로 인해 수십년간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피력했다.

가평/김민수기자 kim2989@kyeongin.com
15.2 X 13.7 cm

강원 고성군 청간 해변 41년 군(軍) 경계용 철책 경관형 울타리로 교체

민원번호 : 2CA-1109-085345(국방보훈민원과, 박시현 조사관)

(‘11. 12. 13.)

민원개요

강원 고성 청간해변과 청간정은 관광명소로 손색이 없으나 해변에 설치된 군 경계용 철책 때문에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장애가 되고 있으니 지역발전을 위해 경계용 철책을 철거해 달라는 민원에 대해 청간해변 해수욕장 운용구간이 포함된 일부 구간의 군 경계용 철책 일부를 철거하고 나머지 구간은 경관형 철책(웬스)으로 설치하도록 조정 중재

1 당사자

- 신 청 인 : 강원 고성군 토성면 청간리 ○○○외 431명
- 피신청인 : 육군 제○○보병사단장
- 관계기관 : 고성군수(관계기관1), 강원도지사(관계기관2)

2 민원내용

- 청간해변에 설치된 군(軍) 경계용 철책 때문에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장애가 되고 있어 관광객 편의와 지역발전을 위해 군 경계용 철책을 철거 요구

3 피신청인 등 의견

가. 육군 제○○보병사단장

- 청간해변은 과거 적 침투지역으로 잠수함 접안 가능하여 군단 A급 예상침투로로서 철책 철거 시 해안경계 작전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나, 전체 철책(192m)중 ○○○부대 앞 철책(132m)에 한하여 고성군수가 경계력 보강을 위한 경관형 웬스를 설치할 경우 작전성을 검토하여 합동참모본부 승인 후 철거가 가능하다.

나. 고성군수

- 해수욕장 구간(132m)에 대한 청간 해변 군 경계용 철책 철거가 가능할 경우 철책철거 공사 시행 및 경계력 보강을 위해 피신청인이 요구하는 대체시설 제공에 필요한 예산지원에 적극 협조하겠다.

다. 강원도지사

- 육군 제〇〇보병사단장이 청간 해변 철책을 철거하기로 하는 경우 대체시설 제공에 필요한 예산지원에 적극 협조하겠다.

4 주요 쟁점사항

- 청간 해변 군 경계용 철책 철거
- 철거 및 대체시설 설치 비용 분담

5 갈등 분석

가. 민원발생배경 및 주요사실관계

- 고성 청간정 문화재*와 청간 해변은 관광명소로 좋은 자연조건을 갖추고 있으나, 1970년대부터 해변 백사장에 경계용 철책을 설치하여 출입제한 등으로 관광객 유입이 미약한 상태
- * 청간정은 조선시대 건립(1520년 이전)된 정자로서, 관동팔경 중 하나이며, 1971년 강원도 유형문화재(제32호)로 지정되었고, 청간 해변은 2002년 해수욕장으로 개장
- 주민들은 2002년부터 관광객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철책을 철거해 달라는 민원을 군부대에 지속적으로 제기하였으나,
 - 관할 군부대는 군사 작전상 철거가 곤란하다는 입장을 견지
- '11. 9. 15. (전)고성군의원, 청간리 이장, 청간리 어촌계장, 지역주민 등 431명이 위원회에 청간 해변 군 철책 철거를 요구하는 고충민원을 제기
 - 위원회에서는 현장조사, 당사자 의견청취 및 이견조율 등을 통해 해결방안 모색

나. 해결 목표

- 주민들의 숙원사항을 해소하면서 군 작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주민과 군 모두가 win-win하는 해결방안을 마련
 - 군 경계용 철책을 철거하되, 경관형 철책로 교체하는 방안

6 갈등해결과정

가. 진행과정 개요

- '11. 10. 12. : 제1차 현장조사 및 관계기관 협의
 - 주민대표, 육군 제○○보병사단, 고성군 등 관계자들과 현장 실사하고 해결 방안 논의
 - ※ (육군 제○○보병사단) 청간 해변은 과거 적 침투지역으로 군단 A급 침투로 관리하고 있어, 철책 전부를 철거하는 것은 불가하나 일부지역은 철책철거 검토 가능
 - (고성군) 군 철책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공사 및 대체시설 제공 가능
- '11. 11. 3. ~ '11. 11. 11. : 추가 현장조사(1회) 및 관계기관 협의(3회)를 거쳐 위원회 조정안 제시
- '11. 12. 2. : 신청인, 피신청인 및 관계기관 위원회 조정안 수용

나. 대안제시

- 육군제○○사단 : 청간해변 철책192m 중 870부대 울타리 구간 철책132m 철거동의
- 고성군 : 철책철거(132m), 경관형 휨스 교체설치(210m), 일부구간 철책이설(60m)
- 강원도 : 철책철거 및 경관형 휨스 교체, 철책이설 비용 도비지원

7 조정 (합의) 결과

가. 조정·합의 최종결과

- 군부대는 청간해변에 설치된 군 경계용 철책 192m 중 해수욕장 운용구간이 포함된 철책 132m 철거에 적극 협력하고, 대신 고성군은 경계용 철책 132m 철거와 철거지역에 경관형 휨스를 설치해주며, 강원도는 고성군과 협의하여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합의

나. 위원회 조정 · 합의문

- 육군 제〇〇보병사단장은 청간해변 군 철책 총 192m 중 〇〇부대 앞 132m 해안철책 철거를 검토하고, 합동참모본부에 철책철거 승인을 건의하여 고성군수는 철책철거 및 경관형 휨스 교체설치와 일부철책 이설공사를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 고성군수는 합동참모본부의 청간해변 철책철거(132m) 승인 후 피신청인이 요구하는 기존 철책철거(132m) 및 경계력 보강 대체시설인 경관형 휨스 교체설치(210m)와 일부철책 이설(60m)공사를 예산확보 후 시행한다.
- 강원도지사는 관광객 유치와 지역발전 등 지역주민의 권익증진을 위해 청간해변 철책 철거 및 이설과 경계력 보강을 위한 대체 설치비용 중 고성군수가 건의하는 내용을 상호 협의하여 지원한다.
- 신청인은 향후 청간해변 군 철책 추가 철거 등 새로운 요구를 하지 않는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군 경계철책철거 및 경계력 보강 대체시설설치를 신청인과 피신청인 및 관계기관이 협력하여 완료하도록 사후관리 한다.

8 수용-이행 여부 및 시사점

가. 신청인-피신청인 수용 및 이행여부

- '11. 12. : 군 철책 철거 상급부대(최종 합참)에 승인을 건의
- '12. 6. : 철책철거 및 대체시설 설치 예산 확보
- '12. 12. : 철책 철거 후 대체시설 설치 예정

나. 시사점

- 이번 조정은 권익위가 주민과 관련기관들과 함께 지난해 9월부터 3개월 동안 2회의 현장조사와 4차례의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함께 노력하고 협력한 결과로, 40여 년 간 지속되어온 주민 불편 해소
- 이번 합의안에 따라 청간해변 군(軍) 경계용 철책이 철거되고 철거지역에 경관형 휨스를 설치하면 군(軍)은 경계 작전 보장을 받고, 고성군과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로 인한 가시적인 경제효과 기대

고성 청간 해변 軍철책 41년만에 철거

郡, 경관형 펜스로 대체

강원 고성군 토성면 청간해변에 설치된 군 경계용 철책이 41년 만에 철거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고성군청 회의실에서 육군 22사단, 고성군, 강원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1971년 설치된 철책 132m를 내년에 철거하는 내용의 합의안을 이끌어 냈다. 고성군은 철책을 철거하는 대신 경관형 펜스를 설치한다. 군부대는 군 철책 192m 가운데 해수욕장 운영구간이 포함된 132m를 철거하는 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강원도는 고성군과 협의해 비용 일부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해변 출입에 불편을 겪었던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의 해변 출입이 편해지고 더 많은 관광객 유치로 지

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민 430명은 9월 국민권익위에 이 철책을 철거해 달라는 집단 민원을 냈다. 청간해변은 관동팔경 중 하나인 청간정과 수려한 경치의 백사장이 있는 관광지다.

조정회의를 주재한 박재영 권익위 부위원장은 "3개월 동안 2차례의 현장 조사와 4차례의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유관기관이 함께 노력한 결과 조정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10.2 X 11.1 cm

고성 청간해변 철책 사라진다 40년만에 경관올타리로 대체

강원 고성군 토성면 청간해변에 설치된 군(軍) 경계용 철책 132m가 내년 철거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고성군청에서 박재영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내년 청간해변의 경계용 철책을 철거하는 대신 경관형 울타리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간해변은 관동팔경의 유명 관광명소인 청간정 문화재와 백사장이 있는 관광지이지만, 해수욕장에 군 경계용 철책이 설치된 지난 1971년 이후로는 주민들의 해변출입이 자유롭게 못됐다. 권익위는 "관광객들도 해변을 드나들 수 없어 지역경제가 침체되는 등 주민 430여명이 지난 9월 집단민원을 제기해 왔다"고 말했다.

이날 권익위는 군부대가 청간해변에 설치된 군 철책 192m 가운데 해수욕장 운영구간이 포함된 132m를 철거하는 데 적극 협력하고, 강원도는 고성군과 협의해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합의안을 마련하도록 중재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합의안에 따라 군 철책이 경관형 울타리로 대체되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5.0 X 15.5 cm

한겨레
THE HANJERYE2011년 12월 14일 (수)
15B면 중청/강원

고성 청간 해변 철책 사라진다

군 경계용 192m 중 132m 내년 철거

강원 고성 주민의 숙원이었던 청간해변 군 경계용 철책 132m가 내년에 철거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고성군과 군부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조정회의를 열어, 고성군은 경계용 철책을 철거하는 대신 경관형 울타리를 설치하고, 군부대는 청간 해변에 설치된 철책 192m 가운데 해수욕장 인근 132m를 철거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청간해변은 관동팔경의 유명 관광명소인 청간정 문화재가 있는 관광지이지만 군 경계용 철책이 설치돼 있어 출입이 자유롭지 못했다.

박재영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번 조치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고성주민 430여명은 지난 9월 ‘청간정 주변 해변을 이용하지 못해 지역경제가 침체됐다’며 철책을 철거해 달라는 집단민원을 권익위에 냈다.

박수혁 기자

11.9 X 7.3 cm



고성, 청간해변 군철조망 철거된다

2011-12-13 오후 6:24:53 이장춘 기자

고성군 토성면 청간리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마을 해변의 군철조망이 경관 울타리로 교체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고성군청 회의실에서 청간해변 군철책철거 현장조정회의를 갖고 주민들이 요구한 철조망을 경관용 울타리로 교체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회의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철조망 백92m 가운데 백32m를 경관용 울타리로 교체하고 나머지 60여m는 장소를 옮겨 설치하기로 중재했다.

이에 따라 군부대 측은 이 같은 내용을 상급부대에 건의하고 승인 시 철조망 교체와 이설작업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고성군 청간해변에는 지난 1971년 해안경계를 목적으로 철조망이 설치됐으나 주변지역이 해수욕장으로 사용되면서 불편을 느꼈고 지난 9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집단민원을 제기하는 등 철거요구가 이어졌다.



고성, 청간 해변 군철조망 철거

20111213

국민권익위원회와 군부대, 강원도, 고성군이 관동팔경의 하나인 고성 청간정 일대 해변 군 철책 192미터에 대해 주민 민원에 따라 경관형 펜스로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고성,청간해변 군철조망 철거된다

2011-12-13 오후 6:24:53 이장춘 기자

고성군 토성면 청간리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마을 해변의 군철조망이 경관 울타리로 교체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고성군청 회의실에서 청간해변 군철책철거 현장조정회의를 갖고 주민들이 요구한 철조망을 경관용 울타리로 교체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회의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철조망 백92m 가운데 백32m를 경관용 울타리로 교체하고 나머지 60여m는 장소를 옮겨 설치하기로 중재했다.

이에 따라 군부대 측은 이 같은 내용을 상급부대에 건의하고 승인 시 철조망 교체와 이설작업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고성군 청간해변에는 지난 1971년 해안경계를 목적으로 철조망이 설치됐으나 주변지역이 해수욕장으로 사용되면서 불편을 느꼈고 지난 9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집단민원을 제기하는 등 철거요구가 이어졌다.

고성 청간 해변 군 철조망 경관 울타리로 교체될 듯

기사입력 2011-12-13 16:03



【고성=연합뉴스】 이종건 기자 = 13일 고성군청에서 열린 '청간해변 군 철조망 철거 현장조정회의'에 참석한 국민권익위원회 박재영 부위원장이 민원현장인 고성군 토성면 청간리 해변을 방문해 군(軍) 관계자로부터 현황설명을 듣고 있다.

13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성군청 회의실에서 박재영 부위원장 주재로 '청간해변 군 철책 철거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철조망을 경관용 울타리로 교체하는 문제를 논의했다.

현지 주민을 비롯해 군부대와 고성군, 강원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 국민권익위원회는 문제가 되고 있는 철조망 192m 가운데 132m를 경관용 울타리로 교체하고 나머지 60여m는 장소를 옮겨 설치하기로 중재했다.

이에따라 군부대 측은 이 같은 내용을 상급부대에 건의하고 승인 시 철조망 교체 및 이설작업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으며 고성군과 강원도도 군부대의 승인이 나는데로 공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청간해변 철조망은 지난 1971년 해안경계를 목적으로 설치됐으나 주변지역이 해수욕장으로 사용되면서 불편을 느낀 주민들이 지난 9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집단민원을 제기하는 등 철거요구가 이어졌다.



아시아뉴스통신
Asia news agency

e새한일보

고성군, 국민권익위원회 청간해변 군경계철책철거 현장조정 회의

2011.12.13



13일 강원 고성군 군청 소회의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과 고성군 및 군(軍)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청간해변 군(軍)경계용 철책 철거 및 이설 조정, 협의회를 갖고 있다.
(사진제공=고성군청)

강원 고성 청간지구 해안 경계철책 허문다

국민권익위 현장조정 내년 철거 합의

강원 고성군 토성면 청간지구 해안 경계철책이 국민권익위원회의 현장조정으로 철거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고성군청에서 관할 군부대 관계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현장조정회의에서 지난 1971년 청간지구 해안에 설치된 해안경계철책 132m를 내년에 철거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 430명의 청간지역 주민들은 지난달 8일 이동 신문고를 통해 40여년 동안 생활불편과 지역발전에 지장을 주고있는 해변철책 철거를 건의했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에 앞서 지난달 29일 고성군 간성을 북전지구 3만1,944㎡에 1972년 설치된 군부대 포

사격장(대대리 포사격장) 이전문제도 합의 조정했다.

주요 합의 내용은 130mm 또는 이달부터 사격을 중단하고 155mm 또는 연간 총 6회로 제한하며 105mm 또는 가능한 다른 지역에서 사격 훈련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군부대는 내년에 105mm 사격장 이전 지를 선정, 2014~2018년 국방중장기계획에 이전사업을 반영토록 했으며 그 전이라도 인접 고성중·고교 시험기간에는 포 사격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40여년 만에 주민불편 현안이 해소될 이번 합의 조정은 지난 8월부터 본격적인 현장조사와 군부대의 적극 협력 등 관계기관이 함께 노력한 결과로 이뤄지게 됐다”고 밝혔다.

고성/ 박승호기자 <shpark@jeonmae.co.kr>

15.9 X 9.1 cm

청간해변 군 철책 경관용 펜스로 교체

권익위 현장조정회의서 경계용 132m 철거 합의
고성 주민 지역경제 활성화 등 경제적효과 기대

【고성】1971년 설치된 고성군 토성면 청간해변 군(軍) 경계용 철책 132m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ACRC)의 현장조정으로 이르면 내년 철거되고 경관용 펜스로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는 13일 고성군청 회의실에서 박재영 부위원장 주재로 황종국 군수와 조성직 육군 제22보병사단장, 김홍주 도한동해출장소장, 지역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 회의를 가졌다.

이날 조정회의에서 군부대는 청간 해변에 설치된 군경계용 철책 192m 중 해변 운송구간이 포함된 철책 132

m 철거에 대해 군 요구 조건 적합시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또 고성군은 경계용 철책 132m를 철거하고 대신 경관용 펜스를 설치하고 도는 고성군과 협의를 거쳐 비용 일부를 지원하자는 합의를 마쳤다.

이에 따라 군부대 철책선이 철거되고 경관용 펜스가 완료되면 지역경제 활성화 등 가시적인 경제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그동안 청간해변은 관광발달의 유망 관광명소인 청간정 문화재와 청정한 백사장이 있는 관광지였지만 192m에 이르는 해수욕장에 군 경계용 철책이 설치돼 해변 출입이



◇국민권익위원회 박재영 부위원장(가운데)이 13일 고성 청간해변 내 군(軍) 철책을 철거하는 현장조정회의를 앞두고 관계자들과 해변 철책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자유롭지 못했다.

이에 주민들은 지난 9월 관광객들조차 청간정(정자) 관광 때 해변을 사 용하지 못해 지역경제가 침체된다며 주민 430여명이 공동으로 국민권익 위에 철책을 철거해 달라는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조정회의를 주재한 박재영 부위원

장은 “이번 현장조정은 권익위가 주민과 관련 기관들과 함께 지난 9월부터 2회의 현장조사와 4차례의 관계 기관 협의를 통해 합의를 마련했다”며 “오랫동안 이어온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돼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고 했다.

정래석기자 <redfox9458@kwnews.co.kr>

20.7 X 12.4 cm

고성 청간 해변 철책 사라진다

군부대, 경관형 펜스 교체 협력...40년 주민 숙원 해결

국민권익위 현장 조정회의

지난 1971년부터 고성군 토성면 청간해변에 설치돼 있던 군(軍) 경계용 철책 철거가 추진돼 주민들의 40년 숙원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고성군청 회의실에서 주민대표와 정세철 고성군 부군수, 김홍주 도 환동해출장소장, 조성직 22사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박재영 부위원장 주재로 '고성 청간해변 군 경계용 철책 철거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군부대는 청간해변 군 철책 192m 중 부대 앞 132m의 해안철책 철거를 검토해 상급부대에 승인을 건의하고, 승인시 군 요구조건에 부합하게 철책을 철거하고 경관형 펜스로 교체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키로 했다.

또 고성군은 철책 철거 승인 시 군(軍)이 요구하는 대체시설인 경관형 펜스 교체 설치 및 일부 철책 이설공사를 시행하고, 도는 철책 철거 및 이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고성군과 협의해 지원키로 했다.

청간해변은 관동팔경의 하나인 청간정과 청정한 백사장을 지닌 관광명소이지만, 192m에 이르는 해수욕장에 군(軍) 경계용 철책이 설치돼 있어 주민들도 해변출입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관광객들조차 청간정 관광시 해변을 사용하지 못해 지역경제 침체를 가져왔으며, 급기야 주민 430여명은 지난 9월 국민권익위에 관광 활성화와 지역 발전을 위해 해변철책을 철거해 달라는 집단 민원을 냈다.

고성/남진현 jcnam@kado.net
10.2 X 13.4 cm

전국도민일보

2011년 12월 14일 (수)
03면 종합고성 청간해변 軍 경계용 철책 철거
권익위 경관형 펜스 설치 중재

강원 고성군 토성면 청간해변에 1971년부터 설치돼 있던 군 경계용 철책 132m가 이르면 내년에 철거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는 13일 오후 고성군청 회의실에서 박재영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 조정회의를 열어 고성군이 경계용 철책 132m를 철거하는 대신 경관형 펜스를 설치하도록 하는 합의안을 마련해 중재했다고 밝혔다.

합의안을 통해 군부대는 청간해변에 설치된 군 철책 192m 중 해수욕장 운운구간이 포함된 132m를 철거하는데 적극 협력하는 한편 강원도는 고성군과 협의해 비용 일부를 지원하도록 했다.

청간해변은 관동팔경의 유명 관광명소인 청간정 문화재와 청정한 백사장이 있는 관광지이지만 그동안 192m에 이르는 해수욕장에 경계용 철책이 설치돼 있어 주민들도 해변 출입이 자유롭지 못했다는 게 권

익위의 설명이다.

청간정은 조선시대(1520년 이전)에 건립된 정자로 1971년 강원도 유형문화재(제32호)로 지정된 곳이며 청간해변은 2002년 개장한 해수욕장이다.

이에 대해 지역주민 430여명은 지난 9월 관광객들조차 청간정 관광 때 해변을 사용하지 못해 지역경제가 침체됐다는 점을 들어 철책을 철거해 달라는 집단민원을 권익위에 낸 바 있다.

이옥재기자

15.4 X 11.2 cm

제 2 장

경찰민원

조정사례



□ 서울 동대문구 ○○아파트 앞길 교차로 설치로
주민 교통 불편 해소

서울 동대문구 ○○아파트 앞길 교차로 설치로 주민 교통 불편 해소

민원번호 : 2AA-0811-028799(경찰민원과, 금광연 조사관)

(‘11. 11. 10.)

민원개요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2동에 있는 답십리래미안엘파인아파트 주민들은 아파트 앞길(한천로)에서 좌회전 하여 통행을 못하고 상당 거리를 우회해야 하는 불편이 있으니 아파트 진출입이 원활하도록 교통환경을 개선해 달라는 민원에 대해, 도로선형을 개선하고 교차로 설치 후 신호등을 설치하도록 조정 중재

1 당사자

- 신 청 인 :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래미안엘파인아파트 ○○○외 501명
- 피신청인 : 서울지방경찰청장(피신청인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피신청인2)
- 관계기관 : 서울동대문경찰서장

2 민원내용

-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2동에 있는 답십리래미안엘파인아파트 주민들은 아파트 앞길(한천로)에서 좌회전 하여 통행을 못하고 상당 거리를 우회해야 하는 불편이 있으니 차량의 아파트 진출입이 원활하도록 교통 환경 개선 요구

3 피신청인 등 의견

가. 서울지방경찰청장, 동대문구청장

- 아파트 주민들이 교차로 설치를 희망하는 곳은 기존 교차로와의 거리가 약 40m로 너무 짧아 사고 위험이 예상되어 받아들이기 곤란
- 진출입로 개선의 합리적 대안을 적극 검토 마련 예정

나. 서울 동대문경찰서장

- 이 민원 지점은 대로변에 연접해 있고 거주민 대다수가 다양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주민들로 수도 생활권으로 진출입을 위한 신호체계가 필요한데도 원거리를 우회하거나 U턴하므로서 생활에 상당한 불편이 초래되고 있으므로 진출입로 개선을 통한 신호등 설치 요구는 타당함

4 주요 쟁점사항

- 도로선형 개선 및 교차로 설치
- 교통신호체계 개선

5 갈등 분석

가. 민원발생배경 및 주요사실관계

-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2동에 있는 래미안엘파인아파트(524세대/1,850명)주민들은 아파트 앞길에서 좌회전하여 통행하지 못하고 약 1.2km정도를 우회해야 하는 교통불편을 고충민원으로 호소.
- 이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은 ‘아파트 주민들이 교차로 설치를 희망하는 곳은 기존 교차로와의 거리가 약 40m로 너무 짧아 사고 위험 예상되나, 소공원 도로부지를 확보 후 진출입로를 이설하는 방안을 강구하면 가능하다.’하고,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은 ‘소공원 조정을 통하여 진출입로 선형 개선을 할 수 있다’라고 답변
- 집단 민원의 합리적 조정해결 필요

나. 해결 목표

- 피신청기관 및 관계기관 역할분담(조정)을 통한 종합대책 마련
 - ‘한천로’에서 아파트 진출입을 편리를 위해 도로선형을 개선하고 교차로 설치 후- 이 민원 지점에 신호등을 설치하여 좌회전이 가능토록 하므로서 집단민원 해소

6 갈등해결과정

가. 진행과정 개요

- '11. 7. 22. : 답십리엘파인아파트 진출입로 좌회전 신호등 설치 요구 민원 접수
- '11. 7. 25. ~ : 관계 기관협의(6회) 및 실지 방문조사(5회)
- '11. 8. 11. 및 '11. 8. 30. : 1, 2차 현장조사 실시
 - 민원 지점에 접해 있는 소공원을 일부 축소하고 진출입로를 확장하면서 도로 선형을 개선하는 방안 협의
- '11. 10. 20. : 3차 현장조사 및 관계기관 방문 협의
 - 진출입로 개선을 위한 설계('11. 10. 31. 납품예정)/동대문구청
 - 설계도서를 토대로 신청인, 입주자대표 등 주민설명회 개최예정/서울동대문경찰서
 - 주민설명회 후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안전 상정예정/서울지방경찰청
- '11. 10. 21. : 협의사항 완성을 위해 조정회의 개최 합의
- '11. 11. 4. : 조정서(안) 최종합의(서울지방경찰청, 동대문구청, 서울동대문경찰서)
- '11. 11. 7. : 교통불편 해소 대책(안) 주민 설명회 개최

7 조정 (합의) 결과

가. 조정 · 합의 최종결과

- 아파트 앞길과 인접해 있는 가로공원을 조정해 차량 통행이 원활하도록 아파트 진출입 도로선형을 개량하고, 아파트 진출입로와 만나는 지점에 교차로를 신설, 신호에 따라 아파트로 진출입할 수 있도록 교차로에 신호등을 설치

나. 위원회 조정 · 합의문

- 피신청인1은 2011. 12. 말까지 이 민원 동대문구 답십리엘파인아파트 앞길(한천로)에 교차로와 신호등 설치를 위하여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 본 안전을 상정하기로 한다.
- 피신청인2는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심의 결과 '가결' 통보되면 2012. 6. 말까지 이 민원 지점 일부를 축소 조정하여 진출입로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 관계기관은 이 민원 지점 공사기간 중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交通安全 대책을 수립 시행한다.
- 신청인은 위 진출입로 공사 중 부득이 하게 발생하는 통행불편에 대하여는 피신청인과 관계기관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8 수용-이행 여부 및 시사점

가. 신청인-피신청인 수용 및 이행여부

- '11. 10. 30. : 진입로 선형변경 설계 완료
- '12. 3. ~ 6. : 진입도로 토목공사 및 신호기 설치 예정

나. 시사점

- 이번 조정은 권익위 교통 분야 전문가의 5개월 동안 수차례에 걸친 현장조사 및 합리적 대안 제시와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와 양보를 통해 만들어낸 결과임
- 민원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관계기관의 협조를 통해 1,700세대 아파트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게 되는 결과 도출

권익위, 답십리 아파트 앞길 교통불편 중재

기사입력 2011-11-10 14:00

제2장

【서울=뉴시스】 장진복 기자 = 아파트 앞길에서 바로 아파트로 들어가지 못하고 1km 이상 우회해 다녀야 했던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2동 소재 1700세대 아파트 주민들의 불편이 해결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현지 중재를 통해 해당 아파트 앞에 교차로와 신호등을 설치토록 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7월 해당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는 '아파트 앞에 교차로와 신호등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을 권익위 등 관계기관에 제기했다. 그러나 진출입로가 좁고 인근에 교차로가 있어 새 교차로를 만드는 것이 여의치 않았다.

이에 권익위는 해당 아파트 주민, 동대문구청, 서울지방경찰청, 서울동대문경찰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아파트 앞 진출입로 선형을 개량하고 진출입로와 만나는 지점에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를 신설하는 합의를 마쳤다.

이번 조정회의를 주재한 권익위 정기창 상임위원은 "5개월 동안 수차례에 걸친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1700세대 아파트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해소돼 뜻 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viviana49@newsis.com

국민권익위, "아파트 우회 진입 불편 해결"

【서울=뉴스1】 권은영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아파트 앞길에 교차로와 신호등을 설치해 서울 동대문구 주민들의 아파트 진입 불편을 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동대문구 답십리2동에 있는 래미안 엘파인 아파트와 우성아파트 1700세대 주민들은 아파트 진입 시 1km 이상 돌아가야 하는 불편을 겪어 왔다.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는 7월 권익위 등 관계기관에 아파트 앞에 교차로와 신호등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지만, 진출입로가 좁고 주변에 이미 교차로가 있어 해결에 차질을 빚어 왔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10일 아파트 주민과 동대문구청, 서울지방경찰청, 서울동대문경찰서 관계자 등과 현장 조정 회의를 열고 교차로와 신호등 설치에 관한 합의를 성사시켰다.

이번 회의를 주재한 국민권익위 정기창 상임위원은 “이번 합의는 5개월 동안 수차례에 걸친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1700세대 아파트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해소돼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제 3 장

산업·농림·환경민원

조정사례



- ☐ 천안시 ○○아파트 교통소음, 방음벽 설치로 해소
- ☐ 서울 송파구 ○○아파트 교통소음, 1년 6개월 만에 해결
- ☐ 통영시 장사도 해상공원 뱃길 열려

천안시 ○○아파트 교통소음, 방음벽 설치로 해소

민원번호 : 2AA-1012-023717(산업농림환경민원과, 박양규 조사관)

(‘11. 2. 22.)

민원개요

충남 천안시 천안청수택지개발지구 중 우미린아파트가 위치한 구간은 천안남부대로에 근접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교통소음피해를 입고 있어 소음방지를 위한 방음시설을 설치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 소음방지대책 마련 중재를 통해 차도구간 포장방식을 변경하여 절감된 사업비(329백만 원)를 방음벽 설치에 사용하는 조정안 도출

1 당사자

- 신 청 인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456 우미린아파트 724세대 대표 ○○○
- 피신청인 :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충청남도 천안시장

2 민원내용

- 충남 천안시 천안청수택지개발지구에 있는 우미린아파트(이하 ‘이 민원 아파트’라 한다)는 인근 남부대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소음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에 어려움이 있으니,
 -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남부대로 변에 방음시설을 설치 요구
 - ※ 우미린아파트는 ’10. 8. 입주하였으나 민원 제출일까지 교통소음 방지시설 미설치

3 피신청인 등 의견

가. 한국토지주택공사

- 이 민원 아파트 구간은 완충녹지 조성, 방음벽 설치, 남부대로 차도부분 저소음 포장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되어 협의내용을 이행하면 소음기준을 충족할 것이므로 추가 방음시설 설치의 곤란하다. 다만, 소음측정 결과 도로변 소음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추가 대책을 강구할 계획임.

나. 천안시장

- 현재 교통소음이 환경기준치를 초과한 상태이고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이행 하여도 기준치를 초과하게 되므로 조속한 소음방지대책의 마련 및 시행이 필요함. 피신청인 1이 사업비를 마련할 경우 적극 협조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임

4 주요 쟁점사항

- 아파트 소음 피해 대책
- 소음피해 방지시설 설치비용 부담 주체

5 갈등 분석

가. 민원발생배경 및 주요사실관계

- 충남 천안 천안청수지구택지개발사업은 '07. 7.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제시된 완충녹지 조성, 방음벽 설치 및 남부대로 차도구간 저소음포장을 시행하여야 하나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업비 확보 문제로 지연
 - 이로 인해 우미린아파트는 '10. 8.부터 입주를 시작하였으나, 남부대로 교통소음으로 인한 생활불편이 심해 방음시설 설치를 요구하는 고충민원 제기('10. 12. 6.)

나. 해결 목표

- 교통소음으로 시달리고 있는 우미린아파트 724세대의 소음 고충 해소방안을 마련하여 쾌적하고 조용한 주거환경 확보
 - 민원인과 피신청인이 양보와 타협을 통해 소음방지방안 도출

6 갈등해결과정

가. 진행과정 개요

- '11. 1. 13. : 제1차 현장조사 및 신청인·관계기관 협의
 - 피신청인들은 환경영향평가협의에서 제시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나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자금난으로 조속한 시행 곤란 입장 표명

- '11. 2. 15. : 제2차 현장조사 및 관계기관 협의
 - 천안시 분담 사업비(50%)로 우선 착수 방안 및 남부대로 차도구간 포장 방식 변경(저소음포장→일반포장) 방안 등
- '11. 2. 16. : 제3차 관기기관 협의
 - '11. 5. 31.까지 남부고가교에 대한 안정성 검토를 실시하고 '11. 9. 31.까지 방음벽 설치 완료, 남부대로 차도구간 포장방식을 변경하여 절감된 사업비(329백만 원)를 방음벽 설치에 사용하는 조정안 도출
 - ※ 방음벽 설치 소요 예산은 세부 실시설계 완료 후 확정(약 12억 내외)
- '11. 2. 17. : 제3차 현장조사 및 제4차 협의
 - 2. 17. 입주민 회의에서 위원회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

7 조정 (합의) 결과

가. 조정 · 합의 최종결과

- 천안시와 토지주택공사는 당초 계획된 남부대로의 차도부분 포장방식을 저소음 포장에서 일반포장으로 변경해 사업비를 절감하는 대신 올해 9월말까지 천안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우미린아파트 인근 남부대로변에 방음벽을 설치하도록 합의

나. 위원회 조정 · 합의문

- 천안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신청인들이 거주하는 이 민원 아파트의 소음방지를 위하여 방음벽을 설치하기로 한다. 이를 위해 2011. 5. 31.까지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2011. 9. 31.까지 방음벽 설치를 완료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피신청인 천안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50%씩 분담한다.
- 천안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방음벽을 설치하는 대신 천안남부대로 차도부분 포장방식을 저소음포장에서 일반포장으로 변경하여 절감된 사업비를 방음벽 설치에 사용한다.
- 신청인은 천안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방음벽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소음과 교통 불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사업시행에 적극 협조한다.

8 수용-이행 여부 및 시사점

가. 신청인-피신청인 수용 및 이행여부

- '11. 4. 18. : 방음벽 설치를 위한 실시설계용역 발주(LH공사)
- '11. 4. 18. : 방음벽 시설제원 주민설명회
 - 방음벽 시설제원 상향 요구
- '11. 6. 14. : 2차 주민설명회
- '11. 9. 20. : 3차 주민설명회
- '12. 6. : 방음벽 설치 완료 계획으로 정상 사업 추진 중

나. 시사점

- 도시 확장과 기반시설 확충 등으로 도로변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권익위 뿐만 아니라 여러 기관에 많이 제기되고 있음.
- 앞으로 위원회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도로변에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적정한 소음기준 등을 충족하도록 해 나갈 계획임.

권익위 "천안 우미리아파트 교통소음 민원 해결"

천안시 청당동 우미리아파트 주민들의 교통소음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천안시 동남구청에서 아파트 주민과 천안시, 토지주택공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조정회의를 열고 오는 9월 말까지 방음벽을 설치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도록 했습니다.
지난해 8월 입주한 우미리아파트 주민들은 당초 약속과 달리 인근 남부대로와 아파트 사이에 완충녹지와 방음벽이 설치되지 않아 소음에 시달리고 있다는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국민권익위, 천안 우미리아파트 교통소음 민원 현장조정

기사입력 2011-02-22 16:44



【천안=뉴시스】 전진환 기자 = 현장행정을 강조해 온 김대식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중앙)이 22일 충남 천안시 동남구청 회의실에서 천안 우미리아파트 주민이 제기한 ‘교통소음 방음벽 설치 요구’ 민원에 대해 조정회의를 원만히 마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민권익위 제공)

현장조정회의 주재하는 김대식 부위원장

기사입력 2011-02-22 16: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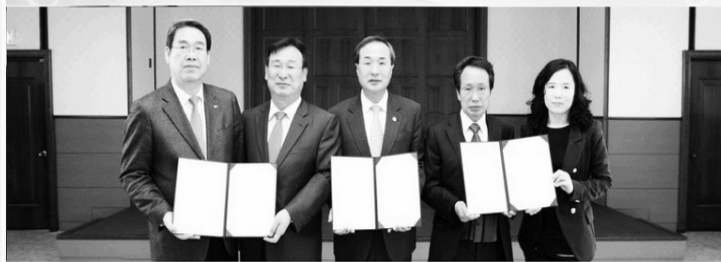


【천안=뉴스시스】 전진환 기자 = 현장행정을 강조해 온 김대식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중앙)이 22일 충남 천안시 동남구청 회의실에서 천안 우미리아파트 주민이 제기한 ‘교통소음 방음벽 설치 요구’ 민원에 대해 관계기관간 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photo@newsis.com

천안 우미리아파트 교통소음 해결

권익위 현장 조정... 9월까지 방음벽 설치 합의

천안 우미리아파트 교통소음 대책 마련 현장조정회의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 국민권익위원회 일시 및 장소 : 2011. 2. 22(화) 천안시 동남구청



현장행정을 강조해 온 김대식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22일 충남 천안시 동남구청 회의실에서 천안 우미리아파트 주민이 제기한 교통소음 방음벽 설치 요구 민원에 대해 조정회의를 원만히 마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소재 우미리아파트 724세대 입주자들이 그동안 줄곧 제기했던 인근 남부대로 교통소음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풀렸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22일 오전 천안시 동남구청 회

의실에서 입주자들과 천안시 건설사업소,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방음벽 설치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냈다.

권익위는 이날 김대식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아파

트 인근 남부대로 변에 방음벽을 설치하는 중재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천안 우미리아파트는 천안시와 토지주택공사가 2004년부터 공동 시행한 천안청수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택지에 들어서 2010년

8월 입주가 시작됐다.

그러나 토지주택공사의 자금난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통해 완충녹지와 방음벽을 설치하기로 한 당초 계획이 지연되면서 소음에 시달린 입주자들이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특히 토지주택공사는 방음벽 설치는 당초 사업계획에 없었고, 추후 예산이 마련되면 완충녹지와 저소음포장을 할 계획이라며 방음벽을 설치하지 않아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고충민원에 대한 조정 권한을 갖고 있는 권익위는 지난해 12월 민원을 접수한 이후 여러 차례의 현장조사와 실무 조정 협의를 가졌다.

이를 통해 천안시와 토지주택공사는 당초 계획된 남부대로의 차도부분 포장방식을 저소를 포장에서 일반포장으로 변경해 사업비를 절감하는 대신 오는 9월까지 천안시와 토지주택공사는 아파트 인근 남부대로변에 방음벽을 설치토록 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 조정은 권익위와 입주자, 관련기관들이 3회의 현장조사와 4차례의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함께 협력한 결과"라며 "오랜 시간 소음피해를 견뎌온 입주자들의 주거환경이 개선되는 계기가 마련된 것에 대해 보람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천안/최재기〉
21.0 X 15.0 cm

천안 우미린 아파트 교통소음 해결

국민권익위, 남부대로변 방음벽 설치 중재 성공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우미린아파트 724가구 입주자들이 아파트 앞을 지나는 도로의 교통소음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천안시 동남구청 회의실에서 김대식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 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아파트 인근 남부대로변에 방음벽을 세우는 중재에 성공했다.

천안 우미린아파트는 천안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04년부터 공동시행한 천안청수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들어가 지난해 8월 입주가 시작됐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통해 완충녹지와 방음벽을 만들기로 한 당초계획이 LH의 자금난으로 늦어지면서 입주자들이 방음벽 설치를 요구해왔다.

하지만 LH는 방음벽 설치가 원래 사업계획에 없었고 예산이 마련되면 완충녹지와 저소음포장을 할 계획이라며 방음벽을 세우지 않아 그동안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12월 민원을 접수한 뒤 여러 번 현장조사와 실무조정회의로 합의에 이르게 됐다.

합의사항은 천안시와 LH는 차도포장방식을 저소음포장에서 일반포장으로 바꿔 사업비를 줄이는 대신 9월까지 천안시와 LH가 아파트 부근 남부대로변에 방음벽을 만들도록 했다.

김대식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조정은 권익위와 입주자, 관련기관들이 3차례에 걸친 회의와 현장조사, 4차례의 관계기관협의로 협력한 결과"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오랫동안 소음피해를 견뎌온 입주자들의 주거환경이 개선되는 계기가 마련된 게 보람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최남일 / 천안
19.6 X 8.1 cm

대한매일신문

천안, 교통소음 민원문제 해결

권익위, 우미리아파트 인근 대로 방음벽 설치 중재

2011년 02월 23일 (수) 대한매일신문 daehanmail@naver.com

백수현 기자 /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우미리아파트 724세대 입주자들이 지난해 8월 입주한 직후부터 계속 제기 했던 인근 남부대로의 교통소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 A CRC)는 22일 오전 천안시 동남구청 회의실에서 입주자들과 박한규 천안시 부시장과 한국토지주택공사(대전충남지역본부)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김대식 부위원장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아파트 인근 남부대로변에 방음벽을 설치하는 중재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천안 우미리아파트는 천안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04년부터 공동 시행한 천안청수지구 택지개발 사업에 포함되면서 2010년 8월 입주가 시작됐으나, 완충녹지를 조성하고 방음벽을 설치하기로 한 당초 계획이 토지주택공사의 자금난으로 지연되면서 입주자들이 방음벽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토지주택공사에서는 방음벽 설치는 당초 사업계획에 없었고, 추후 예산이 마련되면 완충녹지와 저소음포장을 할 계획이라며 방음벽을 설치하지 않아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 왔다.

이에 고충민원에 대한 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12월 민원을 접수한 이후 여러 차례의 현장조사와 실무 조정 협의를 통해 ▲ 천안시와 토지주택공사는 당초 계획된 남부대로의 차도부분 포장방식을 저소음 포장에서 일반포장으로 변경해 사업비를 절감하는 대신 ▲올해 9월말까지 천안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우미리아파트 인근 남부대로변에 방음벽을 설치하도록 했다.

현장조정회의를 주재한 김대식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번 조정은 권익 위와 입주자, 관련 기관들이 3회의 현장조사와 4차례의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함께 협력한 결과로서, 오랜 시간 소음피해를 견뎌온 입주자들의 주거환경이 개선되는 계기가 마련된 것에 대해 배려와 나눔 이해와 포용의 정부정책을 이루어 다행”이라고 밝히고 “향후 국민들의 애로사항을 더욱 많이 해결할 수 있는 권익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서울 송파구 ○○아파트 교통소음, 1년 6개월만에 해결

민원번호 : 2AA-0811-028799(산업농림환경민원과, 박양규 조사관)

(‘11. 6. 9.)

민원개요

서울 송파구 장지동 833 송파파인타운 1단지 아파트 221세대 주민들이 인근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소음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우니 원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방음벽을 보완설치해 달라는 민원에 대해 소음방지를 위하여 이 민원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방음벽을 보완설치하도록 중재하여 민원 해소

1 당사자

- 신 청 인 : 서울 송파구 장지동 송파파인타운1단지 입주자대표회장 ○○○
- 피신청인 : SH공사사장(피신청인 1), 한국도로공사사장(피신청인 2)

2 민원내용

- 서울 장지지구 택지개발지구에 있는 송파 파인타운 1단지 아파트(이하 ‘이 민원 아파트’라 함) 입주민은 인근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이하 ‘이 민원 도로’라 함)에서 발생하는 교통소음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우니,
 -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이 민원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방음벽을 보완설치해 달라
- ※ 이 민원 아파트는 '09. 12. 입주하였고, 이 민원 도로에는 높이 9.5m에서 12.5m의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음(SH공사 시공)

3 피신청인 등 의견

가. SH공사

- 환경영향평가협의시 제시된 사업을 모두 시행하였고, 야간소음이 다소 초과하나 방음벽으로는 한계가 있고, 아치형 방음벽은 설치비 과다로 신청인 요구 수용 곤란

나. 한국도로공사

- 현재 교통소음이 환경기준치를 초과하는 상태이므로 기 설치된 방음벽에 대한 보완은 필요하나, 방음벽 보완 시공은 도로변에 인접하여 택지를 개발한 SH공사에게 책임이 있음

4 주요 쟁점사항

- 도로소음 기준 충족 여부
- 방음시설 설치비용 분담 주체

5 갈등 분석

가. 민원발생배경 및 주요사실관계

- 서울 장지지구택지개발사업은 '04. 3.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도로 경계로부터 50m 이상 이격하고, 지각배치하며, 높이 9.5m ~ 12.5m의 방음벽을 설치할 경우 도로소음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협의
 - 이 민원 아파트는 '09. 12.부터 입주를 시작하였으나, 입주 후 이 민원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생활불편으로 기 설치되어 있는 방음벽을 보완하여 달라는 고충민원 제기('11. 3. 22.)
 - ※ '10. 12. 1. 1차 민원 제기(도로소음 재측정 후 민원을 다시 제기 할 계획이라는 내용으로 '11. 2. 8. 취하)

나. 해결 목표

- 교통소음으로 시달리고 있는 송파파인타운 1단지 아파트 221세대의 소음 고충 해소방안을 마련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
 - 민원인과 피신청인이 양보와 타협을 통해 소음방지 방안 도출

6 갈등해결과정

가. 진행과정 개요

- '11. 1. 4. : 제1차 현장조사 및 관계기관 협의

- 피신청인(SH공사)은 환경영향평가협약에서 제시된 사업을 시행하였고, 야간 소음이 다소 초과하나 방음벽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아치형 방음벽은 설치비 과다로 신청인 요구 수용 곤란
 - ※ 참석 : 신청인(입주자대표회의 감사 대리 참석, 관리소장), SH공사
- '11. 1. 18. : 제1차 출석조사(SH공사, 한국도로공사)
 - 야간소음이 도로소음 기준을 초과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수립 필요
 - 관계기관에서 도로소음을 각각 재측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방음대책 수립 필요 여부 재논의
- '11. 3. 31. : 도로소음 측정결과 제출[단위 : dB(A)]
 - SH공사 측정 : 주간 57.0 ~ 63.0 / 야간 52.0 ~ 59.1
 - 한국도로공사 측정 : 주간 55.9 ~ 62.0 / 야간 53.1 ~ 58.9
 - ※ 도로변 야간소음 기준 초과(도로변 소음기준 : 주간 65, 야간 55)
- '11. 4. 12. : 제2차 출석조사(SH공사, 한국도로공사)
 - 도로소음 재측정 결과에 따른 방음벽 보완 필요성 및 추진 방안 논의
 - SH공사가 설계용역을 통해 '11. 10. 말까지 방음벽을 보완설치하고, 한국도로공사는 관련 행정협약과 공사중 안전조치 및 과속주행 방지를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기로 협의
- '11. 5. 3. : 제2차 현지조사 및 관계기관 협의
 - 위원회 조정내용 확인 및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위원회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

□ 사업추진 방향

- 방음벽의 높이(9.5m~12.5m)를 1m 내외로 높이고, 상단부분에 소음감쇄기 설치
- 방음벽 미설치 구간의 보완될 방음벽 높이로 약 100m 구간에 대하여 연장 설치
 - ☞ 약 15억원 내외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시설규모와 예산은 실시설계 이후 확정

※ 도로공사는 현장조정의 기여도(역할)는 크지 않으나 외곽순환고속도로 등 수도권에 위치한 고속도로 소음 민원이 조정을 통해 원만히 해결되는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이번 사례가 향후 유사 민원처리의 모범이 될 수 있으며, 방음벽 설치 공사중 도로 안전유지의 책임이 있다는 입장에서 조정회의에 참여

7 조정 (합의) 결과

가. 조정 · 합의 최종결과

- SH공사가 올해 10월 말까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변에 설치한 방음벽을 도로변 소음기준에 맞게 보완설치하고, 한국도로공사는 비관리청공사시행허가 등 관련 행정절차에 적극 협조하고, 공사중 사고예방을 위한 전반적 안전조치 이행과 이동식 과속단속카메라 운영을 위한 시설물 설치

나. 위원회 조정 · 합의문

- 피신청인 1은 신청인이 거주하는 이 민원 아파트 입주민의 소음피해 방지를 위하여 이 민원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방음벽이 「환경정책기본법」상의 도로변 소음기준에 충족되도록 보완설치 한다. 이를 위해 2011. 6. 30.까지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2011. 10. 31.까지 방음벽 설치를 완료한다.
- 피신청인 2는 피신청인 1의 방음벽 보완설치시 비관리청공사시행허가 등 관련 행정협의를 이행하고, 피신청인 1의 방음벽 보완설치 공사중 이 민원 도로 통행상의 사고예방을 위한 전반적 안전조치를 이행하며, 이 민원 도로에서의 차량 과속주행 방지를 위해 2011. 6. 30.까지 무인속도측정기 및 과속주의 경고 시설물을 설치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 1과 2가 방음벽을 보완설치하는 과정에서 부득이 하게 발생하는 소음과 교통 불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사업시행에 적극 협조한다.

8 수용-이행 여부 및 시사점

가. 신청인-피신청인 수용 및 이행여부

- '11. 6. 10. : 방음벽 보완을 위한 실시설계용역 발주
- '11. 7. 6. : 이동식단속카메라 거치대 및 과속주의경고표지판 설치 완료
- '11. 8. 8. : 소음예측평가결과 보고
 - 방음시설 보완계획 수립
- '11. 8. 30. : 주민설명회 개최 의견 수렴
- '12. 6. : 방음벽 설치 예정

나. 시사점

민원인과 피신청인이 양보와 타협을 통해 소음방지 방안 도출 주민의 소음피해 대책을 통해 아파트 입주민의 정온한 주거환경을 제공

김영란 위원장, 소음 집단민원 해결

기사입력 2011-06-09 17:10



【서울=연합뉴스】 김영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이 9일 오후 송파구민회관에서 서울 장지동 송파파인타운 아파트의 교통소음 해결 요구 민원에 대해 10월까지 방음벽을 보완 설치하기로 하는 중재안을 마련해 합의한 후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1.6.9 < 국민권익위원회 > photo@yna.co.kr

東亞日報

2011년 06월 10일 (금)
08면 종합

김영란 권익위원장, 아파트 소음분쟁 중재 해결

국민권익위원회는 서울 송파구 장지동 아파트 인근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변의 소음으로 인한 주민과 시행사 간 분쟁을 김영란 위원장의 중재로 해결했다고 9일 밝혔다. 권익위는 이날 송파구민회관에서 김 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장지동 송

파파인타운 1단지 아파트 입주자들과 SH공사,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합의를 중재했다. 이에 따라 SH공사는 10월까지 방음벽을 도로변 소음기준에 맞게 보완 및 설치하고, 한국도로공사는 관련 행정절차와 공사 중 사고 예방을 위

한 전반적인 안전조치 이행에 협조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조정서에 서명하기 전까지 당사자 간 의견 조율 과정을 청했다고 권익위 측은 설명했다. 그는 앞서 다른 분쟁 사안에 대해 의견이 조율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장 중재에 나섰다가 합의를 끌어내는 데 실패한 뒤 사전 물밑 조율에 신경을 써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15.7 X 4.9 cm

김영란 권익위원장 '현장행정' 돋보이네

아파트 소음피해 민원 1년 6개월만에 해결

서울 송파구 장지지구 아파트의 소음 피해 집단 민원이 1년 6개월여 만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김영란(사진) 국 민권익위원장은 9일 민원 현장인 서울 송파구민회관을 찾아 현장 조정 회의를 주재했다. 김 위원장은 입주 자들과 SH공사 사장, 한국도로공사 관계자 등 민원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주민들이 제기한 민원을 원만 하게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 을 이끌어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 에서 "권익위의 조정으로 오랜 시간 소음 피해를 견뎌온 입주자들의 주거 환경이 개선되는 계기가 마련된 것을 보람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송파구 장지동 A아파트 221세대 입주자들은 2009년 12월 입주한 직후부터 졸곡 아파트 인근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심한 차량 소음에 시달리다며 SH공사와 한국도로공사 등에 민원을 제기했다. SH공사는 이 아파트 주변 도로에 환경영향평가 협의에서 제시한 높이 9.5m에서 12.5m의 방음벽을 설치했으나 도로 소음으로 인한 피해 민원은 계속됐다.

이에 따라 고충 민원에 대한 조정 권한을 갖고 있는 권익위가 지난해 12월 민원을 접수한 이후 여러 차례의 현장 조사와 실무 조정 협의를 거쳐 SH공사가 오는 10월 말까지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변에 설치한 방음벽을 도로변 소음 기준에 맞게 보완·설치토록 합의를 이끌어 낸 것이다.

이동규기자 yidonggu@seoul.co.kr

14.6 X 8.0 cm



권익위, 송파파인타운 아파트 소음피해 중재



국민권익위원회는 송파구 장지동 아파트 인근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변에 설치된 방음벽을 도로변 소음기준에 맞게 보완하도록 했습니다.

권익위는 김영란 위원장 주재로 장지동 송파파인타운 1단지 아파트 입주자들과 SH공사,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이 중재했습니다.

지난 2009년 12월 입주를 시작한 송파파인타운 1단지 아파트 주민들은 높이 9.5~12.5m의 방음벽이 설치돼 있지만, 도로 소음이 심하다며 민원을 제기해 왔습니다.

최종편집 : 2011-06-09 17:56



권익위, 송파파인타운 아파트 소음 피해 중재

입력시간 2011.06.09 (15:59) 송영석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서울 송파구 장지동 파인타운 입주민들의 민원에 따라, 인근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에 설치된 방음벽을 보완하는 내용의 중재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오늘 김영란 권익위원장 주재로 아파트 입주민들과 SH 공사,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송파구민회관에서 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이 중재했습니다.

이에 따라 SH 공사 측에는 오는 10월까지 방음벽을 도로변 소음기준에 맞게 보완해 설치하도록 했으며, 도로공사에는 관련 행정 절차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권익위는 지난해 말, 방음벽이 있어도 소음이 심하다는 송파파인타운 입주민들의 민원을 접수한 이후 여러 차례 현장조사와 실무조정 협의를 거쳐 이번 중재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끝>

파이낸셜뉴스

권익위, 송파구 인근 아파트 소음문제 중재

기사입력 2011-06-09 15:11 기사수정 2011-06-09 15:11

국민권익위원회는 송파구 장지동 아파트 인근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변에 설치된 방음벽을 도로변 소음기준에 맞게 보완, 설치하도록 했다고 9일 밝혔다.

권익위는 이날 오후 송파구민회관에서 김영란 위원장 주재로 장지동 송파파인타운 1단지 아파트 입주자들과 SH공사,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이

이 중재했다.

지난 2009년 12월 입주를 시작한 송파파인타운 1단지 아파트 주민들은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따라 설치된 높이 9.5~12.5m의 방음벽에도 도로 소음이 심하다며 민원을 제기해 왔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작년 12월 민원을 접수한 이후 여러 차례의 현장 조사와 실무 조정 협의를 통해 SH공사가 오는 10월까지 방음벽을 도로변 소음기준에 맞게 보완·설치하도록 했다.

/ktttk@fnnews.com 김태경기자

서울경제

권익위, 송파파인타운 아파트 소음피해 중재

국민권익위원회는 송파구 장지동 아파트 인근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변에 설치된 방음벽을 도로변 소음기준에 맞게 보완, 설치하도록 했다고 9일 밝혔다.

권익위는 이날 오후 송파구민회관에서 김영란 위원장 주재로 장지동 송파파인타운 1단지 아파트 입주자들과 SH공사,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이 중재했다.

지난 2009년 12월 입주를 시작한 송파파인타운 1단지 아파트 주민들은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따라 설치된 높이 9.5~12.5m의 방음벽에도 도로 소음이 심하다며 민원을 제기해 왔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작년 12월 민원을 접수한 이후 여러 차례의 현장 조사와 실무 조정 협의를 통해 SH공사가 오는 10월까지 방음벽을 도로변 소음기준에 맞게 보완·설치하도록 했다. 또 한국도로공사에 관련 행정절차와 공사 중 사고 예방을 위한 전반적인 안전조치 이행에 협조하고 이동식 과속단속카메라 운영을 위한 시설물을 이달 말까지 설치하도록 했다고 권익위는 덧붙였다.

입력시간 : 2011/06/09 15:48:13

권익위, 송파파인타운 아파트 교통소음 민원 중재

현장조정 통해 올 10월까지 방음벽 보완·설치 합의

기사입력 2011-06-09 15:00 | 기사수정 2011-06-09 15:00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서울 장지동 송파파인타운 1단지 아파트 입주자들이 줄곧 제기해온 인근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교통소음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이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9일 송파구민회관에서 아파트 입주자들과 SH공사, 한국도로공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영란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아파트 인근 도로변에 설치돼 있는 방음벽을 소음기준에 맞게 보완·설치하는 중재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송파파인타운 1단지 아파트는 SH공사가 시행한 장지지구 택지개발사업에 포함되면서 지난 2009년 12월 입주가 시작됐다.

SH공사는 당시 환경영향평가 협의에서 제시된 높이 9.5~12.5m의 방음벽을 설치했으나 221세대 입주민들은 도로소음에 따른 피해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이에 권익위는 작년 12월 해당 민원을 접수, 현장조사 및 실무조정협의를 통해 SH공사에 올 10월말까지 외곽순환고속도로변에 설치한 방음벽을 소음기준에 맞게 보완·설치토록 하는 중재안을 내놴다.

또 도로공사에 대해선 관련 행정절차와 공사 중 사고예방을 위한 전반적 안전조치 이행에 협조하고, 이달 말까지 이동식 과속단속카메라 운영을 위한 시설물 설치토록 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조정은 권익위와 입주자, 관련기관이 2회의 현장조사와 4차례의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함께 노력하고 협력한 결과”라며 “오랜 시간 소음피해를 견뎌온 입주자들의 주거환경이 개선되는 계기가 마련돼 보람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용석 기자 ys4174@ajnews.co.kr



통영시 장사도 해상공원 뱃길 열려

민원번호 : 2AA-1106-094115(산업농림환경민원과, 정현준 조사관)

(‘11. 11. 30.)

민원개요

경남 통영시 한산면 소재 ‘장사도해상공원은 조성사업이 완료되었으나, 통영시와 장사도(해상공원운영사) 측이 거제선적 유람선의 운항 승인 규모를 두고 장기간 마찰을 빚어 개장이 지연됨에 따라 유람선 운항 승인을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되어 유람선 접안시설 설치를 위한 공유수면 점·사용승인, 공원 개장일 전까지 용수 공급, 해상공원 운영 수입금 배분을 위한 협의체(7인) 구성 하여 논의 결정하도록 조정 중재

1 당사자

- 신 청 인 : 장사도해상공원주식회사 대표이사 ○○○
- 피신청인 : 경남 통영시장
- 관계기관 : 경남 거제시장

2 민원내용

- 한려해상 장사도식물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통영시장은 거제 선적 유람선(7척)의 장사도식물원 운항을 즉시 승인하고, 장사도식물원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을 배분하라는 주장의 취소 요구

3 피신청인 등 의견

가. 통영시장

- 거제지역 유람선의 장사도 운항 승인은 선박 척수와 관계없이 1회 400명, 차도선 1척 외에는 시민 여론 등을 감안할 때 수용 곤란하다.
- 수입금 배분에 관하여는 기 투자한 시설물(진입도로 등)의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장사도식물원 운영 수입금의 10% 배분이 타당하다.

나. 거제시장

- 거제시 관내 마을(대포·저구·가배)에서 총 4척의 유람선이 입출항 준비를 마치고 항구에 정박 중에 있으므로 최소한 4척(적당 승선 인원은 신청인 주장과 같다) 이상으로 유람선 운항이 승인이 되어야 장사도식물원 운영에 필요한 용수공급이 가능하다.

4. 주요 쟁점사항

- 거제 선적 유람선(7척)의 장사도식물원 운항 승인
- 장사도식물원에서 발생하는 수입금 배분

5. 갈등 분석

가. 민원발생배경 및 주요사실관계

- 2003. 3. 착공한 장사도해상공원 조성사업이 2011. 6. 완료되었으나, 통영시와 장사도 측이 거제선적 유람선의 운항 승인 규모를 두고 장기간 마찰을 빚어 개장이 지연됨에 따라 고충민원 발생
 - ※ 통영시는 2004. 12. 8. 장사도해상공원(주)과 ‘한려해상 장사도식물원조성 민간유치사업 시행협약서’를 체결하여 기반시설설치사업(진입도로·오페수처리시설, 선착장 등) 시행 *사업비 : 37.8억(국·도비 25.8억, 시비: 12억)
- 거제 선적 유람선의 운항 승인 규모를 놓고 장사도해상공원(주)과 통영시 간의 대립 격화로 지역주민과 기관 간의 갈등 발생
 - 《통영시》
 - 거제 선적 유람선 장사도해상공원 운항 승인 거부
 - 장사도 선박 접안시설 설치를 위한 공유수면 점·사용 불허
 - 《거제시》
 - 장사도에 지하수 공급을 대가로 유람선 운항권을 받은 거제주민들이 구입한 유람선(4척)의 운항 불승인 시 지하수 공급 중단
 - ※ 거제(대포·가배마을)주민들이 구입한 유람선이 장사도에 운항을 못하게 되자, 주민들이 거제시에 용수 공급 중단 등 대책 마련을 요구함에 따라, 거제시와 통영시가 수차례 대책 협의를 가졌으나, 합의(안) 도출에는 이르지 못하였음

나. 해결 목표

- 장사도행 유람선 운항 승인 등 통영시와 거제시간 지역현안 문제에 대하여 조정해결을 통해 민원 해소와 통영과 거제지역이 상생 발전 롤(Roll) 모델을 제시
 - 모두가 win-win 할 수 있는 갈등 해결 방안 창출

6 갈등해결과정

가. 진행과정 개요

- '11. 6. 14. : 거제시 선적 유람선 장사도에 운항 승인 요구 고충민원 접수
- '11. 6. 23. : 위원장 이동신문고 민원 상담 및 장사도 현장방문
- '11. 8. 5. : 제1차 현장조사 및 관계기관 협의
 - 신청인 : 장사도해상공원에 거제 선적 유람선(250인승 6척)의 운항 승인 및 수입금액은 배분 곤란
 - 피신청인 : 유람선 1회 300명, 차도선 1척 별도) 이외에는 수용 곤란, 수입 금액 배분은 공원관리를 위해 10%배분 타당
 - 관계기관 : 장사도에 지하수 공급 조건으로 거제(대포)마을 주민들이 유람선을 구입, 유람선 운항 불허 시 지하수 공급 중단
 - ※ 신청인(대표자 대리인) 및 통영시(관광과, 해양수산과), 통영시유람선협회, 거제시(환경사업소) 관계자 참석
- '11. 8. 9. : 실무협의회의 개최
 - 신청인과 피신청인 및 관계기관은 종전 입장을 반복 주장
 - 위원회에서 중재(안) 제시 후 '11. 8. 19.까지 검토의견 제출 요구
- '11. 10. 19. : 2차 협의회의 개최
 - 유람선은 4척(차도선 1척 포함)으로 협의, 승선인원은 미확정, 수입금액 배분은 당사자 간 별도 협의체를 구성 논의하기로 협의 - 위원회에서 조정(안) 제시 후 '11. 10. 28.까지 검토의견 제출 요구

조정(안) 제시

- 유람선 운항(4척, 600인승): 250인 1척+100인 1척+차도선 1척(유람선 운영 가능)
- 수입금 배분: 당사자 간에 협의체 구성(개장일부터 30일 이내) 후 90일 내 논의 결정

- '11. 10. 31. ~ 11. 23. : 수정안 제시 및 협의(계속)
 - 유람선 규모에 관한 이견을 조정하기 위해 수정안을 계속 제시하여 쟁점차를 좁혀가면서 조정(안) 도출 노력
- '11. 11. 23. : 수정(안)에 대한 당사자들의 동의 여부 확인
 - 신청인과 통영시 및 거제시가 위원회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

나. 대안제시

수정(안) 제시

- 유람선 운항 규모(4척, 580인) : 150인 3척+130인 1척
- 수입금 배분: 당사자 간에 협의체 구성(개장일부터 30일 이내) 후 90일 내 논의 결정
- * 협의체 구성(7인) :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각 3인을 추천하고, 나머지 1인은 피신청인이 추천하되, 신청인이 동의하는 자로 하며, 협의회의 장은 구성원의 호선으로 한다.
- 지하수 공급 : 장사도식물원의 개장일 전일까지는 용수를 공급하기로 한다.

7 조정 (협의) 결과

가. 조정 · 합의 최종결과

- 통영시가 올해 12월 초까지 장사도해상공원 개장을 위해 접안시설(부잔교) 설치 위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승인하기로 하고, 거제시는 장사도해상공원의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통수시험을 거쳐 늦어도 개장일 전일까지는 용수를 공급

나. 위원회 조정 · 합의문

- 거제지역 유람선 접안 승인에 관하여
 - 1) 거제지역에서 장사도식물원으로 운항하는 유람선의 1일 운항 척수의 상한을 4척(해양경찰서에 승선인원으로 신고한 150인승 3척, 130인승 1척을 말한다)과 차도선 1척(물품운반 및 직원 수송용)으로 한다. 다만,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장사도식물원에 탐방객이 증가할 경우 사전 협의를 거쳐 동 유람선의 운항 척수와 승선 인원을 상향 조정할 수 있다.
 - 2) 장사도식물원의 개장을 위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와 관련하여, 신청인

은 조정 성립일부터 7일 이내에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신청하고, 피신청인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및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의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따른 처리기한 안에 허가하며, 신청인의 준공검사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위 법률에서 정해진 처리기간 안에 준공검사를 완료한다.

- 3) 신청인은 준공검사가 완료되면 지체 없이 유람선 운항 승인신청을 하고, 피신청인은 지체 없이 승인하는 등 장사도식물원 개장에 필요한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한다.

• **한려해상 장사도식물원 운영에 따른 수입금 배분에 관하여**

수입금 배분에 관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협의체를 구성(구성원 7인)하여 동 협의체에서 장사도식물원 개장(유람선 최초 입도일을 말한다) 후 30일 안에 논의·결정한다. 협의체 구성원은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각 구성원 3인을 추천하고, 나머지 1인은 피신청인이 추천하되, 신청인이 동의하는 자로 하며, 협의회 의장은 구성원의 호선으로 한다.

• **거제지역에서의 용수공급에 관하여**

관계기관은 장사도식물원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통수시험을 거쳐 2011. 12. 1.까지 용수를 정상 공급한다.

8 수용-이행 여부 및 시사점

가. 신청인-피신청인 수용 및 이행여부

- '11. 12. 20. :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 '11. 12. 1. : 장사도식물원 용수 공급
- '11. 12. 27. : 유람선 운항 승인

나. 시사점

- 장사도행 유람선 운항 승인 등 통영시와 거제시간 지역현안 문제에 대하여 조정해결을 통해 민원 해소와 통영과 거제지역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 거제·통영시가 상호 협력하여 갈등해결의 롤(Roll) 모델을 제시하였고, 세계적인 관광허브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구축됨
- 지역주민과 행정기관 간의 갈등과 분쟁을 조정 해결하는 위원회 像 구현

장사도 해상공원 뱃길 열린다

국민권익위 현장 조정으로 운항 합의

배종규 기자 / 2011-12-01 14:18:37



▲ 사진제공=통영시 ©2011 CNB뉴스

장사도해상공원으로 가는 유람선의 운항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1일 통영시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 주관으로 지난 30일 오후 2시 통영시청 회의실에서 김동진 통영시장, 김봉렬 장사도해상공원 대표, 김재철 거제시 환경소장이 참여한 가운데 장사도해상공원의 유람선운항 문제로 현장조정회의가 열렸다.

이날 국민권익위원회 박성일 상임위원 주재로 이 같은 문제가 조정됐다.

이날 조정합의 내용은 거제지역에서 장사도식물원으로 운항하는 유람선의 1일 운항척수는 4척(해양경찰서에 승선신고 인원기준 150인승 3척, 130인승 1척)과 차도선1척(물품운반 및 직원 수송용)이다.

현장 조정회의를 주재한 박성일 국민권익위원회 상임위원은 “이번 조정해결을 통해 두 도시가 더욱 협력하고 상생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동진 통영시장은 “두 도시가 서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다행이다. 앞으로 남은 문제도 원만히 해결되기를 기대 한다”고 밝혔다.

장사도해상공원주는 거제지역과 통영지역 유람선 운항 문제와 수익금 배분문제로 그 동안 개장이 미루어져오다가 이번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개장에 따른 걸림돌을 제거하고 12월 초 우선 가개장하게 됐다고 밝혔다.

장사도해상공원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남해안에 자생하는 후박나무, 동백나무, 구실잣밤나무 등 인공을 배제하고 철저하게 원시상태로 잘 보존된 자생 꽃 섬으로 가꾸어 거제 외도와 차별화 된 또 다른 자연환경을 자랑하고 있다.



통영 장사도 해상공원 뱃길 열려...분쟁 합의

기사입력 2011-12-01 16:17 | 최종수정 2011-12-01 16:33

【통영=뉴스시스】 최운용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경남 통영시 '장사도해상식물원'이 곧 개장돼 유람선 운항이 이뤄질 전망이다.

통영시는 지난달 30일 국민권익위 주관으로 열린 현장조정회의에서 장사도해상공원의 유람선 운항 문제가 조정됐다고 1일 밝혔다.

조정회의에는 김동진 시장과 김봉렬 장사도해상공원 대표, 김재철 거제시 환경소장이 참석했으며 권익위측의 중재로 타결됐다.

이날 통영시와 장사도해상공원(주)측은 거제에서 장사도로 운항하는 선박으로 1일 유람선 4척과 화물운반선 1척에 전격 합의했다.

또 장사도해상식물원 운영에 따른 수입금 배분은 개장 후 10일 이내에 협의체를 구성해 30일 안에 결정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장사도해상공원(주)측은 이달 초 우선 가개장해 본격적으로 영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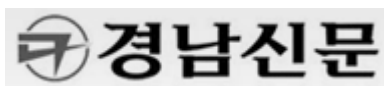
시 관계자는 "장사도해상식물원을 한려수도조망케이블카와 연계한 관광상품으로 개발해 통영을 대표하는 관광지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사도해상식물원은 원시상태로 보존된 동백나무와 후박나무 등 자생식물을 활용한 차별화를

통해 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으로 2004년 협약을 체결, 공공 및 민간부분에서 170억원을 들여 올해 4월 개발을 완료했다.

그러나 장사도해상공원(주)측이 거제지역에서 유람선 운항을 시도하자 예산과 행정지원 조건으로 '통영지역 유람선의 우선 입도'를 명시한 민자유치협약을 이유로 통영시와 통영유람선업계가 운항 중단을 요구, 마찰을 빚어면서 개장이 미뤄져 왔다.

yong4758@newsis.com



통영 장사도 해상공원 뱃길 열었다

국민권익위 조정, 시-민간업자 이달 가개장 합의
거제시 하루 유람선 4척·화물운반선 1척 운항해

통영시 한산면 매죽리 장사도 해상공원 뱃길이 열릴 전망이다.

2일 통영시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지난 30일 오후 2시 통영시청 회의실에서 김동진 통영시장과 김봉렬 장사도해상공원 대표, 김재철 거제시 환경소장이 참여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장사도 해상공원의 유람선 운항 문제를 조정했다.

통영시와 장사도해상공원(주)은 이날 거제에서 장사도로 운항하는 선박을 하루 유람선 4척(150인승 3척, 130인승 1척)과 화물운반선 1척으로 합의했다.

또 장사도해상식물원 운영에 따른 수입금 배분은 개장 후 10일 이내에 협의체를 7명으로 구성해 30일 안에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장사도해상공원(주)은 이달 초 우선 가개장해 본격적으로 영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통영시는 한려수도조망케이블카와 연계된 관광 상품개발로 통영을 대표하는 해양관광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박성일 국민권익위 상임위원은 “이번 조정해결을 통해 두 도시가 더욱 협력하고 상생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동진 시장은 “두 도시가 서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돼 다행이며 앞으로 남은 문제도 원만히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장사도는 섬의 3분의 2가 동백나무와 후박나무가 군락을 이루고 있으며 주변의 대덕도, 소덕도, 가왕도, 어유도, 거제의 대·소병대도 등과 어우러져 경치가 빼어나다.

특히 겨울이면 새빨간 꽃망울을 터트리는 동백꽃이 장관을 이룬다.

장사도해상공원은 주5일제 근무 등 관광수요 패턴 변화와 해양관광 수요 증대에 대비해 섬의 특징인 원시상태의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가꾸어 해양관광 기틀 마련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04년에 협약을 체결하고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 170여억원을 투입해 사업이 추진돼 왔다.

그러나 거제지역과 통영지역 유람선 운항 문제와 수익금 배분 문제로 그동안 개장이 연기됐다.

신정철·이회근기자 sinjch@knnews.co.kr

경남도민일보

2011년 12월 02일 (금)
07면 사회

통영 장사도 해상공원 이달 초 개장

통영시·거제시·해상공원
유람선 운항 문제 등 합의

통영 장사도 해상공원이 이달 초 문을 열 전망이다.

통영시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의 주관으로 지난 30일 오후 2시 통영시청 회의실에서 열린 현장조정회의에서 장사도 해상공원의 유람선 운항 문제가 조정됐다.

국민권익위원회 박성일 상임위원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김동진 통영시장, 김봉렬 장사도 해상공원 대표, 김재철 거제시 환경소장이 참여했다.

장사도 해상공원(주)은 거제지역과 통영 지역 유람선 운항 문제와 수익금 배분 문제로 그동안 개장이 미뤄져 오다 이번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개장에 따른 걸림들을 제거하고 이달 초 우선 개장하게 됐다.

이날 조정회의 내용은 거제지역에서 장사도 식물원으로 운항하는 유람선의 1일 운항 척수는 4척(해양경찰서에 승선신고



지난달 30일 통영시청 대회의실에서 장사도 해상공원 유람선 운항 승인 현장 조정회의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주최로 열렸다. /통영시

인원기준 150인승 3척, 130인승 1척), 차도선은 1척(물품운반 및 직원수송용)으로 합의했다.

또한, 한려해상 장사도 식물원 운영에 따른 수입금 배분은 통영시와 장사도 해상공원은 장사도 식물원 개장 후 10일 이내에 협의체를 구성해 30일 안에 논의,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통영시는 지난 2004년 장사도 해상공원

(주)과 ‘민자유치사업시행 협약서’를 체결하고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 170여억 원을 투입, 자생 꽃 섬을 추진해왔다.

통영시는 장사도 해상공원 개장에 따른 제반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한려수도 조망 케이블카와 연계된 관광 상품개발로 통영을 대표하는 해양관광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원정 기자 june2009

18.9 X 13.6 cm

국제신문

2011년 12월 02일 (금)
10면 지역

통영 '자생꽃 섬' 장사도 문 활짝

유람선·차도선 입도 척수 합의
오는 15일께 임시 개장 예정

박현철 기자 phcnews@kookje.co.kr

경남 통영의 '자생꽃 섬' 장사도가 이달 중 개장한다.

통영시와 장사도 해상공원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유람선 입도 척수 조정 결과를 수용하기로 합의, 이달 중 개장한다고 1일 밝혔다. 합의 내용은 거제에서 장사도로 운항하는 척수는 유람선 4척과 차도선 1척으

로 제한하고 통영 유람선은 입항에 척수 제한이 없다. 또 통영시와의 수익금 배분은 별도의 협의회를 구성해 개장 후 30일 이내에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장사도 해상공원 측은 이달 15일께 임시 개장한 뒤 내년 3월 정식 개장식을 가질 예정이다. '제 2의 외도'로 불리는 장사도는 행정구역상 통영에 속하지만 거리가 거제와 가까워 유람선의 거제 운항 문제를 둘러싸고 두 시가 마찰을 빚어 개장이 지연돼 왔다.

전체 면적이 39만5378㎡인 장사도는 동백나무 후박나무 등 난대림

군락과 야생화로 뒤덮여 사시사철 푸른 숲을 볼 수 있는 섬으로 민자와 통영시비 등 170여억 원을 투입해 해상공원을 조성했다. 장사도는 외래 식물 중심의 거제 외도와 달리 자연 환경을 최대한 살려 차별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통영시 관계자는 "두 도시가 상생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며 "장사도는 남해안의 새로운 관광지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통영시의회와 통영 유람선협회 등은 국민권익위 조정에 반발하고 있다. 통영시의회는 "국민권익위의 조정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며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들어갔다.

15.3 X 8.6 cm

제 4 장

도시·수자원민원

조정사례

- ☐ 광양시 명당지구 산업단지 준공지연 해결로, 지역경제 활성화
- ☐ 고령군 ○○ 아파트 부설주차장 추가 설치로 주차난 해결
- ☐ 경기 안성시 공장증설 요구 민원, 하천구역 정비를 통해 해결
- ☐ 안동 축산농가 구제역 피해 36농가 축산보상
- ☐ 임실 섬진강댐 재개발사업지구 거주민 이주 대책 마련
- ☐ 전남 강진만 어업피해 원인 조사 합의
- ☐ 인천 환경가교 철거로 인한 교통정체 해소
- ☐ 경기 양주시 회천택지개발지구 잔여지 보상, 13년만에 해결



광양시 명당지구 산업단지 준공지연 해결로, 지역경제 활성화

민원번호 : 2BA-1102-164216(도시수자원민원과, 김경태 조사관)

(‘11. 3. 30.)

민원개요

전라남도 광양시장이 시행하는 국가산업단지 명당지구의 개발대행업체인 신청인이 산업 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이 민원 사업지구와 접한 공유수면 108㎡를 착오 매립하였다는 이유로 준공을 득하지 못하여 기업 활동에 차질을 빚고 있으니 이를 해소하여 달라는 민원에 대해, 해당 착오매립지를 국유지로 귀속하는 조건으로 전라남도는 원상회복 의무 면제를 적극 검토하고, 광양시 역시 준공처리를 해주기로 하는 대안 마련 조정 합의

1 당사자

- 신청인 : 전남 광양시 태인동 ○○번지 (주)○○○
- 피신청인 : 전라남도지사(피신청인 1), 전라남도 광양시장(피신청인 2)

2 민원내용

- 광양국가산업단지 명당지구(이하 ‘이 민원 사업 지구’라 한다) 내 민원기업이 105,153㎡ 규모의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공유수면 108㎡를 매립(이하 ‘이 민원 매립지’라 한다)하였다는 이유로 준공처리를 지연함에 따라 합병 등 기업 설립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으니,
 - 원활한 기업 활동을 위해 조성 완료된 부지의 준공 및 착오 매립된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 요구

3 피신청인 등 의견

가. 전라남도지사

- 이 민원 매립지에 대한 처리절차가 우선 정리되어야만 조성이 완료된 이 민원 사업지구 부지에 대한 준공 처리가 가능

나. 전남 광양시장

- 이 민원 매립지는 종전 사업자인 (주)○○○ 조선해양의 조선소 부지 조성을 위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공유수면 매립면허가 있었던 당초 처분 면적 범위 이내인 점을 고려하여 국유지 귀속을 조건으로 원상회복 의무 면제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음

4. 주요 쟁점사항

- 사업부지 준공
- 착오에 의해 매립된 민원 매립지에 대한 원상회복 의무면제

5. 갈등 분석

가. 민원발생배경 및 주요사실관계

- (주)포스틸은 광양시 태인동 명당지구일대 국가산업단지 대행사업자로 2011. 3. 31. 준공을 목표로 105,153m² 규모의 부지를 조성하면서 매립면허 없이 108m² 규모의 공유수면을 매립(민원 매립지)하였다는 사유로 준공 지연되어 합병 등 기업 활동에 제약
 - ※ 민원 매립지는 종전 사업자인 (주)○○○조선해양이 조선소 부지 조성을 위해 139m² 규모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매립면허가 2008. 6. 16. 이루어졌으나, 부도로 인해 2009. 4. 13 취소되고, 광양시에서는 2009. 6. 24. 실업주자가 개발하는 개발대행사업 방식으로 (주)포스틸의 투자를 유치하여 부지 조성사업을 시행하게 됨
- 산업단지 준공 후에야 기업합병 실사 작업이 가능하므로 민원 매립지를 제외한 부지에 대해 준공을 요구하였으나,
 - 민원 매립지의 매립면허 절차 등이 선결되어야 한다며 준공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견지
- 2011. 2. 28. (주)광양SPFC에서 사업부지에 대한 준공 및 착오에 의해 매립된 민원매립지에 대한 원상회복 의무면제를 요구하는 고충민원을 제기

나. 해결 목표

- 조선용 후판 등 산업자재 수요에 부응하고자 급박한 기업 설립과정에서 발생한 고충을 해소하여 관계기관과 기업 모두가 Win-Win하는 해결방안을 마련
 - 사실상 조성 완료된 토지에 대해 우선 준공, 착오로 매립된 부지에 대한 원상회복 의무면제를 절차를 이행하도록 구분 처리하는 방안 등
 - ※ 조정 성립으로 원활한 기업 활동 제고, 조기 고용창출(약100명)

6 갈등해결과정

가. 진행과정 개요

- '11. 3. 3. : 제1차 현장조사 및 관계기관 협의
 - 기업 관계자, 전라남도, 광양시 등 관계자들과 민원현장을 실사하고 해결방안 논의
 - 광 양 시 : 비록 단지 조성이 완료되었다 하여도 민원 매립지의 원상회복 등이 선결되어야 하므로 전체 준공은 곤란하나, 민원 매립지를 포함하여 별도 공구로 구획하고 부분준공은 검토 가능
 - 전라남도 : 민원 매립지에 대해 원상회복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 원상회복 의무면제 여부는 별도로 검토
- '11. 3. 17. ~ '11. 3. 24. : 추가 현장조사 및 신청인과 관계기관(국토해양부, 전라남도, 광양시)협의를 거쳐 조정안 제시
 - 신청인, 피신청인 모두 우리 위원회 조정안 수용

위원회 제시 조정안

- 광 양 시 : 조성이 완료된 산업단지 전체 준공처리
- 전라남도 : 민원 매립지는 국토해양부에서 실시중인 '바닷가 실태조사'에 포함하고 처리지침에 따라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 면제 검토
- 신 청 인 : 민원 매립 시설(제방)을 국유지로 귀속 의사를 문서로 표시

7 조정 (합의) 결과

가. 조정 · 합의 최종결과

- 착오매립지를 국유지로 귀속하는 조건으로 전라남도는 원상회복 의무의 면제를 적극 검토하고, 광양시 역시 준공처리를 해주기로 하는 중재안 합의

나. 위원회 조정 · 합의문

- 전라남도지사는 조성 완료된 이 민원 사업지구에 대해 준공처리 한다.
- 전라남도 광양시장은 이 민원 매립지에 대해 국토해양부에서 실시중인 ‘바닷가 실태조사’¹⁾에 포함하여 원상회복 의무 면제여부를 적극 검토 처리한다.
- 신청인은 이 민원 매립지를 국유지로 귀속 의사를 전라남도지사에게 문서로 표시한다.

8 수용-이행 여부 및 시사점

가. 신청인-피신청인 수용 및 이행여부

- '11. 5. : 착오 공유수면 매립지(108m²)를 전남 광양시장에게 국유지 귀속의사 문서로 표시
- '11. 5. : 착오 매립지를 국토해양부의 ‘바닷가 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원상회복 의무 면제여부 적극 검토 처리
- '11. 6. 1. : 조성 완료된 명당지구 국가산업단지 준공처리

나. 시사점

- 우리 위원회는 국가 경제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경제 활성화의 주역이 되는 기업 민원을 특별 관리하여 오고 있음.
 - 이번 조정은 부분적인 행정절차 이행에 미숙하여 산업단지 전체의 준공이 어렵게 되는 경우, 기업 활동의 흐름에 큰 장애가 없도록 우선 준공하고, 착오 매립된 부분을 분리하여 관련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여,
 - 지역경제 활성화와 더 나아가 국가 경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문제 해결 관점에서 기업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하는 상징적 의미가 있음.

1) 국토해양부 연안계획과 -4753 (2010. 12.10)

국민권익위, 광양 국가산단 준공지연 문제 해결

기사입력 2011-03-30 15:53 | 최종수정 2011-03-30 16:23



민원해결 도우미.. 국민권익위 【광양=연합뉴스】 박성우 기자 = 준공이 됐으나 허가를 받지 못했던 전남 광양 국가산단 준공 지연 문제가 국민권익위의 도움으로 말끔히 해결됐다. 왼쪽부터 현종석 광양SPFC 사장, 김대식 권익위 부위원장, 이개호 전남행정부지사, 정태기 광양 부시장. 2011.3.30.〈(지방기사 참고, 국민권익위 제공)〉 3pedcrow@yna.co.kr

【광양=연합뉴스】 박성우 기자 = 준공이 됐으나 허가를 받지 못했던 전남 광양 국가산단 준공 지연 문제가 국민권익위의 도움으로 말끔히 해결됐다.

국민권익위는 국가산단인 광양시 태인동 명당1지구 준공지연 문제 해결을 위해 30일 광양 현지에서 이개호 전남부지사, 장태기 광양부시장 등 당국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김대식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주재로 중재회의를 열어 문제를 해결했다고 밝혔다.

명당1지구는 개발대행사인 포스틸이 단지 조성 과정에서 착오로 공유수면 108㎡를 매립, 단지 부지에 포함하는 바람에 명당1지구 10만5천153㎡ 전체 부지에 대한 준공이 지연되는 사태로 비화했었다.

이날 중재에서 국민권익위(정부)가 공유수면 108㎡를 국유지로 편입하는 조건으로, 전남도는 부지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해주고, 광양시는 준공허가를 내주기로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명당 1지구는 지난해 4월 부지 조성작업에 착수, 지난 3월 조성을 완료했으나 공유수면 착오 편입 문제가 불거지면서 준공허가가 미뤄져 왔다.

3pedcrow@yna.co.kr

광양 국가산업단 명당1지구 준공지연 해결 실마리

기사입력 2011-03-30 14:00

【광양=뉴스IS】 김석훈 기자 = 전남 광양시 국가산업단지내 명당1지구에 있는 10만5153㎡ 규모의 국가산업단지의 준공 지연사태가 해결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30일 명당1지구의 개발대행업체인 (주)포스틸이 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공유수면 108㎡를 착오로 매립하면서 10만5153㎡규모의 명당1지구 전체의 준공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태에 대해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광양시 (주)광양 SPFC(구 삼현철강) 회의실에서 이개호 전남부지사, 이성웅 광양시장이 참여한 가운데 김대식 부위원장 주재로 조정회의를 열어 해당 단지를 준공처리키로하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당초 포스틸이 공유수면 일부를 착오매립하자 준공처리를 담당하는 광양시는 착오 매립지를 원상회복하거나, 전남도로부터 원상회복 의무 면제조치를 받아야 준공처리를 해준다는 입장이었다. 전남도도 역시 해당 매립지를 원상회복한 후 별도의 매립면허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의 중재로 해당 착오매립지를 국유지로 귀속하는 조건으로 전남도는 원상회복 의무의 면제를 검토하고, 광양시가 준공처리를 해주기로 하는 중재안에 합의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정으로 광양 국가산업단지 명당1지구가 준공처리되면 원활한 기업활동 지원이 가능해 100여 명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정회의를 주재한 김대식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기업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만히 해결돼 뜻깊게 생각하며 이번 조정이 앞으로 지역경제 부흥에도 새로운 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31일 여수 엑스포타운조성 사업지구와 웅천지구택지개발 현장사무실을 방문해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 권익위는 엑스포 타운 조성 사업구역에서 제외돼 이주대책과 보상을 요구하는 8세대의 이주 가능 여부를 살피고, 웅천 택지개발 이주민중 대상에서 제외된 세대에 대한 택지공급 여부도 살필 계획이다.

kim@newsis.com

광양국가산업단지 명당1지구 준공 지연 민원 조정합의

기사입력 2011-03-30 15:22



【광양=뉴스시스】 전진환 기자 = 현장 방문 행정에 나선 김대식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왼쪽 두번째)이 30일 오후 전남 광양시 태인동 (주)광양SPFC 회의실에서 '광양국가 산업단지 명당1지구 준공 지연 민원'에 대해 조정합의한 후 관계기관장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현종석 (주)광양SPFC 사장, 김대식 권익위 부위원장, 이개호 전남행정부지사, 정태기 광양부시장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제공)

photo@newsis.com



광양 명당국가산업단지 준공 지연 해결

매립 착오로 지연된 광양 명당 국가산업단지의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 광양시 태인동 명당 1지구에서 김대식 부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발 대행업체의 매립 착오로 발생한 준공 지연문제에 대한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착오 매립지를 국유지로 귀속하는 조건으로 해당 단지를 준공처리하도록 광양시와 전라남도로부터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명당 국가산단은 개발대행업체인 주식회사 포스틸이 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공유수면 백8제곱미터를 착오로 매립해 전체 단지 10만 제곱미터의 준공허가가 나지 않아 입주 업체들이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광양에 이어 순천을 방문해 201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장 부지에 있는 철탑을 지중화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예산을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끝)

CBS

권익위 명당산단 준공 지연 해결

국민권익위원회가 광양 태인동 명당 1지구 국가산단의 준공 지연 민원을 해결했다.

국민권익위 김대식 부위원장 일행은 30일 광양 민원 현장을 찾아 '포스틸'이 명당산단을 조성하면서 공유수면 108㎡·32평을 착오로 매립해 산단 전체가 준공을 받지 못한 상황을 파악했다.

이런 착오 매립에 따라 준공 처리를 담당하는 광양시는 착오 매립지를 원상회복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전라남도는 착오 매립지를 원상회복한 후 별도의 매립 면허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국민권익위는 그러나 조정회의를 통해 광양 명당산단 착오 매립지를 국유지로 귀속하는 조건으로, 광양시는 준공을 허가해 주고 전라남도는 원상회복 의무 면제를 적극 검토하도록 중재하면서 합의를 이끌었다.

newsman@cbs.co.kr 전남CBS 고영호 기자



명당1지구 준공 '합의' (R)

김유진 2011-03-31 1

〈앵커〉

잘못된 부지 매립으로 준공이 지연됐던 광양시 명당 1지구의 단지 구성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착오로 매립된 부지로 인해 발생한 재산권 문제 등은 행정 기관 간 협의를 통해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김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주식회사 포스틸은 광양시 국가산업단지 내 명당 1지구에
철판가공제품 생산공장을 건설하기로 하고
지난 해 4월, 10만 5천 제곱미터 부지에 대한 단지 조성작업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공장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공유 수면을 매립했고,
광양시가 이를 문제로 준공 불허 방침을 밝히면서 사업 추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포스틸은 매립지를 원상 회복 할 경우 비용 부담은 물론,
공장 준공 연기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며
해당 부지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민원을 국민권익위에 요청했고,
30일, 권익위 조정회의에서 "부지를 그대로 활용 하게 한다"는 내용의 합의문이 도출됐습니다.

권익위는 포스틸측의 부지 매립이 행정 착오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매립된 108제곱미터 부지를 국유지로 귀속하고,
대신 전라남도로부터 매립지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중재안에 대해 관계
기관들이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김대식 /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원상회복하고 재매립을 하면 6개월에서 1년까지 준공이 늦춰질 수 있습니다.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서 행정적으로 편의를 주는...

하지만 이번 합의문 도출로 당장 해당 부지에 대한 준공이 결정되는 건 아닙니다.

권익위는 국토해양부의 불법 매립지 원상 회복 처리 절차 등의 실무적 과제가 남았으며, 하지만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준공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포스틸은 명당1지구의 개발대행업체로 선정됐으며

현재 철판가공공장을 포함해 3개의 철강 관련 공장을 건립중에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유진입니다.

무등일보

2011년 03월 31일 (목)
03면 종합

광양 명당1지구 난제 해결

김대식 권익위 부위원장 적극 앞장

공유수면 착오매립으로 준공을 받지 못하고 있던 광양 명당1지구의 국가산업단지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김대식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30일 광양시 ㈜광양 SPFC(구 삼현철강) 회의실에서 이개호 전남도 부지사, 이상용 광양시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조정회의를 갖고 해당 단지를 준공처리하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날 조정회의는 명당1지구 개발대행업체인 ㈜포스틸이 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공유수면 108㎡를 착오로 매립하면서 10만5천153㎡ 규모의 명당1지구 전체의 준공을 받지

못하는 있다는 민원을 접수함에 따라 이뤄졌다.

그동안 광양시는 착오 매립지를 원상회복하거나 전남도로부터 원상회복 의무 면제조치를 받아야 준공처리를 해준다는 입장이었고, 전남도 역시 해당 매립지를 원상회복한 후 별도의 매립면허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의 적극적인 중재에 따라 해당 착오매립지를 국유지로 귀속하는 조건으로 전남도는 원상회복 의무의 면제를 적극 검토하고, 광양시 역시 준공처리를 해주기로 하는 중재안 합의에 성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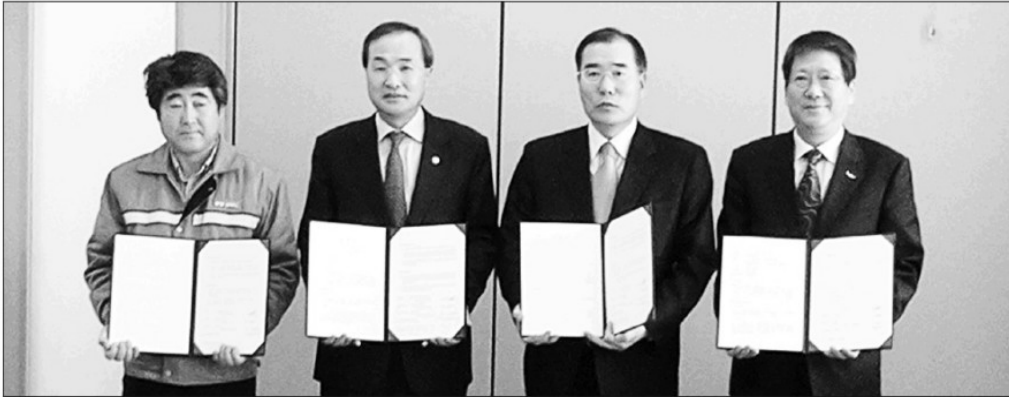
김대식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이 30일 광양시 국가산업단 명당1지구 조성 사업 현장에서 이상용 광양시장과 현충식 광양SPFC사장 등과 함께 현상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이번 조정으로 광양 국가산업단지 명당1지구가 준공처리되면 원활한 기업활동 지원이 가능해 100여명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이로 인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김대식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기업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행정적으로도 원만히 해결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이번 조정이 앞으로 지역경제 부흥에도 새로운 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윤한식기자
20.3 X 10.0 cm



김대식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왼쪽 두번째)이 30일 오후 광양시 태인동 (주)광양SPFC 회의실에서 '광양국가산업단지 명당1지구 준공 지연 민원'에 대해 조정합의한 후 관계기관장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현종석 (주)광양SPFC 사장, 이개호 전남행정부지사, 정대기 광양부시장

광양 국가산단 '명당1지구' 준공 가능할듯

공유수면의 착오 매립으로 준공이 지연됐던 광양 국가산업단지내 명당1지구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적극적인 중재로 준공이 가능해 개발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30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에 따르면 명당1지구의 개발 대행업체인 ㈜포스틸이 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공유수면 108㎡를 착오로 매립하면서 10만5153㎡ 규모의 명당1지구 전체가 준공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권익위는 이날 오후 2시 광양시 (주)광양 SPFC(구 삼현철강) 회의실에서 이개호 전남도 부지사, 이성웅 광양시장이 참여한 가운데

김대식 부위원장 주재로 조정회의를 개최, 해당 단지를 준공처리하는 합의를 이끌어 냈다.

포스틸이 공유수면 일부를 착오 매립하자 준공처리를 담당하는 광양시는 착오 매립지를 원상회복하거나 전남도로부터 원상회복 의무 면제조치를 받아야 준공처리를 해준다는 입장이었고 전남도 역시 해당 매립지를 원상회복한 후 별도의 매립면허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이날 권익위의 중재에 따라 해당 착오매립지를 국유지로 귀속하는 조건으로 전남도는 원상회복 의무의 면제를 적극 검토하고

광양시 역시 준공처리를 해주기로 하는 중재안에 합의했다.

권익위의 이번 조정으로 광양 국가산업단지 명당1지구가 준공처리되면 원활한 기업활동 지원이 가능해 100여명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이로 인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김대식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기업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행정적으로도 원만히 해결됐다"며 "이번 조정이 앞으로 지역경제 부흥에도 새로운 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은용주 기자 yong@

15.1 X 17.3 cm

광양 국가산업단지 명당1지구 준공될 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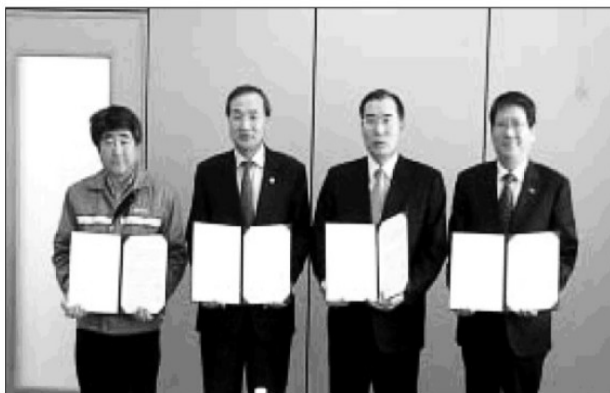
국민권익위, 현장조정회의로 10만5천153㎡ 처리 합의

전남 광양 국가산업단지내 명당1지구에 있는 10만5천153㎡ 규모의 국가산업단지의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탄)는 명당1지구의 개발대행업체인 (주)포스틸이 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공유수면 108㎡를 착오로 매립하면서 10만5천153㎡ 규모의 명당1지구 전체의 준공을 받지 못하는 민원을 접수한 뒤 30일 오후 광양시 (주)광양SPFC(구 삼현철강) 회의실에서 이성웅 광양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대식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주재로 조정회의를 갖고 해당 단지를 준공처리하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주)포스틸이 공유수면 일부를 착오매립하자 준공처리를 담당하는 광양시는 착오 매립지를 원상회복하거나 전남도로부터 원상회복 의무 면제조치를 받아야 준공처리를 해준다는 입장이었다.

전남도 역시 해당 매립지를 원상회복한 뒤 별도의 매립면허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김대식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30일 '광양국가산업단지 명당1지구 준공 지연 민원' 조정회의한 뒤 관계기관장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현종석 (주)광양SPFC 사장, 김대식 부위원장, 이개호 전남도 행정부지사, 장태기 광양부시장.

보였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의 적극적인 중재로 해당 착오매립지를 국유지로 귀속하는 조건으로 전남도는 원상회복 의무의 면제를 적극 검토하고, 광양시 역시 준공처리를 해주기로 하는 중재안 합의에 성공했다.

국민권익위의 이번 조정으로 광양 국가산업단지 명당1지구가 준공처리될 경우 100여명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 지역경

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조정회의를 주재한 김대식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기업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행정적으로도 원만히 해결돼 뜻 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조정이 앞으로 지역경제 부흥에도 새로운 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광양/서순규 기자

skseo@namdondnews.com

15.5 X 17.3 cm

광양 국가산업단 명당1지구 준공지연 민원해결

전남 광양시 국가산업단지내 명당1지구에 소재한 105,153㎡규모의 국가산업단지의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명당1지구의 개발대행업체인 (주)포스틸이 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공유수면 108㎡를 착오로 매립하면서 105,153㎡규모의 명당1지구 전체의 준공을 받지 못하는 민원을 접수하고 30일 (주)광양 SPFC(구 삼현철강) 회의실에서 이개호 전남도 부지사, 이성웅 광양시장이 참여한 가운데 조정회의를 개최해 해당 단지를 준공처리하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날 국민권익위가 나서 합의를 이끌어낸 민원은 (주)포스틸이 공유수면 일부를 착오매립하면서 발생됐다.

이에 광양시는 착오 매립지를 원상회

복하거나 전남도로부터 원상회복 의무 면제조치를 받아야 준공처리를 해준다는 입장이었다.

전남도 역시 해당 매립지를 원상회복한 후 별도의 매립면허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의 이번 중재로 해당 착오매립지를 국유지로 귀속하는 조건으로 전남도는 원상회복 의무의 면제를 적극 검토하고, 광양시 역시 준공처리를 해주기로 하는 중재안 합의에 성공했다. 국민권익위의 이번 조정으로 광양 국가산업단지 명당1지구가 준공처리되면 원활한 기업활동 지원이 가능해 100여명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전남취재본부/ 서길원기자

11.4 X 8.7 cm



광양 국가산업단지 명당1지구 준공지연민원 해결

국민권익위, 30일 현장조정회의로 준공 합의

[2011-03-30 오후 2:35:28]

전라남도 광양시 국가산업단지내 명당1지구에 있는 105,153㎡규모의 국가산업단지의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 ACRC)는 명당1지구의 개발대행업체인 (주)포스틸이 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공유수면 108㎡를 착오로 매립하면서 105,153㎡규모의 명당1지구 전체의 준공을 받지 못하는 민원을 접수하고 30일 오후 2시 전남 광양시 (주)광양 SPFC(구 삼현철강) 회의실에서 이개호 전라남도 부지사, 이성웅 광양시장이 참여한 가운데 김대식 부위원장 주재로 조정회의를 개최해 해당 단지를 준공처리하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주)포스틸이 공유수면 일부를 착오매립하자 준공처리를 담당하는 광양시는 착오 매립지를 원상회복하거나 전라남도로부터 원상회복 의무 면제조치를 받아야 준공처리를 해준다는 입장이었고, 전라남도 역시 해당 매립지를 원상회복한후 별도의 매립면허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의 적극적인 이번 중재로 해당 착오매립지를 국유지로 귀속하는 조건으로 전라남도는 원상회복 의무의 면제를 적극 검토하고, 광양시 역시 준공처리를 해주기로 하는 중재안 합의에 성공했다.



국민권익위의 이번 조정으로 광양 국가산업단지 명당1지구가 준공처리되면 원활한 기업활동 지원이 가능해 100여명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이로 인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조정회의를 주재한 김대식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기업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협저로 행정적으로도 원만히 해결되어 뜻 깊게 생각하며, 이번 조정이 앞으로 지역경제 부흥에도 새로운 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광양닷컴

(주)포스틸 지옥에서 천당으로, 국민권익위, 30일 현장조정회의로 준공 합의

2011년 03월 30일 (수) 19:53:09
광양닷컴 desk@newsgwnagyang.com

광양시 국가산업단지내 명당1지구가 조성계획보다 매립면적이 추가되어 국가산업단지의 준공에 난항이 예상됐으나 국민권익위원회가 발벗고 나서 명당1지구 국가산업단지의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30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 ACRC)는 명당1지구의 개발대행업체인 (주)포스틸이 단지를 조성 과정에서 공유수면 108㎡를 착오로 추가매립하면서 105,153㎡규모의 명당1지구 전체의 준공을 받지 못하는 실정에 놓였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30일 오후 2시 광양시 (주)광양 SPFC(구 삼현철강) 회의실에서 이개호 전라남도 부지사, 이성웅 광양시장이 참여한 가운데 김대식 부위원장 주재로 조정회의를 개최해 해당 단지를 준공처리하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당초 광양시는 (주)포스틸이 공유수면 일부를 착오로 매립면적이 추가되자 준공을 담당하는 시관계자는 착오 매립지를 원상회복하거나 전남도로부터 원상회복 의무 면제조치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전남도 역시 해당 매립지를 원상회복한 후 별도의 매립면허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의 적극적인 중재로 해당 착오매립지를 국유지로 귀속하는 조건으로 전남도는 원상회복 의무의 면제를 적극 검토키로하고, 광양시 역시 준공처리를 해주기로 하는 중재안에 합의했다.

국민권익위의 이번 조정으로 광양 국가산업단지 명당1지구가 준공처리되면 원활한 기업활동 지원이 가능해 100여명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조정회의를 주재한 김대식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기업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행정적으로도 원만히 해결되어 뜻 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조정이 앞으로 지역경제 부흥에도 새로운 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광양 국가산단 명당1지구 ‘착오 매립지’ 포함 준공 합의

국민권익위 중재 원상회복 의무 면제

10만5천153㎡...지역경제 활력 기대

입력날짜 : 2011. 03.31. 00:00

준공지연으로 큰 불편을 겪었던 광양 국가산업단지내 명당1지구에 있는 10만5천153㎡규모의 국가산업단지 준공이 해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30일 명당1지구의 개발대행업체인 (주)포스틸이 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공유수면 108㎡를 착오로 매립하면서 10만5천153㎡규모의 명당1지구 전체의 준공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태에 대해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광양시 (주)광양 SPFC(구 삼현철강) 회의실에서 이개호 전남부지사, 이성웅 광양시장이 참여한 가운데 김대식 부위원장 주재로 조정회의를 열어 해당 단지를 준공처리하기로 하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당초 포스틸이 공유수면 일부를 착오매립하자 준공처리를 담당하는 광양시는 착오 매립지를 원상회복하거나, 전남도로부터 원상회복 의무 면제조치를 받아야 준공처리를 해준다는 입장이었다. 전남도도 역시 해당 매립지를 원상 회복한 후 별도의 매립면허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의 중재로 해당 착오매립지를 국유지로 귀속하는 조건으로 전남도는 원상회복 의무의 면제를 검토하고, 광양시가 준공처리를 해주기로 하는 중재안에 합의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정으로 광양 국가산업단지 명당1지구가 준공처리되면 원활한 기업활동 지원이 가능해 100여 명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정회의를 주재한 김대식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기업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만히 해결돼 뜻깊게 생각하며 이번 조정이 앞으로 지역경제 부흥에도 새로운 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인 31일 여수 엑스포타운조성 사업지구와 웅천지구택지개발 현장 사무실을 방문해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

권익위는 엑스포 타운 조성 사업구역에서 제외돼 이주대책과 보상을 요구하는 8세대의 이주 가능 여부를 살피고, 웅천 택지개발 이주민중 대상에서 제외된 세대에 대한 택지공급 여부도 살필 계획이다.

/광양=김권일 기자

국민권익위, 광양 국가산단 준공 문제 해결

기사입력 2011.03.30 16:05:28 | 최종수정 2011.03.30 16:13:06

준공이 됐으나 허가를 받지 못했던 전남 광양 국가산단 준공 지연 문제가 국민권익위의 도움으로 말끔히 해결됐다.

30일 국민권익위는 국가산단인 광양시 태인동 명당1지구 준공지연 문제 해결을 위해 광양 현지에서 이개호 전남부지사, 장태기 광양부시장 등 당국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김대식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주재로 중재회의를 열어 문제를 해결했다고 밝혔다.

명당1지구는 개발대행사인 포스틸이 단지 조성 과정에서 착오로 공유수면 108㎡를 매립, 단지 부지에 포함하는 바람에 명당1지구 10만5153㎡ 전체 부지에 대한 준공이 지연되는 사태로 비화했었다.

이날 중재에서 국민권익위(정부)가 공유수면 108㎡를 국유지로 편입하는 조건으로, 전남도는 부지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해주고, 광양시는 준공허가를 내주기로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명당 1지구는 지난해 4월 부지 조성작업에 착수, 지난 3월 조성을 완료했으나 공유수면 착오 편입 문제가 불거지면서 준공허가가 미뤄져 왔다.

[뉴스속보부]

아시아경제

광양 국가산업단지 명당1지구 준공지연 해결됐다

14:00기사입력 2011.03.30 14:00

권익위, 30일 현장조정회의로 준공 합의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전라남도 광양시 국가산업단지 내 명당1지구에 있는 10만㎡규모의 국가산업단지의 준공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명당1지구의 개발대행업체인 (주)포스틸이 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공유수면 108㎡를 착오로 매립하면서 10만5153㎡규모의 명당1지구 전체의 준공을 받지 못하는 민원을 접수하고 30일 오후 2시 전남 광양시 (주)광양 SPFC(구 삼현철강) 회의실에서 이개호 전라남도 부지사, 이성웅 광양시장의 참여한 가운데 김대식 부위원장 주재로 조정회의를 개최해 해당 단지를 준공처리하는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30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포스틸이 공유수면 일부를 착오매립하자 준공처리를 담당하는 광양시는 착오 매립지를 원상회복하거나 전라남도로부터 원상회복 의무 면제조치를 받아야 준공처리를 해준다는 입장이었고 전라남도 역시 해당 매립지를 원상회복한 후 별도의 매립면허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권익위의 적극적인 이번 중재로 해당 착오매립지를 국유지로 귀속하는 조건으로 전남도는 원상회복 의무의 면제를 적극 검토하고 광양시 역시 준공처리를 해주기로 하는 중재안 합의에 성공했다.

권익위의 이번 조정으로 광양 국가산업단지 명당1지구가 준공처리되면 원활한 기업활동 지원이 가능해 100여명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이로 인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대식 부위원장은 "기업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행정적으로도 원만히 해결돼 뜻 깊게 생각하며 이번 조정이 앞으로 지역경제 부흥에도 새로운 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황상욱 기자 ooc@

고령군 ○○ 아파트 부설주차장 추가 설치로 주차난 해결

민원번호 : 2AA-1102-072157(도시수자원민원과, 박광준 조사관)

(‘11. 4. 21)

민원개요

경북 고령군 고령읍에 거주하는 ○○아파트는 세대수(375호)에 비해 주차장(209면)이 현저히 부족하여 아파트와 연접한 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 설치를 하고자 했으나, 고령군청은 별도의 진입로가 없기 때문에 개발행위허가를 해줄 수 없다고 하였는바, 이에 대해 주차장 추가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니 아파트 인접 토지를 주차장용도의 개발행위허가를 허가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 개발행위 시 전제되는 도로접도조건에 대하여 기존아파트부지에 연접되는 사항을 감안하여 별도의 접도조건을 요구하지 않고 개발허가를 해준다는 대안을 마련 조정 합의

1 당사자

- 신청인 : 경북 고령군 고령읍 쾌빈리 6-1 디오판리스아파트 375세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
- 피신청인 : 경상북도 고령군수
- 관계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2 민원내용

- 신청인들 거주 고령디오판리스 아파트(이하 ‘이 민원 아파트’라 한다)는 세대수(375호)에 비해 주차장(209면)이 부족하여 별도의 부지에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나,
 - 해당부지에 진입도로가 없다는 이유로 개발행위허가를 해 주지 않고 있으니,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요구

3 피신청인 등 의견

가. 경북 고령군수

- 주차장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주장에는 공감하지만, 이 민원 토지는 진입도로가

없는 땅지이므로 주차장 설치를 위해서는 허가기준에 적합한 진입도로를 마련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나. 한국토지주택공사

- 이 민원 아파트는 주차장이 부족하여 '10. 1. (주)○○기업으로부터 이 민원 아파트 중 180세대(임대주택용)를 매입할 때 주차장을 증설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주차장 증설시 매입잔금 10억 원 지급)한 바 있으며, 주차장 조성시 매입잔금 지급 등을 통해 입주민 불편 해소에 적극 협력하겠음

4 주요 쟁점사항

- 아파트 부설주차장 추가 확보
- 진입도로가 없는 토지의 개발행위허가 가능 여부

5 갈등 분석

가. 민원발생배경 및 주요사실관계

- 고령 디오펠리스는 당초 아파트 375세대에 주차장 209면으로 사업계획 승인되었으나, 247세대가 입주한 현재 입주민 차량이 280대에 달해 주차장 부족 문제가 심각
 - '10. 1월 정부의 미분양 아파트 해소대책으로 (주)○○기업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당해 아파트 180세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도 이 문제가 제기되어 주차장 추가 설치 조건으로 매매계약 체결
 - ※ 한국토지주택공사 요구 조건
 - 주차장 80면 이상 추가 설치 (이행을 조건으로 매매대금 10억 원 지급 유보)
- 이후 (주)○○기업에서 아파트 옆에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고자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이 부지에 진입도로가 없어 허가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견지
- '11. 2. 15. 아파트 입주민들이 위원회에 주차장 추가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요구하는 고충민원을 제기
 - 위원회에서는 현장조사, 당사자 의견청취 및 이견조율 등을 통해 해결방안 모색

나. 해결 목표

- 개발행위허가 제도의 취지와 현장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주민들의 고충을 해소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모색
 - 현재 아파트와 접도된 도로를 진입도로로 인정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방안을 모색

6 갈등해결과정

가. 진행과정 개요

- '11. 3. 24. : 제1차 현장조사 및 관계기관 협의
 - 아파트 주민대표, 고령군 관계자 등과 현장실사 및 해결방안 논의
 - ※ (고령군) 입주민들의 불편은 공감하나, 관련 법령상 진입도로 없이는 개발행위허가가 불가하며, 이 민원의 경우는 제도개선 필요한 사항임.

검토를 위한 실태조사

- 이 민원 처리과정에서 제기된 제도개선 필요성 등을 검토하기 위해 전국 24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유사 사례 등에 대한 전수 조사 중('11. 4. 6. ~ 4. 15.)

- '11. 3. 25. ~ '11. 4. 8. : 추가 현장조사(1회) 및 관계기관 협의(3회)
 - 개발행위허가 제도의 취지와 현장상황을 감안한 조정안 제시
 - ※ 이 민원은 기존 아파트 부지와 주차장 예정부지가 연접하여 별도의 진입도로 불필요

위원회 조정안

- 신청인 : 주차장 예정부지(고령읍 패빈리 4-3 등)에 대한 토지사용 승락서 등 관계서류를 구비하여 주차장 부지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신청
- 고령군 : 신청인에게 주차장 조성 목적의 개발행위허가
- LH공사 : 주차장 조성시 매입잔금 지급 등 입주민 불편 해소에 적극 협력

7 조정 (합의) 결과

가. 조정 · 합의 최종결과

- 아파트입주민대표회가 토지사용승낙서 등 제반서류를 구비하여 주차장부지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고령군에게 하며, 이에 고령군에서는 개발행위조건에 적합할 경우 개발행위를 허가, 다만, 개발행위시 전제되는 도로접도조건에 대하여 기존아파트부지에 연접되는 사항을 감안하여 별도의 접도조건을 요구하지 아니한다는 조정 중재

나. 위원회 조정 · 합의문

- 이 민원 아파트의 주차장 부지 조성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아파트 매각과정 등 그간의 경위 및 개발행위허가 제도의 입법취지를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조정·합의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토지에 대한 사용승락서(증빙서류 포함) 등 관계서류를 구비하여 주차장 부지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한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이 민원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신청 시 개발행위허가 조건에 적합할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한다. 다만, 개발행위허가의 전제가 되는 도로접면조건에 대해서 이 민원 아파트 부지에 연접된 사항을 감안하여 별도의 접도조건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 관계기관은 개발행위허가가 이루어지면 공사 진행 정도에 따라 매입잔금을 지급하는 등 주차장 조성 공사가 원만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한다.

8 수용-이행 여부 및 시사점

가. 신청인-피신청인 수용 및 이행여부

- '11. 9. : 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 3필지 중 2필지는 개발행위허가 완료 후 주차장 조성공사 완료
- '12. 6. : 나머지 1필지에 사용승낙(또는 매입) 추진 중으로 매입 완료 후개발행위허가 신청 예정

나. 시사점

- 현행 법령과 현실 간 괴리, 법령 규정 등의 미비로 갈등이 발생한 상황에서 법령의 입법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함으로써 행정기관의 부담 경감과 민원인 불편을 해소하여 신청인 피신청인 모두 win-win 하는 결과 도출



권익위, 아파트 주차난 현장중재로 해소

기사입력 2011-04-21 18:04

【대구=연합뉴스】 홍창진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경북 고령군 고령읍 모 아파트의 아파트 주차난을 현장 중재해 주민 불편을 해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2007년 사용 승인이 난 이 아파트의 375가구(700여명)는 주차면수 209대로 주차난을 겪어오다 지난 2월 민원을 제기했다.

입주민들은 "아파트 인근의 토지를 매입해 주차장을 만들고자 했지만 고령군이 허가해 주지 않는다"고 권익위에 호소했다.

고령군은 주차장 증설의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주민들이 바라는 토지는 별도의 진입로가 없기 때문에 개발행위를 허가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권익위는 21일 고령군청에서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입주민대표회는 토지사용승낙서 등 관련서류를 갖춰 군청에 주차장부지 조성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하고, 고령군은 해당 토지가 아파트 부지에 붙어있으니 별도의 조건없이 개발을 허가해 주라"는 합의안을 제시해 중재에 성공했다.

권익위는 "조정회의에 앞서 지난 두 달간 2차례 현장조사와 4차례 관계기관 협의로 함께 노력한 결과 오랜 주민의 불편을 연내 해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realism@yna.co.kr

국민권익위, 고령군 아파트 주차난 현장중재

기사입력 2011-04-21 20:59

【고령=뉴스시스】 김재욱 기자 = 국민권익위가 경북 고령군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주차난 부족 문제를 현장 중재로 풀었다.

21일 권익위 등에 따르면 2007년 사용 승인이 난 고령읍의 247세대 아파트는 주차면수가 부족해 주차난을 겪었다.

이에 주민들이 아파트 인근 토지를 매입해 주차장을 만들고자 고령군에 요청했지만 군은 관련법규 미비를 이유로 허가해주지 않아 민원이 발생했다.

민원이 길어지자 고령군과 아파트 주민, LH공사 등 관계인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권익 위원회에 조정 요청을 했다.

수차례에 걸쳐 협의 및 현장 조정을 거쳐 21일 고령군청에서 주민 수십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고령군수, LH대구경북본부장, 주민대표가 조정 합의문에 서명했다.

합의문에는 “입주민대표회는 관련서류를 갖춰 주차장 부지 조성 개발 행위 허가를 신청하고 군은 해당토지가 아파트 부지에 있으니 별도 조건 없이 개발을 허가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로써 개발 행위 허가 신청 등 민원처리 절차만 남게 됐다.

조정회의를 중재한 김대식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수차례의 관계기관 협의에 잘 인내하고 협조한 행정당국과 주민들에게 감사한다”며 “장기 집단민원이 잘 해결돼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곽용환 고령군수는 “조정을 통해 민원을 해결할 수 있어 큰 다행으로 생각한다. 그 동안 많은 어려움에도 잘 참아준 주민에게 감사한다”면서 “주변도로의 인도 설치, 단지내 쉼터 조성 등을 최단시간 내에 완성해 살기 좋은 아파트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jukim@newsis.com



국내최대 민영 뉴스통신사 2001-2011

NEWSIS

국민권익위원회, 고령군 디오판리스 아파트 주차난 민원 해결

기사입력 2011-04-21 15:26



【고령=뉴스시스】 김대식(오른쪽)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21일 경북 고령군 고령읍내 디오판리스아파트에서 주차난 해소 요구민원을 제기한 주민들과 함께 현장을 돌아보고 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제공)

photo@newsis.com

국민권익위원회, 고령군 디오펠리스 아파트 주차난 민원 해결

기사입력 2011-04-21 15:26



【고령=뉴스시스】 김대식(오른쪽 두번째)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21일 경북 고령군청 대회의실에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 디오펠리스아파트 주차난 해소 요구 민원을 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제공)

photo@newsis.com

국민권익위,아파트 주차난 민원 중재

이성훈 2011-04-22

국민권익위원회는 한 아파트의 주차난을
현장 중재해 주민 불편을
해소했다고 밝혔습니다.

2007년 사용 승인이 난
고령군 고령읍 한 아파트의 375가구 주민들은
아파트 인근의 토지를 매입해 주차장을
만들고자 했지만 고령군이 허가해 주지
않는다고 권익위에 호소했습니다.

권익위는 고령군청에서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입주민대표회는 토지사용 승낙서 등
관련서류를 갖춰 군청에 주차장부지 조성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하고, 고령군은 해당 토지가
아파트 부지에 붙어있으니 별도의 조건 없이
개발을 허가해 주라"는 합의안을 제시해
중재에 성공했습니다.

권익위 아파트 주차공간 확보 위한 중재에 나서서 해결

'375세대에 주차공간 209개' 아파트 인근토지를 주차공간으로 확보 성공

2011년 04월 21일 (목) 14:39:12 조현진 기자 chj@newsway.kr



▲ ⓒ 뉴시스

【서울=뉴스웨이】 조현진 기자 375세대에 주차공간이 209대뿐인 아파트 주민들의 고질적 문제인 주차난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 이하 권익위)가 현장조정으로 해결했다.

권익위는 21일 오후 1시 30분 경북 고령군 소재 디오판리스 아파트 주민들을 비롯해 김대식 부위원장과 곽용환 고령군수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주차장부지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해주는 합의안을 마련해 중재에 성공했다.

그동안 디오판리스 아파트는 2007년 1월 입주 후 700여명의 주민들이 주거하고 있었으나 375세대수에 비해 주차공간이 209개로 협소해 많은 주차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와 관련해 입주민 735명이 인근 토지를 매입해 주차장을 만들고자 했지만 고령군 측에서는 주민들이 지정한 해당 토지는 별도의 진입로가 없기 때문에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를 해줄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입주민은 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하게 됐다.

이번 조정회의를 주재한 김대식 부위원장은 "이번 조정은 권익위가 주민과 관련기관들과 함께 지난 두 달여 동안 2회의 현장조사와 4차례의 관련기관 협의를 통해 함께 노력하고 협력한 결과로, 장기간 지속되어온 주민불편이 해소될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현진 기자

대구신문

2011년 04월 22일 (금)
09면 지역

‘375세대 주차209대’ 고충 해결

<고령 디오판리스>

권익위, 입주민·고령군 합의안 마련 중재

LH, 확장 공사 적극 협력...연내 가능

국민권익위가 고령 디오판리스 아파트 주차장 추가 확보 현장 중재에 성공했다.

당초 375세대가 입주한 아파트단지의 주차가능 대수가 209대뿐이었다. 아파트주민들의 고질 주차난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의 현장조정으로 해결된 것.

고령군 고령읍 채반리 디오판리스 아파트는 2007년 1월 사용승인 후 700여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다. 그러나 세대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주차공

간으로 입주이후 줄곧 주차장문제로 어려움을 겪어오다 지난 2월 국민권익위에 민원이 제기됐다.

입주민 735명(대표 김순옥)은 권익위에 제기한 민원에서 "아파트 인근의 토지를 매입해 주차장을 만들고자 했지만 고령군이 허가해주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고령군은 주차장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주민들이 지정한 해당 토지는 별도의 진입로가 없어 개발행위 허가를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21일 오후 1시30분 고령군청 회의실에서 김대식 부위원장 주재로 지역 주민들과 적극적인 고령군수 등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열었다.

권익위는 ▲입주민대표회가 토지사용승낙서 등 제반서류를 구비해 고령군에 주차장부지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고 ▲고령군은 해당 토지가 기존 아파트부지에 붙어있으므로 별도의 접도조건없이 개발행위를 허가해주는 합의안을 마련해 중재

에 성공했다.

또한 관계기관인 LH공사도 입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해 주차장 조성 공사가 원만히 시행되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조정회의를 주재한 권익위 김대식 부위원장은 "이번 조정은 권익위가 주민과 관련기관들과 함께 지난 2개월 동안 2회의 현장조사와 4차례의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함께 노력하고 협력한 결과로, 장기간 지속되어온 주민불편이 해소될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안에 따라 연내로 고령 디오판리스 아파트의 주차장 확장이 가능해지면서 고질적인 주차난을 겪던 주민들의 고충이 해결될 수 있게 됐다.

고령·추홍식기자 chhs@idaegu.co.kr
20.5 X 11.4 cm

경상매일신문

2011년 04월 25일 (월)
07면 지역

고령군 해동디오판리스 주차장 민원문제 타결

국민권익위 조정 타결...행정절차만 남아

고령군과 아파트 주민, LH공사 등 관계인은 법과 제도의 미비로 오랫동안 미해결 민원으로 남아있던 이 아파트 주차장 설치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정요청을 하고 수차례에 걸쳐 협의 및 현장 조정을 거쳐 21일 고령군청 회의실에서 주민 수석명 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고령군수, LH대구경북지역본부장, 주민대표가 주차장 설치

조정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로써 375세대가 입주하는 해동디오판리스의 주차장 309면을 설치할 수 있게 됐으며, 개발행위 허가신청 등 행정절차만 남게됐다.

이 아파트는 1994년 6월7일 사업승인 이후 우여곡절 끝에 2007년 1월12일부터 입주가 시작됐으며 세대수에 비해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해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을 가져와 장기 미결민원으로 남아 있었

다.

과충한 고령군수는 "아파트 입주민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오다. 이번 조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어 큰 다행으로 생각하며, 해동디오판리스를 살기 좋은 아파트로 만들기 위해 주변도로의 인도설치, 단지내 쉼터 조성 등도 최대한기간내에 설치하겠다"며 "그동안 많은 어려움에도 잘 참아 주신 주민에게 감사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정회의를 중재한 김대식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수차례의 관계기관 협의에 잘 안내하고 협조해 주신 고령군 행정당국과 주민들에게 감사하고 고령군의 장기 집단민원이 잘 해결돼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김순옥 아파트 주민 대표도 "이제 모든 것이 해결됐으므로 살기 좋은 아파트를 만드는데 입주민 모두가 노력하고 협동하자"고 말했다.

전상철 기자
jse@gsmnews.co.kr
20.4 X 12.0 cm

디오펠리스 아파트 주차난 '숨통' 트인다

고령군·입주민·LH공사
209면 추가 설치 합의

고령군의 가장 오랜 집단민원인 고령읍 왜빈리 375가구 아파트 해동 디오펠리스 주차장 문제가 완전 해결되면서 주민불편이 해소된다.

지난 21일 오후 고령군청 회의실에서 김순옥 아파트 주민대표, 김대식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박용환 군수, 하진수 LH대구경북지역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차장 설치 조정 합의문에 서명했다.

입주민 대표회는 개발행위허가 신청, 고령군은 별도의 접도조건없이 허가, LH공사는 주차장 조성공사에 대한 적극 협조 등을 합의했고, 따라서 기존의 주차장 109면과 함께 209면을 더 설치할 수 있게 됐으며, 행정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디오펠리스 아파트는 지난 2007년부터 입주 시작됐고, 현재 전체 375가구 중 247가구(65.9%, 735명 거주)가 입주해 있으며, 가구수에 비해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해 고질적



고령읍 디오펠리스 아파트 주차장 민원 해결을 위한 조정회의에서 합의 서명을 마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하진수 LH대구경북지역본부장, 박용환 군수, 김대식 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김순옥 아파트 주민대표)

인 주차난을 겪어왔다.

이번 주차장 문제해결은 고령군의 전방위 해결의지를 통해 각계각층의 관심을 유발시키고, 이를 통한 주차장 설치 문제를 완결시키는 결과를 도출해냈다.

특히 아파트 입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통한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요청, LH공사와의 꾸준한 협의 등 해법의 실마리를 제공한 박용환 군수의 의지가 돋보였다는 평가이다.

아파트 주민 대표 김순옥씨는 “이번 모든 것이 해결됐으며, 살기 좋은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 주민 모두가 협동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용환 군수는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오다 이번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해결 된 것은 큰 다행”이라며 “그 동안 인내하고 협조해준 주민들에게 감사하며, 인도설치, 단지 내 쉼터 등의 조성에 행정력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권오항기자

15.2 X 15.2 cm

국민권익위, 고령군 아파트 주차난 현장중재로 풀어

국민권익위가 고령군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주차난 부족 문제를 현장 중재로 풀었다. 21일 권익위는 지난 1997년 사업승인이 나고 2007년부터 사용 승인이 난 고령읍의 375세대 아파트는 주차장이 209면에 불과, 주차면수가 부족해 주차난을 겪었다.

이에 주민들이 아파트 인근 토지를 매입해 주차장을 만들고자 고령군에 요청했지만 군은 관련법규 미비를 이유로 허가해주지 않아 민원이 발생했다.

민원이 길어지자 고령군과 아파트 주민, LH공사 등 관계인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권익 위원회에 조정 요청을 했다.

수차례에 걸쳐 협의 및 현장 조정을 거쳐 21일 고령군청에서 주민 수십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고령군수, LH대구경북본부장, 주민대표가 조정 합의문에 서명했다.

합의문에는 “입주민대표회는 관련서류를 갖춰 주차장 부지 조성 개발 행위 허가를 신청하고 군은 해당토지가 아파트 부지에 있으니 별도 조건 없이 개발을 허가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로써 주차장 100면을 증면하게 돼 전체 309면의 주차면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개발 행위 허가 신청 등 민원처리 행정절차만 남았다.

조정회의를 중재한 김대식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수차례의 관계기관 협의에 잘 인내하고 협조한 행정당국과 주민들에게 감사한다”며 “장기 집단민원이 잘 해결돼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곽용환 고령군수는 “조정을 통해 민원을 해결할 수 있어 큰 다행으로 생각한다. 그 동안 많은 어려움에도 잘 참아준 주민에게 감사한다”면서 “주변도로의 인도 설치, 단지내 쉼터 조성 등을 최단시간 내에 완성해 살기 좋은 아파트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김은규 기자 hj1794619@hanmail.net
2011-04-25

경기 안성시 공장증설 요구 민원 하천구역 정비를 통해 해결

민원번호 : 2BA-1103-154194(도시수자원민원과, 이진석 조사관)

(‘11. 6. 10.)

민원개요

반도체 제조업체의 사세 확장으로 공장 증축이 불가피하나, 하천 기능을 상실한 폐천부지가 공장 부지를 가로지르고 있어 공장 증설에 장애가 되니 하천구역 재정비를 통해 기업의 고충을 해소해 달라는 민원에 대해, 사실상 기능을 상실한 하천을 폐천하도록 조속히 하천기본계획 변경안을 마련하도록 증재하여 원활한 기업 활동 지원

1 당사자

- 신 청 인 : 경기 안성시 양성면 석화리 152-1 뉴텍웨이브 대표○○○
- 피신청인 : 경기도지사(피신청인 1), 경기도 안성시장(피신청인 2)

2 민원내용

- 반도체 제조업체인 뉴텍웨이브가 최근 사세 확장으로 공장 증축이 불가피하나, 하천 기능을 상실한 폐천부지가 공장 부지를 가로지르고 있어 공장 증설에 장애가 되니 하천구역 재정비를 통해 기업의 고충민원 해소 요구

3 피신청인 등 의견

가. 경기도지사

- 하천구역은 수계에 대한 유역조사와 수문조사에 따라 홍수예방에 필요한 부지로 하천구역 제척여부는 하천기본계획 재정비시 종합 검토되어야 할 사안이나, 인접 사유지와 관계 등 수계의 연속성을 감안하여 이 민원 토지들에 대해 폐천 고시 여부를 적극 검토 처리 예정

나. 경기도 안성시장

- 이 민원 토지들은 하천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고, 사유지(신청인의 형수 ○○○ 소유)에 둘러싸여 이 민원 기업이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이 민원 공장의 진입로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일반재산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하천구역 변경(지적 분할)이 선행되어야 함

4. 주요 쟁점사항

- 하천구역 제척여부 가능 여부

5. 갈등 분석

가. 민원발생배경 및 주요사실관계

- 뉴텍웨이브는 경기 안성시 양성면 석화리에서 반도체장비를 제조하는 공장으로 최근 사세 확장에 따라 공장 증축이 불가피하나, 하천기능을 상실한 폐천부지가 공장부지를 가로지르고 있어 증축이 불가함
 - ※ 뉴텍웨이브(New Tech Wave)는 2005. 6. 1. 반도체 장비 제조업으로 설립
 - ※ 현재 공장 2개동에 12명이 근무중이며, LG Innotek·LG Display·SAMSUNG ELECTRONICS 등에 LED·LCD 등 반도체 장비를 납품
- 경기 안성시 양성면 석화리 149-10, 같은 리 152-2 지번의 하천부지는 이미 석축 등으로 정비가 수년전에 이루어져 더 이상 정비가 진행되기 어려운 땅으로 하천구역 제척을 요구하는 취지의 민원을 제출하였으나,
 - 하천구역제척 여부는 인근 지역여건, 하천의 유량, 하도의 특성 및 하천구역의 변동 상황 등을 고려한 하천기본계획 재정비 시 종합 검토할 사안으로 불가 통보 받음
- 2011. 3. 22. 뉴텍웨이브가 공장이전에 따른 기업부담 경감 및 공장증축을 통한 지역사회 고용증대 등을 위해 하천기본계획 재검토를 요구하는 고충민원을 제기
 - 위원회에서는 현장조사, 당사자 의견청취 및 이견조율 등을 통해 해결방안 모색

나. 해결 목표

- 하천공사로 하천구역에서 제외된 폐천부지 등에 대한 하천기본계획 재정비로 폐천 고시된 토지를 공장증축이 필요한 기업에 공장부지로 공급함으로써 기업 민원을 해소하여 관계기관과 기업 모두가 Win-Win하는 해결방안 마련
 - 조속히 하천기본계획 변경안을 마련하여 지방하천하천관리위원회에 상정 심의토록 하고, 하천구역 제척 결정 시 폐천부지 고시 및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매각절차 진행
 - ※ 조정 성립으로 원활한 기업 활동 지원, 공장증축 시 고용창출(약20여명)

6 갈등해결과정

가. 진행과정 개요

- 2011. 5. 3. : 제1차 현장조사 및 관계기관 협의
 - 기업 관계자, 경기도·안성시 관계자들과 민원현장을 실시하고 해결방안 논의
 - 【경기도】 하천구역은 수계에 대한 유역조사와 수문조사에 따라 홍수예방에 필요한 부지로 제척여부는 하천기본계획 재정비 시 종합 검토 되어야 할 사안이다.
 - 【안성시】 이 민원 토지 들은 하천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고, 사유지에 둘러싸여 이 민원 기업이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공장의 진입로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일반재산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하천구역 변경이 선행되어야 한다.
- 2011. 5. 9. : 추가 현장조사 및 신청인·피신청인 협의를 거쳐 조정안 제시(신청인, 피신청인 모두 우리 위원회 조정안 수용)

위원회 제시 조정안

- 경기도와 안성시는 지방하천관리위원회에 이 민원 토지들의 하천구역 제척에 관한 안건을 마련하여 조속히 상정토록 한다.
 - 제척이 결정될 경우 하천구역 변경 및 폐천부지 고시를 통해 용도폐지 절차를 거친 후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라 신청인에게 매각한다.
- 신청인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에 부합하는 공장증축계획을 마련하여 안성시에 제출한다.

7 조정 (합의) 결과

가. 조정 · 합의 최종결과

- 하천구역 제척여부에 대한 지방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진행시키기로 합의하고, 제척 시 안성시는 공장증설이 가능한 모든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하는 중재안 합의

나. 위원회 조정 · 합의문

- 경기도지사와 경기 안성시장은 이 민원 토지들에 대한 하천구역 제척여부에 대한 지방하천관리위원회 심의요청 등 하천구역 변경절차를 진행한다.
- 심의 결과 하천구역변경이 가능하다고 확인될 경우 매각절차를 이행한다.
 - 1) 경기도지사는 이 민원 토지들에 대한 하천구역 변경 및 폐천부지 고시 절차를 조속히 추진한다.
 - 2) 안성시장은 현행 하천기본계획선 포함 여부에 따라 폐천부지 고시 후 지적정리(분할)한다. 이 민원 토지 중 석화리 〇〇〇-〇〇 토지에 대한 용도폐지 후 일반재산으로 전환하여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인(또는 라현정)에게 매각하고, 공장증설을 위한 기업활동을 지원한다.
- 신청인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에 부합하는 공장증축계획을 마련하여 매각시기에 맞추어 피신청인 2에게 제출한다.

8 수용-이행 여부 및 시사점

가. 신청인-피신청인 수용 및 이행여부

- '11. 11. : 신청인 공장증축계획안 안성시에 제출
- '11. 9. : 지방하천관리위원회 심의,
- '12. 3. : 지방하천 폐천 고시(경기도)
- '12. 5. : 하천 폐천 고시 결정에 따라 매각 절차 진행

나. 시사점

- 기업활동에 지장을 주는 하천구역을 관련법에 따라 정비하고, 「기업활동 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공장증설이 필요한 중소기업에 공장부지를 공급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고용창출에 기여

권익위, 안성 中企 공장증설 민원 현장조정으로 해결

기사입력 2011-06-10 10:43 | 기사수정 2011-06-10 10:43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하천기능을 상실한 폐천부지로 공장부지가 나뉘어 있어 증설이 어려웠던 중소기업의 고충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의 현장조정을 통해 해결됐다.

권익위는 10일 경기도 안성시 소재 중소 반도체업체인 '뉴텍웨이브'에서 황은성 안성시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김대식 부위원장 주재로 조정회의를 열어 공장증설에 관한 합의안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뉴텍웨이브는 최근 사세 확장에 따라 공장을 증축코자 했으나 공장 내의 폐천부지 때문에 증축이 여의치 않자 인근 지역으로의 공장 이전을 고려하던 중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그간 안성시는 “해당 기업이 문제의 폐천부지를 사용해 공장을 증설하려면 경기도가 하천구역 변경조치를 먼저 해줘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경기도는 “해당부지에 대한 변경은 추후 하천기본계획 재정비 때 종합 검토할 사항”이란 의견을 밝혀왔다.

이에 권익위는 중재를 통해 △경기도는 지방하천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해당 부지의 변경절차를 진행하고 △안성시는 이 심의에서 해당 부지가 하천구역에서 제외되면 용도폐지 후 매각해 공장을 증설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의 합의안을 성사시켰다.

김 부위원장은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기업 고충이 원만히 해결됐다”며 “이번 조정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장 증설 민원현장 찾은, 김대식 부위원장

기사입력 2011-06-10 16:13



【서울=뉴시스】 최동준 인턴기자 = 김대식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이 10일 오전 경기 안성시 소재 반도체 생산 업체인 뉴텍웨이브가 제기한 '공장 증설 부지 공급 애로'민원 현장을 찾아 관계자로 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제공)

photo@newsis.com

안성시 이동신문고 현장조정

기업애로 해결위해 이동신문고 현장조정



【아시아투데이=이진 기자】국민권익위원회 김대식 부위원장은 10일 안성시 양성면 석화리의 한 기업체를 찾아 기업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이동신문고 현장 조정회의를 개최했다.

안성시 소재 반도체업체인 뉴텍웨이브는 최근 사세확장으로 공장증축을 하고자 했으나 공장 내에 있는 폐천부지 때문에 증축이 여의치 않자 인근지역으로 이전을 고려하다가 국민권익위에 지난 3월 민원을 제기했다.

이날 조정회의는 지난달 20일 안성시 ‘이동신문고’ 운영시 개최할 예정이었던 기업애로 현장조정회의로, 이자리에는 손성오 경기도 건설본부장, 황은성 안성시장, 권익위 정혜영 도시수자원민원과장, 기업체 관계자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시는 이동신문고 현장 조정회의를 통해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기 위해 이같은 자리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경기도 손성오 건설본부장은 “하천구역은 수계에 대한 유역조사와 수문조사에 따라 홍수에 방에 필요한 부지로 하천구역 제척여부는 하천기본계획 재정비시 종합 검토되어야 할 사안이나, 인접 사유지와 관계 등 수계의 연속성을 감안하여 폐천 고시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황은성 안성시장은 “이 지역 토지는 하천으로서 기능을 상실했고, 사유지에 둘러싸여 있어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공장 진입로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하천구역 변경 등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경기도 건설본부와 안성시는 이 지역 토지들에 대해 하천구역 제척여부에 대한 지방하천관리위원회에 심의요청 등 하천구역 변경절차를 진행하게 되며, 심의결과 하천구역 변경이 가능할 경우 매각절차를 이행하기로 조정서에 합의했다.

뉴텍웨이브 김재운 대표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 발벗고 나서 주신 황은성 시장님과 이렇게 직접 멀리서 방문해 주신 김대식 부위원장, 손성오 건설본부장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이진 기자 jin1658@asiatoday.co.kr>

현대일보

2011년 06월 13일 (월)
01면 중합

기업애로 해결 “눈에 띄네”

권익위, 안성시 이동신문고 현장조정위 열어

【국민권익위원회 김대식 부위원장은 10일 안성시 양성면 석화리의 한 기업체를 찾아 기업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이동신문고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조정회의는 지난달 20일 당초 안성시 ‘이동신문고’ 운영시 개최할 예정이었던 기업애로 현장조정회의로, 이 자리에는 손성오 경기도 건설본부장, 황은성 안성시장, 권익위 정태영 도시수자원

민원과장, 기업체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양성면 석화리에 위치한 뉴텍웨이브(대표 김재운)는 2005년 공장을 설립하여 반도체 및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를 생산하는 업체로 주문량 증가로 인해 공장을 증설하고자 했으나 증설하고자 하는 양성면 석화리 149-10번지와 152-2번지가 기능을 상실한 폐천부지임에도 하천구역으로 판

리되어, 기존공장 사이에 걸쳐 있어 공장증설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안성시는 이동신문고 현장조정회의를 통해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기 위해 이같은 자리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경기도 손성오 건설본부장은 “하천구역은 수계에 대한 유역조사와 수문조사에 따라 홍수예방에 필요한 부지로 하천구역 제척여부는 하천기본계획 재정비시 종합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나, 인접 사유지와 관계 등 수계의 연속성을 감안하여 폐천 고시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안성/최영환 기자 cyh@hyundaiilbo.com
15.6 X 8.2 cm

일간경기

2011년 06월 13일 (월)
11면 지역

국민권익위, 안성 中소 고충 해결

‘폐천부지로 공장증축 불가’ 민원 논의 끝에 ‘가능’ 합의 끌어내

폐천부지로 공장부지가 양분돼 증축을 포기한채 공장 이전을 고민하던 중소기업의 고충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대식·ACRC)의 현장조정을 통해 증축할 수 있을 길이 마련됐다.

안성시 소재 반도체업체인 뉴텍웨이브는 최근 사세확장으로 공장 증축을 하고자 했으나 공장내에 있는 폐천부지 때문에 증축이 여과치 않자 인근 지역으로 이전을 고려하다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지난 10일 오전 10시30분 뉴텍웨이브 회의실에서

황은성 안성시장이 참여한 가운데 김대식 부위원장 주재로 조정회의를 개최해 공장증축이 가능하도록 하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당초 시는 해당 기업이 문제의 폐천부지를 사용해 공장을 증설하려면 도에서 하천구역 변경조치를 먼저 해줘야 한다는 입장이고, 도는 해당부지에 대한 변경은 추후 하천기본계획 재정비 시 종합 검토돼야 할 사항이라는 의견을 밝혔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는 도는 지방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해당부지의 변경절차를 진행하고, 시는 이 심의를 통해 해당 부지가 하천구

역에서 제외되면 용도폐지 후 해당 기업에 매각해 공장증축이 가능하도록 하는 합의를 성사시켰다.

국민권익위의 이번 조정으로 뉴텍웨이브는 인근 지역으로 이전하지 않고도 공장을 증설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30여명의 신규 인력도 고용할 수 있게 됐다.

김대식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기업고충이 완만히 해결되는 듯 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조정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안성=권영복 기자
bo0170@jarkg.co.kr
15.0 X 10.4 cm



김대식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이 안성시 소재 반도체 생산업체인 뉴텍웨이브가 제기한 '공장증설 부지 공급 애로' 민원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공장 양분 폐천부지 문제 중재

국민권익위, 안성 中企 공장증설 민원 해결

하천기능을 상실한 폐천부지로 공장부지가 양분되어 있어 증설이 여의치 않았던 중소기업의 고충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가 현장조정을 통해 증설할 수 있는 길을 마련했다.

경기 안성시 소재 반도체 생산업체인 뉴텍웨이브는 최근 사세확장으로 공장증축을 하고자 했으나 공장 내에 있는 폐천부지 때문에 증축이 여의치 않자 인근지역으로 이전을 고려하다가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지난 10일 오전 10시30분 안성시 뉴텍웨이브 회의실에서 황은성 안성시장이 참여한 가운데 김대식 부위원장 주재로 조정회의를 개최해 공장증설이 가능하도록 하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당초 안성시는 해당 기업이 문제의 폐천부지를 사용해 공장을 증설하려면 경기도에서 하천구역 변경 조치를 먼저 해줘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경기도는 해

당 부지에 대한 변경은 추후 하천기본계획 재정비시 종합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하지만 국민권익위는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 경기도는 지방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해당 부지의 변경절차를 진행하고 안성시는 이 심의를 통해 해당 부지가 하천구역에서 제외되면 용도폐지 후 해당 기업에 매각해 공장증설이 가능하도록 하는 합의안을 성사시켰다.

국민권익위의 이번 조정으로 뉴텍웨이브는 인근 지역으로 이전하지 않고도 공장을 증설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20여명의 신규 인력도 고용할 수 있게 됐다.

조정회의를 주재한 김대식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기업 고충이 원만히 해결되어 뜻 깊게 생각하며 이번 조정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안성=허암출기자

15.5 X 22.6 cm

안동 축산농가 구제역 피해 36농가 축산보상

민원번호 :2CA-1104-079417, 2BA-1105-030835(도시수자원민원과, 이진석 조사관)

(‘11. 6. 30.)

민원개요

경북도청이전신도시건설사업 보상계획열람공고 및 감정평가 이전에 구제역 확산방지라는 정부시책에 따라 가축을 강제적으로 살처분 한 농가에 대하여 감정평가 시점에 소가 없다는 이유로 축산보상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억울하니 구제하여 달라는 민원에 대해 보상 절차가 중단된 축산농가(36가구)에 대한 감정평가 등 보상 절차를 진행하도록 조정 중재하여 도청 이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축산농가 보상

1 당사자

- 신 청 인 : 경북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외 1인
- 피신청인 :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 관계기관 : 경상북도지사

2 민원내용

- 경북도청이전신도시건설사업(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 개발예정지구 지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고시(2010. 5. 4.)와 보상물건 현장조사(2010. 7. ~ 12.)를 완료하고 보상계획열람공고 및 감정평가 이전에 구제역 확산방지라는 정부시책에 따라 가축을 강제적으로 살처분(2010. 12.)한 농가에 대하여 감정평가 시점에 소가 없다는 이유로 축산보상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억울하니 구제 요구

3 피신청인 등 의견

가. 경상북도개발공사

- 축산보상은 축산업 보상대상이 되는 가축의 기준마리 수 이상으로, 사업인정 고시일 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계속적으로 축산업을 행하던 자가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 행하도록 되어 있어, 가축이 구

제역으로 살처분 되어 축산보상 대상 가축 기준 마리수에 미달하고, 이 민원 사업 시행 이외의 이유로 축산업을 계속 영위하지 못하는 경우 축산보상 대상이 될 수 없다.

나. 경상북도지사

- 2010. 12. 6.부터 2010. 12. 26.까지 이 민원사업지구 내에서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하여 846마리의 가축을 살처분 하였던 바, 살처분 농가에 대한 축산보상 절차가 진행될 경우 감정평가를 위한 살처분 가축에 대한 이력자료 및 보상금 지급내역을 제출하는 등 적극 협조하겠다.

4 주요 쟁점사항

- 개발사업 보상계획열람·공고 및 감정평가 이전 살처분 한 축산농가 보상 가능 여부

5 갈등 분석

가. 민원발생배경 및 주요사실관계

- 2008년 8월 경북도청 이전지로 안동시 풍천면과 예천군 호명면 일원이 결정되자 이들 지역 주민들은 일제히 환호했다. 특히, 낙후된 경북 북부지역이 회생할 기반을 갖추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안동시민과 예천군민들은 함께 도청 이전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았다.
- 2010년 6월 보상설명회 개최 후 보상물건 현장조사(7월~12월)를 실시하던 중, 2010. 11. 29. 안동시 와룡면에서 구제역 양성 반응 판정이 나와「가축전염병 예방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등에 의거 이 민원 사업 지역 내에서 37농가의 846마리(한우 820, 돼지 2, 염소 24) 가축을 살처분 하였다.
- 민원인들은 구제역 관련 살처분이 자발적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보상물건 현장조사 시 존재했던 가축을 기준으로 축산보상 시행을 주장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이 민원 사업 보상협의회 등에서 구제역 살처분 농가의 구제방안을 논의하였으나, 관계기관이 국토해양부에 질의회신한 내용 등을 종합하여 축산보상 불가 방침 확정·통보
- 2011. 4. 12. 이 민원 사업이 아니었다면 재입식을 통해 계속 축산농으로 살아

갈 수 있는 사람들을 현 상황에서 소가 없다며 축산보상을 실시하지 않는 것은 억울하다며 고충민원을 제기

- 위원회에서는 현장조사, 당사자 의견청취 및 이견조율 등을 통해 해결방안 모색

나. 해결 목표

- 2008년 8월 경북도청이전지로 안동시 풍천면과 예천군 호명면 일원이 결정되자 이들 지역 주민들은 일제히 환영하였다. 하지만 구제역 관련 살처분 농가에 대한 축산보상 불가 방침이 전해지자, 이 지역 축산농가들은 이 민원 사업이 본인들의 생업을 빼앗아간 대상으로 인식하게 되어 민심이 동요됨은 물론 향후 이 민원 사업 추진에 막대한 차질 예상
- 따라서, 신청인들이 생업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축산농가의 민원을 해소함으로써, 이 민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가능하게 하여 신청안·피신청안관계기관 모두가 Win-Win하는 해결방안 마련

6 갈등해결과정

가. 진행과정 개요

- 2011. 4. 29. : 제1차 현장조사 및 관계기관 협의
 - 신청인, 경상북도개발공사, 경상북도 도청이전추진단 관계자들과 민원현장을 실시하고 해결방안 논의
 - **【경상북도개발공사】** 법령이 정한 보상을 행하기 위해 보상대상 물건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으나 구제역 발생에 따른 가축의 살처분 및 매물로 가축이 소실되어, 축산보상으로 되어 있던 것이 기준 마리수 미달로 이 민원 사업 시행 이외의 이유로 축산업을 계속 영위하지 못하는 경우가 되어 축산보상이 불가하고, 또한 토지보상법상 축산보상금 지급 시 살처분에 따른 국가보상금과 중복보상 문제가 발생된다.
 - **【경상북도】** 2010. 12. 6.부터 2010. 12. 26.까지 이 민원사업지구 내에서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하여 846마리의 가축을 살처분 하였던 바, 살처분 농가에 대한 축산보상 절차가 진행될 경우 감정평가를 위한 살처분 가축에 대한 이력자료 및 보상금 지급내역을 제출하는 등 적극 협조하겠다.
 - **【위원회】** 구제역 관련 살처분 역시 관련법령에 의해 구제역 확산 방지라는 공익적 목적으로 실시되고, 이 민원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다면 현재 축산농

가들은 재입식을 통해 축산업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

- 2011. 6. 3. : 추가 현장조사 및 신청인·피신청인·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조정안 마련(모두 우리 위원회 조정안 수용)

위원회 제시 조정안

- ▶ 축산보상은 영업보상의 일환으로 폐업 또는 휴업보상을 의미하고, 구제역 살처분에 따른 보상은 가축자체의 소멸에 대한 보상으로 규정 법령 및 구성요건이 각기 달라 이중보상이라 보기 어렵고,
- ▶ 이 민원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재입식을 통해 축산업을 계속 영위할 의사가 확인되고, 제반 사실을 종합하여 살처분 이전 기준 마리수를 충족한 사실이 추정·소명된 경우 축산보상 대상으로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조정·합의한다.

【피신청인】 이 민원 사업 지구 내에서 가축이 구제역으로 살처분 되어 보상 절차가 중단된 축산 농가(36가구)에 대한 감정평가 등 보상 절차를 진행한다.

【관계기관】 피신청인이 감정평가를 진행할 수 있도록 살처분 가축에 대한 이력자료와 관련 보상금 지급내역 자료를 제공한다.

7 조정 (합의) 결과

가. 조정 · 합의 최종결과

- 축산보상은 영업보상의 일환으로 폐업 또는 휴업보상을 의미하고, 구제역 살처분에 따른 보상은 가축자체의 소멸에 대한 보상으로 규정 법령 및 구성요건이 각기 달라 이중보상이라 보기 어렵고, 이 민원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재입식을 통해 축산업을 계속 영위할 의사가 확인되고, 축사의 크기 등 기타 제반 사실을 종합하여 살처분 이전 기준 마리수를 충족한 사실이 추정·소명될 경우 축산보상의 대상으로 보아야 함이 타당하다는데에 합의하고, 축산보상을 위한 감정평가 등의 절차를 진행시키기로 하였다. 또한, 경상북도농업기술원에 살처분 가축에 대한 이력자료 제공 등 가능한 모든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하는 중재안 합의

나. 위원회 조정 · 합의문

- 축산보상은 영업보상의 일환으로 폐업 또는 휴업보상을 의미하고, 구제역 살처

분에 따른 보상은 가축자체의 소멸에 대한 보상으로 규정 법령 및 구성요건이 각기 달라 이중보상이라 보기 어렵고, 이 민원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재입식을 통해 축산업을 계속 영위할 의사가 확인되고, 축사의 크기 등 기타 제반 사실을 종합하여 살처분 이전 기준 마리수를 충족한 사실이 추정·소명된 경우 축산보상의 대상으로 보아야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조정·합의한다.

- 피신청인은 이 민원 사업 지구 내에서 가축이 구제역으로 살처분 되어 보상 절차가 중단된 축산농가(신청인 장인환·조한제 외 34가구)에 대한 감정평가 등 축산보상 절차를 진행한다.
- 관계기관은 피신청인이 감정평가를 진행할 수 있도록 다음의 자료를 제공한다.
 - 1) 이 민원 사업 지구 내에서 구제역으로 살처분 된 가축의 두수와 각각의 개체무게·연령·암소구분 등 이력자료
 - 2) 구제역으로 살처분된 가축에 대한 보상금 지급내역

8 수용-이행 여부 및 시사점

가. 신청인-피신청인 수용 및 이행여부

- '11. 8. : 살처분 가축 자료 제공
- '11. 10. : 감정평가 실시
- '11. 12. : 협의보상 완료

나. 시사점

- 구제역이라는 암초를 만나 경북도청이전에 대해 피해의식을 가지게 된 안동시 풍천면과 예천군 호명면 일원의 축산농가들에 대해 축산보상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최초 도청이전이 발표될 당시의 감격과 환희를 되찾을 수 있게 됨
- 경북 북부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인 경북도청이전신도시 건설사업 추진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원만히 해결되어 도청이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게 됨
- 축산농가의 민원을 해소함으로써, 이 민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가능하게 하여 신청인-피신청인-관계기관 모두가 Win-Win하는 해결방안 마련

김영란 위원장, 구제역 피해농가 보상 현장조정

기사입력 2011-06-30 15:44



【서울=연합뉴스】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30일 오후 경북 안동시 풍천면사무소에서 관계기관장 및 농민대표들과 '안동·예천 구제역 살처분 보상' 요구민원을 합의 조정하고 있다. 왼쪽부터 권영세 안동시장, 김영재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공원식 경북 정무부지사, 김영란 위원장. 2011.6.30 << 국민권익위원회 >>

photo@yna.co.kr



국내최대 민영 뉴스통신사 2001-2011

NEWSIS

안동 축산농가 찾은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

기사입력 2011-06-30 16:31



【안동=뉴시스】 조수정 기자 =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30일 오후 경북 안동시 임동면 갈전리 일원의 축산농가를 둘러본 후 농민들의 어려운 점과 제안사항을 청취하고 있다.(사진=국민권익위원회 제공)

photo@newsis.com

제4장



도청 이전지 매물처분 농가도 ‘축산보상’

경북도청 이전 예정지에서 가축을 매물처분한 농가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도청이전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 이전에 구제역으로 가축을 매물처분했다는 이유로 축산영업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부당하다는 안동시 풍천면 조한제씨 등 축산농가 2명이 제출한 민원을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김영란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살처분하고 겹쳐서 이중보상이나 하는 문제가 제기됐지만, 만약에 도청이전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더라면 구제역으로 살처분 되었더라도 농가들이 재입식을 해서 축산업을 계속할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이중보상이 되지 않는다는 게 권익위의 판단이었습니다.

권익위는 오늘 안동 도청이전 현장을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의 중재 조정안을 발표하고 매물처분한 36개 축산농가에 대한 축산보상 절차를 진행하도록 했습니다.(끝)

이하늬 기자 / 입력시간 : 2011-06-30 (16:50)

안동·예천 감정평가 시행 전 구제역 살처분 농가도 축산영업 보상길 열려

경북도청 이전 풍천면·호명면 일대 국권위 중재로

경북도청이 이전하는 안동시 풍천면과 예천군 호명면 일대의 축산농가 367가구가 이전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 시행 전에 구제역으로 가축을 살처분했다는 이유로 축산영업 보상을 받지 못하다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연란, ACRC)의 중재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민원인들은 도청 이전사업을 하는 경상북도개발공사로부터 축산업에 대한 감정평가를 받기 직전에 구제역이 돌면서 부득이 가축을 살처분했지만, 이 때문에 축산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준 마리수에 미달되게 되어 보상 대상이 되지 못하자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었다.

국민권익위는 30일 오후 2시 경북

안동시 풍천면사무소에서 김영재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공원식 경상북도 정무부지사가 참여한 가운데 김연란 위원장 주재로 조정회의를 개최해 민원인들이 축산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합의안을 성사시켜 민원을 해결했다.

당초 경상북도개발공사는 ▲ 축산보상을 받으려면 가축이 기준마릿수 이상이고, ▲ 사업인정 고시일 전부터 축산업을 하다가 도청 이전사업 때문에 휴업이나 폐업하는 경우여야 하는데, ▲ 해당 농가들은 그 이전에 가축을 살처분해 기준 마리수에 미달했고, ▲ 도청 이전사업이 아닌 다른 이유(구제역)로 축산업을 계속 하지 못하게 됐으며, ▲ 살처분

과 관련한 보상은 이미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보상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는 현장조사 결과 경상북도개발공사의 축산보상은 가축 소멸에 따른 보상이 아니라 도청이전 사업으로 축산업을 하지 못하게 되는 영업보상, 즉 폐업이나 휴업보상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중보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 도청 이전사업이 아니라면 농민들이 축산업을 계속할 의사가 있고, ▲ 축사 크기 등 기타 제반 사실을 종합해 살처분 이전에 이전사업의 영업보상에 해당하는 가축의 기준 마리수가 있었다는 것이 추정·소명된다면 농민들에게

축산보상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조정안을 만들어 합의를 이끌어냈다.

권익위의 중재에 따라 앞으로 경상북도개발공사는 축산보상을 위한 감정평가를 진행하고, 경상북도는 농민들의 살처분 가축에 대한 과거 이력자료를 제공하는 등 행정적 지원을 하게 된다.

조정회의를 주재한 김연란 위원장은 "국민권의 이번 민원 해결로 구제역으로 고통받던 농민들의 시름을 달고, 경북 북부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도청 이전 사업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게 되어 큰 보탬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윤성 기자
20.7 X 14.1 cm

대구신문

2011년 07월 01일 (금)
01면 종합

도청이전지내 구제역 피해 축산농가 권익위, 현장 조정·보상결정 합의

경북도는 30일 도청이전 신도시건설 예정지내 구제역매몰 축산농가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연란)의 현장조정·합의를 이끌어 내 축산보상을 할 수 있는 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안동시 풍천면사무소 회의실에서 국민권익위, 경북도, 경북도개발

공사, 축산농가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조정·합의서에 공동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했다.

국민권익위에서 이번 현장조정·합의로 축산보상을 받을 수 있는 농가는 36농가며, 매몰한 가축은 한우 등 총 808마리다.

국민권익위의 조정·합의는 민법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해 사업시행자인 경북개발공사에 대하여는 이행청구권을 가진다.

한편, 공익사업에 따른 축산농가 손실보상은 휴업보상인 경우는 3개월간의 영업이익을 보상하지만, 이번 구제역 매몰로 인해 폐업보상이 인정되면 2년간의 영업이익을 보상받을 수 있다.

공원식 정무부지사는 "지난 14일 통보된 보상액이 주민들의 기대치에 못미쳐 안타까웠는데 오늘 구제역 피해 축산농가 보상결정으로 다소나마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이종훈기자
15.3 X 6.2 cm

도청 이전지 살처분 농가 축산보상

예천군 호명면 · 안동시 풍천면 36가구

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합의안을
성사시켜 민원이 해결 됐다.

황원식 기자

hwangws@gsmnews.co.kr

【醴泉】경북도청이 이전하는 안동시 풍천면과 예천군 호명면 일대의 축산농가 36가구가 이전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 시행 전에 구제역으로 가축을 살처분 했다는 이유로 축산영업 보상을 받지 못하다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 ACRC)의 중재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민원인들은 도청 이전사업을 하는 경상북도개발공사로부터 축산업에 대한 감정평가를 받기 직전에

구제역이 돌면서 부득이 가축을 살처분 했지만 이 때문에 축산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준 마릿수에 미달 되게 되어 보상 대상이 되지 못하자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었다.

국민권익위는 30일 오후 2시 경북 안동시 풍천면사무소에서 김영재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공원식 경상북도 정부부지사가 참여한 가운데 김영란 위원장 주재로 조정회의를 개최해 민원인들이 축산보상

15.2 X 9.2 cm

每日新聞

2011년 07월 01일 (금)
08면 대구/경북

도청이전지 살처분 가축 영업보상 성사

국민권익위 민원 현장조정

구제역으로 가축을 잃은 안동과 예천지역 경북 신도청 이전지 축산농가들이 살처분 가축에 대한 '영업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경상북도과 안동시는 "그동안 축산보상에 따른 기준 마릿수 부족 등의 이유로 구제역 살처분 가축에 대한 영업보상(축산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됐던 신도청 이전지 축산농가들의 민원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현장방문을 통해 조정·합의, 축산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이끌어내 보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고 30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0일 김영란 위원장과 공원식 경북도 정부부지사, 김영재 경북도개발공사 사장, 민원 축산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안동 풍천면사무소에서 '안동·예천 축산보상 관련 민원 현장조정'을 했다.

이날 현장 조정은 신도청 이전지 축산농인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조모(63) 씨 등 3명의 축산농이 경북도개발공사를 상대로 구제역 살처분 가축에 대한 감정평가 시점에 가축이 없다는 이유로 축산보상 대상

에서 제외된데 대한 억울함을 구제해 달라는 민원에 따라 열렸다.

국민권익위는 이날 현장조사 결과 경북도개발공사의 축산보상은 가축소멸에 따른 보상이 아니라 도청이전 사업으로 축산업을 하지 못하게 되는 영업보상, 즉 폐업이나 휴업보상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중보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도청 이전사업이 아니라면 농민들이 축산업을 계속할 의사가 있고, 축사 크기 등 기타 사실을 종합해 살처분 이전에 이전사업의 영업보상에 해당하는 가축의 기준 마릿수가 있었다는 것이 추정·소명된다면 농민들에게 축산보상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조정안을 만들어 합의를 이끌어냈다.

그동안 경북도개발공사는 구제역으로 살처분된 도청 이전지 34농가 가축 846여 마리에 대해 도청 이전사업이 아닌 다른 이유로 축산업을 계속하지 못하게 됐으며 살처분 보상이 이뤄진 상태로 이중보상이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안동·임재진기자 2000jin@msnet.co.kr

예천·권오석기자 stone5@msnet.co.kr

10.0 X 15.0 cm

임실 섬진강댐 재개발사업지구 거주민 이주대책 마련

민원번호 : 2BA-1101-162516(도시수자원민원과, 이명호 조사관)

(‘11. 7. 7.)

민원개요

전북 임실군 운암면 쌍암리 ○○○일원 거주민들은 1965년 ‘섬진강다목적댐 재개발사업’으로 정부에서 국·공유지인 현 거주지역으로 집단 이주하였으나, 섬진강댐 준공시 측량착오로 만수위 이하로 그동안 주거부지를 불하도 못 받고 주택개량도 하지 못한 채 어렵게 생활하던 중 또 다시 이주하여야 하는 실정으로 수령한 보상금으로는 현실적인 이주가 불가하니 신청인들에게 안정된 주거생활이 영위될 수 있도록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여 달라는 민원에 대해 주민들에게 이주택지를 공급하고, 입주 후에는 정착자립이 가능하도록 관계기관 종합대책 성격의 조정 중재를 통해 민원 해결

1 당사자

- 신청인 : 전북 임실군 운암면 쌍암리 ○○○외 53가구
- 피신청인 : 한국수자원공사(피신청인 1), 전라북도 임실군수(피신청인 2)
- 관계기관 : 전라북도지사

2 민원내용

- 섬진강다목적댐 재개발사업(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단) 구역 내 있는 전북 임실군 운암면 쌍암리 ○○○일원(이하 ‘이 수몰 마을’이라 한단) 거주하는 신청인들은 으로 기 수령한 이주보상금으로는 현실적인 이주가 불가하니 안정된 주거생활이 영위될 수 있도록 별도의 이주 및 생계대책 요구

신청인들은 당초 섬진강댐 개발사업으로 국·공유지로 집단 이주하였으나, 측량착오로 이주지가 만수위선에서 최저 0.7m 이하에 위치하였고, 이주정착지(계화·동진·반월)의 장기간 조성으로 그동안 주거부지 불하도 못 받고 주택개량도 하지 못한 채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여 왔음

3 피신청인 등 의견

가. 한국수자원공사, 전북 임실군수

-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하고자 하는 세대에 대해 이주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관련법령상 이주대책을 실시한 것으로 이주보상금 수령자의 이주단지 입주허용은 관련 법령에 위반되므로 신청인들이 이주 보상금을 반환할 경우, 별도의 이주대책 수립 등을 적극 검토할 것이다.

나. 전라북도지사

- 신청인들은 당초 섬진강댐 이주대책의 실패로 인해 국·공유지에서 거주 및 영농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빈농으로 별도의 이주 및 생계 대책이 필요하다.

4 주요 쟁점사항

- 이주보상금 지급 후 추가 이주 대책 실시 가능 여부
- 이주 대책과 별도로 생계 대책 지원 가능 여부

5 갈등 분석

가. 민원발생배경 및 주요사실관계

- 섬진강댐 건설(1941년~1965년)당시 이주정착지(계화·동진·반월) 장기간 조성(1978년 준공)으로 이주대책 실패
- 1965년 섬진강댐 준공시 측량착오로 만수위 기준 이하의 국유지에 정착 후 농지경작 등으로 생계 유지
 - * 이주지가 만수위선에서 최저 0.7m 이하에 위치('1969년 대홍수 발생 : 주택 97호 전파, 700여명의 이재민)
- 섬진강댐 재개발사업 목적(홍수조절능력 향상, 추가 용수량 확보)의 차질 및 과거 이주정책 실패의 재연으로 사회적 문제 발생
 - * “수몰민 이주 난향”(2009. 11. 2, 전주MBC), “대부분 이주단지 입주 희망”(2010. 6. 20, 전북일보)
- 대부분의 이주민들은 영농에 종사하고 있으나 섬진강댐 재개발사업사업 시행

시 전체 90%이상 농경지 침수로 생계기반 상실 예상

* '2010. 8월 전체 농경지 2/3 침수 피해(4년 주기로 농경지 침수피해 발생)

* 대체농지 조성 등 이주민의 생계대책 수립 필요

- 이주보상금 수령자 대부분은 경제적 빈곤과 고령층으로 타지역으로 이주하여 자력으로 생계유지 현실적 어려움

* 현재 거주지는 국유지로 주택의 신·증축이 제한되었고 이에 따라 지장물 보상금 수령액이 적음 (세대당 2,250만원~3,500만원에 불과)

- 지역주민 대부분은 이주단지 입주를 희망하고 있으나 대책마련을 위하여 국토해양부, 한국수자원공사, 전라북도, 임실군 등이 여러 차례 협의에도 불구하고 마땅한 대책이 없던 상태

이주단지 개요

- 위 치 : 전북 임실군 운암면 쌍암리 ○○○일원
- 조성면적 : 130천㎡(약 40천평),
- 공급택지 : 주거택지 (85필지), 공공·상업택지(10필지)

- 섬진강댐 만수위 이하에서 거주하는 경제적 능력이 없는 신청인들이 별도의 이주 및 생계대책 요구하는 고충민원 제기, 2BA-1101-162516 이주대책 ('11.01.28.)

나. 해결 목표

- 관계기관 역할분담(조정)을 통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주거 및 생계 위기에 놓인 섬진강댐 수몰 이주민의 정상적인 주거환경 제공을 통해 정착자립 유도
- * 당초 현장조정시('08.12.11) 제시된 이주대책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하고, 두 차례에 걸쳐 삶의 터전을 상실한 이주민에게 경제력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생계대책 마련

6 갈등해결과정

가. 진행과정 개요

- '11. 3. 24. : 현장 방문 및 관계기관 의견청취를 통한 해결방안 논의 (임실군

- 청 : 도시수자원민원과 조사관, 신청인, 한국수자원공사, 임실군, 전라북도)
- '11. 4. 14. : 과장급 현장방문 및 이주대책 협의 (임실군청 : 도시수자원민원과장, 신청인, 한국수자원공사, 임실군, 전라북도, 국토해양부)
 - '11. 5. 25. : 특용작물 재배단지 조성사업 등의 생계대책 협의(국민권익위원회 : 도 도시수자원민원과장, 수자원공사, 임실군, 전라북도)
 - '11. 6. 9. : 수몰민 이주 및 생계대책 해소를 위한 조정서(안) 작성(임실군청 : 도시수자원민원과장, 신청인, 한국수자원공사, 임실군, 전라북도, 국토해양부)

7 조정 (합의) 결과

가. 조정 · 합의 최종결과

- 이주단지 입주희망자는 기 수령한 이주보상금 반납 조건으로 이주택지 입주, 생계대책을 위한 특용작물 재배단지 부지 확보, 특용작물 시설구축 소요 비용 지원, 댐 주변 지역 지원 사업비 재조정

나. 위원회 조정 · 합의문

- 신청인들은 피신청인2가 조성하는 이 민원 사업 이주단지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 기 수령한 이주 보상금을 피신청인 2에게 반납하는 조건으로 입주한다. 그 외, 신청인들은 이 민원 사업관련 이주대책과 생계대책에 대해 별도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 피신청인 1과 2는 신청인들의 생계대책을 위해 이 수몰 마을을 중심으로 특용작물 재배단지 조성사업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고, 시설구축에 소요되는 비용(한도 20억원)을 공동 부담한다.
- 피신청인 2는 ‘댐주변 지역 정비 사업비’를 재조정하여 이 민원 사업으로 인해 이주하게 되는 이주단지의 택지구입비 등을 지원한다.
- 관계기관은 피신청인 2가 제출한 ‘댐주변 지역 정비 사업비’의 계획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한다.

8 수용-이행 여부 및 시사점

가. 신청인-피신청인 수용 및 이행여부

- '11. 9. 16. : 이주단지 입주희망자 수요조사 완료
- '11. 9. 8. : 이댐주변지역정비사업비 조정신청(임실군→전라북도)
- '11. 10. : 댐 주변지역정비사업비 계획변경 승인신청(전라북도)
- '12. 6. : 이주보상금 반납, 이주단지 택지구입비 지원
- '15. 12. : 특용단지 재배부지 확보 및 시설구축

나. 시사점

- 우리 위원회 조정으로 1965년에 건설된 섬진강댐으로 인한 수몰민과 그 2세대들은 과거 정부의 이주대책 실패와 섬진강댐 운영정상화사업으로 또 다시 삶의 터전을 잃어야 하는 주민들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고 해결점을 찾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 특히, 정상적 주거환경 제공으로 정착·자립 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협력하여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공동의 고민과 노력이 있었음
- 아울러, 섬진강댐 정상화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어 안정적인 용수 공급하고 홍수예방을 통해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권익위, 임실·남원 현장방문 고충민원 해결

기사입력 2011-07-07 14:04 | 최종수정 2011-07-07 14:21



【남원=연합뉴스】이윤승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7일 전북 임실군과 남원시를 방문해 현장 조정으로 수십 년 묵은 민원을 해결했다.

권익위는 이날 오전 임실군을 방문하고 섬진강댐 재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생계기반을 잃게 된 운암면 쌍암리 일대 수몰 이주민 58명에게 이주택지와 특용작물 시설 구축지원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이들은 1965년 섬진강댐 건설 때 정부의 측량착오로 만수의 기준 이하이던 현재의 국유지로 집단 이주했으나 최근 추진 중인 다목적댐 재개발사업으로 90% 이상의 농경지가 침수되는 등 이주대상자가 됐지만, 보상액이 적고 대부분 고령으로 다른 지역에 이주해 생계를 꾸리기가 어려워 민원이 발생했다.

권익위는 김영란 위원장과 주민, 한국수자원공사, 임실군 등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현장 조정회의를 거쳐 이주택지 공급과 이주 후 정착,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조정안을 만들어 합의 를 이끌어냈다.

섬진강댐 수몰민,이주대책안 합의

2011-07-07 11:05

섬진강댐 재개발 사업으로 주거와 생계기반을 잃게 전북 임실군 이주민 58명이 7일 이주택지와 특용작물 시설 구축을 골자로 하는 정부 조정안에 합의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오전 11시 전북 임실군청에서 지역주민들과 한국수자원공사, 임실군, 전라북도 등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김영란 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조정안은 △이주단지 입주 희망자는 이미 수령한 이주 보상금을 임실군에 다시 반납하는 조건으로 임실군이 마련한 이주택지에 입주할 수 있고 △수자원공사와 임실군은 수몰민들의 생계대책을 위해 특용작물 재배단지 부지를 확보하고 △특용작물 시설 구축에 들어가는 비용을 20억원 한도 내에서 공동지원하기로 했다.

이주민 58명은 1965년 섬진강댐 준공시 정부의 측량 착오로 만수위 기준 이하이던 현재의 국유지로 집단 임시이주했으며, 이후 계화·반월·동진 일대에 조성된 이주정착지가 13년 후인 1978년에야 뒤늦게 완공돼 이주하지 못한 채 그대로 정착했다.

이들은 최근 섬진강 다목적댐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전체 90% 이상의 농경지가 침수되면서 다시 이주 대상자가 됐지만, 보상액이 적고 대부분 고령으로 타지역으로 이주해 생계를 꾸리기가 어려워 민원이 발생했다. 주민들은 그동안 거주지가 국유지라는 이유로 주택의 신·증축이 제한되는 등 어려움을 겪어왔다.

〈김윤희 기자 @outofmap〉 worm@heraldm.com

권익위, 임실·남원 현장방문 고충민원 해결

기사입력 2011-07-07 14:04 | 최종수정 2011-07-07 14:21

【남원=연합뉴스】 이윤승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7일 전북 임실군과 남원시를 방문해 현장 조정으로 수십 년 묵은 민원을 해결했다.

권익위는 이날 오전 임실군을 방문하고 섬진강댐 재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생계기반을 잃게 된 운암면 쌍암리 일대 수몰 이주민 58명에게 이주택지와 특용작물 시설 구축지원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이들은 1965년 섬진강댐 건설 때 정부의 측량착오로 만수의 기준 이하이던 현재의 국유지로 집단 이주했으나 최근 추진 중인 다목적댐 재개발사업으로 90% 이상의 농경지가 침수되는 등 이주대상자가 됐지만, 보상액이 적고 대부분 고령으로 다른 지역에 이주해 생계를 꾸리기가 어려워 민원이 발생했다.

권익위는 김영란 위원장과 주민, 한국수자원공사, 임실군 등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현장 조정회의를 거쳐 이주택지 공급과 이주 후 정착,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조정안을 만들어 합의의 길을 이끌어냈다.

또 이날 오후에는 남원 부시장과 한국도로공사 대표, 마을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강면사무소에서 고충회의를 하고 20여년간 풀지 못 한 민원을 해결했다.

남원시 대강면 입암마을은 1984년 88고속도로 건설 당시 설치된 소형통로박스의 확장요구와 조망권 피해, 교통소음 등의 생활불편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관계기관 대표들과 협의 끝에 출입구를 확장하고 주차장과 체육시설 건립, 흙길 농로의 콘크리트 포장 등을 해주기로 중재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억울함이 없는 나라, 깨끗한 사회"를 목표로 노력하는 국민권익위원회는 앞으로도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며 국민의 권익증진을 위한 고충해결에 매진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love@yna.co.kr

권익위, 임실·남원시 현안문제 '해결'

기사입력 2011-07-07 15:38

【전주=뉴스시스】유진휘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전북 임실과 남원을 차례로 찾아, 주민들의 현안문제를 해결했다.

권익위는 7일 오전 임실군청에서 지역주민들과 전북도, 임실군, 한국수자원공사 등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김영란 위원장 주재 현장조정회의를 열었다.

권익위는 현장회의에서 주민들에게 이주택지를 공급하고, 입주 후에는 정착자립이 가능하도록 관계기관 종합대책 성격의 조정안을 만들어 합의를 이끌어냈다.

김 위원장은 "1965년에 건설된 섬진강댐으로 인한 수몰민과 그 2세들은 과거 정부의 이주대책 실패와 섬진강댐 재개발사업으로 또 다시 삶의 터전을 잃어야 하는 주민들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눠야한다"며 "정상적인 주거환경 제공으로 정착자립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협력해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공동의 고민과 노력이 있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날 오후 남원시 대강면사무소 회의실에서 민원제기된 88고속도로 확장사업과 관련, 입암마을 도로주변 경관개선 및 완충녹지시설 설치 고충민원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조정서 서명 및 교부식을 가져 고충민원을 해결했다.

yjh@newsis.com

국민권익위원회, 섬진강댐 이주 및 생계대책 요구민원 현장방문

기사입력 2011-07-07 14:35



【임실=뉴스시스】 7일 오전 전북 임실군 운암면 일대 1백여명의 주민들이 제기한 섬진강댐 이주 및 생계대책 요구민원 현장에서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마을주민 대표로부터 애로사항을 듣고 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제공)

photo@newsis.com

권익위, 섬진강댐 수몰민 이주 대책 마련

[2011-07-07]

섬진강 댐 수몰 이주민에 대한 주거와 생계 대책이 마련됐습니다.

섬진강 댐 수몰 이주민과 임실군 등 관계기관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현장 조정회의에서 이주민 58명이 이주보상금을 반납하는 조건으로 임실군이 마련한 이주택지에 입주하고, 임실군과 수자원공사가 공동으로 이주민을 위한 특용작물 재배단지를 조성한다는 내용의 조정안에 합의했습니다.

섬진강 댐 수몰 이주민은 지난 1965년 섬진강 댐 조성 당시 정부의 측량 착오로 댐 수위보다 낮은 국유지에 거주해오다 최근 섬진강 댐 재개발로 농경지 대부분이 물에 잠겨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섬진강댐 수몰 이주민 대책 마련

현장조정으로 이주택지 및 특용작물 시설 구축 지원 합의

2011년 07월 07일 (목) 13:30:01 설현택 기자 hyuntags0891@naver.com

【임실=뉴스웨이 호남취재본부 설현택 기자】 섬진강댐 재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생계기반을 잃게 된 전북 임실군 운암면 쌍암리 일대 섬진강댐 수몰 이주민 58명에게 국민권익위원회의 현장조정으로 이주택지와 특용작물 시설 구축 지원 등의 대책이 마련됐다.

이들은 1965년 섬진강댐이 준공시 정부의 측량착오로 만수위 기준 이하이던 현재의 국유지로 집단 임시이주했으며, 이후 계화·동진·반월일대에 조성되던 이주정착지가 13년이나 지난 1978년에야 뒤늦게 완공되는 바람에 이주하지 못한 채 그대로 정착한 주민들이다.

이번에 이들은 섬진강 다목적댐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전체 90% 이상의 농경지가 침수되면서 다시 이주 대상자가 됐지만 보상액이 적고 대부분 고령으로 타지역으로 이주해 생계를 꾸리기가 어려워 민원이 발생했다.

주민들은 그동안도 거주지가 국유지라는 이유로 주택의 신·증축이 제한되는 등 오랜 시간 어려움을 겪어왔다.

국민권익위는 7일 오전 11시 전북 임실군청에서 주민들과 한국수자원공사, 임실군, 전라북도 등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김영란 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주민들에게 이주택지를 공급하고, 입주 후에도 이들이 정착과 자립이 가능하도록 종합대책 성격의 조정안을 만들어 합의를 이끌어냈다.

세부내용을 보면, ▲ 이주단지 입주희망자는 이미 수령한 이주보상금을 임실군에 다시 반납하는 조건으로 임실군이 마련한 이주택지에 입주할 수 있고 ▲ 수자원공사와 임실군은 수물민들의 생계대책을 위해 특용작물 재배단지 부지를 확보하고, ▲ 특용작물 시설 구축에 들어가는 비용을 20억원 한도내에서 공동지원하기로 했다.

조정회의를 주재한 김 위원장은 "이번 합의는 과거 정부의 이주대책 실패와 섬진강댐 재개발 사업으로 또 다시 삶의 터전을 잃어야 하는 수물민과 그 2세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기 위해 관계기관이 적극 협력한 덕분이다"며 "이를 계기로 댐 재개발사업도 원만히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설현택 기자

국민권익위, 현장조정 주민숙원 잇따라 해결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현장조정으로 해법을 찾았다.

국민권익위원회 김영란 위원장은 7일 임실과 남원을 잇따라 방문, 섬진강댐 재개발사업과 관련 민원과 88고속도로 확장 관련 남원 대강면 입암마을 주민들의 오랜 민원을 현장조정을 통해 해

결했다.

권익 위
는 이날 오
전 임실군
청 회의실
에서 전복

도와 임실군,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 및 수몰이주민 대표들이 배석한 가운데 현장조정 회의를 열고 수몰민중 수령된 이주보상금 반납시는 이주택지 임주를 가능토록 했다. 또 특용작물 재배단지 확보를 통한 생계대책도 마련했다.

더불어 특용작물 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것과 댐 주변 정비사업비 재조정으로 이주단지 택지구입비 지원 조정안에 대한 합의점도 도출했다. 특히 K-water와 임실군이 전례없이 이주후 생계대책까지 마련해 주

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이종세 K-water 섬진강댐 관리단장은 “이주민이 조속한 시일내에 이주를 완료, 섬진강댐의 정상운영이 가능할 경우 홍수방어능력이 크게 확충되고 6,500만톤의 용수를 추가 확보하여 부족한 생공용수를 추가 공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날 오후 남
원시 대강
면사무소
에서 열린
‘입암마을
도로 주변

경관개선 및 완충녹지시설 설치 고충민원 현장조정회의’에서는 88고속도로가 지나는 대강면 입암리의 논 13필지를 도로공사 측이 2015년까지 사들여 마을 진입교량을 짓기로 했다.

또 완공 후 6개월 이내에 성토해 주민을 위한 녹지공간을 조성하고 입암마을의 주 통행로에 설치될 교량 폭을 10m에서 12m로 확장키로 했으며, 입암마을 서측 끝에서 광주방향으로 길이 240m, 폭 3m의 농로를 개설해 주도록 했다.

임실=박정우·남원=신기철기자

10.2 X 17.8 cm

전북도-권익위 현장방문 민원 해결

임실군·남원 대강면서 주민 고충해결 조정회의

국민권익위원회 김영란 위원장과 한국수자원공사 대표, 임실군청과 전북도청 관계관, 그리고 섬진강 댐 수몰위기 주민들이 7일 오전 11시 임실군청 회의실에 모여 현지 주민들이 제기한 주거 안정 및 생계 대책 요구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1965년 섬진강댐 준공 시 인근으로 이주했던 주민들이 최근 댐 재개발사업으로 인한 생계기반을 또다시 잃을 위기에 놓여 있는 상황으로 다자기관 간 얽힌 민원에 대해 '현장조정회의'를 주재한 김영란 위원장은 협상 끝에 이주택지 공급과 생계용 특용작물 재배단지를 주민들에게 확보해 주기로 하는 합의를 이끌어 냈다.

같은 날 오후 3시 남원시 대강면사무소에서 남원부시장, 한국도로공사 대표, 관내 입암마을 주민, 김영란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들의 고충해결을 위한 조정회의가 열려 1984년 88고속도로 건설 당시 설치된 소형통로박스(4m)의 확장요구, 높은 교각으로 인한 조망권 피해 및 교통소음 등의 생활불편 민원을 해

결하기 위해서 김 위원장은 관계기관 대표들과 논의 끝에 출입구를 12m로 3배 확장함과 동시에 주차장과 체육시설 건립, 흙길농로의 콘크리트 포장 등을 해주기로 했다.

수 십 년이 된 두민원은 다자기관 간 머리를 맞대면 해결점을 찾을 수 있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

주민들이 오랫동안 고충을 겪어 왔다는 것은 어느 한 기관이 손대서 고칠 수 없었다는 말과 같다. 고충을 겪는 주민들 입장에서 합의점을 찾으려고 노력한다면 아무리 난해한 민원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전국적으로 보면 국민권익을 침해하는 민원들이 수없이 많을 것으로 행정기관의 입법 부당한 행정처분이나 일상생활의 불편사항은 누구든지 국민권익위원회에 호소할 수 있다.

접수방법은 국번 없이 110번으로 전화해도 되고 인터넷으로 '국민신문고'를 쳐서 안내를 받아도 된다. 물론 국민권익위원회(서울 서대문구 의주로)를 방문해도 가능하다.

전북본부/송정섭기자
swp2072@hanmail.net

10.3 X 15.5 cm

권익위, 섬진강댐 수몰 이주민 생계·주거대책 마련

이주택지 및 특용작물 시설 구축 지원 합의

2011년 07월 08일 (금) 김소영 기자 syong@constimes.co.kr

섬진강댐 재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생계기반을 잃게 된 전북 임실군 운암면 쌍암리 일대 섬진강댐 수몰 이주민 58명에게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 ACRC)의 현장조정으로 이주택지와 특용작물 시설 구축 지원 등의 대책이 마련됐다.

이들은 1965년 섬진강댐이 준공시 정부의 측량착오로 만수위 기준 이하이던 현재의 국유지로 집단 임시이주했으며, 이후 계화·동들이다.

이번에 이들은 섬진강 다목적댐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전체 90% 이상의 농경지가 침수되면서 다시 이주 대상자가 됐지만 보상액이 적고 대부분 고령으로 타지역으로 이주해 생계를 꾸리기가 어려워 민원이 발생했다.

주민들은 그동안도 거주지가 국유지라는 이유로 주택의 신·증축이 제한되는 등 오랜 시간 어려움을 겪어왔다.

국민권익위는 7일 오전 11시 전북 임실군청에서 지역주민들과 한국수자원공사, 임실군, 전라북도 등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김영란 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주민들에게 이주택지를 공급하고, 입주 후에도 이들이 정착과 자립이 가능하도록 종합대책 성격의 조정안을 만들어 합의를 이끌어냈다.

세부내용을 보면, ▲이주단지 입주희망자는 이미 수령한 이주보상금을 임실군에 다시 반납하는 조건으로 임실군이 마련한 이주택지에 입주할 수 있고 ▲수자원공사와 임실군은 수몰민들의 생계대책을 위해 특용작물 재배단지 부지를 확보하고, ▲특용작물 시설 구축에 들어가는 비용을 20억원 한도내에서 공동지원하기로 했다.

조정회의를 주재한 김위원장은 "이번 합의는 과거 정부의 이주대책 실패와 섬진강댐 재개발사업으로 또 다시 삶의 터전을 잃어야 하는 수몰민과 그 2세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기 위해 관계기관이 적극 협력한 덕분이다. 이를 계기로 댐 재개발사업도 원만히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건설타임즈(<http://www.constime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한겨레 환경일보

섬진강댐 재개발사업 이주민 주거위기 '해결'

정상적인 주거환경 제공으로 정착·자립, 관계기관 협력

2011년 07월 08일 09:26 환경일보 조영환 기자

【임실=환경일보】 조영환 기자 = 섬진강댐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주거 및 생계기반을 상실할 위기상황에 있던 임실군 운암면 섬진강댐 수몰 이주민들의 고충민원이 국 민권익위원회(ACRC)의 현장조정으로 해결됐다.

권익위는 7일 전북 임실군청에서 지역주민들과 전라북도, 임실군, 한국수자원공사 등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김영란 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주민들에게 이주택지를 공급하고, 입주 후에는 정착·자립이 가능하도록 관계기관 종합대책 성격의 조정안을 만들어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번 조정으로 이주단지 입주희망자는 기 수령한 이주보상금 반납 조건으로 이주택지 입주, 생계대책을 위한 특용작물 재배단지 부지 확보, 특용작물 시설구축 소요 비용지원, 댐주변 정비사업비 재조정으로 이주단지의 택지구입비 지원을 통해 운암면 쌍암리 수몰이주민은 정상적인 정착·자립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조정회의를 주재한 권익위 김영란 위원장은 “1965년에 건설된 섬진강댐으로 인한 수몰민과 그 2세들은 과거 정부의 이주대책 실패와 섬진강댐 재개발사업으로 또 다시 삶의 터전을 잃어야 하는 주민들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고 정상적인 주거환경 제공으로 정착·자립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협력해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공동의 고민과 노력이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실군 관계자는 “권익위원회의 관계기관 조정을 통해 섬진강 댐 정상화 사업으로 또다시 정들었던 삶의 터전을 잃고 떠나야 하는 실의에 빠져있던 이주민들에게 금번 조정은 새로운 희망의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jbyh@hkbs.co.kr



전남 강진만 어업피해 원인 조사 합의

민원번호 : 2BA-1101-071182(도시수자원민원과, 김경태 조사관)

(‘11. 7. 20.)

민원개요

장흥댐 건설, 간척지 매립사업 등으로 인한 강진만 일원의 패류(바지락, 꼬막 등) 폐사로 인한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강진군 29개 어촌계 1,321명으로부터 집단 민원이 제기되어 패류 피해조사를 위해 피신청인 및 관계기관 대표자로 구성하는 실무협의회를 구성, 원인분석 및 피해규모, 인과관계에 따른 기관별 책임비율 산정 등 피해 현황조사를 하도록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조정 중재안을 마련하여 민원 해소

1 당사자

- 신청인 : 전남 강진군 ○○○ 외 1,321명 (29개 어촌계)
- 피신청인 :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피신청인1), 전라남도 강진군수(피신청인2), 한국수자원공사사장(피신청인3)
- 관계기관 :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장

2 민원내용

- 한국수자원공사가 장흥댐에 담수를 시작한 2005년부터 강진만의 해양환경 변화로 인해 바지락, 꼬막 등의 서식환경이 파괴되어 패류가 감소되었다며 어업 피해 조사보상 요구
 - 신청인들은 2005년 장흥댐 담수 이후 한국수자원공사에 5회 이상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피신청인의 소극적인 태도로 미해결되어 7년 이상 장기 고질화된 집단민원 임

3 피신청인 등 의견

- 이 민원 해역의 바지락, 꼬막 등(이하 ‘패류’라 한다.)의 추정 자원량이 감소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에 대한 원인은 이 민원 해역 일원에서 시행한 공익사업

(간척, 준설, 댐건설 등)과 자연환경 변화 등에 의해서 발생한 것으로 이에 대한 인과 관계 규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4 주요 쟁점사항

- 어업 피해사실에 대한 객관적 조사
- 어업피해 규모와 인과관계 규명

5 갈등 분석

가. 민원발생배경 및 주요사실관계

- 강진만 해역의 종패장·양식장은 0.5~1.5m 가량의 두터운 ‘희리’(미세한 입자로 죽어있는 갯벌)층이 형성되는 등 패류 서식환경의 변화로 바지락 등 패류 생산 실적이 전무한 실정
 - 피해 추정규모(신청인 주장) : 면적 803ha, 277억 원
- 수자원공사는 패류의 폐사사실은 인정하나, 강진만 일대에서 타 기관이 행한 공익사업이 원인이라며 피해 조사거부
- 강진군은 사업시행 중 기 보상하였고, 환경영향 평가결과 피해와 무관하다며 추가조사 및 보상을 거부
 - 1,170건에 대해 156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사업구역 내 직(간)접 보상임
- 목포해양항만청은 강진군 보상책임 조건으로 협의하여 사업시행 하였다며 추가보상 불가입장 표명
 - 강진군에서 종패대 10억 원을 어민들에게 지급하였으나 이는 보상이 아닌 생계보전 지원금으로 공고된 것임

강진만 일원의 주요 공익사업현황

- 한국수자원 공사
 - 장흥댐 건설사업 (1997~2006, 2005년부터 담수)
- 목포지방해양항만청
 - 강진만 해역준설사업 (2001~2008, 997천m²준설, L= 12km)
- 전라남도 강진군
 - 만덕·사내 간척지 매립사업 (1989~2002, 조성면적 1,144ha-약 3,432천평)

- 신청인들은 2005년부터 수자원공사에 어업피해 조사를 수차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자 우리 위원회 집단민원 제기

나. 해결 목표

- 공익사업으로 발생한 피해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를 선행하여 공익사업별 어업피해 규모와 인과관계를 규명하고 보상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민·관 갈등 해소로 신청인들과 관계기관 모두가 Win-Win하는 해결방안 마련.
- 3개 피신청기관과 객관성 확보를 위한 외부 관계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조속히 구성, 공정한 피해 조사 후 보상 절차 이행.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3조 규정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인근에 있는 어업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실제 피해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 그 피해에 대하여 보상하도록 규정
 - ※ 환경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을 규정한「환경정책기본법」제31조 따라 사업장에서 발생한 책임을 사업자가 입증하고,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어느 사업장등에 의하여 피해가 발생한 것인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각 사업자가 연대 배상

6 갈등해결과정

가. 진행과정 개요

- 2011. 1. 13. 민원 접수 후 수차례의 현장조사와 국토해양부, 목포해양항만청, 전라남도, 전라남도 강진군, 한국수자원 공사 등 관계자의 출석조사 및 기관 협의를 통해 해결방안 모색한 결과,
- 2011. 6. 17. 강진만 해역의 패류 서식환경 변화로 바지락 등의 폐사에 대한 피해발생 원인조사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게 되었고, 이후 두 차례의 기관협의를 거쳐,
- 2011. 7. 14. 민원해결을 위해 3개 피신청인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강진만 해역 공익사업과 무관한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실무 협의체를 구성, 공동으로 인과관계 및 책임비율을 확인하는 별도의 용역을 시행하고 그에 따라 보상처리하도록 위원회에서 제시한 조정안을 신청인과 피신청인 모두 수용

7 조정 (합의) 결과

가. 조정 · 합의 최종결과

- 어민들이 주장하는 피해를 조사하기 위해 4개 기관이 공동으로 실무협의체를 구성, 각 기관별 공익사업에 따른 생태환경 변화요인과 피해규모를 확정, 어민들에게 보상하도록 관계기관이 연대하는 성격의 조정 중재

나. 위원회 조정 · 합의문

- 1) 피신청인 1, 2, 3과 관계기관은 이 민원 해역에 발생한 패류 피해 조사 등을 위한 각 기관 대표로 구성하는 실무 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이 민원 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구성한다.
- 2) 실무협의회는 이 민원 해역의 패류 추정 자원량 감소의 원인분석 및 패류 피해 현황조사를 위한 용역을 실무협의회 구성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 시행하고, 용역비를 포함하여 용역관리 등 용역에 대한 제반사항을 결정한다.
- 3) 실무협의회에서 발주한 용역 결과에 따라 피해규모, 인과관계에 따른 기관별 책임비율을 산정하되, 보상여부는 조사 후 관련 법령, 판례 등에 따른다. 다만, 강진만 해역준설사업 및 사내·만덕 간척사업으로 받은 보상과 중복될 경우 이를 배제하고, 해역준설사업 관련 피해보상은 2001. 6. 30. 피신청인 2와 3이 상호 협의한 내용에 따른다. 책임비율 산정조사 시 이 민원 해역의 자연환경 변화요인을 포함하고 자연환경 변화요인은 위 보상 규모에서 배제한다.
- 4) 실무협의회(대표)는 위 ‘2)’, ‘3)’항의 결정사항 및 용역결과에 대해 신청인들 또는 신청인 대표에게 설명회 등의 형태로 별도 안내한다.
- 5)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1, 2, 3과 관계기관이 시행하는 공동조사에 협조하고 용역결과에 따른다.

8 수용-이행 여부 및 시사점

가. 신청인-피신청인 수용 및 이행여부

- '11. 8. : 실무협의회 구성
- '12. 6. : 피해규모, 인과관계 및 기관별 책임비율 산정을 위한 용역 발주 추진

나. 시사점

- 우리 위원회의 조정으로 비슷한 시기에 주변지역에서 공익사업을 시행한 각 기관이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강진만 일대의 생태환경 변화와 패류감소의 원인을 규명하고, 피해규모를 확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공익사업의 복합적인 영향과 이후 관계법령에 따른 피해 보상을 진행할 수 있는 해결점을 찾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 환경피해는 누적적인 원인이 있을 수 있으나 각 사업의 주체들은 어민들의 피해 실정에 공감하면서도 각 해당사업의 원인은 미미하다 주장하며 피해 조사 자체에도 소극적인 측면이 있었음.
- 이번 조정을 통해 환경 변화와 피해의 원인이 복합적인 경우 각 사업자가 공동조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되었으며, 강진만 일대는 물론 향후 각종 공익사업 시행 시 총량적인 피해원인을 규명하고 법령에 따른 보상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되는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임.

강진만 어민 어업피해 보상길 열려(종합)

기사입력 2011-07-20 17:11

【강진=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장흥댐 건설과 바다 준설·매립 등으로 어패류가 감소하면서 피해를 당한 전남 강진의 어민들이 보상을 받을 길이 열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일 오후 전남 강진군 칠량면사무소에서 김영란 위원장 주재로 어민, 수자원공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조정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조정에서는 어업피해 조사를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과 공익사업에 따른 생태환경 변화요인, 피해규모 확정 등의 합의안을 마련했다.

이로써 장흥댐이 건설되고 어패류가 줄어 담수를 시작한 2005년 이후에만 수백억원대 어업권 손실을 봤다고 주장하는 강진 6개 읍·면 어민들의 민원이 해결될 실마리를 찾았다.

또 앞으로 어업 피해의 원인, 기관별 책임 비율이 확정된다면 7년 이상 끌어온 민·관 갈등이 원만히 해소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할 것으로 보인다고 권익위는 밝혔다.

김영란 위원장은 "강진만 일대에서 공익사업을 시행한 기관들이 어민들의 피해를 공감하면서도 피해 민원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해왔으나, 뒤늦게나마 어민들의 생계대책이 마련돼 다행이다"며 "앞으로 강진만 해역의 어패류 서식환경 회복을 위해 관계기관과 어민들이 공동으로 노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진어민 1천300여명은 장흥댐 건설로 갯벌이 적체돼 수백억대 조업 피해를 봤다며 권익위를 비롯해 감사원, 국토해양부, 수자원공사, 전남도 등 5개 기관에 탄원서를 냈다.

권익위는 이와 같이 전문조사관과 법률상담가 등으로 '이동신문고'를 운영, 유관기관 관계자와 함께 민원 현장을 찾아가 지역민의 억울함을 해결해주고 있다.

권익위는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인천과 부산, 서울, 경기, 전남, 충남 등 시·군·구 22곳에서 이동신문고를 운영해 현장합의 7건, 고충민원접수 67건, 상담안내 331건 등 총 469건의 민원을 상담 처리했다. cbebop@yna.co.kr

권익위 '장흥댐 피해' 강진군 어민 보상 기틀 마련

기사입력 2011-07-20 16:06

【강진=뉴스시스】 류형근 기자 = 전남 장흥댐 건설과 바다 매립 등의 사업으로 피해를 입은 강진군 어민들의 보상대책이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일 오후 강진군 칠량면사무소에서 김영란 위원장과 지역 어민, 목포해양항만청장, 강진군수, 한국수자원공사 전남본부장, 전남 해양수산과학원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강진만 어업 피해 보상 민원 현장조정위원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권익위는 어민들이 주장하는 어업피해를 조사하기 위해 3개 관계기관이 공동으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각 기관별 공익사업에 따른 생태환경 변화요인과 피해규모를 확정해 어민들에게 보상하도록 합의안을 마련했다.

이로써 한국수자원공사가 장흥댐에 담수를 시작한 2005년부터 '강진만의 바지락, 꼬막 등의 패류가 감소되었다'며 7년째 어업피해 조사·보상을 요구해 온 강진군 어민들의 민원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됐다.

김영란 위원장은 "뒤늦게나마 어민들의 생계대책이 마련돼 다행이다"며 "앞으로 강진만 해역의 어패류 서식환경 회복을 위해 관계기관과 어민들이 공동으로 노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강진만 해역 일원에서는 한국수자원공사 주관으로 지난 1997년부터 2006년까지 장흥댐 건설공사를 비롯해 롯데 해역 준설사업(목포해양항만청·2002~2008), 사내·만덕지구 간척지 개발(강진군·1989~2002) 등 대규모의 사업이 잇따라 진행됐다.

이에 따라 강진어민 1300여명은 장흥댐 건설로 갯벌이 적체돼 수백억대 조업 피해를 봤다며 권익위를 비롯해 감사원, 국토해양부, 수자원공사, 전남도 등 5개 기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hgryu77@newsis.com

권익위원장, 강진만 어업피해지역 방문

기사입력 2011-07-20 18:54



【강진=뉴스시스】 전진환 기자 =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가운데)이 20일 오후 강진군 칠량면사무소에서 열린 장항댐 건설로 인한 어업피해 보상 요청 민원 현장조정회의에서 관계관들과 합의한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국민권익위 제공)



【강진=뉴스시스】 전진환 기자 = 20일 오후 강진군 칠량면사무소에서 열린 장항댐 건설로 인한 어업피해 보상 요청 민원 현장조정회의에 참석한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강진만 갯벌에서 패류 감소로 인한 어업피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국민권익위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20일 오후 강진만 패류 피해 현장에서 어민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있다..2011.7.20

전남매일

2011년 07월 21일 (목)
02면 종합

강진만 어업피해 보상길 열렸다

국민권익위, 조정위원회 열고 합의안 마련

장흥댐 건설과 바다 준설·매립 등으로 어패류가 감소하면서 피해를 당한 강진의 어민들이 보상을 받을 길이 열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일 오후 강진군 칠랑면사무소에서 김영란 위원장 주재로 어민, 수자원공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조정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조정에서는 어업피해 조사를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과 공익사업에 따른 생태환경 변화요인, 피해규모 확석 등의 합의안을 마련했다.

이로써 장흥댐이 건설되고 어패류가 줄어 담수를 시작한 2005년 이후에만 수백억원대 어업권 손실을 봤다고 주장하는 강진 6개 읍·면 어민들

의 민원이 해결될 실마리를 찾았다.

또 앞으로 어업 피해의 원인, 기관별 책임 비율이 확정된다면 7년 이상 끌어온 민·관 갈등이 원만히 해소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할 것으로 보인다고 권익위는 밝혔다.

김영란 위원장은 “강진만 일대에서 공익사업을 시행한 기관들이 어민들의 피해를 공감하면서도 피해 민원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해왔으나, 뒤늦게나마 어민들의 생계대책이 마련돼 다행이다”며 “앞으로 강진만 해역의 어패류 서식환경 회복을 위해 관계기관과 어민들이 공동으로 노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진어민 1,300여명은 장흥댐 건

설로 갯벌이 적체돼 수백억대 조업 피해를 봤다며 권익위를 비롯해 감사원, 국토해양부, 수자원공사, 전남도 등 5개 기관에 탄원서를 냈다.

권익위는 이와 같이 전문조사관과 법률상담가 등으로 ‘이동신문고’를 운영, 유관기관 관계자와 함께 민원현장을 찾아가 지역민의 억울함을 해결해주고 있다.

권익위는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인천과 부산, 서울, 경기, 전남, 충남 등 시·군·구 22곳에서 이동신문고를 운영해 현장접수 71건, 고충민원접수 67건, 상담안내 331건 등 총 469건의 민원을 상담 처리했다.

/강진=여두문 기자

15.3 X 10.6 cm

강진만 어민 1300여명 어업피해 보상길 열려

국민권익위, 강진서 현장 조정회의 통해 합의안 도출

장흥댐 건설과 바다 준설 및 매립 등 각종 공익사업으로 강진만에서 패류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삶의 터전을 잃을 처지에 놓인 강진군 어민 1300여명이 어업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20일 강진에서 열린 '강진만 어업피해 보상 민원 현장 조정'을 통해 어민들이 주장하는 어업피해를 조사하기 위해 3개 관계기관이 공동으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각 기관별 공익사업에 따른 생태 환경 변화요인과 피해 규모를 확정해 어민들에게 보상하도록 하는 내용의 합의안을 이끌어냈다. 이날 오후 강진군 칠량면사무소에서 열린 민원 현장 조정회의는 김영란 위원장 주재로 지역 어민, 정창원 목포해양항만청장, 이석천 한국수자원공사 전남지역본부장, 황주홍 강진군수, 유선호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현장 조정을 통해 합의안이 도출됨으로써 한국수자원공사가 장흥댐에 담수를 시작한 2005년부터 강진만의 해양환경 변화로 인해 바지락, 꼬막 등의 패류 서식환경이 파괴되어 어획고가 감소했다며 7년째 어업피해 조사와 보상을 요구해온 강진군 어민들의 집단장기 민원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됐다. 강진군 29개 어촌계 소속 어민 1321명은 장흥댐 건설로 패류가 감소해 강



김영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20일 강진군 칠량면 봉황리 대섬주변 해역 현장을 찾아 강진만 어업피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강진군 제공

진만 해역 803ha에서 277억 규모의 어업 피해가 발생했다면서 지난 1월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강진만 해역 일원은 장흥댐 건설(한국수자원공사·1977~2006년)을 비롯해 해역 준설사업(목포해양항만청·2002~2008년), 사내·만덕지구 간척지 개발(강진군·1989~2002년) 등 비슷한 시기에 대규모 사업이 진행된 곳이다.

이번 조정으로 향후 어업 피해의 원인이 규명되고 기관별 책임 비율이 확정될 경우 7년 넘게 끌어온 강진만 어업피해 집단 민원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현장 조정에서 강진만 양식장과 종패장을 둘러본 김영란 위원장은 "그동안 강진만 일대에서 공익사업을 시행한 기관들이 어민들의 피해 실정을 공감하면서도 피해 민원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해왔으나 뒤늦게나마 권익위와 함께 고민하고 노력한 결과 어민들의 생계 대책이 마련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피해 원인조사 차원을 넘어 강진만 해역의 패류 서식환경 회복을 위해서도 관계기관과 어민들이 공동으로 노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진=김규중 기자
16.7 X 22.6 cm

장흥댐 건설, 바다 준설·매립 피해

강진만 어민 보상길 열렸다

장흥댐 건설과 바다 준설·매립 등으로 어패류가 감소하면서 피해를 입은 강진지역 어민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일 오후 강진군 칠량면사무소에서 김영란 위원장 주재로 어민, 수자원공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조정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조정에서는 어업피해 조사를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과 공익사업에 따른 생태환경 변화요인, 피해규모 확정 등의 합의안을 마련했다.

이로써 장흥댐이 건설되고 어패류가 줄어 답수를 시작한 2005년 이후에만 수백억원대 어업권 손실을 봤다고 주장하는 강진 6개 읍·면 어민들의 민원이 해결될 실마리를 찾았다.

또 앞으로 어업 피해의 원인, 기관

별 책임 비율이 확정된다면 7년 이상 끌어온 민·관 갈등이 원만히 해소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할 것으로 보인다고 권익위는 밝혔다.

김영란 위원장은 “강진만 일대에서 공익사업을 시행한 기관들이 어민들의 피해는 공감하면서도 피해 민원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해왔으나, 뒤늦게나마 어민들의 생계대책이 마련돼 다행”이라며 “앞으로 강진만 해역의 어패류 서식환경 회복을 위해 관계기관과 어민들이 공동으로 노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진어민 1300여명은 장흥댐 건설로 갯벌이 적체돼 수백억대 조업 피해를 봤다며 권익위를 비롯해 감사원, 국토해양부, 수자원공사, 전남도 등 5개 기관에 탄원서를 냈다.

/중부취재본부=남철희기자 choul@

10.3 X 12.1 cm

국민권익위원회, 강진만 어업피해 보상 해결

【강진=뉴스웨이 호남취재본부 윤대식 기자】 장흥댐 건설과 바다 준설·매립 등 각종 공익사업으로 패류 생산량이 감소되면서 삶의 터전을 잃을 위험에 처한 강진군 어민 1300여명의 보상대책 물꼬가 터졌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일 오후 5시 전남 강진군 칠량면사무소에서 김영란 위원장 주재로 지역 어민, 목포해양항만청장, 강진군수, 한국수자원공사 전남본부장, 전남 해양수산과학원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가졌다.

이날 조정회의에서 ▲ 어민들이 주장하는 어업피해를 조사하기 위해 3개 관계기관이 공동으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 각 기관별 공익사업에 따른 생태환경 변화요인과 피해규모를 확정해 어민들에게 보상하도록 합의안을 성사시켰다.

이로써, 한국수자원공사가 장흥댐에 담수를 시작한 2005년부터 강진만의 바지락, 꼬막 등의 패류가 감소되었다며 7년째 어업피해 조사·보상을 요구해온 강진군 어민들의 집단 장기민원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이날 현장조정에 앞서 김영란 위원장은 직접 어민들이 장흥댐 때문에 패류가 감소되어 강진만 해역 803ha에 277억 규모의 어업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해온 패류 양식장과 종패장을 둘러봤다.

강진만 해역 일원은 장흥댐 건설을 비롯해 해역 준설사업 사내·만덕지구 간척지 개발 등 비슷한 시기에 대규모의 사업이 진행된 곳이다.

이번 조정으로 향후 어업피해의 원인, 기관별 책임비율이 확정된다면 7년 이상 오랫동안 끌어왔던 민관갈등이 원만히 해소됨은 물론이고, 어민들의 생계터전 상실에 대한 적절한 보상대책이 마련됨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여진다.

김영란 위원장은 "그간 강진만 일대에서 공익사업을 시행한 기관들이 어민들의 피해실정을 공감하면서도 피해 민원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해왔다"며 "뒤늦게나마 권익위와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 피해 어민들의 생계대책이 마련될 수 있게되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피해 원인조사 차원을 넘어 강진만 해역의 패류 서식환경 회복을 위해서도 관계

기관 어민들의 공동으로 노력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대식 기자

朝鮮日報
‘장흥댐 피해’ 강진 어민 보상길 열려

2011년 07월 22일 (금)
14E면 지역

국민권익위 조정위서 합의
장흥댐 건설과 바다 준설·매립 등으로 어패류가 줄어드는 바람에 피해를 입은 전남 강진지역 어민들이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일 오후 전남 강진군 칠량면사무소에서 김영란 위원장 주재로 어민과 수자원공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조정위원회회를 열었다.
이날 조정에서는 어업피해 조사를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과 공익사업에 따른 생태환경 변화요인 및 피해 규모 확정 등 합의안을 마련했다.
이로써 장흥댐 건설로 어패류가 줄어 담수를 시작한 2005년 이후 수백억원대 어업권 손실을 봤다고 주장하는 강진 6개 읍·면 어민들의 민원이 해결될 실마리를 찾았다.
또 앞으로 어업피해의 원인과 기관별 책임 비율이 확정되면 7년 이상 끌어온 민·관 갈등이 해소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강진만 일대에서 공익사업을 시행한 기관들이 어민들의 피해를 공감하면서도 피해 민원에 소극적으로 대처해왔으나, 늦게나마 어민들의 생계 대책이 마련돼 다행”이라며 “강진만 해역의 어패류 서식환경 회복을 위해 관계 기관과 어민들이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강진지역 어민 1300여명은 장흥댐 건설로 갯벌이 적체돼 수백억원대의 피해를 봤다며 권익위와 감사원, 국토해양부, 수자원공사, 전남도 등 5개 기관에 탄원서를 냈다.
조흥복 기자 powerbok@chosun.com
15.4 X 7.8 cm

chosun.com

[호남] '장흥댐 피해' 강진 어민 보상길 열려

국민권익위 조정위서 합의

장흥댐 건설과 바다 준설·매립 등으로 어패류가 줄어드는 바람에 피해를 입은 전남 강진지역 어민들이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일 오후 전남 강진군 칠량면사무소에서 김영란 위원장 주재로 어민과 수자원공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조정위원회회를 열었다.

이날 조정에서는 어업피해 조사를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과 공익사업에 따른 생태환경 변화요인 및 피해 규모 확정 등 합의안을 마련했다.

이로써 장흥댐 건설로 어패류가 줄어 담수를 시작한 2005년 이후 수백억원대 어업권 손실을 봤다고 주장하는 강진 6개 읍·면 어민들의 민원이 해결될 실마리를 찾았다.

또 앞으로 어업피해의 원인과 기관별 책임 비율이 확정되면 7년 이상 끌어온 민·관 갈등이 해소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권익위는 밝혔다.

김 위원장은 "강진만 일대에서 공익사업을 시행한 기관들이 어민들의 피해를 공감하면서도 피해 민원에 소극적으로 대처해왔으나, 늦게나마 어민들의 생계 대책이 마련돼 다행"이라며 "강진만 해역의 어패류 서식환경 회복을 위해 관계 기관과 어민들이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강진지역 어민 1300여명은 장흥댐 건설로 갯벌이 적체돼 수백억원대의 피해를 봤다며 권익위와 감사원, 국토해양부, 수자원공사, 전남도 등 5개 기관에 탄원서를 냈다.

조홍복 기자 powerbok@chosun.com

시민일보

'어민피해 277억' 보상길 열리나

'장흥다목적댐 건설' 강진만 어업피해 조사 6개월내 착수

【시민일보】 전남 강진군의 강진만 주변 어민들이 장흥다목적댐 건설 사업으로 인해 개펄이 적체돼 강진만 해역 803ha에 277억 규모의 어업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해 지난 1월 22일 국민권익위원회가 현장 조사에 나섰다.

당시 어업인 대표 구연금씨 등 1,322명이 피해보상 용역을 실시하라는 진정서를 제출함에 따라 관계기관들은 4차에 거쳐 실무협의회를 갖고 강진만 어업피해 조정·합의에 들어간바 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지난 20일 강진군을 방문, 김영란 위원장을 필두로 관계기관 실무자들과 함께 장흥댐 건설로 인해 강진만 어업피해를 입은 칠량면 봉황리 대섬 주변 해역 현장을 살피고 칠량면사무소 회의실에서 한국수자원공사, 목포항만청, 강진군이 조정·합의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에 나설 것을 당부 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조정·합의회에는 황주홍 강진군수를 비롯한 김 위원장,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 목포항만청 관계자, 어업피해 신청인 30여명 등 총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정·합의 내용에 서명하고 공동조사에 협조키로 했다.

조정·합의된 내용에는 실무협의회를 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구성하고, 실무협의회 구성일로부터 5개월 이내 피해조사용역을 실시, 용역결과에 따라 피해규모 인과관계에 따른 기관

별 비율을 산정하되 보상은 관계법령에 따라 시행기로 했다.

다만 해역복원사업 및 간척사업으로 받은 보상과 중복될 경우 보상에서 제외되며, 책임비율 산정 조사 시 자연환경 변화요인은 보상규모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실무협의회는 용역시행 및 용역결과를 신청인(피해 어업인)에게 별도 설명하고, 공동조사 협조는 물론 어떤 결과든 용역 결과에 따르기로 했다.

군은 이번 조정으로 향후 어업피해의 원인, 기관별 책임비율이 확정된다면 7년 이상 오랫동안 끌어왔던 민관갈등이 해소돼, 현재에서 민원을 해결하는 좋은 선례를 남기게 됐다. 또, 어민들의 생계터전 상실에 대한 적절한 보상대책이 마련됨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 위원장은“권익위원회가 피해 어민들의 생계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고 피해 원인조사 차원을 넘어 강진만 해역의 패류 서식환경 회복을 위해서도 관계기관과 어민들이 공동으로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용역비는 강진군과 목포항만청,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분담하며, 용역관리 및 제반사항 결정도 함께 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전남=정찬남 기자 jcrso@siminilbo.co.kr



강진군 어민 어업피해 보상길 열려

송도훈 방송일 2011-07-22

장흥댐 건설로 피해를 본 강진만 일대 어민들에게 보상의 길이 열렸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강진군 어민과

수자원공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현지에서 조정위원회를 열고

어업피해 조사를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과 피해규모 확정 등 합의안을 마련했습니다

강진군 칠랑면 등 6개 읍면 어민들은
장흥댐 건설로 어패류가 감소하면서
어업권 손실을 봤다며 7년째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일보

2011년 07월 22일 (금)
11면 호남/제주



지난 20일 국민권익위 김영란 위원장이 강진만 어업피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강진군청]

강진만 어업피해 보상 길 열려

권익위 현장방문, 관계기관 조정·합의 이끌어내

국민권익위원회 김영란 위원장이 전남 강진만 어업피해 현장을 직접 방문해 관계기관 조정·합의를 이끌어냈다. 강진군은 지난 20일 김 위원장이 장흥댐 건설로 인해 강진만 어업피해를 입은 칠랑면 봉황리 대섬 주변 해역 현장을 방문하고, 칠랑면 사무소 회의실에서 한국수자원공사, 목포항만청, 강진군이 조정·합의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에 나서 주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조정·합의회에는 황주홍 강진군수를 비롯한 김영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 목포항만청 관계자, 어업피해 신청인 30여명 등 총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정·합의 내용에 서명하고 공동조서에 협조하기로 했다.

강진만 주변 어민들은 장흥다목적댐 건설사업으로 인해 개펄이 적체돼 강진만 해역 803ha에 277여 규모의 어업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해

지난 1월 22일 국민권익위원회가 현장 조사에 나섰으며, 어업인 대표 구연금씨 등 1322명이 피해보상 용역을 실시하라는 진정서를 제출하고, 4차 실무협의회를 거쳐 강진만 어업피해 조정·합의에 들어갔다.

조정·합의된 내용을 살펴보면 실무협의회를 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구성하고, 실무협의회 구성일로부터 5개월 이내 피해조사용역을 실시, 용역결과에 따라 피해규모 인과관계에 따른 기관별 비율을 산정하고, 보상금에 따른 관계법령에 따라 시행하기로 했다. 다만 해역복원사업 및 간척사업으로 받은 보상과 중복될 경우 보상에서 제외되며, 책임비율 산정 조사시 자연환경 변화요인은 보상규모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실무협의회는 용역시행 및 용역결과를 신청인(피해 어업인)에게 별도 설명하고, 공동조사 협조는 물론 어떤 결과든 용역 결과에 따르기로 했다.

군은 이번 조정으로 향후 어업피해의 원인, 기관별 책임비율이 확정된다면 7년 이상 오랫동안 끌어왔던 민관갈등이 원만히 해소되므로, 현재에서 민원을 해결하는 좋은 선례를 남기게 됐다. 또, 어민들의 생계터전 상실에 대한 적절한 보상대책이 마련됨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영란 위원장은 “권익위원회가 피해 어민들의 생계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자”며 “피해 원인조사 차원을 넘어 강진만 해역의 패류 서식환경 회복을 위해서도 관계기관과 어민들이 공동으로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광남 강진군 해양수산팀장은 “그동안 장흥댐 건설사업으로 인한 어업인의 건의 사항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관계기관 조정·합의를 이끌어 내 어업인의 억울함을 해결해주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고 말했다.

■한홍수 기자
15.5 X 24.7 cm

강진만 어민 1,300여명 피해 보상길

국민권익위, 현장 조정회의 통해 합의안 도출

장흥댐 건설과 바다 준설 및 매립 등 각종 공익사업으로 강진만에서 패류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삶의 터전을 잃을 처지에 놓인 전남 강진군 어민 1천300여명이 어업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24일 강진군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최근 강진에서 열린 '강진만 어업피해 보상 민원 현장 조정'을 통해 어민 어업 피해를 조사하기 위해 3개 관계기관이 공동으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각 기관별 공익사업에 따른 생태 환경 변화요인과 피해 규모를 확정해 어민들에게 보상하도록 하는 내용의 합의안을 이끌어냈다.

이날 현장 조정을 통해 합의안이 도출됨으로써 한국수자원공사가 장흥댐에 담수를 시작한 2005년부터 강진만의 해양환경 변화로 인해 바지락, 꼬막 등의 패류 서식환경이 파괴돼 어획고가 감소됐으며 7년째 어업피해 조사와 보상을 요구해온 강진군 어민들의 집단 장기 민원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됐다.

강진군 29개 어촌계 소속 어민 1천321명은 장흥댐 건설로 패류가 감소해 강진만 해역 803ha에서 277억 규모의 어업 피해가 발생했다면서 지난 1월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강진만 해역 일원은 장흥댐 건설(한국수자원공사·1977~2006년)을 비롯해 해역 준설사업(목포해양항만청·2002~2008년), 사내·만덕지구 간척지 개발(강진군·1989~2002년) 등 비슷한 시기에 대규모 사업이 진행된 곳이다.

이번 조정으로 향후 어업 피해의 원인이 규명되고 기관별 책임 비율이 확정될 경우 7년 넘게 끌려온 강진만 어업피해 집단 민원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영란 위원장은 "피해 원인조사 차원을 넘어 강진만 해역의 패류 서식환경 회복을 위해서도 관계기관과 어민들이 공동으로 노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진이봉석 기자

lbs@namdodnews.com

10.3 X 13.8 cm

인천 환경가교 철거로 인한 교통정체 해소

민원번호 : 2AA-1107-014888(도시수자원민원과, 임병록 조사관)

(‘11. 7. 29.)

민원개요

경인 아라뱃길 건설현장 인근 환경가교가 철거되면 극심한 혼잡이 예상되는 인천시 서구 일대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식 교량인 백석교 등이 개통되는 9월 말까지 수도권 매립지 내부도로를 임시 개방하도록 긴급 조정을 통해 교통정체 해소

1 당사자

- 신 청 인 : 인천 계양구 효성2동 태산아파트 ○○동 ○○호 ○○○
- 피신청인 : 한국수자원공사사장
- 관계기관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관계기관1), 인천 서구청장(관계기관2), 인천서부경찰서장(관계기관3), 인천광역시시장(관계기관4)

2 민원내용

- 경인 아라뱃길(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 사업구역 내 환경가교가 철거되면서 인근 교통정체가 심각해 질 것을 우려하여 교통 대책 수립 요구

3 피신청인 등 의견

- 환경교 서측 가설교량 이용 및 기존도로 우회방안이 현실적인 대안이나,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수도권매립지 내부도로(이하 ‘이 민원 도로’라 한다)를 임시 개방할 경우 기존 도로와 연결하여 교통정체를 완화할 수 있다.

4 주요 쟁점사항

- 환경가교가 철거로 인한 주변 교통 대책
- 수도권매립지 내부도로 임시 개방 가능 여부

5 갈등 분석

가. 민원발생배경 및 주요사실관계

- 경인 아라뱃길 사업구역 내 환경가교가 철거되면서 인근 교통정체가 우려되어 교통대책을 수립하여 달라는 인터넷민원 접수(7.4)
- 피신청인의 제출자료 검토과정에서 개별민원 사항이 아닌 다수의 주민 피해가 예상되는 집단민원 성격임을 인지(7.15)
- * ‘작은 소리도 크게 듣는’ 자세로 주민 한 사람의 인터넷민원에도 문제의 심각성·파급효과를 고려하여 기관 간 조정을 통해 다수의 국민피해 최소화 필요

나. 해결 목표

- 인천 서구 일대의 주민 피해가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긴급 현장조정을 통하여 현안을 신속히 해결
 - 교통정체 해소를 위하여 정식 교량(백석교) 개통 전까지 약 2개월간 매립지 내부도로를 한시적으로 개방하는 등 임시대책 마련

6 갈등해결과정

가. 진행과정 개요

〈민원건의현황〉

- ▶ (한국수자원공사) 환경연구단지 4개 기관 및 노조에서 환경가교 철거에 따른 대체우회 도로 개설 요청(6.20~22)
- ▶ (인천서부경찰서) 일일 전화민원 약 13건, 인터넷민원 총 11건 접수
- ▶ (인천시 서구) 인터넷 민원 총 4건 접수

〈7.15 환경가교 차단 이후 교통정체 현황〉

- ▶ 구 간 : 백석초등학교 ~ 공촌사거리 구간(약 3km)
- ▶ 통행시간 : (당초) 20분 → (현재) 1시간 소요, 버스 운행 약 1시간 지체

〈언론보도〉

- ▶ 「환경가교 철거 “서구일대 교통지옥”」등 6개 지방지 및 YTN 방송(7.15~25)

- 2011. 7. 15. : 자료접수 후 즉시 피신청인 방문 및 의견청취
* 그간에 관계기관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검토해 왔으나 매립지공사의 반대로 합의점 도출에 난항
- 2011. 7. 15. : 환경가교 철거로 우려되었던 교통정체 발생
- 2011. 7. 21. : 신속한 해결을 위해 합의를 유도하였으나 조율 실패
* 매립지공사에서 안전문제, 결정권자 부재 등의 이유로 내부도로 임시개방 반대
- 2011. 7. 25. : 관계기관 긴급 조정을 위한 과장급 실무협의
* 조정(안)에 대해 매립지공사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조정회의에 참석하기로 협의
- 2011. 7. 27. : 조정 이행에 따른 비용부담 이견 조율

7 조정 (합의) 결과

가. 조정 · 합의 최종결과

- 긴급 조정회의를 열어, 정식 교량인 백석교 등이 개통되는 9월 말까지 수도권 매립지 내부도로를 임시 개방하고, 8월 초까지 매립지 외곽도로를 정비하기로 합의

나. 위원회 조정 · 합의문

- 이 민원 사업 인근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임시 대책으로 피신청인은 이 민원 도로와 일반 도로를 2011. 8. 4.까지 연결하고, 관계기관 1은 이 민원 도로를 일반 차량에게 2011. 9. 30.까지 임시 개방한다.
 - 피신청인 및 관계기관 1, 2, 3, 4는 이 민원 도로의 임시 개방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결정하고, 이에 따른 교통시설물은 피신청인 및 관계기관 2에서 비용을 부담하여 설치하며, 관계기관 3은 이 민원 도로의 교통통제 및 사고처리 등을 지원한다.
 - 관계기관 4는 수도권매립지 외곽도로를 2011. 8. 4.까지 정비하여 개방하고, 백석교를 2011. 9. 30.까지 개통하여 교통정체의 주요인을 해소한다.
- 단, 장기간 폭우 등 불가피한 경우 이행기한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8 수용-이행 여부 및 시사점

가. 신청인-피신청인 수용 및 이행여부

- '11. 8. : 매립지 내부도로와 일반도로 연결
- '11. 8. : 매립지 내부도로 임시개방
- '11. 8. : 매립지 내부도로 교통시설물 설치

나. 시사점

- 이번 사안은 인천시 서구 일대의 교통대란으로 주민들의 불편이 심각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긴급하게 조정을 진행한 것임
 - 인천시 등 관계기관도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서 위원회의 조정을 원하였으며, 매립지공사·수자원공사·서부경찰서 등이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조정이 성사된 것임
- 민원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 한 사람으로부터 국민신문고에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 달라’는 내용의 인터넷민원이 접수되었는데,
 -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단순한 민원일지도 모르지만 이 민원을 통해서 위원회에서는 인천시 서구 일대 교통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였고, 긴급 조정으로 다수의 국민(7만 여명) 들이 겪을 불편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거두었음
- * 조정이후 인천 서구 의회 의장이 주민 69,211명의 서명을 받아 집단민원 제기(9.1)한 것에 대하여 후속 합의해결 처리
- 국민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듣는 자세로 인근 주민이 신청한 인터넷민원에서 사회적 갈등을 조기에 감지하여 신속히 해결



수도권매립지 내부도로 임시개방..주변 혼잡 완화 권익위, 관계 기관 긴급 조정

【인천=연합뉴스】 신민재 기자 = 경인아라뱃길 건설 등의 여파로 심한 혼잡을 빚고 있는 인천시 서구 수도권매립지 일대 교통난이 완화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8일 오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한국수자원공사, 인천시, 경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영란 위원장 주재로 긴급 조정회의를 열고, 관계기관 조정안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냈다.

조정안에 따라 매립지공사는 경인아라뱃길 위로 놓이는 정식 교량인 백석교 등이 개통되는 오는 9월 말까지 매립지 내부도로를 임시 개방하기로 했다.

인천시도 8월 초까지 매립지 외곽도로를 정비해 함께 개방할 예정이다.

매립지 주변 서쪽로는 지난 15일 매립지 후문에 있는 환경가교가 철거되면서 1일 평균 7천여대의 차량이 우회해 통행이 이전보다 1시간 이상 지체되고 있다.

여기에 1일 2만1천여대가 이용 중인 백석교 임시교량도 철거를 앞두고 있어 교통난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권익위는 정부민원 온라인 접수창구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해당 민원이 제기되자 관계기관과 협조해 조정안을 마련했다.

smj@yna.co.kr

인천 서구 교통혼잡 해결 나선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

기사입력 2011-07-28 16:37



【인천=뉴스시스】 28일 오후 인천 서구 경인 아래벧길 건설현장 인근 환경가교가 철거되면서 극심한 교통혼잡을 빚고 있는 현장을 방문한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관계자로부터 현황을 듣고 있다.

인천 교통난 중재한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



【인천=뉴스시스】 28일 오후 인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대회의실에서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 이 9월 말까지 수도권 매립지 내부도로를 임시 개방하는 합의를 이끌어낸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제공) photo@newsis.com

朝鮮日報

2011년 07월 29일 (금)
14F면 지역

수도권매립지 내부도로 임시개방키로

서구 주변 교통혼잡 덜 듯

경인아라뱃길 건설 등의 여파로 심한 혼잡을 빚고 있는 인천시 서구 수도권매립지 일대 교통난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8일 오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Kwater(한국수자원공사), 인천시, 경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조정회의를 열고 관계기관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에 따라 매립지공사는 경인아라

뱃길 위로 놓이는 정식 교량인 백석교 등이 개통되는 9월 말까지 매립지 내부 도로를 임시 개방하기로 했다. 인천시도 8월 초까지 매립지 외곽 도로를 정비해 함께 개방할 예정이다.

매립지 주변 서쪽로는 지난 15일 매립지 후문에 있는 환경가교가 철거되면서 1일 평균 7000여대의 차량이 우회해 통행이 이전보다 1시간 이상 지체되고 있다. 여기에 1일 2만1000여대가 이용 중인 백석교 임시 교량

도 철거를 앞두고 있어 교통난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권익위는 정부 민원 온라인 접수 창구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해당 민원이 제기되자 관계기관과 협조해 조정안을 마련했다.

이두 기자

15.3 X 7.2 cm

인천 서구 일대 교통정체 해소 기대

권익위, 수도권 매립지 내부도로 임시개방 합의

경인 아라뱃길 건설현장 인근 환경가교가 철거되면서 극심한 혼잡을 빚고 있던 인천시 서구 일대의 교통정체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8일 김영란 위원장 주재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대회의실에서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광역시 서구, 인천서부경찰서,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관계자 등과 긴급 조정회의를 열어 서구 교통정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백석교 등이 개통되는 9월 말까지 수도권 매립지 내부도로를 임시 개방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인천시도 다음달 초까지 매립지 외곽도로를 정비, 개방하기로 했다.

현재 이 지역은 지난 15일 인천시 서구 수도권매립지 후문에 있는 환경가교가 철거되면서 하루 평균 7000여대의 차량이 우회, 서쪽으로 일대 통행시간이 평소보다 1시간 이상 지체되고 있다.

특히 하루 2만1000여 대의 차량이 통행하는 백석교 임시교량도 곧 철거될 예정이어서 이른바 ‘교통지옥’ 지역으로 불리고 있다.

한형용기자 je8day@

시민일보

[인천시] 서쪽으로 교통정체 해소 실마리

환경가교 철거... 서구일대 교통혼잡 수도권 매립지 내부도로 임시 개방

【시민일보】 경인 아라뱃길 건설현장 인근 환경가교가 철거되면서 극심한 혼잡을 빚고 있던 서구 일대의 교통문제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해결될 전망이다.

권익위는 28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회의실에서 한국수자원공사와 인천 서구, 인천 서부경

철서, 인천종합건설본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조정회의를 열어 정식 교량인 백석교 등이 개통되는 9월 말까지 수도권매립지 내부도로를 임시 개방하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경기신문

2011년 07월 28일 (금)
17면 지역

서곶길 상습정체 벗어난다

인천지하철 2호선 공사 구간으로 인천 최대 교통체증을 빚고 있는 인천시 서구 서곶길의 교통난이 해결 될 전망이다.

28일 시에 따르면 검단신도시로 이어지는 길은 평소에도 검단신도시 건설을 비롯한 각종 개발사업과 연동돼 하루 5만여대의 차량이 통행함으로써 심각한 교통난을 야기하던 곳이다.

게다가 이 지역은 지난 15일 인천시 서구 수도권매립지 후문에 위치한 환경가교가 철거되면서 하루 평균 차량 약 7천여대가 우회해 서곶로 일대의 통행시간이 평소보다 1시간 이상 지체되고 있다.

더욱이 하루 2만1천여 대의 차량이 통행하는 백석교 임시교량도 철거를 앞두고 있어 이 차량들마저 서곶로로 몰리면 그야말로 '교통지옥'이 예상되는 곳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인근 주민이 정부민원 온라인 접수창구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인터넷 민원을 통해 제기됨으로써 국민권익위원회와 관계기관은 긴급 조정회의를 열어, 오는 9월 말까지 수도권 매립지 내부 도로를 임시 개방에 합의했다.

이와 함께 인천시도 오는 8월 초까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28일 오후 경인 아래벚길 건설현장 인근 환경가교가 철거되면서 극심한 교통혼잡을 빚고 있는 인천시 서구 일대현장을 방문해 관계자로부터 현황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백석교 임시교량 철거 대비 대책 마련 내달 매립지 외곽도 개방 교통난 숨통

지 매립지 외곽도로를 정비해 같이 개방하기로 한에 따라 일대 극심하게 야기돼 오던 서곶길 교통체증이 한결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 김영란 위원장주재로 개최된 긴급조정회의는

28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대화의실에서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시 서구, 인천서부경찰서, 인천시 종합건설본부 관계자 등 관계기관이 참석했다.

/김상섭기자 kss@

15.3 X 16.6 cm

인천시 역시 8월 초까지 매립지 외곽도로를 정비해 같이 개방하기로 했다. 현재 이 지역은 지난 15일 수도권매립지 후문에 위치한 환경가교가 철거되면서 하루 평균 차량 7000여 대가 우회해 서곶로 일대의 통행시간이 평소보다 1시간 이상 지체되고 있다.

이와 함께 하루 2만1000여 대의 차량이 통행하는 백석교 임시교량도 철거를 앞두고 있어 이 차량들마저 서곶로로 몰리면 그야말로 '교통지옥'이 예상되는 곳이기도 하다.

조정회의를 주재한 김영란 권익위원장은 “인근 주민들이 정부민원 온라인 접수창구 국민신문고에 제기한 인터넷 민원을 통해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알게 됐다”며 “관계기관들이 적

극 협조해 신속하게 불편을 해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상태 기자 lst@siminilbo.co.kr

경인일보

2011년 07월 29일 (금)
23면 시·도

수도권매립지 내부도로 '9월까지 개방'

서곶로 교통체증 완화 예고

경인아라뱃길 임시교량 철거 여파로 심한 혼잡을 빚고 있는 인천시 서구 수도권매립지 일대 교통난(경인일보 7월 19일자 23면보도)이 완화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8일 오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한국수자원공사, 인천시, 경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영란 위원장 주재로 긴급조정회의를 열고 관계기관 조정

안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번 조정안에 따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경인아라뱃길 정식교량인 백석교 등이 개통하는 오는 9월 말까지 매립지 내부도로를 임시개방하기로 했다.

매립지 주변 서곶로는 지난 15일 매립지 후문에 있는 환경가교가 철거되면서 1일 평균 7천여대의 차량이 몰려 통행이 이전보다 1시간 이상 지체되고 있다. 여기에 1일 2만1천여

대가 이용중인 백석교 임시교량도 철거를 앞두고 있어 교통난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인천 서부경찰서와 서구는 지난 6월부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매립지 내부도로 개방을 요구해 왔다.

권익위는 정부민원 온라인 접수창구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해당 민원이 제기되자 관계기관과 협조해 조정안을 마련했다.

/국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4 X 5.4 cm

joongboo.com

권익위, 인천 서구 교통정체 긴급 조정

데스크승인 2011.07.29 안재취 | ajh-777@joongboo.com

경인 아라뱃길 건설현장 인근 환경가교가 철거되면서 극심한 혼잡을 빚고 있던 인천시 서구 일대의 교통문제가 국민권익위의 긴급 조정으로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권익위 김영란 위원장은 28일 오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시 서구, 인천서부경찰서, 인천시 종합건설본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조정회의를 열고 정식 교량인 백석교 등이 개통되는 9월 말까지 수도권 매립지 내부도로를 임시 개방하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인천광역시 역시 8월 초까지 매립지 외곽도로를 정비해 같이 개방하기로 했다.

현재 이 지역은 지난 15일 인천시 서구 수도권매립지 후문에 위치한 환경가교가 철거되면서 하루 평균 차량 약 7천여 대가 우회해 서곶로 일대의 통행시간이 평소보다 1시간 이상 지체되고 있다.

또한 하루 2만 1천여 대의 차량이 통행하는 백석교 임시교량도 철거를 앞두고 서곶로로 몰리

면서 교통지옥이 예상되고 있다.
안재취기자/ajh-777@joongboo.com



수도권매립지 내부도로 임시개방

■ 기사입력 2011-07-29 18:28

경인아라뱃길 건설 여파로 극심한 혼잡을 빚는 인천시 서구 검단 일대의 교통난이 다소 풀릴 전망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긴급 조정회의를 열고, 정식 교량이 개통하는 9월까지 수도권매립지 내부도로를 개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단 주변 도로는 지난 15일 매립지 후문에 있는 임시다리가 철거되면서 하루 평균 7천여 대의 차량이 우회해 출·퇴근길 차량정체로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윤지윤 / yjy@mbn.co.kr]

서구 교통혼잡 권익위 긴급조정'물꼬'

2011년 07월 29일 (금)



경인아라뱃길 임시교량이 철거되면서 극심한 혼잡을 빚고 있던 인천시 서구 일대의 교통문제가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김영란)의 긴급 조정으로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는 28일 오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대회의실에서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시 서구, 인천서부경찰서, 인천시 종합건설본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영란 위원장 주재로 긴급 조정회의를 열고 정식 교량인 백석교 등이 개통되는 9월말까지 수도권 매립지 내부도로를 임시 개방하는 합의를 이끌어 냈다.

/남창섭기자 csnam@itimes.co.kr

서구 매립지 개방 교통정체 ‘숨통’ 오는 9월 백석교 개통까지 내부도로 이용 가능 권익위 조정서 합의… 내달 초 외곽도로 정비도

2011년 07월 28일 (목) 18:33:42 한동식 기자 dshan@kihoilbo.co.kr

경인아라뱃길 개통을 앞두고 대체교량 없이 기존 교량을 철거하면서 교통지옥으로 변한 서구 일대의 교통정체가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서구 일대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8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긴급조정회의를 열고 수도권매립지 내부도로를 임시 개방해 교통혼잡을 해소하도록 조정했다.

이날 긴급조정회의에는 김영란 국민권익위 위원장 주재로 김종해 경인아라뱃길 사업본부장, 전상주 서구 부구청장, 남경순 서부서 경무과장, 유영성 종건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조정회의를 통해 참석자들은 정식교량인 백석교 등이 개통되는 오는 9월 말까지 수도권매립지 내부도로를 임시 개방하도록 했으며 인천시도 다음 달 초까지 매립지 외곽도로를 정비해 개방하는 데 합의했다.

현재 이 지역은 지난 15일 한국수자원공사가 수도권매립지 후문에 위치한 환경교(환경연구단지~수도권매립지~검단)를 철거하면서 하루 평균 7천여 대가 우회하면서 서곶로 일대 통행시간이 평소보다 1시간 이상 지체되고 있다.

더구나 서구 경서동과 검단을 연결하는 임시교량인 백석교도 하루 2만1천여 대의 차량이 통행하는데 다음 달 10일 철거로 인한 폐쇄가 예고돼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서구지역은 교통지옥으로 변할 가능성이 농후해진 상황이다.

우회도로 없이 백석교도 폐쇄되면 이곳을 이용하던 차량들이 모두 서곶로로 몰리기 때문이다.

이번 조정회의를 통해 우회도로인 수도권매립지 내부도로와 매립지 외곽도로가 개방되면 서

구지역 교통난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서구 관계자는 “그동안 주민들의 항의와 민원이 하루 평균 10여 건 이상 접수되는 등 심각한 상황이었다”며 “이번 조정으로 우회도로가 확보되면 그나마 이용객들의 불편은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한매일신문

인천 서구 일대 극심한 교통정체 해소 전망

28일 권익위 긴급 조정으로 매립지 내부도로 임시 개방

2011년 07월 28일 (목) 정순학 daehanmail@naver.com

정순학 기자 / 경인 아라뱃길 건설현장 인근 환경가교가 철거되면서 극심한 혼잡을 빚고 있던 인천시 서구 일대의 교통문제가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김영란)의 긴급 조정으로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는 28일 오후 3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대회의실에서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시 서구, 인천서부경찰서, 인천시 종합건설본부 관계자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조정회의를 열었다.

김영란 위원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 정식 교량인 백석교 등이 개통되는 9월 말까지 수도권 매립지 내부도로를 임시 개방하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인천시도 8월 초까지 매립지 외곽도로를 정비해 같이 개방하기로 했다.

현재 이 지역은 지난 15일 인천시 서구 수도권매립지 후문에 위치한 환경가교가 철거되면서 하루 평균 차량 약 7천여 대가 우회해 서쪽으로 일대의 통행시간이 평소보다 1시간 이상 지체되고 있다.

더구나 하루 2만 1천여 대의 차량이 통행하는 백석교 임시교량도 철거를 앞두고 있어 이 차량들마저 서쪽으로 몰리면 그야말로 '교통지옥'이 예상되는 곳이다.

조정회의를 주재한 권익위 김영란 위원장은 “인근 주민이 정부민원 온라인 접수창구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제기한 인터넷 민원을 통해서 이번 교통사태의 심각성을 알게

됐고, 여러 관계기관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신속하게 불편을 해소토록 조치하게 됐다.”고 밝혔다.

건설타임즈 www.constimes.co.kr .co.kr

인천 서구 일대 극심한 교통정체 해소 전망

2011년 07월 29일 (금) 김소영 기자 syong@constimes.co.kr

경인 아라뱃길 건설현장 인근 환경가교가 철거되면서 극심한 혼잡을 빚고 있던 인천시 서구 일대의 교통문제가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김영란)의 긴급 조정으로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는 28일 15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대회의실에서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광역시 서구, 인천서부경찰서,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관계자 등 다양한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김영란 위원장 주재로 긴급 조정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식 교량인 백석교 등이 개통되는 9월 말까지 수도권 매립지 내부도로를 임시 개방하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인천광역시 역시 8월 초까지 매립지 외곽도로를 정비해 같이 개방하기로 했다.

현재 이 지역은 지난 15일 인천시 서구 수도권매립지 후문에 위치한 환경가교가 철거되면서 하루 평균 차량 약 7000여 대가 우회해 서곶로 일대의 통행시간이 평소보다 1시간 이상 지체되고 있다.

더구나 하루 2만 1000여 대의 차량이 통행하는 백석교 임시교량도 철거를 앞두고 있어 이 차량들마저 서곶로로 몰리면 그야말로 '교통지옥'이 예상되는 곳이다.

조정회의를 주재한 권익위 김영란 위원장은 "인근 주민이 정부민원 온라인 접수창구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제기한 인터넷 민원을 통해서 이번 교통사태의 심각성을 알게 됐고, 여러 관계기관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신속하게 불편을 해소하도록 조치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경기 양주시 회천택지개발지구 잔여지 보상, 13년만에 해결

민원번호 : 2BA-1104-154647(도시수자원민원과, 최수관 조사관)

(‘11. 12. 15.)

민원개요

경기 양주 회천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되고 남은 토지는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으니 사업시행자가 매수하거나 도시계획시설결정 해제를 요구하는 민원에 대해, 회천택지개발지구 에 편입되고 남은 신청인들의 잔여지 보상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하도록 조정 중재하여 13년 묵은 민원 해결

1 당사자

- 신 청 인 : 경기 양주시 덕정동 ○○○외 8인
- 피신청인 :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피신청인1),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피신청인 2), 경기도 양주시장(피신청인3)

2 민원내용

- 경기 양주 회천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되고 남은 토지[경기 양주시 덕정동○ ○○(전) 외 7건]는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매수하거나 도시계획 시설결정 해제 요구

번호	소재지	소유자	지목	면적
잔여지 1	○○○번지	최○○	전	594㎡
잔여지 2	○○○-○번지	강○○	전	293㎡
잔여지 3	○○○번지	송○○·도○○	전	438㎡
잔여지 4	○○○-○번지	한○○	잡	452㎡
잔여지 5	○○○번지	안○○	답	373㎡
잔여지 6	○○○번지	임○○	답	2,835㎡
잔여지 7	○○○번지	이○○	답	2,494㎡
잔여지 8	○○○번지	원○○	전	392㎡

3 피신청인 등 의견

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 신청인들의 토지는 잔여면적이 크고 토지의 형상·이용상황 등을 고려할 때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이 민원 잔여지들을 매수하기는 어렵다.

나. 한국철도시설공단

- 이 민원 잔여지 5, 6, 7, 8은 철도시설 설치를 위해 직접적으로 필요한 부지가 아니며, 2006. 9. 12. 경원선(의정부~동안) 복선전철 건설사업 실시계획승인시 철도사업부지에서 제외되었으며, 법적근거가 없어 매수가 어렵고, 향후 철도용지로서의 존치 필요성이 없으므로 철도시설에서 해제할 수 있다.

다. 경기도 양주시장

- 2008. 10. 국토해양부장관의 이 민원사업 지구지정 변경 및 개발계획 변경승인 협의시 “경원선과 이 민원 사업 지구 사이 잔여지를 지구내 편입하여 완충녹지 조성”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으며, 이 민원 잔여지들은 이 민원 사업 지구와 연결된 완충녹지로 택지개발지구에 포함되어야 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우선 잔여지들을 매수할 필요가 있다

4 주요 쟁점사항

- 택지개발사업 잔여지 보상
- 철도시설 용지 해제

5 갈등 분석

가. 민원발생배경 및 주요사실관계

- 이 민원 토지는 '99. 3. 최초 경기도 고시에 의해 철도소음 저감을 위해 완충녹지로 결정된 후 '06. 5. LH공사가 회천택지지구 지정
- * 건교부 고시 제2006-379호로 경원선(의정부~동안) 복선전철건설사업 실시계획승인 시 철도완충녹지로 변경 결정(철도변 모두결정)

- LH가 완충녹지를 경계로 택지개발사업지구 경계선을 확정지으면서 잔여지 발생
* LH의 사업구조조정 대상으로 택지개발사업은 중단된 상태(보상율 99.7%)
- 신청인들은 장기간 완충녹지로 결정하고 LH가 회천택지지구를 지정하면서 잔여지를 발생시킴에 따라 보상 또는 완충녹지 해제를 요구

나. 해결 목표

- 경원선 철도부지와 택지지구 사이의 자투리 토지의 잔여지 보상 과 완충녹지 해제를 요구하는 집단민원이 제기되어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일부 보상, 일부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하는 방안 강구

6 갈등해결과정

- '11. 4. : 현장 방문 및 관계기관 의견청취를 통한 해결방안 논의
(신청인,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국토해양부)
- '11. 6. : 출석조사 4차 실시
- '11. 12. : 현장방문 및 보상방안 협의
- '11. 12. : 잔여지 규모가 작은 5개 필지에 대한 보상(LH) 및 불필요한 도시계획시설(철도) 해제를 위한 조정서(안) 작성

7 조정 (합의) 결과

가. 조정 · 합의 최종결과

- 한국철도시설공단은 화물적하장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4필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철도)을 해제하도록 입안·제안하고, 양주시장은 이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추진,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회천택지개발지구에 편입되고 남은 신청인들의 잔여지 4필지를 조기에 보상

나. 위원회 조정 · 합의문

- 피신청인 1은 이 민원 사업 구역에 편입되고 남은 이 민원 잔여지 1, 2, 3, 5를 매수하고 이 민원 잔여지 4는 이 민원 사업이 구체적으로 시행되는 시기에 진출입로를 개설하거나 매수하며, 이 민원 잔여지 6, 7, 8에 대해서는 이 민원 사업을 시행할 때에 이 민원 사업 계획이 변경될 경우 이 민원 사업 지구로의

- 추가편입 여부를 검토하되 편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출입로를 개설하기로 한다.
- 피신청인 2는 이 민원 잔여지 5, 6, 7, 8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철도)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피신청인 3에게 입안·제안한다.
 - 피신청인 3은 피신청인 2가 입안·제안한 이 민원 잔여지 5, 6, 7, 8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철도)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를 추진한다.

수용-이행 여부 및 시사점

가. 신청인-피신청인 수용 및 이행여부

- '12. 6. : 잔여지 매수 또는 진출입로 개설 추진
- '12. 12. : 도시계획시설 해제 절차 이행

나. 시사점

- 공익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장기적인 도시계획과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주민들의 사유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보상 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
- 사유 재산권을 고려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자제와 불필요하게 결정된 장기미집행시설 해제를 통해 토지의 효율적 이용 도모

LH직할사업단 방문한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

기사입력 2011-12-15 19:12



【양주=뉴시스】 박종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 김영란 위원장(왼쪽 세번째)이 15일 경기도 양주 울정동에 위치한 LH직할사업단 회의실에서 회천택지개발지구 잔여지 보상 요청 민원을 중재한 후 관계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제공)

권익위, 13년 묵은 민원 현장해결

철도시설공·LH 책임공방에 미뤄졌던

양주 덕정역 인근 주민 토지보상 문제

양주시 덕정역 인근 주민들의 토지보상 요청 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현장조정으로 해결됐다.

권익위는 15일 오후 양주시 소재 LH공사 양주직할사업단 회의실에서 지역주민들과 현상식 양주시장,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현장 조정

회의를 열어 철도 화물하역장으로 사용하지 않는 사유지 4필지에 대해 도시계획시설(철도 부지) 지정을 해제하고, 회천택지개발지구 편입된 남은 4필지는 조기 보상토록 하는 합의안을 이끌어냈다.

민원이 발생한 잔여지는 경원선 복선전철사업과 회천택지개발지구 사이에 남은 사유지로 지

난 1999년 3월 완충녹지로 결정되고 이중 4개 필지는 화물 하역장 용도로도 지정됐다.

하지만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수 책임을 서로 미루는 바람에 13년간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

권익위의 이번 조정으로 하역장 용도로 지정됐던 4필지는 용도해제되면서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고, 13여년간 잔여지 미보상에 따른 재산권 제한을 받아온 나머지 토지주들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임춘원기자 lcw@

15.3 X 10.1 cm

아주경제

한·중·영·일 4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메디컬투데이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건강신문

덕정역 주변 완충녹지 잔여지 13년만에 보상기로

권익위, 양주시·LH·철도시설공단간 현장조정회의 개최

기사입력 2011-12-15 15:53 | 기사수정 2011-12-15 15:53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전철사업과 택지개발지구사이에서 잔여지 형태로 남아 13년동안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던 경기도 양주시 덕정역 인근 주민들의 토지(총 8필지, 7871㎡) 보상 요청 민원이 15일 해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김영란 위원장 주재로 양주시 소재 LH공사 양주직할사업단 회의실에서 현장 조정회의를 열어 철도 화물하역장으로 사용하지 않는 사유지 4필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철도 부지) 지정을 해제해주며 회천택지개발지구 편입되고 남은 4필지는 조기 보상토록 하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민원이 발생한 잔여지는 경원선 복선전철사업과 회천택지개발 사업지구 사이에 남은 사유지로, 1999년 3월 완충녹지로 결정되고 이중 4개 필지는 화물 하역장 용도로도 지정되었지만 이후 관련기관인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수책임을 미루는 바람에 13년간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번 조정으로 인해 하역장 용도로 지정됐던 4필지는 용도 해제되면서 자유롭게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고 약 13년간 잔여지 미보상에 따른 재산권 제한을 받아온 나머지 토지주들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김 위원장은 “국가가 시행하는 공공사업으로 인해 본의 아니게 장기간 고통을 받아온 주민들의 고충이 해결되어 다행”이라며 “앞으로 공익사업을 시행하더라도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보상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지역민들과 양주시장,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경기매일

권익위, 양주 덕정역 택지사이 잔여토지 '중재해결'

LH공사, 양주시장 등 관계자들 현장 조정회의서 합의

2011년 12월 16일 (금) 최화창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15일 전철 교각과 택지개발지구사이 잔여지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던 경기 양주시 덕정역 토지(8필지, 7871㎡)의 소유주들이 낸 민원을 현장조정으로 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권익위는 이날 오후 3시30분 김영란 위원장 주재로 양주시 소재 LH공사 양주직할사업단 회의실에서 지역민들과 양주시장,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현장 조정회의를 열었다.

이날 권익위는 중재를 통해 철도 화물하역장으로 사용하지 않는 사유지 4필지는 도시계획시설(철도 부지)로 지정을 해제하고, 회천택지개발지구에 편입돼 남은 4필지는 조기 보상하도록 합의안을 이끌어냈다.

민원이 발생한 토지는 경원선 복선전철사업과 회천택지지구 사이에 남은 사유지로, 1999년 3월 완충녹지로 결정된 뒤 이중 4개 필지는 화물 하역장 용도로 지정됐지만 이후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수책임을 서로 미뤄 13년간 보상이 지연돼왔다.

권익위의 이번 조정으로 하역장 용도의 4필지는 용도 해제돼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고, 13년간 보상지연으로 재산권 제한을 받아온 잔여 토지는 보상이 가능해졌다.

김영란 위원장은 "국가가 시행하는 공공사업으로 인해 장기간 고통을 받아온 주민들의 고충이 해결돼 다행"이라며 "앞으로 공익사업을 시행할 때 관계기관간 긴밀하게 협력해 보상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양주 덕정역 완충녹지 잔여지 13년만에 보상 중재

국민권익위 현장 조정

국민권익위는 15일 오후 김영란 위원장 주재로 양주시 소재 LH공사 양주직할사업단 회의실에서 김영란 위원장주재로 지역민들과 현 삼식 양주시장,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현장 조정회의를 개최, 전철사업과 택지개발지구사이에서 잔여지 형태로 남아 13년동안 방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던 양주시 덕정역 인근 주민들의

토지(총 8필지, 7,871㎡) 보상 요청 민원을 현장조정으로 해결했다.

국민권익위는 현장조정을통해 철도 화물하역장으로 사용하지 않는 사유지 4 필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철도 부지)지정을 해제해주고, 회천택지개발지구에 편입되고 남은 4필지는 조기 보상토록 하는 합의안을 이끌어냈다. 민원이 발생한 잔여지는 경원선 복선전철사업과 회천택지개발 사업지구 사이에 남은 사유지로, 1999년 3월 완충녹지로 결정되고 이중 4개 필

지는 화물 하역장 용도로도 지정된 이후 관련기관인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수책임을 서로 미루는 바람에 13년간 보상이 이뤄지지않고 방치 돼 왔었다. 권익위의 이번 조정으로 △하역장 용도로 지정됐던 4필지는 용도해제되면서 자유롭게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고 △약 13년간 잔여지 미보상에 따른 재산권 제한을 받아온 나머지 토지주들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양주/김한구 기자 hskim36@naver.com

15.6 X 10.8 cm

제 5 장

교통·도로민원

조정사례



- ☐ 청원군 내수면 묵방리 등 12개 마을 교통불편 해결
- ☐ 충남 아산시 8개 마을 주민 교통불편, 27년 만에 해결
- ☐ 남원 88고속도로 확장공사로 인한 환경피해 해결
- ☐ 전남 화순군 대리지구 교차로 개선공사로 주민 불편 해결
- ☐ 충북 옥천군 이백삼거리 고속도로 통로박스 (굴다리) 확장 합의

청원군 내수면 묵방리 등 12개 마을 교통불편 해결

민원번호 : 2BA-1007-093763, 2BA-1008-006876(교통도로민원과, 유택중 조사관)

(‘11. 2. 16.)

민원개요

청주내덕~청원북일간 자동차전용도로로 인해 충북 청원군 내수읍 묵방1리 등 3개 마을과 충북 청원군 북이면 장재1구 등 9개 마을 농지 상당부분이 편입되고 소음, 매연, 먼지 등으로 주거환경이 악화됨에도 불구하고, 이 민원 도로에서 이 민원 마을 1과 2로 진출입할 수 있는 진출입로가 없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진출입로를 만들도록 중재하여 주민 불편 해소

1 당사자

- 신청인 1 : 충북 청원군 내수읍 묵방1리 등 3개 마을 ○○○외 297명
- 신청인 2 : 충북 청원군 북이면 장재1구 등 9개 마을 ○○○외 264명
- 피신청인 :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 관계기관 : 충청북도 청원군수

2 민원내용

-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청주내덕~청원북일간 자동차전용도로(이하 ‘이 민원 도로’라 한다)가 충북 청원군 내수읍 묵방1리 등 3개 마을(이하 ‘이 민원 마을 1’이라 한다)과 충북 청원군 북이면 장재1구 등 9개 마을(이하 ‘이 민원 마을 2’라 한다)를 가로질러 건설되고 있으나,
 - 정작 이 민원 마을 1과 2에서 거주하는 신청인들은 이 민원 도로를 바로 이용할 수 없고, 이용하기 위해서는 3~6km를 우회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으므로, 이 민원 도로를 이용하여 청주시로의 접근이 편리하도록 진출입로 2개를 설치 요구

3 피신청인 등 의견

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 주민들의 요구는 추가 예산 소요, 도로부지 편입 확대에 의한 다른 민원 발생 가능성 등으로 받아들이기 곤란

나. 청원군수

- 이 민원 마을 1은 청주시와 같은 생활권으로 진출입을 위한 진출입로가 필요하고, 이 민원 마을 2는 인근에 진출입로가 없고 원거리에 있는 신기교차로는 이용이 불편하므로 진출입로 신설을 요구하는 신청인 요구는 타당함

4 주요 쟁점사항

- 마을 주민들의 자동차 전용도로 이용 가능 여부
- 하천부지 편입 농지 보상

5 갈등 분석

가. 민원발생배경 및 주요사실관계

- 충북 청원군 묵방1리 등 3개 마을 서측에는 북일~남일 간 자동차전용도로가, 남측에는 청주내덕~청원북일 간 자동차전용도로가 건설 중임.
 - 두개 자동차전용도로 교차지점에 묵방교차로를 신설하여 신청인들 경작농지 상당 부분이 공사구간에 편입되고,
 - 두개의 자동차전용도로가 개통되면 소음, 분진 등으로 묵방1리 등 3개 마을은 주거환경이 열악해질 것으로 예상되나,
 - 3개 마을 주민들은 위와 같은 피해에도 불구하고 청주내덕~청원북일간 도로를 직접 이용할 수 없고, 이용하기 위해서는 3km 이상을 우회해야 하는 불편이 있게 되자 묵방교차로 내에 청주 방향 진출입로 설치를 요구하는 고충민원 제기('10. 8. 3.)
 - ※ 자동차 전용도로 밑 마을주민이 이용할 수 없는 이상한 도로('10.10.11. KTV 보도)

- 장재1구 등 9개 마을 주민들은 청주내덕~청원북일간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마을로 진출입할 수 있는 도로가 없고, 5~6Km 떨어진 신기교차로를 통해서만 자동차전용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되자,
 - 리도 211호선과의 교차 지점(STA.10+200)에 청주방향 진출입로를 설치해 달라는 고충민원 제기('10. 7. 29.)

나. 해결 목표

- 신설도로에 대한 주민들의 접근성과 청주시로의 이동 편의성을 확보하고,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해결 방안 마련
 - 당사자 간의 대화와 양보를 통해 집단민원을 합리적으로 해결

6 갈등해결과정

가. 진행과정 개요

□ 묵방1리 등 3개 마을 청주·증평방향 진출입로 설치 방안 마련

- '10. 4. 14. 및 '10. 5. 27. : 1, 2차 현장조사 실시
 - 진출입로 설치 위치에 대하여 신청인 대표와 협의
 - ※ 묵방교차로 안에 진출입로를 설치하는 것은 사고위험이 매우 높아 곤란, 묵방교차로에서 1.7km 떨어진(STA.3+140) 지점에 진출입로 설치 방안 협의
 - 신설 진출입로로의 원활한 통행을 위한 리도 210호선 확장방안에 대하여 청원군과 협의
 - ※ 리도 212호선에서 진출입로 설치지점까지의 800m구간을 농어촌도로 시 설기준에 맞게 확장하는 방안 협의
- '10. 9. 17. : 3차 현장조사 및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방문 협의
 - 청주·증평 방향 진출입로 설치 필요성 등(보상비와 공사비 약 40억 소요)
 - ※ 묵방1리 등 3개 마을의 지리적 특성 및 청주시와의 거리를 고려한 양방향 진출입로 설치 방안 협의

□ 장재1구 등 9개 마을 청주방향 진출입로 설치 방안 마련

- '10. 9. 29. : 현장조사

- 청주방향으로 진출입할 수 있는 진출입로 설치 방안 협의 (보상비와 공사비 약 15억 소요)
- ※ 당초 청주와 증평 방향으로 진출입할 수 있는 진출입로 설치 요구, 리도 211호선이 증평까지 연결되어 있는 점을 감안 청주방향 진출입로만 설치기로 협의

□ 하천부지 영농손실방안 협의

- 국동리 마을(묵방1리 등 3개 마을 중 하나) 진입로 확장 및 마을 진입로 확장에 따른 영농손실 등 협의
-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 국동리 마을 진입로 약 104m 확장(4m→8m)
- 청원군수 : 하천부지 점용 허가취소 및 하천부지 경작자에 대한 영농손실보상 실시
- ※ 국동리 마을 주민들이 점용허가 받아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소하천부지 약 700m²가 마을 진입로 확장공사에 편입

7 조정 (합의) 결과

가. 조정 · 합의 최종결과

- 지난 10개월 동안 4회의 현장조사와 8차례의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함께 노력한 결과 청주내덕~청원북일간 자동차전용도로와 리도 210호선, 리도 211호선과의 교차지점에 각각 진출입로를 설치하고, 국동리 마을의 진입로중 폭이 4m인 구간 104m는 폭을 두 배로 넓히고, 리도 212호선에서 네 갈래 진출입로가 생기는 구간은 농어촌도로 시설기준에 맞게 확장하고, 하천부지 경작자들에게는 영농손실보상

나. 위원회 조정 · 합의문

- 피신청인은 2014. 12.말까지 이 민원 도로와 리도 210호선이 교차하는 지점(STA.3+140)에 청주·증평방향 진출입로를, 이 민원 도로와 리도 211호선이 교차하는 지점(STA.10+200)에 청주방향 진출입로를 각 설치하고, 국동리 마을 진입로인 리도 212호선 중 폭이 4m인 104m 구간을 폭 8m로 확장한다.

- 관계기관은 2016. 12.말까지 리도 212호선에서 청주·증평방향 진출입로가 설치되는 지점까지의 리도 210호선(길이 800m)을 농어촌도로 시설기준에 맞게 확장하고, 국동리 마을 진입로에 대하여는 2011. 12.말까지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취소하며, 하천부지 경작자들에 대하여 영농손실보상을 한다.
- 신청인 1과 2는 위 진출입로 공사구간에 편입된 토지와 지장물에 대한 피신청인의 보상협약에 적극 협조하고, 보상협약 지연으로 인한 공사 지연 및 공사 중 부득이 하게 발생하는 통행불편에 대하여는 피신청인과 관계기관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8 수용-이행 여부 및 시사점

가. 신청인-피신청인 수용 및 이행여부

- '11. 12. : 하천부지 경작자 영농보상
- '14. 12. : 청주·증평방향 및 청주방향 진출입로 설치 예정(기본설계 완료)
- '16. 12. : 리도 210호선(길이 800m) 농어촌도로 시설기준에 맞게 확장 예정

나. 시사점

- 자동차 전용도로가 묵방1리와 장재1구 마을에 인접하여 건설됨에도 정작 마을 주민들은 이 도로를 직접 이용할 수 없도록 설계된 점이 아쉬웠으나, 권익위 조정을 통해 주민들이 원하는 위치에 진출입로가 신설되게 됨으로써 마을 주민들이 도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인접한 청주시로의 접근이 보다 편리하게 되는 대안을 끌어냄으로써 이해당사자 모두 win-win 하는 결과 도출
- 특히, 도로 등 사회간접시설은 한번 건설하고 나면 고치기가 매우 어려운데, 초기단계에서 해결방안을 마련한 데에 의미가 크다고 봄.

한국일보

2011년 02월 17일 (목)
148면 지역

청원 자동차전용도로 진출입로 설치

국민권익위 중재 내수·북이 주민 숙원 타결

마을을 관통하는 자동차전용도로에 진출입로를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 중재로 해결됐다.

16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이종윤 청원군수와 유인상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청원군 내수읍·북이면 지역 주민 대표는 이날 내수읍사무소에서 김영란 위원장 중재로 청주시 내덕동~청원군 북이면 도로(13.4km)에 진출입로 2곳을 만들기로 합의했다.

2012년 말 준공 목표로 공사가 한창인 이 도로는 자동차전용도로로 설계돼 진출입로가 없었다. 그러나 청원군 내수읍 북방리와 북이면 장재리 등

12개 마을 주민들은 “도로가 마을을 가로질러 건설되고 있는데 정작 주민들은 3~6km를 우회해야 도로를 이용할 수 있다”며 진출입로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을 지난해 초부터 수 차례 제기했다. 주민 최형균(74)씨는 “출입로가 생기면 청주를 오가는 길이 한결 쉬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번 조정은 지난 10개월 동안 관계 기관들이 8차례나 협의한 결과”라며 “마을 주민들에게 다소나마 위안이 된 것 같아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덕동기자ddhan@hk.co.kr
10.2 X 9.0 cm

NEWSIS

민원인들과 인사 나누는 권익위원장



【청원=뉴스시스】 전진환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 김영란 위원장(오른쪽)이 16일 오전 충북 청원군 내수읍사무소에서 2013년 말 완공 예정인 청주 내덕~청원 북일간 자동차전용도로에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진출입로를 만드는 현장조정회의에 참석해 민원인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국민권익위 제공)

권익위 "청주·청원 전용도로에 진출입로 설치"

김영란 권익위원장, 청원군서 합의서 체결



【청주=연합뉴스】황정현 기자 =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은 16일 오전 충북 청원군을 방문해 청주-청원 자동차전용도로에 진출입로를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한 합의서에 서명하고 있다.

2013년 말 완공을 목표로 건설 중인 청주 내덕-청원 북일간 자동차전용도로에 2개의 진출입로가 만들어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오전 충북 청원군 내수읍·북이면 12개 마을 주민들과 이종윤 청원군수, 유인상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주-청원 자동차전용도로에 마을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진출입로를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한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청원군 내수읍 묵방1리 등 3개 마을과 북이면 장재1구 등 9개 마을 주민들은 자동차전용도로가 마을을 가로질러 건설되고 있으나 정작 자신들은 3-6km를 우회해야 도로를 이용할 수 있다면서 네번에 걸쳐 진출입로를 만들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이 합의안에 따라 해당 도로에는 교차로가 조성될 예정이며, 마을 주민들은 이 교차로를 이용해 청주시와 마을을 원활하게 오고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번 조정은 권익위가 주민·관련기관과 10개월 동안 협의한 결과로, 다소나마 마을 주민들에게 위안이 된 것 같아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sweet@yna.co.kr

AsiaToday.co.kr

권익위, 청원 마을 진출입로 민원, 현장조정 '해결'

[© '글로벌 석간 종합일간지' 아시아투데이]



국민권익위원회 김영란 위원장(가운데)이 16일 오전 충북 청원군 내수읍사무소에서 열린 현장조정회의에서 2013년 말 완공 예정인 청주 내덕~청원 북일간 자동차전용도로에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진출입로를 만들기로 합의하고 주민대표, 이종윤 청원군수(오른쪽), 유인상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왼쪽)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아시아투데이=이상선 기자】 자동차 전용도로가 마을을 관통 하는데도 해당 마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없었던 도로가 고충이 해소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충북 청원군 내수읍, 북이면 일대 12개 마을 560여명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현지중재로 해결됐다.

이에 따라 대전국토관리청은 2013년 완공을 목표로 내수읍, 북이면 12개 마을을 관통하는 청주 내덕~청원 북일 간 자동차전용도로(13.4km)를 건설한다.

그동안 마을 주민들은 해당도로를 이용하려면 3km 이상을 우회하거나, 5~6km 떨어진 다른 교차로를 사용하도록 도로가 설계돼 지난해 2월부터 네 차례에 걸쳐 민원을 제기해 왔다.

대한매일신문

청주시 가는 길 열렸다

권익위, 청원군 12개 마을 진출입로 설치 확정

2011년 02월 17일 (목) 대한매일신문 daehanmail@naver.com



유광선 기자 / 마을을 관통하는 자동차전용도로가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마을주민들은 해당 도로를 이용할 수 없었던 충북 청원군 내수읍과 북이면 일대 12개 마을 560여 명 주민의 불편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 ACRC)의 현지중재로 교차로 진출입로를 만들기로 하면서 해결됐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청장 유인상)이 2013년 말 완공을 목표로 건설하고 있는 청주 내덕~청원 북일간 자동차전용도로(총 길이 13.4km)가 청원군 내수읍 묵방 1리 등 3개 마을과 북이면 장재1구 등 9개 마을의 농지 상당부분을 편입하면서 마을을 관통하게 되면서 주민들은 소음과 매연, 먼지 등의 생활불편을 감수하게 됐다.

특히 해당구간중 북일~남일간 도로(총 길이 1.2km)와 이 도로가 만나는 묵방교차로가 있는

국동리 마을의 경우 농지의 80%가 도로에 편입되면서 농지 손실도 상당하다.

하지만, 정작 마을주민들이 청주와 연결될 예정인 해당도로를 이용하려면 3km 이상을 우회하거나 5~6km 떨어진 다른 교차로를 사용하도록 설계되면서 민원이 발생해 국민권익위에는 지난 해 2월과 4월, 7월, 8월 등 네 차례에 걸이에 국민권익위는 16일 오전 11시 40분 충북 청원군 내수읍사무소에서 지역주민들과 이종윤 청원군수, 유인상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등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김영란 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해당도로와 리도 210호선, 리도 211호선과의 교차지점에 각각 진출입로를 설치하고 ▲국동리 마을의 진입로중 폭이 4m인 구간 104m는 폭을 두 배로 넓히고 ▲리도 212호선에서 네 갈래 진출입로가 생기는 구간은 농어촌도로 시설기준에 맞게 확장하고 ▲하천부지 경작자들에게는 영농손실보상을 하는 합의안을 마련해 양측간 중재에 성공했다.

이번 조정회의를 주재한 국민권익위원회 김영란 위원장은 “이번 조정은 권익위가 주민과 관련기관들과 지난해 4월부터 10개월 동안 4회의 현장조사와 8차례의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노력하고 협력한 결과로, 농지가 도로공사에 편입되고, 소음과 분진 등으로 생활환경이 나빠지게 된 마을주민들을 위해 이번 조정이 다소나마 위안이 된 것 같아서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안에 따라 2015년말까지 해당 도로에 교차로가 완공되면 묵방1구 등 3개마을과 장채리 등 9개 마을주민들은 청주시와 원활하게 오고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영란 권익위 위원장은 이날 복이면 장채리 공사 현장을 방문, 현지 상황을 파악한 뒤 내수읍사무소에서 현장조정회의를 갖고 마을 진출입로 조성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냈다.

권익위와 지역 주민, 이종윤 군수, 유인상 대전국토관리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현장조정회의에서 ▲해당도로 교차지점에 각각 진출입로 설치 ▲국동리 마을진입로 104m 확장 ▲212호선 진출입로 농어촌도로 시설기준으로 조성 ▲하천부지 경작자 영농손실보상 등이 원만하게 합의돼 2015년까지 해당도로에 교차로가 조성돼 인근 주민들이 제기했던 민원이 해결됐다.

금암리 최형균(74)씨는 “그동안 참담한 심정이었지만 일이 잘 해결돼 매우 만족한다”며 “이번 조정으로 마을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뻐했다.

김 위원장도 “이번 조정은 지난해 4월부터 10개월 동안 네차례의 현장조사와 여덟차례의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생활환경이 나빠지게 된 마을 주민들에게 다소나마 위안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상선 기자 lss810@asiatoday.co.kr〉

충남 아산시 8개 마을 주민 교통불편, 27년만에 해결

민원번호 : 2CA-1103-031737(교통도로민원과, 신중권 조사관)

(‘11. 4. 22.)

민원개요

아산~천안 21번 국도 확장(4차선 → 8차선)공사를 시행하면서 충남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구간은 4차선 도로에 설치된 지하 통로암거와 횡단보도를 철거하고, 차량통행로와 횡단보도를 설치해 주지 않아 주변 8개 마을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당초와 같이 차량과 사람이 통행할 수 있도록 교차로(횡단보도 포함) 및 지하차도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에 대해 마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육교를 휴대삼거리 주변에 설치하고, 휴대리 마을도로에서 장재2지하차도까지 대형 차량 통행이 가능한 아산방면 진출도로를 개설하며, 육교에 조형물을 설치하기로 하면서 교통소통과 주민 통행불편 모두 해소하는 조정 해결

1 당사자

- 신청인 : 충남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이장 ○○○
※ 배방읍 8개 이장단 대표, 수혜인원 약 3,000명
- 피신청인 :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 관계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충청남도 아산시장, 천안서북경찰서장

2 민원내용

- 피신청인이 아산~천안 21번 국도 확장(4차선→8차선)공사(이하 ‘이 민원 공사’라 한다)를 시행하면서 기존 4차선 도로에 설치된 횡단보도와 지하 통로암거를 철거
- 도로횡단 보행로 및 차량통로가 설치되지 않아 배방읍 소재 8개 마을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당초와 같이 사람과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교차로 및 지하차도를 설치요구

3 피신청인 등 의견

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 신청인이 요구하는 교차로 설치 요구지역은 일일 교통량이 ‘09년말 기준 70,899

여대에 이르는 교통량 과밀지역으로서 양쪽 지하차도간의 이격거리가 짧아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따른 평면교차로 설치 규정에 어긋나고, 보행자의 안전한 통로 확보 및 신호교차로(횡단보도) 설치에 따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보도 육교를 설치하는 것이 현지여건에 가장 합당한 방안이므로 신청인의 요구는 받아들이기 곤란

나. 관계기관

- 관계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육교를 설치할 경우 아산신도시조성 1단계 구간의 완충녹지대 및 2단계사업지구의 부지가 편입되므로 피신청인의 설계가 완료되면 녹지조성규정에 위배되지 않을 경우 부지를 아산시와 협의하여 제공할 것이다.
- 관계기관 아산시장은 육교 설치시 아산신도시조성 구간의 완충녹지대 일부가 편입된다고 해도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며, 민원해소 차원에서 부지 제공에 적극 협조하겠다.
- 관계기관 천안서북경찰서장은 육교설치 시 육교주변 보행자의 안전사고 발생 방지를 위한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주요 쟁점사항

- 차량 원활한 소통 및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
- 지하차도 및 육교 설치

5 갈등 분석

가. 민원발생배경 및 주요사실관계

- 장재9리 등 8개마을 주민이 이용하는 휴대삼거리는 2011. 12. 조기 개통을 목표로 아산~천안 21번 국도 확장(4차선→8차선) 공사가 진행 중

사업개요

- ▶ 사업명 : 아산~천안 도로건설공사
- ▶ 위치 : 아산시 배방읍 구령리 ~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 ▶ 사업규모 : 연장 7km, 왕복 4차로 → 8차로
- ▶ 사업고시 : 2006.11.30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6-151호)
- ▶ 공사기간 : 전체 2007. 2. 15 ~ 2012. 6. 27 (1,960일)
금회 2011. 1. 1 ~ 2011. 12. 31
- ▶ 시행처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감리 : ㈜홍익기술단 / 시공 : 벽산건설㈜)
- ▶ 사업비 : 197,333 백만원 (공정율 68.0%)

- 기존 국도 21호선(4차로) 휴대삼거리에 설치된 교차로와 인근 지하 통로암거(26m)를 통하여 주민 및 차량 진출입이 용이했으나,
 - 피신청인이 교통정체 해소 및 사고예방을 위하여 교차로 신호등 및 지하통로암거를 철거하고 주민들이 아산, 천안 방면 진출입시 인근의 장재2지하차도 및 신방지하차도 상부교차로를 U-TURN 우회하도록 하자,
 - 당초와 같이 사람과 차량이 국도 21호선을 통행할 수 있도록 교차로 및 지하차도 설치를 요구하는 고충민원 제기('11. 3. 4.)
- ※ 민원지역의 천안~아산간 21번 국도는 아산신도시조성 1단계와 2단계 구간의 경계 도로이며, 천안시와 아산시의 경계구간임.

나. 해결 목표

-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들의 이동 편의성을 확보를 위해 횡단보도 및 지하보차도 설치대안 마련
- 당사자 간의 대화와 양보를 통해 집단민원의 합리적 해결

6 갈등해결과정

가. 진행과정 개요

- 피신청인, 관계기관 제출 자료에 대한 검토, 신청인 및 각 기관 면담을 통해 문제점과 쟁점 도출
- 4회에 걸친 현장방문과 30여 차례 협의를 통해 합의안 마련

7 조정 (합의) 결과

가. 조정 · 합의 최종결과

- 충남 아산시 배방읍 장재9리 등 8개 마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육교를 휴대삼거리 주변에 설치하고, 휴대리 마을도로에서 장재2지하차도까지 대형차량 통행이 가능한 아산방면 진출도로를 개설하며, 육교에 조형물 설치 교통환경 개선

나. 위원회 조정 · 합의문

- 피신청인은 관계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의하여 2011. 12. 조기 개통 예정인 이 민원 공사가 완공되기 전까지 배방읍 휴대삼거리 주변 적정 위치에 보도육교와 아산방면 진출로를 설치하고, 아산방면 진출로는 측도 1차로를 개설하여 아산신도시조성 2단계 구간과 연결되는 10차선 도로가 개설될 때까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시설물의 규모는 다음과 같이 한다.
 - 보도육교는 장애인 및 노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와 자전거 및 사람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경사로와 계단을 설치하고, 육교 상단에는 투명 재질의 지붕과 상징 조형물을 설치한다.
 - 아산방향 진출로는 대형차량이 통행 가능한 시설 규모로 설치한다.
- 관계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관계기관 아산시장은 보도 육교설치에 따라 경사로에 편입되는 아산신도시조성 1단계 구간의 완충녹지대 및 2단계 사업지구의 부지를 조건없이 제공하며, 보도육교가 지방자치단체 관문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육교 형상 및 상징 조형물 등 종합적인 검토가 되어 설치될 수 있도록 피신청인과 아산시장은 적극 협조 추진하며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육교시설물에 대한 유지 관리를 시행한다.
- 관계기관 천안서북경찰서장은 보도육교 설치에 따른 보행자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육교 주변 안전시설물 설치 방안을 마련하여 피신청인에게 보도육교 설계에 반영되도록 한다.
- 관계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피신청인이 설치할 아산방면 진출로 설치 구간의 부지 및 육교설치에 편입되는 2단계 사업지구 부지를 조속히 확보될 수 있도록 해당 부지의 사유지를 우선 보상처리 한다.
- 신청인은 보도육교 설치 및 아산방면 진출로 설치 구간 등에 편입된 토지와 지장물에 대한 보상협의 등에 적극 협조하고, 공사 중 부득이 발생하는 통행불

편에 대하여는 피신청인과 관계기관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수용-이행 여부 및 시사점

가. 신청인-피신청인 수용 및 이행여부

- '11. 6. : 보도육교 설계 경관심의 완료
- '11. 12. :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변경 승인
- '12. 1. : 기획재정부 승인 후 보완 설계
- '12. 3. : 보도육교 시설에 편입되는 아산신도시조성사업지구의 부지 보상 완료

나. 시사점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역 주민들의 이동 편의성을 확보를 위해 횡단보도 및 지하보차도 설치 대안 마련으로 대규모 국책사업 시행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사전 예방

국민권익위, 아산 8개 마을주민 교통불편 해결

기사입력 2011-04-22 15:44 | 최종수정 2011-04-22 18:28

【아산=연합뉴스】 정태진 기자 = 충남 천안~아산 국도 21호 확장 공사로 평소 주민들이 이용하던 횡단보도와 지하 통로가 없어져 불편을 겪었던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8개 마을의 민원이 국민권익위 도움으로 해결됐다.

국민권익위는 22일 오후 아산시 배방읍의 한국토지주택공사 아산사업본부 회의실에서 지역 주민과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및 LH공사, 아산시, 천안서북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영란 위원장 주재로 현장 조정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밝혔다.

주민들의 불편은 현지에서 신도시 조성사업을 하는 LH가 장재2 지하차도를 설치하고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아산~천안 국도 확장공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평소 이용하던 통로 박스가 철거되고 삼거리에 있던 횡단보도와 신호등이 사라지면서 시작됐다.

이날 중재에서 국민권익위는 배방읍 휴대삼거리 주변에 보도육교를 신설하고 마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휴대리 마을도로에서 장재2 지하차도 상부 도로를 통해 대형차량 통행이 가능한 아산방면 진출 도로를 개설하는 중재안을 마련, 합의를 이뤘다.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은 "주민들이 아무 불편 없이 이용하던 통로 박스와 횡단보도는 철거됐지만, 이번 조정으로 육교와 아산방면 진출 도로가 생겨 주민 불편을 덜게 돼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합의로 육교와 진출로가 설치되면 장재9리 등 8개 마을 3천500여 주민이 혜택을 보게 된다.

jtj@yna.co.kr

김영란 위원장, 민원 현장조정

기사입력 2011-04-22 17:04



【서울=연합뉴스】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가운데)이 22일 오후 충남 아산 소재 한국토지주택공사 아산사업본부 회의실에서 ‘아산-천안간 21번 국도 보도육교 및 진출로 설치 요구’ 민원에 대해 조정회의를 마친 뒤 관계자들과 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2011.4.22 << 국민권익위원회 >>photo@yna.co.kr

국민권익위, 아산 8개 마을주민 교통불편 해결

기사입력 2011-04-22 17:10



【아산=연합뉴스】충남일대 현장방문 행정에 나선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22일 오후 아산시 배방읍에 위치한 ‘천안-아산간 21번 국도 보도육교 및 진출입로 설치 요구 민원’ 현장에서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로부터 공사 진행사항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2011.4.22.jtj@yna.co.kr

국민권익위원회, 아산-천안간 21번 국도 보도육교 및 진출로 설치 현장조정회의

기사입력 2011-04-22 17:49



【서울=뉴스시스】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22일 오후 충남 아산 소재 한국토지주택공사 아산 사업본부 회의실에서 ‘아산-천안간 21번 국도 보도육교 및 진출로 설치 요구’ 민원에 대해 관계기관간 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제공)

photo@newsis.com

아시아경제

국도확장으로 없어진 횡단보도, 육교 신설로 민원 중재

기사입력 2011.04.22 15:00

권익위, 아산 장재9리 등 8개 마을주민 교통불편 해결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아산~천안간 21번 국도 확장공사로 충남 아산시 배방읍 장재9리 등 8개 마을 주민들이 이용하던 횡단보도와 지하 통로박스가 없어져 발생한 집단민원을 육교 신설 등의 대안을 마련한 현지 중재로 해결했다.

권익위는 22일 오후 3시 충남 아산시 배방읍 소재 한국토지주택공사 아산사업본부 회의실에서 지역주민들과 송석철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장, 오세진 LH공사 아산사업본부장, 김석중 아산시 부시장, 이원구 천안서북경찰서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김영란 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배방읍 휴대삼거리 주변에 보도육교를 신설하고 ▲마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휴대리 마을도로에서 장재2지하차도 상부 도로를 통해 대형차량 통행이 가능한 아산방면 진출 도로를 개설하는 중재안을 마련해 합의에 성공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당초 이 국도는 왕복 4차선 도로로 휴대삼거리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장재9리 등 8개 마을 주민들이 아산과 천안 방면으로 자유롭게 진출입할 수 있고 국도 하부에 있는 통로박스를 통해 차량과 주민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LH의 장재2지하차도 설치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의 아산~천안간 21번 국도 확장공사로 통로박스는 철거되고 휴대삼거리에 있던 횡단보도와 신호등도 없어졌다.

이에 주민들은 21번 국도를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휴대삼거리에 지하차도나 차량이 다닐 수 있는 육교를 설치해주고 아산시와 천안시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신호등을 만들어 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을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냈지만 여의치 않자 지난 3월 권익위에 민원을 신청했다.

권익위는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 및 실무조정 회의 등을 통해 보도육교를 휴대삼거리 주변에 설치하고 휴대리 마을도로에서 장재2지하차도 상부 도로를 통해 대형차량 통행이 가능한 아산방면 진출도로를 개설하며 보도육교에는 엘리베이터·경사로·조형물 등을 설치하기로 하는 합의안을 성사시켰다.

김영란 위원장은 "주민들이 아무 불편 없이 이용하던 통로박스와 횡단보도는 철거됐지만 이번 조정으로 육교와 아산방면 진출 도로가 생겨 주민들의 불편을 덜게 돼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합의안에 따라 육교와 측도가 설치되면 장재9리 등 8개 마을의 약 3000여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황상욱 기자 ooc@

건설타임즈 www.constimes.co.kr .co.kr

국도확장으로 없어진 횡단보도에 육교신설

아산 장재9리 등 8개 마을주민 교통불편 해결

2011년 04월 22일 (금) 김소영 기자 syong@constimes.co.kr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 ACRC)가 아산~천안간 21번 국도 확장공사로 충남 아산시 배방읍 장재9리 등 8개 마을 주민들이 이용하던 횡단보도와 지하 통로박스가 없어져 발생한 집단민원을 육교 신설 등의 대안을 마련한 현지 중재로 해결했다.

국민권익위는 22일 오후 3시 충남 아산시 배방읍 소재 한국토지주택공사 아산사업본부 회의실에서 지역주민들과 송석철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장, 오세진 NH공사 아산사업본부장, 김석중 아산시 부시장, 이원구 천안서북경찰서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김영란 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었다.

아울러 배방읍 휴대삼거리 주변에 보도육교를 신설하고, 마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휴대리 마을도로에서 장재2지하차도 상부 도로를 통해 대형차량 통행이 가능한 아산방면 진출 도로를 개설하는 중재안을 마련해 합의에 성공했다.

당초 이 국도는 왕복 4차선 도로로, 휴대삼거리에 횡단보도가 설치돼 있어 장재9리 등 8개 마을 주민들이 아산과 천안 방면으로 자유롭게 진출입할 수 있고, 국도 하부에 있는 통로박스를 통해 차량과 주민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NH의 장재2지하차도 설치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의 아산~천안간 21번 국도 확장공사로 통로박스는 철거되고, 휴대삼거리에 있던 횡단보도와 신호등도 없어졌다.

이에 주민들은 21번 국도를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휴대삼거리에 지하차도나 차량이 다

닐 수 있는 육교를 설치해주고, 아산시와 천안시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신호등을 만들어 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을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냈다.

그러나 여의치 않자 지난3월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신청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 및 실무조정 회의 등을 통해 보도육교를 휴대삼거리 주변에 설치하고, 휴대리 마을도로에서 장재2지하차도 상부 도로를 통해 대형차량 통행이 가능한 아산방면 진출도로를 개설한다.

아울러 보도육교에는 엘리베이터·경사로·조형물 등을 설치하기로 하는 합의안을 성사시켰다.

조정회의를 주재한 김영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주민들이 아무 불편 없이 이용하던 통로 박스와 횡단보도는 철거됐지만, 이번 조정으로 육교와 아산방면 진출 도로가 생겨 주민들의 불편을 덜게 돼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안에 따라 육교와 측도가 설치되면 장재9리 등 8개 마을의 약 3000여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권익위, 아산시 배방읍 교통민원 해결 사라진 21번 국도 배방 육교, 횡단보도 등 집단민원 중재

안성원 기자



▲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중양)이 22일 오후 충남 아산 소재 한국토지주택공사 아산사업본부 회의실에서 ‘아산~천안간 21번 국도 보도육교 및 진출로 설치 요구’ 민원에 대해 조정회의를 원만히 마친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 C뉴스041

국민권익위원회가 아산~천안간 21번 국도 확장공사로 충남 아산시 배방읍 장재9리 등 8개 마을 주민들이 이용하던 횡단보도와 지하 통로박스가 없어져 발생한 집단민원을 육교 신설 등의 대안을 마련한 현지 중재로 해결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22일 오후 3시 충남 아산시 배방읍 소재 한국토지주택공사 아산사업본부 회의실에서 지역주민들과 송석철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장, 오세진 LH공사 아산사업본부장, 김석중 아산시 부시장, 이원구 천안서북경찰서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김영란 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를 통해 ▲배방읍 휴대삼거리 주변에 보도육교를 신설하고, ▲마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휴대리 마을도로에서 장재2지하차도 상부 도로를 통해 대형차량 통행이 가능한 아산방면 진출 도로를 개설하는 중재안을 마련해 합의에 성공했다.

당초 이 국도는 왕복 4차선 도로로, 휴대삼거리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장재9리 등 8개 마을 주민들이 아산과 천안 방면으로 자유롭게 진출입할 수 있고, 국도 하부에 있는 통로박스를 통해 차량과 주민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LH의 장재2지하차도 설치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의 아산~천안간 21번 국도 확장공사로 통로박스는 철거되고, 휴대삼거리에 있던 횡단보도와 신호등도 없어졌다.

이에 주민들은 21번 국도를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휴대삼거리에 지하차도나 차량이 다닐 수 있는 육교를 설치해주고, 아산시와 천안시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신호등을 만들어 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을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냈지만 여의치 않자 지난 3월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신청했다.

국민권익위는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 및 실무조정 회의 등을 통해 보도육교를 휴대삼거리 주변에 설치하고, 휴대리 마을도로에서 장재2지하차도 상부 도로를 통해 대형차량 통행이 가능한 아산방면 진출도로를 개설하며, 보도육교에는 엘리베이터·경사로·조형물 등을 설치하기로 하는 합의안을 성사시켰다.

조정회의를 주재한 김영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주민들이 아무 불편 없이 이용하던 통로박스와 횡단보도는 철거됐지만, 이번 조정으로 육교와 아산방면 진출 도로가 생겨 주민들의 불편을 덜게 되어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합의안에 따라 육교와 측도가 설치되면 장재9리 등 8개 마을의 약 3000여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C뉴스041 www.cnews041.com

민원 있는 곳 '권익위'가 달려간다

아산서 국도확장으로 없어진 횡단보도 육교신설로 중재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이하 국민권익위)는 아산~천안간 21호 국도 확장공사로 횡단보도와 지하 횡로박스가 없어져 발생한 집단민원을 육교신설 등 대안을 마련한 현지 중재로 해결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22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아산시업무부 회의실에서 지역주민과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배방을 휴대삼거리 주변에 보도육교 신설과 마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휴대삼거리 마을도에서 장재2지하차도 상부 도로를 통해 대원차량 통행이 가능한 아산방면 진출 도로를 개설하는 중재안을 마련해 합의에 성공했다. 당초 이 국도는 양복 4차선 도로로 휴대삼거리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장재9리 등 8개 마을 주민들이 아산과 천안 방면으로 자유롭게 진출입할 수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2일 현장조정 회의를 열고 국도 확장공사로 횡단보도 등이 없어져 발생한 집단민원을 육교신설 등 대안을 마련해 현지 중재로 해결했다.

있고, 국도 하부에 있는 횡로박스를 통해 차량과 주민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L의 장재2지하차도 설치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의 아산~천안간 21번 국도 확장공사

로 횡로박스는 철거되고, 휴대삼거리에 있던 횡단보도와 신호등도 없어졌다. 이에 주민들은 21번 국도를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휴대삼거리에 지하차도와 차량이 다닐 수 있는

육교를 설치해주고, 아산[로]와 천안[로]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신호등을 만들어 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을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냈지만 여의지 않아 지난 3월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신청했다. 국민권익위는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 및 실무조정회의 등을 통해 보도육교를 휴대삼거리 주변에 설치하고, 휴대삼거리 마을도에서 장재2지하차도 상부 도로를 통해 대원차량 통행이 가능한 아산방면 진출도로 개설과 보도육교에 엘리베이터, 경사로, 조형물 등을 설치하기로 하는 합의안을 성사시켰다. 김영란 위원장은 "주민들이 불편 없이 이용하던 횡로박스와 횡단보도는 철거됐지만, 이번 조정으로 육교와 아산방면 진출 도로가 생겨 주민들의 불편을 없게 돼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산·정옥환기자

20.3 X 13.6 cm

억울하고 답답한 고충민원

청양 이동신문고 로 해결하세요



서민 말착형 국 민소통 창구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사진)의 '이동신문고'가 지난 22일 청양문예회관 소공연장 2층 다목적실에서 운영돼 청양 군민의 고충민원들을 해결해줬다.

이날 이동신문고에서는 복지노동, 재정세무, 산업농림, 도로교통 등 각 분야별로 구성된 10여명의 전문 조사관들이 모두 42건의 고충민원을 접수 상담하고, 가급적 현장에서 당사자간 중재를 통해 합의해결을 유도했다.

현장에서 접수된 민원사항 중 즉석에서 해결이 곤란하거나 조사가 더 필요한 사항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정밀 조사와 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처리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앞서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 일행은 군청을 방문, 군수실에서 이석화 청양군수로부터 지역현안에 대해 설명을 들은 다음 브리핑룸과 상황실을 차례로 둘러 지역 언론인 및 지역사회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폭 넓은 여

론을 수렴했다.

이 자리에서 이석화 군수는 "낙후지역에 근무하는 외직출신 공무원 다수가 타지로의 전출을 희망, 군소 지자체에 숙련공무원이 모자라고 있다"며 "공무원 임용 시 지역연고지 출신에 대한 제한경쟁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또 지역 언론인들은 '질서행위 규제법'의 시행상 모순점, 지방의료원의 운영 개선방안 등에 대해 건의했고, 김 위원장은 해결책을 모색해보겠다고 답했다.

지역사회단체장들은 △청양~신양IC간 도로 확·포장공사 기본설계용역 착수 △청양군 지방하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화훼농가를 위한 '공무원 행동강령' 적용기준 완화 △양도소득세 신고 시 부동산 매매계약서 제출 생략 △마을회관 및 경로당 신축 사업비의 국고 지원 등의 건의사항을 내놓았다.

국민권익위는 고충민원의 처리와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청렴사회를 만들기 위한 부패방지 업무,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청양/박호현>

11.4 X 15.1 cm

아산 장재9리 등 8곳 육교 신설 등 '확장 공사 후유증' 해결된다

국민권익위원회(ACRC)가 아산~천안간 21번 국도 확장 공사로 충남 아산시 배방읍 장재9리 등 8개 마을 주민들이 이용하던 횡단보도와 지하 통로박스가 없어져 발생한 집단민원을 육교 신설 등의 대안을 마련, 현지 중재로 해결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22일 아산시 배방읍 소재 한국토지주택공사 아산사업본부 회의실에서 지역주민들과 송석철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장, 오세진 LH공사 아산사업본부장, 김석중 아산시부시장, 이원구 천안서북경찰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영란 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 회의를 열었다.

회의결과 △배방읍 휴대삼거리 주변에 보도육교 신설 △마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휴대리 마을도로에서 장재2지하차도 상부 도로를 통해 대형차량 통행이 가능한 아산방면 진출 도로를 개설하는 중재안 마련에 합의했다.

당초 이 국도는 왕복 4차선 도로로 휴대삼거리에서 횡단보도가 설치돼 있어 장재9리 등 8개 마을 주민들이 아산과 천안 방면으로 자유롭게 진·출입할 수 있고, 국도 하부에 있는 통로박스를 통해 차량과 주민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었다.

하지만 LH의 장재2지하차도 설치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의 아산~천안간 21번 국도 확장공사로 통로박스는 철거되고, 휴대삼거리에 있던 횡단보도와 신호등도 없어졌다.

이에 주민들은 21번 국도를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휴

대삼거리에서 지하차도나 차량이 다닐 수 있는 육교를 설치해 주고, 아산시와 천안시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신호등을 만들어 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을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냈지만 여의치 않자 지난 3월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신청해 마련된 것이다.

이날 김영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주민들이 아무 불편 없이 이용하던 통로박스와 횡단보도는 철거됐지만, 이번 조정으로 육교와 아산방면 진출 도로가 생겨 주민들의 불편을 덜게 돼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합의에 따라 육교와 측도가 설치되면 장재9리 등 8개 마을의 약 3천500여명이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14.9 X 14.3 cm

“사라진 횡단보도에 육교 신설”

국민권익위, 아산 장재9리 집단민원 해결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가 아산~천안간 21번 국도 확장공사로 아산시 배방읍 장재9리 등 8개 마을 주민들이 이용하던 횡단보도와 지하 통로박스가 없어져 발생한 집단민원을 육교 신설 등의 대안을 마련한 현지 중재로 해결했다.

국민권익위는 22일 오후 3시 아산시 배방읍 소재 LH 아산사업본부 회의실에서 김 영란 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배방읍 휴대삼거리 주변에 보도육교를 신설하고, 마을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휴대리 마을도로에서 장재2 지하차도 상부 도로를 통해 대형차량 통행이 가능한 아산방면 진출 도로를 개설하는 중재안을 마련해 합의에 성공했다.

당초 이 도로는 왕복 4차선으로

휴대삼거리에서 횡단보도가 설치돼 있어 장재9리 등 8개 마을주민들이 아산과 천안 방면으로 자유롭게 진·출입할 수 있고, 국도 하부에 있는 통로박스를 통해 차량과 주민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LH의 장재2 지하차도 설치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의 아산~천안간 21번 국도 확장공사로 통로박스는 철거되고, 휴대삼거리에 있던 횡단보도와 신호등도 없어졌다.

이에 주민들은 21번 국도를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휴대삼거리에서 지하차도나 차량이 다닐 수 있는 육교를 설치해 주고, 아산시와 천안시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신호등을 만들어 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을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냈지만 여의치 않자 지난3월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신청했다.

국민권익위는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 및 실무조정 회의 등을 통해 보도육교를 휴대삼거리 주변에 설치하고, 휴대리 마을도로에서 장재2 지하차도 상부 도로를 통해 대형차량 통행이 가능한 아산방면 진출도로를 개설해, 보도육교에는 엘리베이터·경사로·조형물 등을 설치하기로 하는 합의를 성사시켰다.

김 영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주민들이 아무 불편없이 이용하던 통로박스와 횡단보도는 철거됐지만, 이번 조정으로 육교와 아산방면 진출 도로가 생겨 주민들의 불편을 덜게 되어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합의에 따라 육교와 측도가 설치되면 장재9리 등 8개 마을의 약 3000여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아산=정재호 기자 in300@ctoday.co.kr

16.0 X 13.8 cm

국민권익위 아산주민 교통불편 해결

배방읍 장재리 8개 마을

보도육교 진출도로 개설

충남 천안~아산 국도 21호 확장 공사로 평소 주민들이 이용하던 횡단 보도와 지하 통로가 없어져 불편을 겪었던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8개 마을의 민원이 국민권익위 도움으로 해결됐다.

국민권익위는 22일 오후 아산시 배방읍의 한국토지주택공사 아산사업본부 회의실에서 지역 주민과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및 LH공사, 아산시, 천안 서북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영란 위원장 주재로 현장 조정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밝혔다.

주민들의 불편은 현지에서 신도시 조성사업을 하는 LH가 장재2 지하차도를 설치하고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아산~천안 국도 확장공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평소 이용하던 통로 박스가 철거되고 삼거리에 있던 횡단보도와 신호등이 사라지면서 시작했다.

이날 중재에서 국민권익위는 배방읍 휴대산거리 주변에 보도육교를 신설하고 마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



충남일대 현장방문 행정에 나선 김영란(가운데) 국민권익위원장이 22일 오후 아산시 배방읍에 위치한 천안-아산간 21번 국도 보도육교 및 진출입로 설치요구 민원 현장에서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로부터 공사 진행사항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도록 휴대리 마을도로에서 장재2 지하차도 상부 도로를 통해 대형차량 통행이 가능한 아산방면 진출 도로를 개설하는 중재안을 마련, 합의를 이뤘다.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은 "주민들이 아무 불편 없이 이용하던 통로 박

스와 횡단보도는 철거됐지만 이번 조정으로 육교와 아산방면 진출 도로가 생겨 주민 불편을 덜게 돼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합의로 육교와 진출로가 설치되면 장재9리 등 8개 마을 3500여 주민이 혜택을 보게 된다.

연합뉴스

17.2 X 16.2 cm

민원 있는 곳 '권익위'가 달려간다

아산서 국도확장으로 없어진 횡단보도 육교신설로 중재

【충청일보】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이하 국민권익위)는 아산~천안간 21호 국도 확장공사로 횡단보도와 지하 통로박스가 없어져 발생한 집단민원을 육교신설등 대안을 마련한 현지 중재로 해결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22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아산사업본부 회의실에서 지역주민과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배방읍 휴대삼거리 주변에 보도육교 신설과 마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휴대리 마을도로에서 장재2지하차도 상부 도로를 통해 대형차량 통행이 가능한 아산방면 진출 도로를 개설하는 중재안을 마련해 합의에 성공했다.

당초 이 국도는 왕복 4차선 도로로 휴대삼거리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장재9리 등 8개 마을 주민들이 아산과 천안 방면으로 자유롭게 진출입할 수 있고, 국도 하부에 있는 통로박스를 통해 차량과 주민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14의 장재2지하차도 설치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의 아산~천안간 21번 국도 확장공사로 통로박스는 철거되고, 휴대삼거리에 있던 횡단보도와 신호등도 없어졌다.

이에 주민들은 21번 국도를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휴대삼거리에 지하차도와 차량이 다닐 수 있는 육교를 설치해주고, 아산시와 천안시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신호등을 만들어 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을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냈지만 여의치 않자 지난 3월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신청했다.

국민권익위는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 및 실무조정 회의 등을 통해 보도육교를 휴대삼거리 주변에 설치하고, 휴대리 마을도로에서 장재2지하차도 상부 도로를 통해 대형차량 통행이 가능한 아산방면 진출도로 개설과 보도육교에 엘리베이터,경사로,조형물 등을 설치하기로 하는 합의안을 성사시켰다.

김영란 위원장은 "주민들이 불편 없이 이용하던 통로박스와 횡단보도는 철거됐지만, 이번 조정으로 육교와 아산방면 진출 도로가 생겨 주민들의 불편을 덜게 돼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산=정옥환기자

남원 88고속도로 확장공사로 인한 환경피해 해결

민원번호 : 2AA-1103-189422(교통도로민원과, 유택중 조사관)

(‘11. 7. 6.)

민원개요

88 고속도로로 구간 중 전북 남원시 대강면 입암리 마을은 27년 동안 조망권 및 소음 등 환경 피해를 받고 있었으나, 최근 담양~성산 확장공사 추진계획으로 현 설계대로 건설될 경우 주민 생활환경이 더욱 열악해지므로 도로노선을 마을에서 먼 쪽으로 변경하거나 마을 앞 구간을 교량으로 시공해 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에 대해 마을 저지대 농지를 매수하여 주차장 및 공원을 조성하고, 교량 폭을 확장, 농로 콘크리트 포장 등을 통한 민원 해소 조정중재

1 당사자

- 신 청 인 : 전북 남원시 대강면 입암마을 ○○○외 109명
- 피신청인 : 한국도로공사
- 관계기관 : 전라북도 남원시장

2 민원내용

- 88고속도로 담양~성산 구간 확장공사와 관련하여 전북 남원시 대강면 입암리 마을(이하 ‘입암마을’이라 한다)과 이 민원 고속도로 사이에 위치한 같은 리 ○○-○ 답 1,117㎡ 외 13필지(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는 저지대로서 배수가 불량할 뿐만 아니라 이 민원 고속도로로 인한 일조량 감소 피해로 종래와 같은 목적으로 사용 불가하니 매수해 주고 이 민원 고속도로가 마을의 조망권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이 민원 토지에 조정공사 등을 시행하여 마을의 경관을 개선, 마을의 주통행로에 설치될 예정인 교량의 폭을 10m에서 12m로 넓혀 주고, 마을 서측 끝에서 광주방향으로 길이 약 240m, 폭 3.0m의 농로를 개설해 달라.

제5장

3 피신청인 등 의견

가. 한국도로공사

- 이 민원 토지를 매입한 후 조경공사 등을 통해 입안마을의 경관을 개선해 달라는 것에 대하여는 공사설명회 및 착수 합동답사 언급되지 않은 사안이나 교량화 요구에 대한 대안 요구이므로 긍정적으로 검토할 예정이고, 교량 폭은 통행자의 안전을 위해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예정이며, 농로포장은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다.

나. 남원시장

- 이 민원 토지에 조경공사가 시행될 경우 운동기구의 설치하는 가능하나, 정자의 설치하는 도로법에 저촉되어 불가능하고, 녹지 공간 및 농로의 관리는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 결정할 사안이나, 가능한 한 신청인들의 요구를 수용하도록 하겠다.

4 주요 쟁점사항

- 고속도로 주변 마을 소음 등 주거환경 피해 방지대책
- 도로부지 성토에 따른 조망권 피해 대책

5 갈등 분석

가. 민원발생배경 및 주요사실관계

- 1984. 12. 왕복 2차선의 88고속도로가 2.55m 높이로 3면(좌우면과 후면)이 임야로 둘러싸인 마을 앞에 건설됨
 - 당시 설치된 통로암거(마을의 유일한 통행로)는 폭 4.0m, 높이 3.5m에 불과하여 대형차량 진출입 불가
 - 고속도로변에 마을이 인접해 있어 소음피해 발생
- 피신청인이 2007. 9. 10. 88고속도로를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하고, 높이를 약 5m(성토 3m + 방음벽 2m)정도 더 높이는 고속국도 제12호선 담양~함양 확장공사(이하 '이 민원 공사'라 한다) 시행
 - 이에 신청인들은 그동안 88고속도로로 많은 피해를 당해왔고, 현 계획대로

이 민원 공사가 시행될 경우 조망권 상실 등으로 마을은 더 많은 피해가 발생하므로

- 고속도로의 노선을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옮겨주거나 마을 앞 성토부 약 200m를 교량으로 시공해달라는 고충민원 제기('10. 11. 19.)
 - ※ 노선변경은 지방도로 및 지방하천을 이설해야하고 이미 설치된 주변 구조물을 철거해야하는 등 많은 비용이 들어 곤란하고, 성토부 교량화는 마을 주택이 계단식으로 위치해 있고, 교량 건설시 소음피해가 더 클 것으로 보이며, 성토고를 높이지 않는 방안이 있어 곤란함을 통보(2011. 2. 22.)
 - ※ 성토부 교량화시 약 60억원의 추가비용 발생
- 노선변경 및 교량화 요구 민원이 불수용 되자 마을 앞 저지대 매수 후 주차장 및 공원 조성과 신설교량 폭 확장 등을 요구하는 고충민원 제기('11. 3. 26.)

나. 해결 목표

- 고속도로 확장에 따른 주민피해 최소화 및 높은 토지 성토에 따른 조망권 피해 대책 수립과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해결 방안 마련
- 당사자 간의 대화와 양보를 통해 집단민원을 합리적으로 해결

6 갈등해결과정

가. 진행과정 개요

- '10. 11. 19. : 노선변경 및 교량화 요구 민원 제기
- '10. 12. 22. : 1차 현장조사 실시
 - 성토부 교량화 및 노선변경 대하여 신청인 대표와 협의
 - ※ 현장 여건상 노선변경은 불가, 성토부 교량화시 소음피해 가중 예상
 - 피신청인에게 성토고를 높이지 않는 방안 강구 요청
 - ※ 피신청인 성토고를 높이지 않는 방안 제시(기 설치된 구조물 철거 필요, 철거 시 추가 비용 약 5억)
- '11. 4. 20. : 2차 현장조사 실시
 - 입암마을과 88고속도로 사이에 위치한 저지대 농지를 활용, 주민 편의시설 설치 및 고속도로변 경관개선방안 협의
- '11. 5. 23. : 3차 현장조사 실시

- 공원조성 시 체육시설 및 주민편의시설은 관계기관(남원시)에서 설치하고, 공원과 시설물을 남원시에서 관리할 것 협의

7 조정 (합의) 결과

가. 조정 · 합의 최종결과

- 88고속도로와 마을 사이에 위치한 저지대 농지를 매수하여 주차장 및 공원을 조성하고, 교량 폭을 10m에서 12m로 확장하며, 비포장 농로 250m를 3m 폭으로 콘크리트 포장하고, 공원에 체육시설 및 휴게시설을 설치

나. 위원회 조정 · 합의문

- 피신청인은 2015. 12. 까지 전북 남원시 대강면 입암리 ○○-○ 답 1,117㎡ 외 13필지를 매수한 후 마을진입교량 완공 후 6개월이내에 성토하여 2015. 12. 까지 경관개선 및 주민편의를 위하여 녹지공간을 조성하고, 마을 주 통행로에 설치될 교량 폭을 10m에서 12m로 확장하며, 마을 서측 끝에서 광주방향으로 길이 약 240m, 폭 3.0m의 농로를 개설한다. 완충 녹지공간 및 농로는 공사완료 후 관리권을 관계기관에 이관한다. 또한 피신청인은 녹지공간 조성사업 시행 6개월 전 관계기관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요구를 한다.
- 관계기관은 공사완공 후 피신청인에게 녹지공간 및 농로의 관리권을 이관 받아 운동시설 및 휴식공간을 설치하고, 위 토지 중 관계기관 소유의 같은 리 ○○-○ 도 122㎡, ○○-○ 도 33㎡, ○○-○ 도 20㎡를 별도의 보상 없이 피신청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다.
- 신청인은 이 민원 고속도로의 종단 높이가 평균 39cm, 최대 78cm 높아지는 것에 동의하고, 피신청인이 개설할 농로에 포함되는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여 농로개설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며, 이 민원 고속도로 공사와 관련하여 더 이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8 수용-이행 여부 및 시사점

가. 신청인-피신청인 수용 및 이행여부

- '11. 12. : 설계변경 도면 작업
- '14. 12. : 교량 폭 2m확장 예정
- '15. 12. : 운동시설 및 휴식공간설치 예정

나. 시사점

- 마을주민들은 수 십 년간 대형차가 다닐 수 없는 좁은 통로를 사용해왔고,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 환경피해 대책을 호소했음에도 관계 행정기관 등으로부터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였으나, 금 번 권익위에서 약 8개월 동안 3회의 현장조사와 관계기관과의 여러 차례의 협의를 통해 함께 노력하고 양보하고 협력하여 가장 바람직한 대안을 끌어냄으로써 이해당사자 모두 win-win 하는 결과 도출



국내최대 민영 뉴스통신사 2001-2011

NEWSIS

김영란 국민권익위, 입암마을 민원 중재

기사입력 2011-07-07 17:58



【남원=뉴스시스】 조수정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 김영란 위원장(가운데)이 7일 오후 27년동안 고속도로 교통소음 등의 피해를 감수해온 전북 남원시 대강면 입암마을을 방문해 관계자로부터 민원 발생 현황을 듣고 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제공)
photo@newsis.com

권익위, 임실·남원 현장방문 고충민원 해결

기사입력 2011-07-07 14:04 | 최종수정 2011-07-07 14:21

【남원=연합뉴스】 이윤승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7일 전북 임실군과 남원시를 방문해 현장 조정으로 수십 년 묵은 민원을 해결했다.

권익위는 이날 오전 임실군을 방문하고 섬진강댐 재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생계기반을 잃게 된 운암면 쌍암리 일대 수몰 이주민 58명에게 이주택지와 특용작물 시설 구축지원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이들은 1965년 섬진강댐 건설 때 정부의 측량착오로 만수의 기준 이하이던 현재의 국유지로 집단 이주했으나 최근 추진 중인 다목적댐 재개발사업으로 90% 이상의 농경지가 침수되는 등 이주대상자가 됐지만, 보상액이 적고 대부분 고령으로 다른 지역에 이주해 생계를 꾸리기가 어려워 민원이 발생했다.

권익위는 김영란 위원장과 주민, 한국수자원공사, 임실군 등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현장 조정회의를 거쳐 이주택지 공급과 이주 후 정착,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조정안을 만들어 합의의 길을 열어냈다.

또 이날 오후에는 남원 부시장과 한국도로공사 대표, 마을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강면사무소에서 고충회의를 하고 20여년간 풀지 못한 민원을 해결했다.

남원시 대강면 입암마을은 1984년 88고속도로 건설 당시 설치된 소형통로박스의 확장요구와 조망권 피해, 교통소음 등의 생활불편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관계기관 대표들과 협의 끝에 출입구를 확장하고 주차장과 체육시설 건립, 흙길 농로의 콘크리트 포장 등을 해주기로 중재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억울함이 없는 나라, 깨끗한 사회"를 목표로 노력하는 국민권익위원회는 앞으로도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며 국민의 권익증진을 위한 고충해결에 매진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love@yna.co.kr

권익위, 임실·남원시 현안문제 '해결'

기사입력 2011-07-07 15:38

【전주=뉴스시스】유진휘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전북 임실과 남원을 차례로 찾아, 주민들의 현안문제를 해결했다.

권익위는 7일 오전 임실군청에서 지역주민들과 전북도, 임실군, 한국수자원공사 등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김영란 위원장 주재 현장조정회의를 열었다.

권익위는 현장회의에서 주민들에게 이주택지를 공급하고, 입주 후에는 정착자립이 가능하도록 관계기관 종합대책 성격의 조정안을 만들어 합의를 이끌어냈다.

김 위원장은 "1965년에 건설된 섬진강댐으로 인한 수몰민과 그 2세들은 과거 정부의 이주대책 실패와 섬진강댐 재개발사업으로 또 다시 삶의 터전을 잃어야 하는 주민들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눠야한다"며 "정상적인 주거환경 제공으로 정착자립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협력해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공동의 고민과 노력이 있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날 오후 남원시 대강면사무소 회의실에서 민원제기된 88고속도로 확장사업과 관련, 입암마을 도로주변 경관개선 및 완충녹지시설 설치 고충민원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조정서 서명 및 교부식을 가져 고충민원을 해결했다.

yjh@newsis.com

국민권익위, 현장조정 주민숙원 잇따라 해결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현장조정으로 해법을 찾았다.

국민권익위원회 김영란 위원장은 7일 임실과 남원을 잇따라 방문, 섬진강댐 재개발사업과 관련 민원과 88고속도로 확장과 관련된 남원 대강면 입암마을 주민들의 오랜 민원을 현장조정을 통해 해결했다.

권익위는 이날 오전 임실군청 회의실에서 전북

도와 임실군,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 및 수몰이주민 대표들이 배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수몰민중 수령된 이주보상금 반납시는 이주택지 임주를 가능토록 했다. 또 특용작물 재배단지 확보를 통한 생계대책도 마련했다.

더불어 특용작물 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것과 댐 주변 정비사업비 재조정으로 이주단지 택지구입비 지원 조정안에 대한 합의점도 도출했다. 특히 K-water와 임실군이 전례없이 이주후 생계대책까지 마련해 주

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이종세 K-water 섬진강댐 관리단장은 “이주민이 조속한 시일내에 이주를 완료, 섬진강댐의 정상운영이 가능할 경우 홍수방어능력이 크게 확충되고 6,500만톤의 용수를 추가 확보하여 부족한 생공용수를 추가 공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날 오후 남원시 대강면사무소에서 열린 ‘임암마을도로주변

섬진강댐 수몰 이주민 대책 마련

남원 입암마을 집단민원 중재도

경관개선 및 완충녹지시설 설치 고충민원 현장조정회의’에서는 88고속도로가 지나는 대강면 입암리의 논 13필지를 도로공사 측이 2015년까지 사들여 마을 진입교량을 짓기로 했다.

또 완공 후 6개월 이내에 성토해 주민을 위한 녹지공간을 조성하고 입암마을의 주 통행로에 설치될 교량 폭을 10m에서 12m로 확장키로 했으며, 입암마을 서측 끝에서 광주방향으로 길이 240m, 폭 3m의 농로를 개설해 주도록 했다.

임실=박정우·남원=신기철기자

10.2 X 17.8 cm

전북도-권익위 현장방문 민원 해결

임실군·남원 대강면서 주민 고충해결 조정회의

국민권익위원회 김영란 위원장과 한국수자원공사 대표, 임실군청과 전북도청 관계관, 그리고 섬진강 댐 수몰위기 주민들이 7일 오전 11시 임실군청 회의실에 모여 현지 주민들이 제기한 주거 안정 및 생계 대책 요구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1965년 섬진강댐 준공 시 인근으로 이주했던 주민들이 최근 댐 재개발사업으로 인한 생계기반을 또다시 잃을 위기에 놓여 있는 상황으로 다자기관 간 얽힌 민원에 대해 '현장조정회의'를 주재한 김영란 위원장은 협상 끝에 이주택지 공급과 생계용 특용작물 재배단지를 주민들에게 확보해 주기로 하는 합의를 이끌어 냈다.

같은 날 오후 3시 남원시 대강면사무소에서 남원부시장, 한국도로공사 대표, 관내 입암마을 주민, 김영란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들의 고충해결을 위한 조정회의가 열려 1984년 88고속도로 건설 당시 설치된 소형통로박스(4m)의 확장요구, 높은 교각으로 인한 조망권 피해 및 교통소음 등의 생활불편 민원을 해

결하기 위해서 김 위원장은 관계기관 대표들과 논의 끝에 출입구를 12m로 3배 확장함과 동시에 주차장과 체육시설 건립, 흙길농로의 콘크리트 포장 등을 해주기로 했다.

수 십 년이 된 두민원은 다자기관 간 머리를 맞대면 해결점을 찾을 수 있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

주민들이 오랫동안 고충을 겪어 왔다는 것은 어느 한 기관이 손대서 고칠 수 없었다는 말과 같다. 고충을 겪는 주민들 입장에서 합의점을 찾으려고 노력한다면 아무리 난해한 민원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전국적으로 보면 국민권익을 침해하는 민원들이 수없이 많을 것으로 행정기관의 입법 부당한 행정처분이나 일상생활의 불편사항은 누구든지 국민권익위원회에 호소할 수 있다.

접수방법은 국번 없이 110번으로 전화해도 되고 인터넷으로 '국민신문고'를 쳐서 안내를 받아도 된다. 물론 국민권익위원회(서울 서대문구 의주로)를 방문해도 가능하다.

전북본부/송정섭기자
swp2072@hanmail.net

10.3 X 15.5 cm

서울일보

"행복한 세상만들기" 시민과 함께하는 서울일보

국민권익위원회, 대강면 입암마을 고충민원 현장조정회의

서울일보 11-07-07 13:49 | 최종업데이트 11-07-07 13:49

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오후 3시 남원시대강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주민 고충민원 현장조정회의를 가졌다.

이날 조정회의는 국민권익위원회 김영란위원장, 남원시장 권한대행 김형만 부시장, 한국도로공사 김성환 건설본부장, 입암마을 주민대표 최영배 위원장 등 30여명의 관련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3월26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제기된 88고속도로 확장과 관련 입암마을 도로주변 경관개선 및 완충녹지시설 설치에 대한 고충민원 현장조정회의를 가졌다.

특히 이번 조정회의에서 국민권익위원회 김영란위원장은 입암마을, 한국도로공사, 남원시 등 고충민원 해결을 위해 노력해 원만하게 조정·합의됨에 따라 해결된 점 더욱 뜻 깊은 자리였고 남원이 발전될 수 있길 희망했다.

한편 김형만 권한대행은 인사말을 통해 “주민들의 애로사항이나 불편사항 등 각종 민원중에 고충민원은 많은 기관이 관련돼 좀처럼 해결하기가 어려운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88고속도로가 지나가는 대강 입암마을 앞 도로주변 경관개선 및 완충녹지시설 설치 관련 고충민원을 주민의 입장에서 관련기관과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어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앞으로 입암마을 발전을 기대한다”고 했다. 김동주기자

권익위, 임실·남원 현장방문 고충민원 해결

기사입력 2011-07-07 14:04 | 최종수정 2011-07-07 14:21

【남원=연합뉴스】이윤승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7일 전북 임실군과 남원시를 방문해 현장 조정으로 수십 년 묵은 민원을 해결했다.

권익위는 이날 오전 임실군을 방문하고 섬진강댐 재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생계기반을 잃게 된 운암면 쌍암리 일대 수몰 이주민 58명에게 이주택지와 특용작물 시설 구축지원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이들은 1965년 섬진강댐 건설 때 정부의 측량착오로 만수의 기준 이하이던 현재의 국유지로 집단 이주했으나 최근 추진 중인 다목적댐 재개발사업으로 90% 이상의 농경지가 침수되는 등 이주대상자가 됐지만, 보상액이 적고 대부분 고령으로 다른 지역에 이주해 생계를 꾸리기가 어려워 민원이 발생했다.

권익위는 김영란 위원장과 주민, 한국수자원공사, 임실군 등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현장 조정회의를 거쳐 이주택지 공급과 이주 후 정착,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조정안을 만들어 합의 를 이끌어냈다.

또 이날 오후에는 남원 부시장과 한국도로공사 대표, 마을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강면사무소에서 고충회의를 하고 20여년간 풀지 못 한 민원을 해결했다.

남원시 대강면 입암마을은 1984년 88고속도로 건설 당시 설치된 소형통로박스의 확장요구와 조망권 피해, 교통소음 등의 생활불편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관계기관 대표들과 협의 끝에 출입구를 확장하고 주차장과 체육시설 건립, 흙길 농로의 콘크리트 포장 등을 해주기로 중재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억울함이 없는 나라, 깨끗한 사회"를 목표로 노력하는 국민권익위원회는 앞으로도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며 국민의 권익증진을 위한 고충해결에 매진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love@yna.co.kr

88고속도로 '육지 섬' 남원 입암마을 27년 묵은 불편 해소 권익위, 마을 외부출입구 대폭 확장·공원조성 합의

2011년 07월 08일 (금) 김소영 기자 syong@constimes.co.kr

88 올림픽 고속도로 때문에 27년동안 교통소음 및 조망권 피해와 하나뿐인 출입구로 인한 고립 불편을 감수해온 전북 남원시 대강면 입암마을 주민 110명의 집단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 ACRC)의 현지중재로 해결됐다.

1984년 마을앞에 약 3m높이로 88고속도로가 생기면서 마을은 시야가 막히고, 외부로 드나들 수 있는 유일한 출입구인 통로박스 마저 폭 4m, 높이 3.5m 규모로 작게 만들어지면서 주민들은 오랫동안 소음과 매연 등의 환경피해와 대형 차량 및 농기계를 진출입시킬 수 없는 생활불편을 겪어왔다.

여기에 최근 설상가상으로 88고속도로가 2차로에서 4차로으로 확포장되면서 도로 높이가 당초보다 약 5m(성토 3m + 방음벽 2m) 정도 더 높아지게 되자 주민들은 도로 선형을 변경하거나 성토부 약 200m를 교량형태로 교체시공해달라며 한국도로공사에 요구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 3월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신청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7일 오후 3시 남원시 대강면사무소에서 김영란 위원장이 직접 민원인인 마을주민들과 김형만 남원시부시장, 김성환 한국도로공사 건설본부장 등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중재를 시도해 합의안을 성사시켰다.

합의안에 따라 ▲ 88고속도로와 마을 사이에 있는 저지대 농지를 도로공사가 매수해 고속도로가 완공되는 2015년 12월까지 마을주민들을 위한 주차장으로 만들고, 이후 남원시는 공원을 조성해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휴게시설을 설치하며, ▲ 주민들이 다니는 현재의 진출입로를 12m 넓이로 확장하고, ▲ 250m 길이의 마을앞 비포장 농로도 폭 3m 넓이로 콘크리트 포장이 가능하게 됐다.

이번 조정회의를 주재한 김위원장 "권익위가 관련기관들과 함께 수차례 협의한 결과 오랫동안 불편을 겪어온 마을주민들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되는 합의를 이끌어내게 된 것에 대해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 건설타임즈(<http://www.constimes.co.kr>)

전남 화순군 대리지구 교차로 개선공사로 주민불편 해결

민원번호 : 2BA-1106-204455(교통도로원과, 배중배 조사관)

(‘11. 8. 11.)

민원개요

전남 화순 대리지구 국도 22호선 교차로 개선 공사로 인해 마을 진출입 교차로가 단절되어 통행이 불편하게 되니, 마을 앞 농기계 통행차로, 가감속차로 설치 등 진출입이 가능한 교차로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에 대해 마을의 교차로 개선사업 타당성 조사를 통해 민원을 해소하도록 조정 중재

1 당사자

- 신 청 인 : 전남 화순군 화순읍 대리 ○○○ 등 2,435명
- 피신청인 : 광주국도관리사무소장
- 관계기관 : 전라남도 화순군수

2 민원내용

- 국도 22호선 화순 대리지구 교차로 개선공사(이하 ‘이 민원 공사’라 한다)로 인해 마을 진출입로가 단절되는바, 아래 3가지 사항 요구
- ① 대리1구 마을 진출입 교차로 설치
- ② 대리1, 2, 3구 마을 앞의 농기계 통행로 및 가감속차로 설치
- ③ 화순공설운동장 방향에서 석재공장 방향으로 진출입 교차로 설치

3 피신청인 등 의견

가. 광주국도관리사무소장

- 이 민원 공사는 당초 지하차도로 발주되었으나 대리 1구 마을 진출입로 및 공설운동장 진출입 교차로가 차단됨에 따라 집단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09. 9. 28. 공사착공 이후부터 2년이 지난 현재까지 공사 중지 상태임.

- 민원해소를 위하여 주민설명회를 3회 개최한 바 있고, 민원 해결, 사업의 용이성, 경제성 및 주변구조물(화순천교 등)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고가차도로 시행 예정
 -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마을 진출입로, 농기계 통행로 및 가감속차로, 화순공설운동장 진출입 설치요구의 모든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고가차도로 시행

나. 화순군수

- 설계가 확정되면 공사 진행이 원활하도록 적극 협조할 것임

4 주요 쟁점사항

- 마을교차로 개선사업 타당성 여부

5 갈등 분석

가. 민원발생배경 및 주요사실관계

- 이 민원 공사는 당초 지하차도로 발주되었으나 대리 1구 마을 진출입 교차로 및 화순공설운동장 방향에서 석재공장 방향으로 진출입 교차로가 차단됨에 따라 집단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었다. 그동안 민원해소를 위한 주민 설명회를 3회 실시하였지만 3가지 민원을 해결하는 방안을 찾지 못해 지금까지 공사가 중지된 상태이다.
- 민원 해결, 사업의 용이성, 경제성 및 주변구조물(화순천교 등)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고가차도로 공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 신청취지 중 ①, ② 요구사항은 지하차도 또는 고가차도 관계없이 모두 해결 가능
- 신청취지 중 ③ 요구사항은 고가차도로 시공할 경우 해결 가능하나, 지하차도로 시공할 경우 화순공설운동장 진출입 교차로와 190m거리에 위치한 화순천교로 인해 법적 경사도(4%)보다 높게(9%) 되어 불가능

※ 교차로 입체화(고가 또는 지하) 방안에 대한 주민간 이견으로 2년여 동안 공사 담보 상태(○○○ 등 2,435명이 총 5차례 민원 신청

나. 해결 목표

- 국도22호선 화순 대리지구 교차로 개선 공사에 따른 마을 진출입 교차로 설치 등에 관한 개선방안 모색

6 갈등해결과정

가. 진행과정 개요

- 2010. 9. 29. : 진출입로 및 농기계 통행로 등 설치 요구 민원 제기
- 2010. 12. 17. : 고가차로 반대 민원 제기
- 2011. 1. 26. : 고차차로 반대 민원 제기
- 2011. 1. 27. : 진출입로 및 농기계 통행로 등 설치 요구 민원 제기
 - ※ 2011. 2. 17. 1차 실지조사 : 기존 철도로 인하여 화순공설운동장 진출입을 위한 교차로 설치 곤란함을 설명
 - ※ 2011. 3. 8. 출석조사 : 마을 주민들의 요구조건 반영 방안 협의
- 2011. 3. 21. : 고충민원 신청서 취하
 - ※ 마을 주민 간 갈등을 이유로 취하서 제출(대리 1구 주민 : 고가차도 요구, 대리 2, 3구 주민 : 지하차도 요구)
- 2011. 6. 27. : 고가차도 반대 민원 제기
 - ※ 2011. 8. 1. 2차 실지조사 : 신청인, 피신청인, 관계기관과 협의(민대민 갈등 해소)

7 조정 (합의) 결과

가. 조정 · 합의 최종결과

- 신청인들이 모두 동의하는 건설기술자를 선정하여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이 민원 공사 설계를 확정 후 공사를 진행하기로 합의

나. 위원회 조정·합의문

- 신청인은 2011. 8. 26.까지 피신청인이 작성한 이 민원 공사 설계서에 대한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의한 특급 기술자 또는 고급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건설기술자를 선정(이하 ‘이 민원 건설 기술자’라 한다)한다.
- 피신청인은 2011. 8. 29.까지 이 민원 건설기술자에게 대리교차로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시행하도록 하고, 용역 내용은 대리1구 마을 진출입 교차로, 대리 1, 2, 3구 마을 앞의 농기계 통행차로 및 가감속차로, 화순공설운동장 방향에서 석재공장 방향으로 진출입이 가능한 교차로 설치가 모두 가능한 최선의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며, 용역기간은 2011. 9. 2.까지로 한다.
- 신청인들, 피신청인 및 관계기관은 이 민원 건설기술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용역 검토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용역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 관계기관은 피신청인이 이 민원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가로등 이설, 가로수 이식 등 제반사항에 적극 협조한다.

8 수용-이행 여부 및 시사점

가. 신청인-피신청인 수용 및 이행여부

- '11. 8. 26. : 건설기술자 선정완료
- '12. 8. 29. : 선정된 기술자와 용역계약 완료
- '11. 9. 17. : 용역결과 발표(용역결과를 수용기로 합의한 사항임)

나. 시사점

- 마을 주민들(2,435여 주민)과 시공사간 갈등으로 장기간(2년째) 중단됐던 도로 공사를 위원회에서 주민들과 관련기관들과 함께 지난 해 9월부터 약 1여 년 동안 수차례 실지조사 및 출석조사를 실시하고 협의한 결과임
 - 자칫 주민간의 갈등 심화와 화순군 발전의 저해 요인을 될 수도 있었던 사안이었음
 - 권익위가 사회적 갈등 조정자로서 민원을 조정 중재하여 주민의 민원을 해소하고 정책사업(도로공사)를 계속하여 추진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대안을 끌어냄으로써 이해당사자 모두 win-win 하는 결과 도출

화순 대리지구 교차로 개선공사 재개될 듯 주민-기관 갈등으로 2년간 중지..권익위 중재

기사입력 2011-08-11 18:17

【화순=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교차로 개설 문제로 주민과 기관이 갈등을 빚어 2년째 중단됐던 전남 화순군 대리지구 교차로 개선공사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재개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는 11일 오후 화순군청에서 김영란 위원장 주재로 주민과 홍이식 군수, 박광철 광주국도관리사무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도 22호선 화순 대리지구 교차로 개선공사 문제에 대해 합의안을 도출했다.

합의안은 마을 대표들이 교차로 설계의 타당성을 검토할 기술자를 직접 정하고, 선정된 기술자가 9월 20일까지 설계안을 마련하면 주민과 발주청인 광주국도관리사무소 측은 이의 없이 이를 수용키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광주국도관리사무소는 지난 2009년 화순 대리지구 교차로를 지하차도로 착공했으나 화순 공설운동장에서 석재공장 방향으로 진출입 교차로를 만들어 달라는 주민의 민원에 최근 고가차도로 설계를 변경했다.

그러나 고가차도를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이 지하차도를 요구하며 주민끼리도 갈등을 빚어 현재까지 공사가 중지된 상태다.

김 위원장은 "이번 합의는 권익위가 주민들 및 관련기관들과 함께 지난해 9월부터 약 1년여 동안 수차례 실지조사와 출석조사를 하고 협의한 결과"라며 "자칫 주민 간의 갈등 심화와 화순군 발전의 저해 요인이 될 수도 있었는데 원만히 해결하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areum@yna.co.kr

화순 대리지구 교차로 집단민원 중재한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

기사입력 2011-08-11 15:45



【서울=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 김영란 위원장(가운데)이 11일 오후 화순군청에서 국도 22호선 화순 대리지구 교차로 공사에 대해 마을대표들이 직접 선정한 기술자가 설계타당성을 검토하는 합의안을 성사시킨 후 관계자 및 지역주민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1.8.11 <국민권익위원회>

화순 대리 교차로 개선공사 재개될듯

국민권익위, 중재로 9월 20일까지 설계안 마련시 주민 등 수용키로

2011-08-11 오후 10:27:11



▲ 11일 화순군청 회의실에서 김영란 권익위원장 주재로 합의안 도출 뒤 기념촬영.

주민 민원 등으로 2년째 중단됐던 국도 22호선 화순 대리지구 교차로 개선공사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는 김영란 위원장 주재로 11일 화순군청에서 지역주민들과 홍이식 군수, 박광철 광주국도관리사무소장 등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국도 22호선 화순 대리지구 교차로 개선에 따른 마을 진출입 교차로 설치 등 요구 민원(신청인 대표 김00외 2,434명)에 대해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이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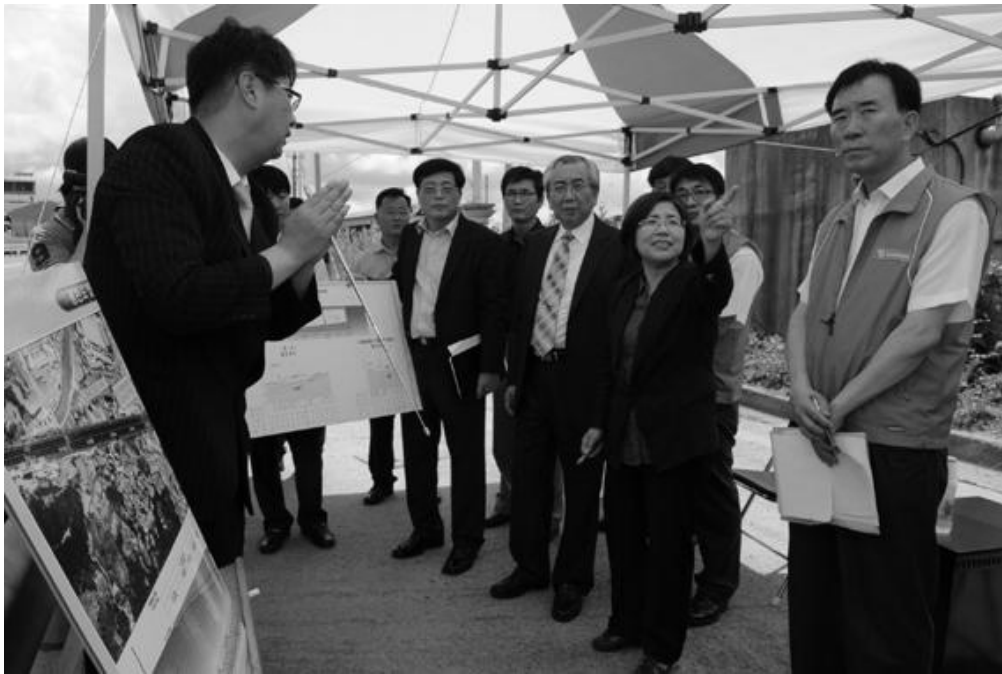
권익위에 따르면 합의안은 마을 대표들이 교차로 설계의 타당성을 검토할 기술자를 직접 선정하고, 선정된 기술자가 9월 20일까지 설계안을 마련하면 주민과 발주청인 광주국도관리사무소측은 이의 없이 이를 수용키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광주국도관리사무소는 당초 화순 대리지구 교차로를 지하차도로 착공했으나 지난해 9월 화순 공설운동장 방향에서 석재공장 방향으로 진출입 교차로 신설을 요구하는 민원인으로 최근 고가차도로 설계를 변경했다.

하지만 같은해 12월과 올해 1월과 6월 등 고가차도를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이 지하차도를 요구하며 주민들끼리도 갈등을 빚어 현재까지 공사가 중지된 상태다.

이번 조정회의를 주재한 국민권익위원회 김영란 위원장은 “이번 합의는 권익위가 주민들 및 관련기관들과 함께 지난 해 9월부터 약 1년여 동안 수차례 실지조사 및 출석조사를 통해 협의한 결과로, 자칫 주민간의 갈등 심화와 화순군 발전의 저해 요인이 될 수도 있었다”며 “원만히 해결될 수 있게 되어서 다행이다”고 밝혔다.

합의안에 따라 교차로 설계 타당성 검토 용역이 마무리되면, 이르면 2014년에 화순 대리지구 교차로가 입체로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대리교차로에서 김영란 위원장의 현지 확인 모습.

자본시장 탐사보도의 중심

프라임경제

전남 화순대리지구 교차로 공사 재개될 듯

권익위, 조정중재로 민민관(民民官) 갈등 해결 물꼬

입력 2011.08.11 16:12:02 장철호 기자 | jch2580@gmail.com

【프라임경제】 마을 주민들과 관계기관간 갈등으로 2년째 중단됐던 국도 22호선 화순 대리지구 교차로 개선공사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 ACRC)의 현장중재로 재개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는 김영란 위원장 주재로 11일 오후 2시 전남 화순군청에서 지역주민들과 홍이식 군수, 박광철 광주국도관리사무소장 등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국도 22호선 화순 대리지구 교차로 개선에 따른 마을 진출입 교차로 설치 등 요구 민원(신청인 대표 김00외 2,434명)에 대해 합의안을 도출했다.

합의안은 ▲ 마을 대표들이 교차로 설계의 타당성을 검토할 기술자를 직접 선정하고, ▲ 선정된 기술자가 9월 20일까지 설계안을 마련하면 주민과 발주청인 광주국도관리사무소측은 이의 없이 이를 수용키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광주국도관리사무소는 당초 화순 대리지구 교차로를 지하차도로 착공했으나 화순공설운동장 방향에서 석재공장 방향으로 진출입 교차로가 해결되지 않아 주민들과 갈등을 빚어 왔으며, 이를 해결하고자 최근 고가차도로 설계를 변경했다.

하지만 고가차도를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이 지하차도를 요구하며 주민들끼리도 갈등을 빚어 현재까지 공사가 중지된 상태이다.

이번 조정회의를 주재한 국민권익위원회 김영란 위원장은 “이번 합의는 권익위가 주민들 및 관련기관들과 함께 지난 해 9월부터 약 1년여 동안 수차례 실지조사 및 출석조사를 실시하고 협의한 결과로, 자칫 주민간의 갈등 심화와 화순군 발전의 저해 요인이 될 수도 있었던 일인데 원만히 해결될 수 있게 되어서 다행이다”고 밝혔다.

합의안에 따라 교차로 설계 타당성 검토 영역이 마무리되면, 이르면 2014년에 화순 대리지구 교차로가 입체로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화순 대리지구 교차로 개선공사 재개

국민권익위 주민 갈등 중재 합의안 도출

국도 22호선 화순 대리지구 교차로 개선공사(광주일보 7월 3일 10면)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의 현장중재로 2년만에 재개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는 김영란 위원장 주재로 11일 화순군청에서 지역주민들과 홍이식 군수, 박광철 광주 국도관리사무소장 등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국도 22호선 화순 대리지구 교차로 개선에 따른 마을 진출입 교차로 설치 등 요구 민원에 대해 합의안을

도출했다.

합의안은 ▲마을 대표들이 교차로 설계의 타당성을 검토할 기술자를 직접 선정하고 ▲선정된 기술자가 9월 20일까지 설계안을 마련하면 주민과 발주청인 광주 국도관리사무소는 이의 없이 이를 수용하기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광주 국도관리사무소는 당초 화순 대리지구 교차로를 지하차도로 착공했으나 화순공설운동장 방향에서 석

재공장 방향으로 진·출입 교차로가 해결되지 않아 주민들과 갈등을 빚어 왔으며, 이를 해결하고자 최근 고가차도로 설계를 변경했다. 하지만 고가차도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지하차도를 요구하며 주민들끼리도 갈등을 빚어 현재까지 공사가 중지된 상태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이번 합의안에 따라 교차로 설계 타당성 검토 용역이 마무리되면 이르면 2014년에 화순 대리지구 교차로가 입체로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정운수기자 unsu@

15.5 X 8.4 cm

광남일보

2011년 08월 12일 (금)
11면 사회

화순 대리지구 교차로 개선공사 재개될 듯 주민-기관 갈등으로 2년간 중지...권익위 중재

교차로 개설 문제로 주민과 기관이 갈등을 빚어 2년째 중단됐던 화순군 대리지구 교차로 개선공사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재개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는 11일 오후 화순군청에서 김영란 위원장 주재로 주민과 홍이식 군수, 박광철 광주국도관리사무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도 22호선 화순 대리지구 교차로 개선공사 문제에 대해 합의안을 도출했다. 합의안은 마을 대표들이 교차로 설계의 타당성을 검토할 기술자를 직접 정하고, 선정된 기술자가 9월 20일까지 설계안을 마련하면 주민과 발주청인 광주국도관리사무소는 이의 없이 이를 수용하기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광주국도관리사무소는 지난 2009년 화순 대리지구 교차로를 지하차도로 착공했으나 화순 공설운동장에서 석재공장 방향으로 진출입 교차로를 만들어 달라는 주민의 민원에 최근 고가차도로 설계를 변경했다. 그러나 고가차도를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이 지하차도를 요구하며 주민끼리도 갈등을 빚어 현재까지 공사가 중지된 상태다.

김 위원장은 “이번 합의는 지난해 9월부터 약 1년여 동안 수차례 실지조사와 출석조사를 하고 협의한 결과”라며 “자칫 주민간의 갈등 심화와 화순군 발전의 저해 요인이 될 수도 있었는데 원만히 해결하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중부권본부/화순=김영균 기자

10.0 X 10.3 cm

화순 대리 교차로 공사 재개 전망

권익위 중재... 마을 진출입 교차로 설치 등 요구 합의

마을 주민들과 관계기관간 갈등으로 2년째 중단됐던 국도 22호선 화순 대리지구 교차로 개선공사가 국민권익위원회 중재로 재개될 전망이다.

권익위에 따르면 김영란 위원장 주재로 11일 오후 화순군청에서 지역주민들과 홍이식 군수, 박광철 광주국도관리사무소장 등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국도 22호선 화순 대리지구 교차로 개선에 따른 마을 진출입 교차로 설치 등 요구 민원에 대해 합의안을 도출했다.

합의안은 마을 대표들이 교차로 설계의 타당성을 검토할 기술자를 직접 선정하고 선정된 기술자가 9월 20일까지 설계안을 마련하면 주민과 발주청인 광주국도관리사무소측은 이의 없이 이를 수용기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합의안에 따라 교차로 설계 타당성 검토 영역이 마무리되면 이르면 2014

년 화순 대리지구 교차로가 입체로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국도관리사무소는 당초 화순 대리지구 교차로를 지하차도로 착공했으나 화순공설운동장 방향에서 석재공장 방향으로 진출입 교차로가 해결되지 않아 주민들과 갈등을 빚어 왔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고가차도로 설계를 변경했다.

하지만 고가차도를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이 지하차도를 요구하며 주민들끼리도 갈등을 빚어 현재까지 공사가 중지된 상태이다.

김 위원장은 “이번 합의는 권익위가 주민들과 관련기관들과 함께 지난해 9월부터 약 1년여 동안 수차례 실지조사 및 출석조사를 실시하고 협의한 결과로 자칫 주민간의 갈등 심화와 화순군 발전의 저해 요인이 될 수도 있었던 일인데 원만히 해결될 수 있게 돼 다행이다” 고 밝혔다. 화순=김선중 기자

11.0 X 12.7 cm

충북 옥천군 이백삼거리 고속도로 통로박스(굴다리) 확장 합의

민원번호 : 2BA-1105-026834(교통도로민원과, 최응환 조사관)

(‘11. 9. 5.)

민원개요

국도 4호선과 군도 15호선을 연결하는 충북 옥천군 군북면 이백삼거리의 경부고속도로 및 경부선 철도의 통로박스가 협소하여 통행불편과 교통정체를 일으키고 있으니, 통로박스를 차량 교행이 가능하도록 확장해 달라는 민원에 대해 통로박스 추가신설 및 사업비를 관계기관이 각 각 분담하도록 조정 중재하여 합의

1 당사자

- 신 청 인 : 충북 옥천군 군북면 추소리 ○○○외 500명
- 피신청인 : 충청북도 옥천군수,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2 민원내용

- 국도 4호선과 군도 15호선을 연결하는 충북 옥천군 군북면 이백삼거리의 경부고속도로 및 경부선 철도의 통로박스가 협소하여 통행불편과 교통정체를 일으키고 있으니, 통로박스를 차량 교행이 가능하도록 확장 요구

3 피신청인 등 의견

가. 옥천군수

- 열악한 군 재정으로 인하여 해결할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간 사업비 공동부담으로 추진되어야 함

나. 한국도로공사

- 2004. 9. 지역주민들의 요구로 통로박스를 기존대로 존치하고 선형개량으로 인한 폐고속도로와 군도 15호선 연결도로 700m를 설치하였으므로, 옥천군의

예산으로 시행해야 함

다. 한국철도시설공단

- 「건널목 입체교차화 비용부담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공단 75%, 옥천군 25%의 사업비를 분담해야 함

4 주요 쟁점사항

- 통로박스 확장 또는 추가 설치
- 시설비용 분담

5 갈등 분석

가. 민원발생배경 및 주요사실관계

- 충북 옥천군 군북면 이백삼거리 지점에 나란히 위치한 경부고속도로와 경부선 철도의 통로박스는 국도 4호선과 군도 15호선의 접속로이고, 군북면 환평리, 추소리, 이평리 등을 통행하는 주요 통로이나,
 - 통로박스의 폭이 4.3 ~ 4.5m로 협소하여 일방통행을 할 수 밖에 없어, 박스 입구에서 대기했다가 번갈아가며 통과하는 실정이고, 특히 철도 통로박스는 높이가 3.4m에 불과해 대형차량 진출입 불가
 - 군도 15호선과 연결된 폐고속도로가 대전~ 옥천 간 통행로로 활용되면서 종래보다 출퇴근 시간이나 휴일의 교통정체가 더욱 심해졌고(통로박스 평균 통행량 : 3,044대/일), 좁은 통로를 차와 사람이 같이 이용하다보니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함

나. 해결 목표

- 상습정체와 통행불편, 교통사고 위험 해소를 위해 경부고속도로와 경부선 철도의 기존 통로박스를 차량 교행이 가능하도록 확장하기 위한 최적의 해법 마련
 - 모두가 win-win 할 수 있는 갈등 해결 방안 창출

6 갈등해결과정

가. 진행과정 개요

- '11. 5. 4. : 통로박스 확장 요구 민원 제기
- '11. 6. 16. : 현장조사 실시
- '11. 7. 14. : 1차 출석조사 실시
- '11. 7. 15. ~ 8. 5. 통로박스 확장에 따른 기술검토 실시
- '11. 8. 10. : 2차 출석조사 실시
- '11. 8. 11. ~ 8. 12. : 위원회 조정안 협의 및 수용
- 4회에 걸친 현장방문과 30여 차례 협의를 통해 합의안 마련

나. 대안제시

- 경부고속도로 통로박스 추가신설(폭 4.5m, 높이 4.5m) 및 사업비는 옥천군 20억 원 정액부담, 나머지 비용은 한국도로공사에서 부담
- 경부선 철도 통로박스 확장(폭 8m, 높이 4m) 및 사업비는 옥천군과 한국철도시설공단 각각 25%와 75% 부담하는 것으로 조정 추진
※ 「건널목 입체교차화 비용부담에 관한 규칙」 제3조 참조

7 조정 (합의) 결과

가. 조정 · 합의 최종결과

- 경부고속도로 통로박스는 추가신설(폭 4.5m, 높이 4.5m)하고, 경부선 철도 통로박스는 폭 8m, 높이 4m로 확장, 경부고속도로 통로박스 추가설치비는 옥천군이 20억 원을 정액부담하고, 나머지 비용은 한국도로공사에서 부담하며, 경부선 철도 통로박스 확장공사비는 옥천군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5%와 75%를 부담하고, 국도 4호선 연결부 가감속차로 시설개선공사비는 보은국도관리사무소에서 부담, 고속도로와 철도 통로박스 간 연결도로는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최대한 완만하게 하고, 이용차량의 안전을 위해 미끄럼방지시설 등 안전시설 설치, 철도 통로박스의 바닥면이 낮아짐에 따라 노면수 유입량 증가에 대비한 배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국도 4호선 연결부 가감속차로에 대해 시설개선

나. 위원회 조정·합의문

- 경부고속도로 통로박스의 확장사업비는 충청북도 옥천군수가 20억 원을 정액 부담하고, 나머지 비용은 한국도로공사가 부담하며, 경부선 철도 통로박스의 확장사업비는 충청북도 옥천군수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철도 횡단구간 및 철도시설보호를 위한 필요적 시설에 한하여 「건널목 입체교차화 비용부담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각 25%와 75%를 분담한다.
- 한국도로공사는 경부고속도로 통로박스와 같은 규모의 폭 4.5m, 높이 4.5m의 통로박스를 추가신설하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은 폭 4.3m, 높이 3.4m의 경부선 철도 통로박스를 폭 8m, 높이 4m로 확장한다.
- 경부고속도로 통로박스와 경부선 철도 통로박스 간 연결도로의 경우 고속도로 부지 내 도로는 한국도로공사가 설치하고, 나머지 연결도로 부분은 충청북도 옥천군수가 설치하며, 연결도로 종단경사는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최대한 완만하게 하고, 이용차량의 안전을 위해 미끄럼방지시설 등 안전시설을 설치한다.
-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경부선 철도 통로박스의 바닥면이 낮아지는 점을 감안하여 노면수 유입량 증가 등에 대비한 배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경부선 철도 통로박스 확장에 따른 국도 4호선 연결부 곡선반경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하도록 한다.
- 보은국도관리사무소장은 철도 횡단구간(옹벽 포함)을 제외한 국도 4호선 연결부 가감속차로 시설개선 공사비를 부담하고, 시설개선공사는 공사의 효율성을 위해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일괄시행하며, 시설개선공사에 따른 편입 사유지나 지장물 발생 시 협의 및 보상은 충청북도 옥천군수가 부담한다.
- 충청북도 옥천군수는 경부고속도로 통로박스와 경부선 철도 통로박스 확장사업에 따른 제반 인·허가업무를 주관하여 처리한다.
- 신청인은 통로박스 확장공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고, 공사 중 부득이 발생하는 통행불편에 대하여는 피신청인과 관계기관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8 수용-이행 여부 및 시사점

가. 신청인-피신청인 수용 및 이행여부

- '11. 12. 6. : 한국철도시설공단 위수탁협약체결
- '12. 5. : 한국도로공사 위수탁협약체결

- '12. 12. : 설계 완료 예정
- '14. 12. : 공사 완료 예정

나. 시사점

- 그 동안 협소한 통로박스로 인해 지역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 왔으나, 관련기관들의 양보와 협조로 차량이 교행할 수 있을 정도로 통로박스가 확장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통행환경이 다소나마 개선된 것에 대해 뜻 깊게 생각한다.
- 이번 현장조정을 통해 통로박스 확장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련 기관들이 현장조사와 여러 차례의 협의를 통해 함께 노력하고 양보하고 협력하여 만들어낸 소통의 결과임
- 국책사업 추진에 앞서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 사업 초기에 반영하여 민원발생 예방 및 민원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지출을 예방하는 노력이 요구됨
- 위치도



- 현장사진



옥천 이백굴다리 60여년 만에 확장

기사입력 2011-09-05 14:31 | 최종수정 2011-09-05 14:49

【옥천=연합뉴스】 박병기 기자 = 충북 옥천군 군북면 이백리 경부고속도로와 경부선철도를 횡단하는 '이백굴다리'가 60여년 만에 확장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5일 오전 11시 군북면사무소에서 옥천군·한국도로공사·한국철도시설공단·보은국도관리사무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대식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이 굴다리 확장을 위한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고속도로 굴다리의 경우 현재와 같은 크기(폭·높이 각 4·5m)로 1곳을 새로 설치하고, 철도 굴다리(폭·높이 각 4·5m)는 폭 8m로 확장하는 데 합의했다.

100여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공사비는 고속도로 굴다리의 경우 옥천군이 20억원만 부담하는 조건으로 나머지는 한국도로공사가 떠맡기로 했고, 철도 굴다리는 옥천군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5대 75의 비율로 부담기로 약속했다.

굴다리와 연결된 국도 4호선의 가속·감속 차로 공사비는 전액 보은국도관리사업소가 부담하기로 했다.

권익위 김 부위원장은 "비좁고 경사진 굴다리 때문에 주민들의 교통불편이 컸을 것"이라며 "뒤늦게나마 불편이 해소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1942년과 1970년 각각 설치된 이곳의 철도와 고속도로 굴다리는 군북면 추소·한평 주민들의 유일한 통행로로 사용되다가 2004년 옛 경부고속도로와 연결되면서 하루 통행차량이 3천여대를 웃돌 정도로 교통이 복잡해졌다.

그러나 굴다리가 비좁아 차량교행이 불가능하고 도로의 경사도 심해 사고위험이 높아 주민들은 지난 5월 국민권익위원회에 굴다리를 확장을 요구하는 민원을 냈다.

권익위, 옥천 이백굴다리 확장 조정회의

기사입력 2011-09-05 14:04



【옥천=연합뉴스】 박병기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5일 충북 옥천군 군북면사무소에서 옥천군·한국도로공사·한국철도시설공단·보은국도관리사무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백굴다리 확장을 위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있다. 2011.9.5
 bgipark@yna.co.kr

민원현장 찾은 국민권익위원회

기사입력 2011-09-05 14:05 | 최종수정 2011-09-05 14:57



【옥천=연합뉴스】 박병기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들이 5일 충북 옥천군 군북면 이백 굴다리 민원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권익위는 이날 현장조정회의를 통해 이 굴다리 확장을 위한 관계기관 합의를 이끌어냈다. 2011.9.5

bgipark@yna.co.kr

〈연합뉴스 모바일앱 다운받기〉 〈포토 매거진〉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합의서 전달하는 김대식 부위원장

기사입력 2011-09-05 14:17



【옥천=뉴스시스】 5일 오전 충북 옥천군 군북면사무소에서 60여년전 세워진 경부선 철도와 경부고속도로의 낡고 협소한 이백삼거리 소재 통로박스 확장 민원을 해결한 후 김대식(왼쪽)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합의서를 민원인에게 전달하고 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제공)

photo@newsis.com



국민권익위원회 김대식 부위원장(가운데)이 5일 마을주민 500여명이 확장 민원을 제기한 충북 옥천군 군북면 이백삼거리 통로바스를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옥천 '이백굴다리' 확장된다

국민권익위·도공 등 관계기관과 폭 8m 늘리기로

옥천군 군북면 이백리 경부고속도로와 경부선철도를 횡단하는 '이백굴다리'가 60여년 만에 확장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5일 군북면사무소에서 옥천군·한국도로공사·한국철도시설공단·보은국도관리사무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대식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굴다리 확장을 위한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고속도로 굴다리의 경우 현재와 같은 크기로 1곳을 새로 설치하고, 철도 굴다리는 폭 8m로 확장하는 데 합의했다.

100여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공사비는 고속도로 굴다리의 경우 옥천군이 20억원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한국도로공사가 떠맡기로 했고, 철도 굴다리는 옥천군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5대 75의 비율로 부담하기로 약속했다.

굴다리와 연결된 국도 4호선의 고속·감속 차로 공사비는 전액 보은국도관리사무소가 부담기로 했다.

권익위 김 부위원장은 "비좁고 경사진 굴다리 때문에 주민들의 교통불편이 컸는데 늦게나마 불편이 해소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1942년과 1970년 각각 설치된 철도와 고속도로 굴다리는 군북면 추소·한평 주민들의 유일한 통행로로 사용되다가 2004년 옛 경부고속도로와 연결되면서 하루 통행차량이 3000여대를 웃돌 정도로 교통이 복잡해졌으나 굴다리가 비좁아 차량교행이 불가능하고 도로의 경사도 심해 사고위험이 높아 주민들이 지난 5월 국민권익위원회에 굴다리를 확장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옥천=박승룡기자

10.2 X 31.0 cm

옥천 이백삼거리 통로박스 확장

폭 협소해 교통정체... 잇단 민원제기
권익위, 현장회의 열어 조정 합의
사고위험 감소 등 통행환경 개선 기대

경부선 철도와 경부고속도로의
넓고 협소한 통로박스 때문에 불
편을 겪어오던 옥천군 군북면 주
민 500여 명의 고충이 국민권익위
원회(위원장 김영란)의 현장조정
으로 해결됐다.

권익위는 5일 오전 11시 옥천군
군북면사무소에서 지역주민들과
옥천군,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
시설공단, 보은국도관리사무소 등
이해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김대식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경부고속도로
통로박스는 추가로 신설(폭 4.5m,
높이 4.5m) △경부선 철도 통로박
스는 폭 8m, 높이 4m로 확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현장조정 했다.

또 예산도 같이 조정해 경부고
속도로 통로박스 추가설치비는 옥
천군이 20억 원을 정액부담하고,
나머지 비용은 한국도로공사에서
부담하기로 했다.

경부선 철도 통로박스 확장공사
비는 옥천군과 한국철도시설공단
이 각각 25%와 75%를 국도 4호선
연결부 가·감속차로 시설개선공

사는비는 보은국도관리사무소에서
각각 부담기로 했다. 또한 △고속
도로와 철도 통로박스 간 연결도
로는 주변여건을 고려해 최대한
완만하게 하고, 이용차량의 안전
을 위해 미끄럼 방지시설 등 안전
시설을 설치하게 된다.

철도 통로박스의 바닥면이 낮아
지는 것을 대비해 노면수 유입량
증가에 대비한 배수처리시설을 설
치하는 한편 국도 4호선 연결부의
가·감속차로에 대해 시설개선을
하기로 하는 내용도 같이 조정 합
의했다.

옥천군 군북면 이백삼거리 지점
에 나란히 위치한 경부고속도로와
경부선 철도의 통로박스는 국도 4
호선과 국도 15호선의 접속로이
고, 군북면 한평리, 주소리, 이평리
등을 통행하는 주요 통로다.

그러나 그동안 이 박스의 폭이
4.3~4.5m로 협소해 일방통행을 할
수 밖에 없어, 지나는 차량들이 박
스 입구에서 대기했다가 번갈아가
며 통과하는 실정이었다.

특히 철도 통로박스는 높이가
3.4m에 불과해 대형차량은 지나



5일 옥천군 군북면사무소에서 국민권익위원회 김대식 부위원장, 김영란 옥천
군수, 도로 및 철도시설 관계자, 주민 등이 참석해 경부선 철도와 경부고속도
로 통로박스 불편해소를 위한 조정합의를 하고 있다.

다니는 것이 불가능했고, 2005년
에 국도 15호선과 연결된 폐고속
도로가 대전~옥천 간 통행로로 활
용되면서 종래보다 출·퇴근 시간
이나 휴일의 교통정체가 더 심해
진데다 차와 사람이 같이 이용하
다보니 교통사고의 위험도 상존해
지난 5월 권익위에 주민들이 민원
을 제기한 바 있었다.

당초 한국도로공사는 과거 지역
주민들의 요구로 통로박스를 기존
대로 존치하고 선형개량으로 인한
폐고속도로와 국도 15호선 연결도
로 700m를 설치해 준 바가 있어,
이번 통로박스 확장요구에 대해
불가 입장을 고수해 왔고, 한국철
도시설공단은 통로박스의 바닥면
이 주변보다 낮아진다면 난색을
표해왔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그동안 현

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
해 통로박스 확장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계기관의
양보와 협조를 이끌어내면서 이번
에 통로박스 확장과 비용분담에
대한 합의에 성공했다.

국민권익위 김대식 부위원장은
“국도 4호선과 국도 15호선의 접
속로이고, 군북면 한평리, 주소리,
이평리 등을 통행하는 주요 통로
인 통로박스가 권익위 조정으로
차량이 교행할 수 있을 정도로 넓
어지게 돼 주민들의 통행환경이
다소나마 개선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안에 따라 통로박스
확장공사가 완공되면 옥천 지역의
대표적 상습정체구간이 원활히 소
통될 것으로 기대된다.

옥천/손근방기자
19.5 X 19.5 cm

이백 굴다리 수십년 만에 확장

옥천군, 현장조정회의 개최... 폭8m 높이 4m 확정

속보=옥천군 군북면 이백삼거리의 낡은 통로박스가 수 십년 만에 신실·확장된다.

<본보 8월 17일자 11면 보도>

국민권익위원회는 1942년과 1970년 이 지역에 각각 설치된 경부선 철도와 경부고속도로의 낡고 협소한 통로박스 때문에 생활에 불편을 겪는 주민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폭과 높이를 확장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권익위는 이날 오전 11시 군북면사무소에서 옥천군과 도로공사, 철도시설공단, 보은국도관리소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대식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경부고속도로 통로박스는 추가로 신실(폭 4.5m, 높이 4.5m)하고, 경부선 철도 통로박스는 폭 8m, 높이 4m로 확장키로 했다.

경부고속도로 통로박스 추가 설치비는 옥천군이 20여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비용은 도로공사에서 부담키로 조정했다.

경부선 철도 통로박스 확장 공사비는 옥천군과 철도시설공단이

각각 25%와 75%씩 부담하고 국도 4호선 연결부 가·감속차로 시설개선 공사비는 보은국도관리소에서 부담한다.

권익위 관계자는 "고속도로와 철도 통로박스 간 연결도로는 주변여건을 고려해 최대한 완만하게 하고 미끄럼 방지시설 등 안전시설과 배수처리 시설도 설치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국도 4호선과 국도 15호선의 접속로인 이 통로박스는 군북면 한평·추소·이평리 주민들이 통행했으나 폭이 4.5m로 비좁아 차량 교행이 불가능하고 사고위험이 상존했으며, 주민들은 지난 5월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김국기 / 옥천

kkk999@jbnnews.com

▶ 국민권익위원회는 5일 오전 군북면사무소에서 옥천군과 도로공사, 철도시설공단, 보은국도관리소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군북면 이백삼거리 공사와 관련한 현장조정회의를 열었다.



19.6 X 16.0 cm

이백삼거리 60년 통로박스 확장

권익위, 경부고속도로 추가신설·철도 확장키로... 옥천 군북면민 숙원 해결

1942년과 1970년에 각각 설치된 경부선 철도와 경부고속도로의 낡고 협소한 통로박스 때문에 불편을 겪어오던 충북 옥천군 군북면 주민 500여 명의 고충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관)의 현장조정으로 해결됐다.

권익위는 5일 옥천군 군북면사무소에서 지역주민들과 옥천군,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보은국도관리사무소 등 이해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김대식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경부고속도로 통로박스는 추가로 신실(폭 4.5m, 높이 4.5m)하고, ▲경부선 철도 통로박스는 폭 8m, 높이 4m로 확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현장조정에서 성공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같은 조정에 대한 예산도 같이 조정해 ▲경부고속도로 통로박스 추가설치비는 옥천군이 20여 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비용은 한국도로공사에서 부담하기로 했으며, ▲경부선 철도 통로박스 확장공사비는 옥천군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각각 25%와 75%를 부담하고, 국도 4호선 연결부 가감속차로 시설개선공사비는 보은국도관리사무소에서 부담하기로 조정했다.

옥천군 군북면 이백삼거리 지점에 나란히 위치한 경부고속도로와 경부선 철도의 통로박스는 국도 4호선과 국도 15호선의 접속로이고, 군북면 한평리, 추소리, 이평리 등을 통행하는 주요 통로인데, 그동안 이 박스의 폭이 4.3~4.5m로 협소해 일방통행은

할 수 밖에 없어, 지나는 차량들이 박스 입구에서 대기했다가 번갈아가며 통과하는 실정이었다.

특히 철도 통로박스는 높이가 3.4m에 불과해 대형차량은 지나다니는 것이 불가능했고, 2005년에 국도 15호선과 연결된 폐고속도로가 대전~옥천 간 통행로로 활용되면서 종래보다 출퇴근 시간이나 휴일의 교통정체가 더 심해진다. 차와 사람이 같이 이용하다보니 교통사고의 위험도 상존해 지난 5월 권익위에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바 있었다.

이번 합의안에 따라 통로박스 확장공사가 완료되면 옥천 지역의 대표적 상습정체구간이 원활히 소통될 것으로 기대된다.

옥천=이영복 기자 pungluin@



국가권익위원회 김대식 부위원장 일행이 옥천 군북면에 위치한 낡고 협소한 60년된 터널을 둘러보고 있다.

21.5 X 12.3 cm

이백삼거리 통로박스 확장

〈 옥천 〉

권익위 “폭 협소 탓 60년간 일방통행 등 불편”

국도 4호선 가·감속차로 시설개선 합의 도출도

1942년과 1970년에 각각 설치된 경부선 철도와 경부고속도로의 낡고 협소한 통로박스 때문에 불편을 겪어 오던 옥천군 군북면 이백삼거리 골다리가 넓어지면서 주민 500여 명의 불편이 사라지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5일 오전 11시 옥천군 군북면사무소에서 지역주민들과 옥천군,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보은국도관리사무소 등 이해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김대식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경부고속도로 통로박스는 추가로 신설(폭 4.5m, 높이 4.5m)하고, △경부선 철도 통로박스는 폭 8m, 높이 4m로 확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현장조정에 성공했다.

권익위는 이날 조정 과정에서 예산문제에 대해서도 경부고속도로 통로박스 추가설치비는 옥천군이 20억 원을 정액부담하고, 나머지 비용은 한국도로공사에서 부담하는 방안으로 조정했다.

또 경부선 철도 통로박스 확장공사비는 옥천군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각각 25%와 75%를 부담하고, 국도 4호선 연결부 가·감속차로 시설개선공사비는 보은국도관리사무소에서 부담하기로 조정했다.

권익위와 참석자들은 또 철도 통로박스의 바닥면이 낮아지는 것을 대비해 노면수 유입량 증가에 대비한 배수처리시설 설치와 함께 국도 4호선 연결부의 가·감속차로에 대해 시설개선을 하기로 하는 내용도

같이 조정해 합의를 이끌어냈다.

옥천군 군북면 이백삼거리 지점에 나란히 위치한 경부고속도로와 경부선 철도의 통로박스는 국도 4호선과 군도 15호선의 접속도로, 군북면 환평리, 추소리, 이평리 등을 통행하는 주요 도로로 기능하고 있다.

그러나 이 박스의 폭이 4.3~4.5m로 협소해 차량 한 대만이 겨우 지나는 일방통행을 할 수밖에 없어 지나는 차량들이 박스 입구에서 대기했다가 번갈아가며 통과하는 불편이 60여년 동안이나 지속돼 왔다. 이 때문에 지난 5월 권익위에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한국도로공사는 지역주민들의 요구로 통로박스를 기존대로 존치하고 선형개량으로 인한 폐고속도로와 군도 15호선 연결도로 700m를 설치했다는 이유로 이번 통로박스 확장요구에 대해 불가 입장을 고수해 왔다.

또 한국철도시설공단 역시 통로박스의 바닥면이 주변보다 낮아진 다며 난색을 표해 왔었다.

이날 현장조정회의를 주재한 국민권익위 김대식 부위원장은 “국도 4호선과 군도 15호선의 접속로이고, 군북면 환평리, 추소리, 이평리 등을 통행하는 주요 도로인 통로박스가 권익위 조정으로 차량이 교행할 수 있을 정도로 넓어지게 되어 주민들의 통행환경이 다소나마 개선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옥천 정규호기자

15.4 X 20.4 cm



국민권익위원회의 현장 조사와 조정을 통해 60년 묵은 옥천군 군북면 주민의 통행불편이 해소될 수 있게 됐다.

옥천군 이백삼거리 60년만에 확장

국민권익위원회 현장조정회의
경부고속도로 통로박스 추가 신설
경부선 철도 통로박스 확장키로

옥천군 군북면 이백리 경부고속도로와 경부선 철도를 횡단하는 '이백굴다리'가 60여년만에 확장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지난 1942년과 1970년에 옥천군 군북면 이백삼거리에 각각 설치된 경부선 철도와 경부고속도로의 넓고 협소한 통로박스 때문에 불편을 겪어오던 주민들의 고충을 현장조정으로 통로의 폭과 넓이를 확장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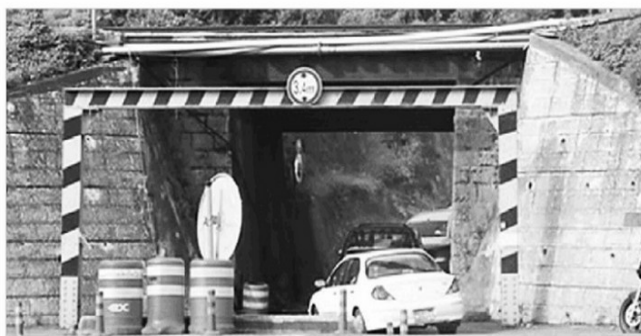
이에 국민권익위는 이날 오전 11시 군북면사무소에서 군과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보은국도관리사무소,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감대식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경부고속도로 통로박스는 추가로 신설(폭 4.5m, 높이 4.5m)하고, 경부선 철도 통로박스는 폭 8m, 높이 4m로 확장키로 했다.

또 경부고속도로 통로박스 추가 설치비는 군이 20억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비용은 한국도로공사에서 부담키로 조정했다.

아울러 경부선 철도 통로박스 확장 공사비는 군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각각 25%와 75%를 부담하고, 국도 4호선 연결부가·감속차로 시설개선 공사비는 보은국도관리사무소에서 부담한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고속도로와 철도 통로박스 간 연결도로는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최대한 완만하게 하고, 미끄럽



국민권익위 중재로 확장이 추진되는 옥천군 군북면 이백굴다리. 하루 3000여대의 차량이 통행하고 있지만 비좁고 경사가 심해 사고위험이 상존해왔다.



국민권익위원회 김대식 부위원장(가운데)이 5일 옥천군 군북면 이백굴다리 민원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권익위는 이날 현장조정회의를 통해 굴다리 확장을 위한 관계기관 합의를 이끌어냈다.

방지시설 등 안전시설과 배수처리 시설도 설치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국도 4호선과 군도 15호선의 접속로인 이 통로 박스는 군북면 환평리, 추소

리, 이평리 주민들이 통행 했으나 폭이 4.3~4.5m에 불과해 일방통행을 할 수 밖에 없는 등 그동안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해 왔다.

<옥천/손동균>

17.1 X 19.4 cm

옥천 '이백굴다리' 뱅 뚫린다

국민권익위, 확장 결정... 60년만에 결실

공사비 100억원 투입 높이 5m서 8m로

【옥천=충북 옥천군 군북면 이백리 경부고속도로와 경부선철도를 횡단하는 '이백굴다리'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60여년 만에 확장돼 주민들의 통행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5일 오전 11시 군북면사무소에서 옥천군·한국도로공사·한국철도시설공단·보은국도관리사무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대식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이 굴다리 확장을 위한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고속도로 굴다리의 경우 현재와 같은 크기(폭·높이 각 4·5m)로 1곳을 새로 설치하고, 철도 굴다리(폭·높이 각 4·5m)는 폭 8m로 확장하는 데 합의했다. 100여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공사비는 고속도로 굴다리의 경우 옥천군이 20억원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한국도로공사가 떠맡기로 했고, 철도 굴다리는 옥천군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5대 75의 비율로 분담하기로 약속했다.

굴다리와 연결된 국도 4호선의 가속·

감속 차로 공사비는 전액 보은국도관리사무소가 부담하기로 했다.

권익위 김 부위원장은 "비좁고 경사진 굴다리 때문에 주민들의 교통불편이 컸을 것"이라며 "뒤늦게나마 불편이 해소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1942년과 1970년 각각 설치된 이곳의 철도와 고속도로 굴다리는 군북면 추소·환평 주민들의 유일한 통행로로 사용되다가 2004년 옛 경부고속도로와 연결되면서 하루 통행차량이 3000여대를 웃돌 정도로 교통이 복잡해졌다. 그러나 굴다리가 비좁아 차량교행이 불가능하고 도로의 경사도 심해 사고위험이 높아 주민들은 지난 5월 국민권익위원회에 굴다리를 확장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옥천=황의택 기자 skyball@daegu.com

16.7 X 10.8 cm

충청투데이

2011년 09월 06일 (화)
17면 지역

옥천 이백삼거리 굴다리 '뱅뚫린다'

권익위, 관계기관 합의 이끌어내 60년만에 확장

통로폭 좁아 상습정체... 차량 일방통행 불편 해결

옥천지역의 대표적 교통상습지대로 많은 주민불편을 초래했던 옥천군 군북면 이백삼거리 60년된 통로박스가 군과 주민들의 노력으로 해결될 전망이다.

이백삼거리 통로박스는 지난 1942년과 1970년에 각각 설치된 경부선 철도와 경부고속도로의 넓고 협소한 이동통로로 옥천과 대전지역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줬던 구간으로 군북면 주민 500여 명이 고충해결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청하면서 이번 현장조정으로 해결됐다.

권익위는 5일 옥천군 군북면사무소에서 옥천군,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보은국도관리사무소 등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김대식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경부고속도로 통로박스 추가 신설(폭 4.5m, 높이 4.5m)을 비롯해 경부선 철도 통로박스 폭 8m, 높이 4m로 확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현장조정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옥천군 군북면 이백삼거리 지점에 나란히 위치한 경부고속도로와 경부선 철도의 통로박스는 국도 4호선과 국도 15호선의 접속로이고, 군북면 환평리, 추소리, 이평리 등을 통행하는 주요 통로로 그동안 박스의 폭이 4.3~4.5m로 협소해 일방통행을 할 수밖에 없어, 지나는 차량들이 박스 입구에서 대기했다가 번갈아가며 통과하는 실정이었다.

당초 한국도로공사는 통로박스를



국가권익위원회 관계자들이 5일 충북 옥천군 군북면 이백삼거리 민원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권익위는 이날 현장조정회의를 통해 이 굴다리 확장을 위한 관계기관 합의를 이끌어냈다. 옥천=황의택 기자

기존대로 존치하고 선형개량으로 인한 폐고속도로와 국도 15호선 연결도로 700m를 설치해 준 바가 있어, 이번 통로박스 확장요구에 대해 불가압장을 고수해 왔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은 통로박스의 바닥면이 주변보다 낮아 진다며 난색을 표해왔다.

권익위는 그동안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통로박스 확장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 관계기관의 양보와 협조를 이끌어내면서 이번에 통로박스 확장과 비용분담에 대한 합의에 성공했다.

옥천=황의택 기자 missan@ccbdar.co.kr

21.5 X 13.2 cm

제 6 장

행정·문화·교육민원

조정사례



- ◆ 진천선수촌 진입로 높이 낮춰, 주민 교통 안전대책 마련
- ◆ 산업단지 조성으로, 교육환경 열악해진 홍명고등학교 이전

진천선수촌 진입로 높이 낮춰, 주민 교통 안전대책 마련

민원번호 : 2BA-1101-062607(행정문화교육민원과, 정덕양 조사관)

(‘11. 3. 24.)

민원개요

대한체육회에서 충북 진천군에 신축 중인 ‘진천선수촌’ 진입로가 죽동마을 진입로보다 1.8m 높게 설계되어 설계도서 대로 개설될 경우, 조망권 침해 및 교통사고 위험과 산사태·침수 등이 예상되니 대책을 세워 달라는 요구에 대하여 당초 1.8m로 시공예정이던 선수촌 진입로를 1m로 낮춰 시공하는 대안 마련

1 당사자

- 신청인 :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회죽리 죽동마을 주민 76명 대표 이장 ○○○
- 피신청인 : 대한체육회
- 관계기관 : 충청북도 진천군수

2 민원내용

- 대한체육회가 충북 진천군에 건립 중인 진천선수촌 진입로(이하 ‘이 민원 진입로’라 한다) 및 평면교차로의 높이가 신청인 마을 진입로 보다 1.8m 높게 조성된다고 하는바,
 - 이로 인해 조망권 제한, 교통사고 위험, 산사태 및 침수 등 주민 불편과 재난 위험이 예상되니 주민안전대책을 세워 달라.

3 피신청인 등 의견

가. 대한체육회

- 이 민원 진입로의 높이를 마을 진입로의 높이와 같게 할 경우(1.8m→0m), 평면교차로 부분에서 급격한 경사가 생겨 차량속도 증가 및 교차로 부분 물고임으로 인한 교통사고 등이 우려되어, 신청인의 요구대로 이 민원 진입로의 높이를 낮추는 것은 곤란

나. 충청북도 진천군수

이 민원 진입로의 높이와 교통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피신청인과 같은 입장이나, 신청인 마을은 산사태 재난 위험지역임을 감안하여 주민안전대책 마련에는 만전을 기하겠음

4 주요 쟁점사항

- 선수촌 진입로 높이 조정
- 평면교차로 교통 안전대책

5 갈등 분석

가. 민원발생배경 및 주요사실관계

- 피신청인은 진천군 광혜원면 회죽리에 올해 8월 준공예정으로 진천선수촌 1단계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선수촌 진입로가 마을 진입로 보다 약 1.8m 높게 건설될 예정인 바,
 - 양 진입로가 교차하는 평면교차로에서의 교통사고 위험, 진천선수촌 진입로 높이로 인한 조망권 침해, 산사태 및 침수 등에 대한 주민안전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고충민원 제기

참고 : 진천선수촌 1단계 공사 개요

- 위치/기간 :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회죽리 일원 / '09.2.5.~'11.8.18.(31개월)
- 사업규모 : 856,253㎡(약 260백평) / 건축면적(34,604㎡)
- 시 행 자 : 대한체육회장
 - 시공사 : 삼성물산(60%), 태영건설(40%)
- 총사업비 : 184,042백만 원(공사비 155,942백만 원, 보상비 등 28,100백만 원)
- 세부내용
 - 지원시설 : 행정동, 선수교육회관, 체력훈련장, 선수숙소(350인), 스포츠의·과학실
 - 훈련시설 : 수영센터, 다목적체육관, 실내실외테니스장, 사격장, 조정/카누훈련장, 종합육상장, 투척/다목적필드(소프트볼·럭비·야구), 정구장, 클레이사격장

나. 해결 목표

- 진천선수촌 진입로의 높이를 적정하게 조정하고, 주민안전대책을 마련하여 공익사업의 원만한 추진과 민원해소방안 강구
 - 당사자 간의 대화와 양보를 통해 집단민원의 합리적 해결 도모

6 갈등해결과정

가. 진행과정 개요

- '11. 1. 27. : 제1차 현장조사 및 신청인·관계기관 협의
 - 위원회가 진천선수촌 진입로 높이를 현재의 1.8m에서 1m 내외로 하향 조정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추가협의 등을 통해 높이 확정기로 합의
- '11. 2. 22. : 제2차 현장조사 및 신청인·관계기관 협의
 - 진천선수촌 진입로의 높이를 1m로 낮추기로 확정하고, 교통안전문제 및 침수 등 주민안전대책 협의
- '11. 3. 15. : 제3차 현장조사 및 신청인·관계기관 협의
 - 기 협의한 내용을 토대로 조정안 협의 및 도출, 조정회의 일정·실무 협의

7 조정 결과

가. 조정 최종결과

- 수차례 현장조사와 실무 조정 협의를 통해, 대한체육회는 마을 진입로와의 평면교차 부분을 포함해 선수촌 진입로의 높이를 당초 1.8m에서 1m로 낮추어 시공하고, 이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며, 진천군은 죽동마을이 산사태 재난 위험지구임을 감안해 산사태·마을침수 등에 대한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두 기관이 상호 협의해 평면교차로 부분에 대한 교통안전대책도 마련하는 대안 합의

나. 위원회 조정서

- 피신청인은 이 민원 진입로의 높이(마을 진입로와의 평면교차로 부분 포함)를 당초 1.8m에서 1m로 낮추어 시공하기로 하고 이에 따른 소요비용을 부담한다.
- 관계기관은 신청인 마을이 산사태 재난 위험지구임을 감안하여 집중호우 등 기상악화로 인한 산사태·마을침수 등 위험에 대한 주민안전대책을 2011. 6.

30.까지 마련하여 이를 시행한다.

- 이 민원 진입로와 신청인 마을 진입로가 교차하는 평면교차로의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피신청인 및 관계기관은 상호 협의하여 2011. 4. 30.까지 교통안전 대책을 마련한다.
- 신청인은 이 민원 진입로 개설 공사에 적극 협조하며 더 이상 이익을 제기하지 아니한다.

8 수용-이행 여부 및 시사점

가. 신청인-피신청인 수용 및 이행여부

- '11. 4. 30. : 진입로 높이 설계 완료, 평면교차로 교통안전대책 마련 완료
- '11. 6. 30. : 진입로의 높이 1m로 낮추어 시공하고, 소요 비용 부담 완료

나. 시사점(의미)

- 이번 조정은 단순히 진천선수촌 진입로의 높이를 조정하는 것을 넘어 죽동마을 주민에 대한 안전대책까지 마련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음.
 - 특히, 진입로 문제로 차질을 빚었던 진천선수촌 1단계 사업의 원만한 추진에 도움이 되었다는 데에 의미가 크다고 봄.

진천선수촌 진입로 높이 관련 집단민원 현장조정

기사입력 2011-03-24 17:06



【서울=뉴스시스】 김대식(왼쪽 두번째)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24일 오전 충북 진천선수촌 진입로 공사현장을 방문해 공사 관계자로부터 진입로 조성 공사 현황을 듣고 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제공)

KBS

국민권익위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 집단 민원 해결"

오는 8월 완공 예정인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건립과 관련한 주민 집단 민원이 오늘 현장 중재로 해결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 진천 광혜원면에서 현장중재를 통해 1.8m로 시공할 예정이었던 선수촌 진입로를 산사태 위험 등을 주장하는 주민의견을 반영해 1m로 낮춰 시공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임재성 기자입력시간 : 2011-03-24 (17:20)

집단민원 조정 기념촬영

기사입력 2011-03-24 16:28



【진천=뉴스시스】 강신욱 기자 = 24일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열린 진천 국가대표종합훈련원 진입로 개설에 따른 주민안전대책 현장조정회의에서 조정서에 서명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최종준 대한체육회 사무처장, 유영훈 진천군수, 김대식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이쾌복 죽동마을 이장.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진천군 광혜원면사무소 회의실에서 대한체육회 최동준 사무총장, 유영훈 군수, 김대식 권익위 부위원장, 이괘복 마을대표, 오중근 마을대표(왼쪽부터)가 국가대표 종합훈련원 진입로 설치 합의를 작성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진천선수촌 진입로 갈등 봉합

국민권익위 중재로 해결
높이 80cm 낮춰 시공키로

대한체육회가 진천군 광혜원면에 건립 중인 국가대표 종합훈련원(진천선수촌) 진입로가 기존 마을 진입로보다 높게 설계되면서 주민들과 마찰을 빚었으나 24일 국민권익위원회 중재로 해결됐다.

권익위는 24일 광혜원면사무소에서 국민권익위원회 김대식 부위원장을 비롯해 유영훈 군수, 대한체육회 최동준 사무총장, 마을대표 이괘복씨 등 회주리 죽동마을 주민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진입로 설치 문제에 대해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당초 1.8m로 시공할 예정이던 진입로 높이를 80cm로 낮

춰 시공하기로 합의했다.

또 진천군은 죽동마을이 산사태 위험지 구역을 감안, 산사태와 마을 침수 등에 대한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대한체육회와 협의해 진입로에 대한 교통안전 대책을 세우도록 했다.

주민들은 선수촌 진입로가 죽동마을 진입로보다 높게 시공되는 것으로 알려진 지난해 4월부터 산사태 위험과 조망권 문제, 교통사고 위험 등을 들어 공사 현장에서 시위를 벌이는 등 대한체육회와 갈등을 빚어 왔다.

권익위는 지난 1월 주민들의 진정에 따

라 그동안 3차례의 현장조사와 수차례 실무조정 협의를 통해 이같이 조정, 합의를 이끌어 냈다.

권익위 김대식 부위원장은 “이번 조정은 권익위와 마을 주민, 관련 기관이 협력하고 양보한 결과”라며 “이를 계기로 국책사업인 진천 선수촌 건립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체육회는 서울에 있는 태릉선수촌을 이곳으로 이전하기 위해 8월 완공을 목표로 2009년 2월부터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진천 박병모기자

news@cctimes.kr

18.0 X 17.1 cm

진천선수촌 진입로 갈등 권익위 중재로 해법찾아

높이 1.8m→1m 변경
주민안전대책 마련키로

진천군 광혜원면에 건립 중인 국가대표 종합훈련원(이하 진천선수촌) 진입로가 기존 마을 진입로보다 높게 설계되면서 주민들과 마찰을 빚어온 문제가 국민권익위원회 중재로 해결됐다.

권익위는 24일 광혜원면 회의실에서 최종준 대한체육회 사무총장, 유영훈 진천군수, 마을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대식 부위원장 주재로 회족리 죽동마을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진입로 설치 문제에 대해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당초 1.8m로 시공할 예정이던 진입로 높이를 1m로 낮추고 주민안전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양측의 합의를 이끌어 냈다.

주민들은 진입로가 죽동마을 진입로보다 높게 시공될 것으로 알려진 지난해 4월부터 산사태 위험과 조망권 문제, 교통사고 위험 등을 들어 공사 현장에서 시위를 벌이는 등 대한체육회와 갈등을 빚어 왔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그동안 3차례의 현장조사와 수차례 실무조정 협의를 통해 ▲대한체육회는 마을 진입로와의 평면교차 부분을 포함해



지난 24일 권익위 김대식 부위원장(가운데)이 진천군 광혜원면 마을 대표와 현장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선수촌 진입로 높이를 당초 1.8m에서 1m로 낮춰 시공하고 이에 따른 비용 부담 ▲진천군은 죽동마을이 산사태 재난위험지구임을 감안해 산사태·마을침수 등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 ▲두 기관이 상호 협의해 평면교차로 부분에 대한 교통안전대책 마련 등의 합의안을 성사시켰다.

이 자리에서 김 부위원장은 “이번 조정은 권익위와 마을 주민, 관련 기관이 협력하고 양보한 결과”라며 “이를 계기로 국책사업인 진천선수촌 건립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죽동마을 이쾌복 이장은 “1년여

동안 주민들의 고생이 많았는데 잘 마무리돼 속이 후련하다”며 “앞으로 선수촌 건립과 함께 마을 환경도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최종준 대한체육회 사무총장은 “선수촌 건립으로 진천지역엔 큰 혜택이 있을 것”이라며 “세계 최고시설로 조성하는 것은 물론 주민 복리증진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유영훈 진천군수는 “권익위의 중재로 지역 민원이 잘 해결돼 다행”이라며 “주변마을 발전과 환경 개선에도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밝혔다.

/진천=김동석기자

15.1 X 19.0 cm

충청매일

2011년 03월 25일 (금)
02면 종합

진천국가대표선수촌 진입로 높이 1m

국민권익위원회 중재

주민들의 집단 반발로 진통을 겪어왔던 충북 진천군에 건립중인 진천국가대표선수촌 진입로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선수촌의 진입로가 기존 마을 진입로보다 당초 1.8m로 높게 조성되던 것이 1m로 낮춰 시공하게 됐기 때문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4일 공해원사무소 회의실에서 선수촌 진입로 높이와 관련한 집단민원에 대한 현장조정을 통해 진입로 높이를 낮추고 주민안전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양측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날 현장조정회의는 김대식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죽동마을 주민들과 최종준 대한체육회 사무총장, 유영훈 진천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당초 1.8m 높이로 시공 예정이던 선수촌 진입로를 1m로 낮추는 것에 합의했다.

김대식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번 조정은 권익위와 마을주민, 관련기관이 협력하고 양보한 결과다"며 "이번 조정을 계기로 국책사업인 진천선수촌 건립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원 신청인 대표인 이태복 죽동마을 이장은 "속이 후련하다. 앞으로 선수촌 건립과 함께 마을 환경도 개

선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종준 대한체육회 사무총장은 "선수촌 건립으로 미래엔 큰 혜택이 있을 것"이라며 "세계 최고시설로 만드는 것은 물론 주민 복리 증진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영훈 진천군수도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민원이 잘 해결돼 고맙다. 주변마을 환경 개선에도 관심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체육회는 2009년 2월부터 선수촌 건립사업을 추진하며 진입로 높이를 인근 죽동마을 진입로보다 1.8m 높게 설계해 추진해왔다.

이에 마을 주민들이 지난해 4월부터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공사현장과 군청에서 시위를 벌여왔다.

심영문기자 simym68@ccdn.co.kr

15.5 X 8.8 cm

충청투데이

2011년 03월 25일 (금)
18A면 지역

진천 선수촌 진입로 민원 '해결'

국민권익위 중재... 도로높이 조정 합의·주민안전대책 마련키로

<속보>-진천 국가대표훈련원 진입로 높이 마을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해결됐다.

<본보 1월 1일자 18면 보도>

훈련원 진입로는 사업시행자가 대한체육회(사공사 삼성건설)로 90여원이 투입, 광혜원면 화곡리 일원에 길이 1.03km, 폭 20m를 사업량으로 올해 12월까지 추진되는 국책사업이다.

진입도로 공사와 관련해 진천군 광

혜원면 화곡리 죽동마을 주민들이 도로 높이를 낮춰달라며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진천군은 도로높이를 낮출 경우 차량속도 증가로 인한 교통사고 우려가 있고 빗물 고임, 역류, 방파발 생 등으로 오히려 도로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해 마찰이 돼왔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올 1월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4일 공해원사무소 회의실에

서 선수촌 진입로 높이와 관련한 집단민원에 대한 현장 조정을 통해 진입로 높이를 낮추고 주민안전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양측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조정회의는 김대식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주재로 죽동마을 주민들과 최종준 대한체육회 사무총장, 유영훈 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열려 당초 1.8m 높이로 계획되었던 선수촌 진입로를 1m

로 낮추는 것으로 합의했다.

화곡리 죽동마을 이태복 이장은 "주민 의견이 반영돼 민원이 해결돼 기쁘다"고 말했다.

진천군은 지난 2006년 4월 이래로 선수촌 건립 관련 주민대표자 회의, 진입로 개설공사 주민설명회, 군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 고시를 실시, 현재 공정은 85%에 이르고 있다.

진천=강영식 기자 like1000@octoday.co.kr

22.1 X 8.9 cm

진천 선수촌 진입로 갈등 해결

국민권익위, 주민 대한체육회 마찰 중재

1m 낮춰 시공... 郡, 산사태 등 대책 마련

[청주·진천] 대한체육회가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에 건립 중인 국가대표 선수촌 진입로가 기존 마을 진입로보다 높게 설계되면서 인근 주민들과 마찰을 빚어온 문제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 중재로) 해결됐다.

권익위는 24일 광혜원면사무소에서 회족리 죽동마을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진입로 설치 문제에 대해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당초 1.8m로 시공할 예정이던 진입로 높이를 1m로 낮춰 시공토록 한다는 데 합의했다.

또 진천군에 대해서는 죽동마을이 산사태 위험지구임을 감안, 산사태와 마을 침수 등에 대한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대한체육회와 협의해 진입로에 대한 교통안전 대책도 세우도록 했다.

주민들은 선수촌 진입로가 죽동마을 진입로보다 높게 시공될 것으로 알려진 작년 4월부터 산사태 위험과 조망권 문제, 교통사고 위험 등을 들어 공사 현장에서 시위를 벌이는 등 대한체육회와 갈등을 빚어왔다.

권익위는 지난 1월 주민들의 진정에 따

라 그동안 3차례의 현장조사와 수차례 실무조정 협의를 통해 이같이 조정,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날 현장 조정회의에는 권익위 김대식 부위원장과 대한체육회 최종준 사무총장, 유영훈 군수, 주민 대표 등이 참석했으며 이에 앞서 김 부위원장 등은 진입로 설치

예정지 등을 둘러봤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 조정은 권익위와 마을 주민, 관련 기관이 협력하고 양보한 결과로 이번 조정을 계기로 국책사업인 진천선수촌 건립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체육회는 서울에 있는 대통령수촌을 이곳으로 이전하기 위해 8월 완공을 목표로 2009년 2월부터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곽상훈 기자 kshoon0663@daejonilbo.com

오인근 기자 inkun0815@daejonilbo.com



국민권익위원회 김대식 부위원장(왼쪽 두번째)이 24일 오전 충북 진천선수촌 진입로 공사현장을 방문해 공사 관계자로부터 진입로 조성 공사 현황을 듣고 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제공
16.7 X 16.2 cm



24일 진천 광혜원면 죽동마을 집단민원 현장조정에 나선 김대식 국민권익위 부위원장과 유영훈 진천군수가 죽동마을앞 현장에서 주민과 공사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진입로 갈등 마침표

진천 죽동마을 선수촌 높이 낮추기로

마을앞에 새로 신설되는 도로 높이가 마을로 연결되는 도로 보다 높아 1년여 가까이 집단민원이 제기됐던 진천 광혜원 죽동마을 진입로 문제가 해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4일 광혜원면 회의실에서 죽동마을 주민들과 최종준 대한체육회 사무총장, 유영훈 진천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집단민원 현장조정회의를 갖고 선수촌 진입로 높이를 낮추는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공사를 펼치고 있는 대한체육회측에서 당초 마을 진입로보다 1.8m 높았던 선수촌진입도로 평면교차로를 1m 높이로 낮추고 도로그루밍 포장, 횡단보도, 경고등, 안전표지판 등 교통안전시설 등을 설치하기로 했다.

죽동마을 진입로는 지난 2009년 2월부터 진행된 진천선수촌 건립과정에서 국도와 선수촌을 연결하는 진입도로가 마을로 연결되는 길보다 높게 시공되면서 마을주민들이 지난해 4월부터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했었다.

또한 주민들은 올해 초 “마

을길과 선수촌 진입도로와 높이 차이가 커서 교통사고 위험이 높고 마을의 시야를 가리며 군지정 산사태 재난 위험지역인 죽동마을의 침수 우려가 높다”며 진입도로의 높이를 낮춰달라는 민원을 국민권익위에 제기했다.

주민들의 주장에 체육회측은 평면교차로의 높이를 낮출 경우 급경사로 인해 통행속도 증가, 물고임 등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높다며 난색을 표명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현장조사와 실무조정 협의를 거쳐 ▶선수촌 진입도로의 높이를 1m로 낮춰 시공하고 ▶진천군에서 산사태·침수에 대한 안전대책을 마련하며 ▶마을 진입 평면교차로에 대한 교통안전대책을 수립하는 조정안을 만들어 이날 합의에 이르게 됐다. 죽동마을 이장 이태복씨는 “1년 가까이 주민들이 고생을 했지만 조정안에 합의하게 돼 후련하다”며 “앞으로 체육회를 비롯해 군에서도 선수촌 건설에 따라 마을 환경이 좋아질수 있도록 배려해 달라”고 말했다. 최동일 / 진천

9.7 X 25.5 cm

진천선수촌 진입로 갈등 봉합

국민권익위 중재로 해결 높이 80 낮춰 시공 합의

2011년 03월 25일 (금) 08:50:24 cbi@cbinews.co.kr

대한체육회가 진천군 광혜원면에 건립 중인 국가대표 종합훈련원(진천선수촌) 진입로가 기존 마을 진입로보다 높게 설계되면서 주민들과 마찰을 빚었으나 24일 국민권익위원회 중재로 해결됐다.

권익위는 24일 광혜원면사무소에서 국민권익위원회 김대식 부위원장을 비롯해 유영훈 군수, 대한체육회 최동준 사무총장, 마을대표 이광복씨 등 회죽리 죽동마을 주민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진입로 설치 문제에 대해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당초 1.8m로 시공할 예정이던 진입로 높이를 80로 낮춰 시공하기로 합의했다.

또 진천군은 죽동마을이 산사태 위험지구임을 감안, 산사태와 마을 침수 등에 대한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대한체육회와 협의해 진입로에 대한 교통안전 대책을 세우도록 했다.

주민들은 선수촌 진입로가 죽동마을 진입로보다 높게 시공되는 것으로 알려진 지난해 4월부터 산사태 위험과 조망권 문제, 교통사고 위험 등을 들어 공사 현장에서 시위를 벌이는 등 대한체육회와 갈등을 빚어 왔다.

권익위는 지난 1월 주민들의 진정에 따라 그동안 3차례의 현장조사와 수차례 실무조정 협의를 통해 이같이 조정, 합의를 이끌어 냈다.

권익위 김대식 부위원장은 "이번 조정은 권익위와 마을 주민, 관련 기관이 협력하고 양보한 결과"라며 "이를 계기로 국책사업인 진천 선수촌 건립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체육회는 서울에 있는 태릉선수촌을 이곳으로 이전하기 위해 8월 완공을 목표로 2009년 2월부터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산업단지 조성으로, 교육환경 열악해진 홍명고등학교 이전

민원번호 : 2BA-1102-023796(행정문화교육민원과, 정덕양 조사관)

(‘11. 7. 14.)

민원개요

울산 울주군 청량면 소재 홍명고등학교 주변으로 신일반산업단지가 조성 중에 있고 학교 경계 인근까지 조성공사가 한창인바, 이로 인한 교육환경 악화로 학교가 울산지역에서 기피대상 1순위가 되어 운영이 어려워지니 학생들이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학교 이전을 요구하는 민원에 대해 학교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학교부지에는 민간개발에 의한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도록 조정

1 당사자

- 신 청 인 : 울산 울주군 홍명고등학교(사립) 학부모·교직원·지역주민 6,055명 대표 ○○○
- 피신청인 : 울산광역시교육감
- 관계기관 : 울산광역시장

2 민원내용

- 울산광역시가 홍명고등학교(이하 ‘이 학교’라 한다) 인근에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학교환경이 악화돼 기피 1순위 학교가 되어 학교운영이 어려워졌으니
 - 학교부지를 일반산업단지(이하 ‘산업단지’라 한다)에 편입(수용)시키고 다른 곳으로 이전할 수 있게 해 달라.

3 피신청인 등 의견

가. 울산광역시교육감

- 학생들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 학교배정에 대한 학부모 민원해소 등을 위해 이 학교 이전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이를 위해서는 학교법인(태화학원)이 학교

이전에 소요되는 예산 확보계획과 향후 학교운영계획 등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피신청인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나. 울산광역시장

- 이 학교를 이전하기 위해 학교부지를 신일반산업단지에 편입(수용)시킬 경우, 분양가 상승으로 입주기업의 반발과 분양 잔여지에 대한 기업유치 애로 등이 있어 학교부지를 산업단지에 편입시키기는 어려우며, 대신 학교인접지역에는 환경적 영향이 적은 업종을 배치하는 등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4 주요 쟁점사항

-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한 학교 교육환경 피해 여부
-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학교 이전 방안

5 갈등 분석

가. 민원발생배경 및 주요사실관계

- 울산 울주군 청량면 소재 홍명고등학교 주변으로 신산업단지가 조성 중에 있고 특히 학교 경계 부근까지 공사가 진행되어
 - 교육환경의 악화로 울산지역에서 기피 1순위 학교가 돼 학교운영이 어려워
니 학생들이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학교를 이전해 달라는
고충민원 제기('11. 2. 8.)
 - ※ 2004년부터 지속적으로 민원제기(국회, 교과부, 울산시·교육청·시의회),
언론 보도, 시위 등이 계속되어온 울산지역 현안
- 신입생 배정시 학부모·학생의 희망과 관계없이 배정되는 비율(강제 배정률)이
평균 70%로 타 학교에 비해 현저히 높음
 - ※ 타 학교의 경우 강제 배정률이 5% 미만, 해마다 홍명고 배정 불만 민원
다수 발생
- 신산업단지 조성이 완료되면 기존공단(동쪽 서유화학공단, 남쪽 온산공단)에
더해 교육환경이 더욱 열악해져 결국 이전이 근본대책

나. 해결 목표

-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학교이전 방안 마련
 - 당사자 간의 대화와 양보를 통해 집단민원의 합리적 해결 도모

참고 : 신산업단지 공사 개요

- 위 치 : 울주군 온산을 처용리, 청량면 용암리 일원
- 사업기간 : 2002년 ~ 2012년
- 사업규모 : A=2,428천㎡
- 사 업 비 : 4,342억원(공사 1,148 보상 2,561 기타 633)
- 공사착공 : '08. 5. 29(2011. 2. 현재 공정 71.0%, 분양 74.5%)
- 추진계획 : 국내·외 기업체 투자유치 및 주력산업의 구조고도화를 위한 신산업 육성

6 갈등해결과정

가. 진행과정 개요

- '11. 3. 10. : 제1차 현지 협의회 개최 및 현장조사
 - 학교이전방안 협의(아래 대안을 제시하고 기관 검토 후 방향결정)
 - ※ 제1안) 학교부지 신산업단지에 편입, 제2안) 학교부지 일대 일반산업단지 조성, 제3안) 학교부지 일대 민간산업단지 조성, 제4안) 연수원 등 대체시설로 활용
- '11. 4. 7. : 제2차 현지 협의회 개최
 - 대안별 각 기관 의견수렴 및 검토 결과 제3안을 추진하기로 잠정합의
 - 신청인은 학교부지를 산업단지에 편입해 수용하기를 원하나, 현실적으로 곤란(산업단지 공정이 71%, 분양계약이 75%이상 진행)
- '11. 5. 26. : 제3차 현지 협의회 개최
 - 제3안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 및 향후 추진방향 협의
 - ※ 울산시는 산업단지계획 승인, 교육청은 행·재정 지원 적극 협조
- '11. 6. 29. : 제4차 현장조사 및 신청인·관계기관 협의
 - 조정안 최종 결정, 조정회의 일정·실무 협의

7 조정 결과

가. 조정 최종결과

- 학교법인은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건전한 민원개발사업자를 선정하여, 산업단지계획이 승인·고시되면 학교부지 및 시설을 매각하며, 울산광역시는 개발사업자가 관계법령 및 절차에 따라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이 있을 경우 산업단지가 원만히 조성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울산교육청은 학교이전에 대한 지도·감독과 더불어 교과부로부터 예산을 확보하는 등 이전을 적극 지원하기로 합의

나. 위원회 조정서

- 신청인과 피신청인 및 관계기관은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교육환경이 열악해진 이 학교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학교부지에는 민간개발에 의한 일반산업단지(이하 ‘산업단지’라 한다) 조성을 추진한다.
- 이를 위해 신청인은 산업단지를 조성할 충분한 능력과 자격을 갖춘 건전한 민간개발사업자(이하 ‘개발사업자’라 한다)를 선정하고, 산업단지계획이 승인·고시되면 개발사업자에게 학교부지 및 시설을 매각하되, 사전에 학교이전 부지 선정 등 학교이전 사항 전반에 대해 피신청인과 필요한 협의를 행한 후 학교법인 이사회의결을 거쳐 피신청인에게 학교이전을 요청한다.
- 관계기관은 개발사업자가 관련법령 및 절차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면 이를 신속하고 성실하게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진행하여 산업단지가 원만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 피신청인은 학교법인의 학교이전 요청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학교가 이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고, 관련법령의 범위 내에서 교육과학기술부의 예산지원 확보 등을 통하여 학교이전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 당사자들은 위 합의내용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서로 긴밀히 협력하고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수용-이행 여부 및 시사점

가. 신청인-피신청인 수용 및 이행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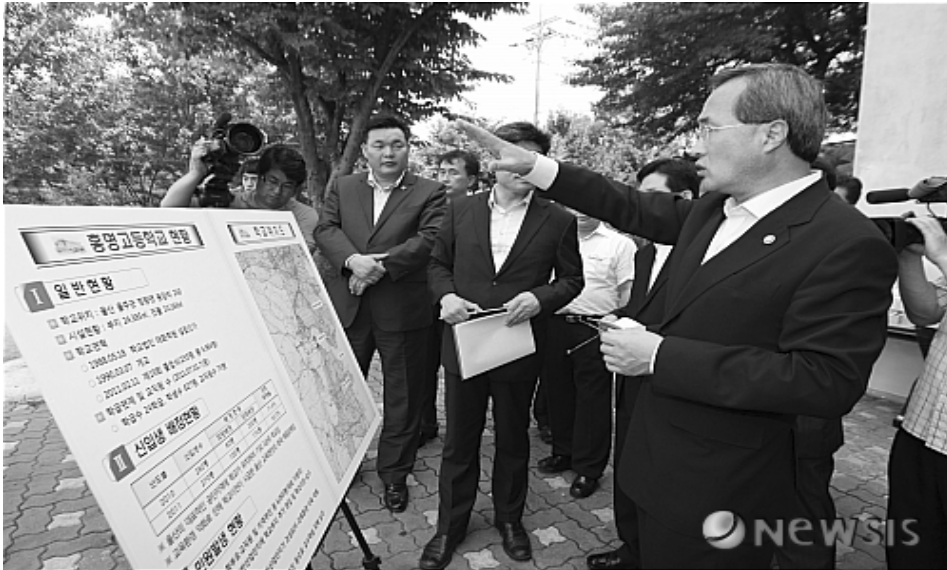
- '11. 8. : 교육과학기술부 예산 지원 확보
- '12. 6. : 민간사업자 선정
- '12. 12. : 산업단지계획 승인
- '13. 12. : 학교부지 및 시설 매각
- '14. 12. : 학교 이전 설립

나. 시사점

- 이번 조정은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날로 악화되고 있는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우리 위원회와 관계기관들이 힘을 합쳐 학교이전이라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음.
 - 특히 이번 조정은 주위환경의 악화로 학교운영이 어려워진 학교재단을 위해서도, 오래 묵은 지역현안의 해결이라는 관계기관의 입장도 아닌,
 - 2004년부터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었으나 장기 미해결되고 있던 교육민원을 해결함으로써 어린 학생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음.

'교육환경 개선' 국민권익위

기사입력 2011-07-14 15:49 |



【울산=뉴스시스】 14일 오후 공단 소음과 분진 때문에 학부모와 교직원, 지역주민 등 학교 이전 민원을 낸 울산 울주군 청량면 소재 홍명고등학교를 방문한 국민권익위원회 김대식 부위원장이 비산먼지가 휘날리는 현장을 가르키고 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제공) photo@newsis.com

권익위, 울산시·교육청과 교육여건 개선 위한 학교이전 합의 산업단지로 둘러싸인 울산 홍명고 이전 물꼬



【울산=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14일 울산시교육청 중회의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 김대식 부위원장(가운데)이 홍명고 이전 관련 현장 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울산 울주군 청량면에 있는 재학생 789명(24학급)의 홍명고등학교는 1988년에 개교했지만, 주변에 산업단지가 잇따라 조성되면서 소음과 분진 등이 발생해 주변 환경이 열악해지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기피학교로 인식되면서 꾸준히 민원이 제기되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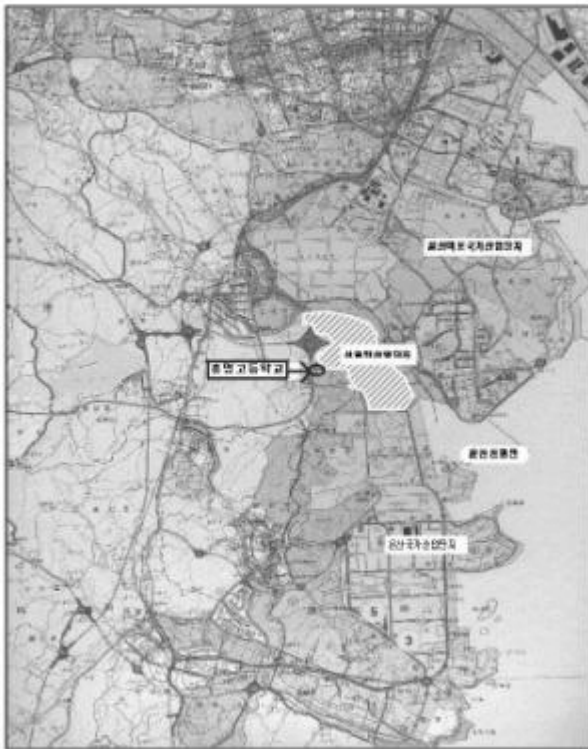
지난 2월 학부모와 교직원, 지역주민 등 6,055명이 제출한 집단민원을 접수한 국민권익위는 14일 오후 3시 울산광역시 교육청 중회의실에서 김대식 부위원장이 직접 나서 울산광역시교육감과 울산광역시 경제부시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해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학교 이전안을 포함한 중재안을 성사시켰다.

홍명고는 동쪽 인근에 석유화학공단이, 남쪽에는 온산공단이 위치하고 있고 학교 뒤편으로는 2008년부터 공사 중인 신일반산업단지가 있어 교육환경이 안 좋다는 인식 때문에 학부모 및 학생들로부터 기피 학교 1순위로 인식돼 매년 해당 학교를 희망하는 학생은 평균 30% 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학생 희망과 무관하게 강제배정되면서 민원이 잦았다.

이에 학교 측에서는 울산시에서 기존의 학교부지는 신일반산업단지에 편입해 수용해주고, 대신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를 해왔으나, 울산시는 공정이 70%이상 진행된 산업단지에 학교부지를 추가 편입하면 분양가가 올라 입주기업이 반발하고, 잔여부지에 기업 유치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해왔다.

신 일 반 산 업 단 지 위 치 도



이에 국민권익위는 민원 접수 이후 여러 차례의 현장조사와 실무 조정 협의를 통해 ▲ 울산교육청은 학교이전에 대한 지도·감독을 맡고, 더불어 교과부로부터 이전 예산을 확보하는 등 이전을 적극 지원하고, ▲ 산업단지계획이 승인·고시되면 학교법인은 선정된 민간개발사업자에게 학교부지와 시설을 매각하고, ▲ 울산광역시에서는 개발사업자가 관계법령 및 절차에 따라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을 할 경우 원만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현장조정회의를 주재한 김대식 부위원장은 "이번 조정은 학교운영이 어려워진 학교재단이나 오래 묵은 지역현안의 해결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무엇보다

보다 학생들이 보다 나은 교육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게 하겠다는 의지에 관계기관들이 모두 뜻을 같이해 협력함으로써 원만히 성사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홍명고 이전이 예정대로 추진되면 약 3년 이후에는 학생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끝)

홍명고 이전 물꼬

작성자 홍상순 작성일 2011-07-14

한국일보

2011년 07월 15일 (금)
12D면 부산/울산/경남

울산 홍명고, 공단 울타리 벗어난다

국민권익위-시·교육청, 교육여건 개선 차원 이전 현장조정

공단에 둘러싸여 소음, 분진 등 공해로 고통을 받아온 울산의 한 고교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의 중재로 환경이 나은 곳으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권익위는 14일 오후 3시 울산시교육청 중회의실에서 김대식 부위원장과 김복만 시교육감, 장만석 시경제부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갖고 울산 홍명고 이전 중재안을 성사시켰다.

지난 2월 학부모와 교직원, 주민 등 6,055명의 집단민원을 접수한지 5개월 만이다.

권익위는 민원 접수 이후 여러 차례 현장조사와 실무 조정협의를 거쳐 이날 ▲교육청은 학교 이전에 대한 지도·감독과 함께 교과부로부터 예산을 확

보하는 등 적극 지원하고 ▲학교법인은 산업단지계획이 승인되면 선정된 민간개발사업자에게 학교부지와 시설을 매각하고 ▲시는 개발사업자가 관계 법령에 따라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을 할 경우 협력기로 합의했다.

1988년 개교한 울주군 청량면 홍명고(재학생 789명, 24학급)는 동쪽에는 석유화학공단, 남쪽에는 온산공단이 위치해 있으며, 2008년부터 학교 뒤편에 신일반산업단지가 조성되면서 소음, 분진이 발생하는 등 주변 환경이 열악해졌다.

이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들의 기피학교 1순위로 꼽혀 매년 이 학교를 희망하는 학생이 30% 정도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희망과 무관하게 강제 배정돼 민원이 잦았다.

학교 측은 시가 기존 학교부지를 신일반산업단지에 편입, 수용해주고 대신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해 왔으나 시는 공정이 상당히 진행된 산업단지에 학교부지를 추가 편입할 경우 분양가가 올라 입주기업이 반발하고, 잔여부지에 기업 유치가 힘들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해왔다.

이날 현장조정회의를 주재한 김대식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홍명고 이전에는 3년 정도 결렬 전망"이라며 "이번 조정은 운영이 어려워진 학교재단이나 묵은 지역 현안 해결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무엇보다 학생들이 보다 나은 교육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들이 뜻을 모으고 협력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목상균기자 sgmok@hk.co.kr

15.5 X 12.0 cm

◀ANC▶

공단에 둘러싸여 진학 기피 학교로 전락한 울주군 청량면 홍명고등학교가 관련 기관들과 이전에 합의했습니다.

홍명고 부지를 사들일 민간 사업자를 찾는 일이 최대 과제로 남았습니다.

홍상순 기잡니다.

◀END▶

◀VCR▶

지난 1990년 개교한 울주군 청량면 홍명고.

동쪽에는 석유화학공단, 남쪽에는 온산공단이 위치해 있고 현재 조성중인 신일반

산업단지와는 학교 뒤편이 맞닿아 있습니다.

교육 환경이 나쁘다는 인식 때문에 학생들이 기피해 해마다 많은 학생들이 강제 배정되면서 민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 I N T ▶ 김우열 학부모/홍명고

학교 재단과 학부모들이 이전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가 4차례 중재에 나서 드디어 이전 방안을 찾았습니다.

홍명고를 포함해 이 일대를 민간업자가 산업단지로 조성하고 홍명고는 학교 용지를 매각하고 다른 곳으로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는 민간 개발 사업자가 나설 경우 원만히 협력하기로 했으며 울산시교육청은 이전 부지를 물색하고 부족한 설립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 I N T ▶ 김대식 부위원장/국민권익위원회

이제 남은 과제는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고 선뜻 나설 민간 개발 사업자가 있겠냐는 겁니다. 홍명고 부지는 5만제곱미터, 산업단지는 최소 50만제곱미터는 돼야 수익성과 효율성을 갖출 수 있어 인근 지주들의 협조도 필요합니다.

홍명고는 현재 4개 건설회사에 산업단지 조성을 검토해줄 것을 요청한 가운데 이 일대 땅값 상승으로 수지 타산을 맞추기가 쉽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뉴스 홍상순/

홍명고 이전 확정

2011-07-15 오전 8:39:26

공단과 산업단지에 둘러싸여 고통받아온 울주군 홍명고등학교가 이전됩니다.
현재 학교부지를 민간 사업자에게 팔고, 다른 곳으로 옮긴다는 것인데,
부지를 매입할 민간사업자가 나타날 지가 관건입니다.
김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민권익위원회 김대식 부위원장이 울주군 홍명고등학교를 찾았습니다.
공단과 산업단지에 둘러싸여 열악한 교육환경에 놓인
학교 이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나선 것입니다.
홍명고등학교는 동쪽에 석유화학공단이,
남쪽에는 온산공단이 위치해 있고, 학교 뒤편으로는
신일반산업단지가 한창 조성 중에 있는 등 공단과 산업단지에 둘러 싸여있습니다.
교육환경이 좋지 않다는 인식 학부모와 학생들 사이에 퍼지면서
기피학교 1순위로 전략했고,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이 줄고, 강제배정으로 인해 민원도 잦았습
니다.
국민권익위는 그동안 수차례 관련기관들과 협의를 가진 끝에,
14일, 학교를 이전하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인터뷰> 김대식/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교육청은 학교이전에 관한 지도,감독과, 교과부로부터
이전 예산을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학교법인은 산업단지 계획이
승인,고시되면 민간개발사업자에게 학교부지와 시설을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또 울산시는 민간개발사업자가 관계법령과 절차에 따라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을 할 경우 최대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클로징> 학교부지를 매입할 민간개발 사업자만 나타난다면,
학교 이전은 빠르게 진행 될 것으로 보입니다.

JCN뉴스 김영환입니다.

권익위 중재...홍명교 이전 전격 합의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의 중재로 14일 울산시와 울산시교육청, 학교법인인 홍명고등학교의 이전에 전격 합의했다. 그러나 학교이전을 위해서는 현 홍명고 부지를 '민간업체 협여를 통해 일반산업단지로 개발한다'는 전제조건이 달렸다.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이전시기는 불투명해지게 된다.

◇홍명고 왜 이전하려 하나 = 울산 울주군 청량면에 소재한 재학생 789명(24학급)의 홍명고등학교는 지난 1988년에 개교했다. 동쪽 인근에 석유화학공단이, 남쪽에는 온산공단이 위치해 있는데 지난 2008년부터 신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추진되면서 교육환경이 악화되기 시작했다. 홍명고를 희망하는 학생은 30%에 머물렀고 나머지 70%는 강제배정 받았다. 학부모들의 원성도 자자했다. 열악한 교육환경에서 자녀들이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학교측은 울산시와 시교육청, 시의회 등에 폐적인 환경 속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학교부지를 산업단지지에 편입, 수용 및 학교 이전을 요구해 왔지만 지금까지 협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홍명고 어디로 이전될까= 국민권익위, 울산시, 울산시교육청이 합의함으로써 '학교이전'은 법률적으로 문서화됐다.

국민권익위는 이날 조정합의에 앞서 "조정서는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며, 합의 내용이 성실히 이행되는지 여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했다. 국민권익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홍명고 이전이 예정



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 울산시교육청에서 홍명고등학교 이전 관련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했다. 김동수기자 dskim@ksilbo.co.kr

**학교이전 법률적 문서화
3년 후 본격 이전 전망
민간산업 조성 전제조건
불합 여파...걸림돌 우려**

대로 추진되면 약 3년 후에는 학생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과연 홍명고는 어디로 이전될까. 우선 아파트 개발사업지구가 가장 유력하다. 울산에는 현재 예정된 개발사업지구가 10여개 정도 있다. 학생 수요와 개발여건 등을 감안할 때 북구 호계지역이 후보지로 떠오른

다. 울주군 범서 등 몇몇 고교 부족 지역도 거론된다. 학교이전이 가시화되고 기존 홍명고의 폐쇄절차가 진행되면 기존 학생들은 희망학교로 분산 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개발...학교이전 '키' = 이날 회의에서 시교육청은 학교 이전에 대한 지도·감독을 맡고, 더불어 교과부로부터 이전 예산을 확보하는 등 이전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또 학교법인은 산업단지계획이 승인·고시되면 민간개발사업자에게 학교 부지와 시설을 매각하기로 하고, 울산시는 민간개발사업자가 관계법령 및 절차에 따라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을 할 경우 원만히 협력하기로 했다.

합의 내용대로라면 현재 홍명고의

부지를 민간개발사업자가 나서서 일반산업단지로 개발해야만 학교 이전이 가능해 진다는 얘기다.

학교측이 공공연히 "몇몇 개발사업자가 관심을 갖고 있다"고 밝히고 있어 계획대로만 되면 조속한 시기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경기불황에다 개발비용 부담, 수익성 등을 따지볼때 쉽지 않을 것이란 의견도 만만찮다.

국민권익위 김대식 부위원장은 "이번 조정은 학교운영이 어려워진 학교재단이나 오래 묵은 지역현안의 해결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무엇보다 학생들이 더 나은 교육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게 하겠다는 의지에 관계기관이 모두 뜻을 같이해 협력함으로써 원만히 성사될 수 있었다"고 했다.

이형종기자 leehj@ksilbo.co.kr
20.6 X 21.8 cm

울산 제일일보

홍명고 이전 드디어 물꼬

권익위, 市·교육청과 합의

부지매입 사업자 물색 관건

2011년 07월 14일 (목) 21:30:07 최인식 기자 cisfrwwdom@hanmail.net



국민권익위원회 김대식 부위원장의 중재로 울산시와 시교육청, 학교법인 태화학원이 홍명고 이전에 합의했다.

국민권익위는 14일 오후 울산시교육청 4층 회의실에서 김대식 부위원장과 김복만 교육감, 장만석 울산시 경제부시장, 이원우 태화학원 이사장과 학부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홍명고 이전 관련 현장 조정회의를 열었다.

이날 울산시와 시교육청, 학교법인 태화학원은 국민권익위의 학교 이전 조정서에 서명함으로써 공단에 둘러 싸여 교육환경이 크게 열악해 학부모들이 제기해 온 학교 이전요구가 실마리

를 찾게 될 전망이다.

이번 조정서에는 울산시는 현재 학교부지를 민간에 매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고, 시교육청은 홍명고가 명문고로 부상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1988년 개교한 홍명고는 올해 완공을 목표로 신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진행되면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 받고 있었다. 이에 태화학원과 학부모들은 2004년부터 학교부지를 공단에 편입하고 학교를 이전해달라고 요구해 왔었다.

그동안 태화학원은 학교 이전에 따른 대체 부지 마련을 위해 현재 학교 부지를 인근 신산업 단지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울산시에 요청했었다. 하지만 울산시가 학교 부지를 신산업단지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자 학교재단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민원을 제기해 왔다.

국민권익위는 그동안 3차례 학교와 시교육청을 방문해 홍명고 이전 문제를 관계기관과 논의해 왔으나 지금까지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하다 이날 홍명고 이전에 합의 서명을 받아냈다.

하지만 홍명고 이전이 낙관만은 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이전할 학교부지가 정해지지 않은데다 학교부지를 매입하겠다는 민간사업자가 쉽게 나타날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태화학원 관계자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화의를 통해 학교 부지 매각과 학교 이전 부지 물색이 원활해 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인식 기자

홍명고, 부지매각으로 이전 결정

울산시-산단조성 협력 교육청-예산확보 지원

2011년 07월 14일 (목) 20:18:35 박송근 song@ulsanpress.net



[속보]= 국민권익위원회와 울산시교육청, 울산시가 교육환경이 열악한 홍명고등학교의 이전에 전격 합의했다. 하지만 학교 부지가 민간 사업자에게 매각이 되어야 가능해 이전 시기는 언제가 될 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 울산시교육청 중회의실에서 울산시와 울산시교육청, 학교법인 태화학원 등 관계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권익위 김대식 부위원장의 주재로 홍명고 이전 문제를 협의한 결과 홍명고를 옮기기로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울산시교육청은 학교 이전에 대한 지도·감독을 맡고, 더불어 교육과학기술부로 부터 이전 예산을 확보하는 등 이전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또 학교법인은 학교부지가 산업단지계획이 승인·고시되면 민간개발사업자에게 부지와 시설을

매각하기로 하고, 울산시는 개발사업자가 관계법령 및 절차에 따라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을 할 경우 원만히 협력하기로 했다.

지난 2월 이 학교 학부모와 교직원, 지역 주민 등 6,055명은 홍명고가 울산과 온산공단에 둘러싸여 있어 대기공해가 심한데다 울산시의 산업단지개발로 소음과 분진 피해까지 보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에 학교 이전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그동안 수차례의 현장 조사와 실무조정 협의를 통해 이날 이 같은 합의를 이끌어냈다.

홍명고는 24학급 789명 규모로 1988년에 개교했으나 북쪽에 울산석유화학공단, 남쪽에 온산공단이 있고 최근에는 동쪽에 울산시가 신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교육환경이 더욱 열악해졌고, 교통마저 불편해 지역 중학생에게 진학 기피 학교로 꼽히고 있다.

하지만 시교육청이 해마다 이 학교에 학생을 강제 배정하면서 민원이 해마다 끊이질 않고 있다.

올해에는 전체 신입생 279명 가운데 62.3%인 174명이 강제배정됐다.

국민권익위 김대식 부위원장은 "이번 조정은 학교운영이 어려워진 학교재단이나 오래 묵은 지역현안의 해결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무엇보다 학생들이 더 나은 교육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게 하겠다는 의지에 관계 기관이 모두 뜻을 같이해 협력함으로써 원만히 성사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박송근기자 song@

2011 고충민원 조정사례집

2012년 6월 인쇄

2012년 6월 발행

발행 : 국민권익위원회

편집 : 고충처리국 민원조사기획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미근동) 임광빌딩 신관 9층

TEL. 02)360-2784 FAX. 02)360-3535

제작 : (사)장애인생산품판매지원협회 인쇄사업소

서울시 중구 을지로 14길 19-3 (을지로 3가)

TEL. 02)2269-5523~4